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조선시대 기록관리제도와 謄錄體系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이 형 중

조선시대 기록관리제도와 謄錄體系

지도교수 오 수 창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이 형 중

이형중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초 록

조선은 광범위한 공적 영역에서 기록관리를 위한 방안으로써 謄錄을 활용하였다. 謄錄이란 단순히 글자 그대로 ‘베껴서 적는 것’을 뜻한다기보다 ‘原文書의 내용 중 보존할만한 것을 선별하여 별도의 보존용 책자 등에 옮겨 적는 행위’ 또는 ‘그렇게 편찬된 기록물’을 뜻하는 것이다. 조선의 實錄 기사를 통해 건국 초기부터 다수의 등록물이 생산·활용되어 왔음이 확인되며, 일부 등록물은 현재 까지도 그 실물이 전해지고 있다. 현전하는 대표적인 등록물로는 《備邊司謄錄》·《議政府謄錄》·《狀啓謄錄》 등이 있는데, 이들은 보통 활용의 편의를 위해 원문의 내용 중 참고할만한 부분을 추려내어 별도로 成冊한 것으로서 일종의 사본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의 등록물은 일반적인 사본기록과는 달리 原本과 동일한 신뢰를 지닌 기록으로 인정되었다. 등록물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前例이자 典故로서 활용되었으며, 심지어 국가 주요 기록인 實錄의 찬수 과정에서도 신뢰할만한 史料로써 인용되었다. 이처럼 조선에서 謄錄은 原本과 동일한 신뢰성을 지닌 별도의 기록을 생산·활용·보존하는 기록관리 방식으로써, 전반적인 행정영역에서 통용되었다. 이는 조선의 통치이념과 이에 근간한 제도, 당시 조선이 처한 사회적 현실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본 논문은 조선의 기록관리가 이 謄錄이라는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에 주목하고 등록물을 생산·활용·보존하는 일련의 체계인 謄錄體系의 실체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등록물이 특히 조선에서 典故이자 史料로서 공적인 신뢰를 지닐 수 있었던 배경을 고찰하고, 등록체계의 전개 과정을 구축기·발전기·안정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따른 운영 양상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등록물의 성격 분석과 함께 이들 등록물이 생산·활용·보존되는 과정의 실상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선 기록관리체계 내에서 謄錄의 위상을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해 조선의 주요 관찬기록이자 謄錄과 유사한 방식으로 편찬되는 기록인 實錄·儀軌·日記를 등록과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조선은 건국 과정에서 公的인 통치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成文法에 따른 法治를 추구하였다. 이는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의 기록관리체도는 ‘公’이라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에서 생산하는 기록은 공적 행위에 대한 현재의 證據이자 동시에 미래 후손들이 살펴볼 歷史가 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기록의 활용과 보존이 특히 중시되었으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謄錄이 등장하게 되었다.

구축기의 등록물은 대체로 법전을 보완할 수 있는 임시법이나 사례집 등을 중심으로 편찬·활용되었는데, 이는 당시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한 성문법 체제가 완비되지 못했던 상황과도 연관되어 있다. 다만 성종 이후부터는 등록 개념의 외연 확장과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보다 다양한 목적과 형태를 가진 등록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성문법 체제의 완비라는 요인과 함께 실록찬수체계의 강화 및 이에 따른 기록관리체계의 변화가 있었다. 공적 영역에서 법전적 성격의 기록물 대신 前例·史料로서의 기록물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발전기 이후에 편찬되는 등록물 다수는 업무의 前例이자 典故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지니게 된다.

조선의 등록물은 먼저 그 편찬 방식에 따라 원본을 그대로 베껴 적는 편철형 등록물과 여기에 다시 추가적인 서술이 들어가는 첨입형 등록물로 나뉜다. 그리고 등록물의 편찬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준법전·공문서철·업무지침서·관청일지·자료집·기타 등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다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등록물은 대체로 범례에 따라 原文書를 수집·정리한 후 필요한 부분을 별도의 책자로 베껴 완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완성된 등록물은 아래로는 지방 말단의 업무증빙을 위한 자료에서부터 위로는 국가 중요기록인 實錄의 참고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용되었다. 그리고 등록물은 그 활용도와 중요도에 따라各司의 자체 문서고에서부터 실록을 봉안하는 史庫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보존되었다.

등록은 조선의 기록관리체계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에, 조선의 또 다른 중요기록인 實錄·儀軌·日記와도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實錄은 前代 국왕의 국정기록이자 동시에 當代史로서 엄격한 찬수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등록물은 이 실록찬수체계하에서 원문서를 일차적으로 선별한 기록이자 동시에 국정 운영의 일단을 담은 신뢰할만한 史料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등록물은 국가의 역사인 實錄과 마찬가지로 기관의 역사이자 동시에 영구보존기록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儀軌는 국가의 주요 儀禮 절차와 관련 문서를 일정한 체제에 따라 정리한 기록이다. 의궤는 일부 등록물과 유사한 체제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 행사의 내용을 다룬 의궤와 등록물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궤는各司에서 자체적으로 편찬한 등록물과 달리 국가 차원에서 별도의 임시기구를 세워 편찬한 기록으로서 일반적인 등록물에 비해 정제된 형태로 편찬되었으며, 그 편찬목적 또한 업무상 활용을 중시한 등록물에 비해 보존을 우선

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日記는 《燕山君日記》나 《光海君日記》같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承政院이나 奎章閣과 같은 비서기관을 비롯하여 일반 관사에서 매일의 기록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을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日記는 대체로 관청일지 성격을 지닌 등록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그 구성과 내용상으로도 등록물과 차별화된 모습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日記라는 별도의 기록군은 등록물과 별개의 위상을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편찬방식과 체제에 따라 日記라는 명칭이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謄錄은 조선 기록관리체계의 한 축으로서 공식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운용된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 등록체계를 통해 생산·활용·보존되는 등록물은 寫本에 가까운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신뢰할 수 있는 典故이자 史料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등록물이 단순히 寫本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폄훼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며, 오히려 조선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료임을 드러낸다.

주요어 : 등록, 기록관리, 실록, 의궤, 일기

학 번 : 2013-30028

목 차

序 論	1
一. 조선 초기 謄錄體系의 형성	12
1. 謄錄과 기록관리제도의 등장	12
1) 등록의 개념과 이념적 토대	12
2) 조선 기록관리제도의 구축과 그 특징	31
2. 謄錄體系 구축의 端緒	52
1) 주요 기록의 관리방안으로서 등록의 대두	52
2) 초기 등록의 형태와 활용	60
二. 謄錄體系의 실체적 분석	71
1. 등록체계의 전개와 謄錄物	71
1) 등록의 외연적 확장과 개념 분화	71
2) 등록물의 분류와 유형별 특징	90
2. 등록체계 운영의 실상	113
1) 생산과정과 생산주체	113
2) 활용과 보존	126
三. 조선 기록관리체계 내 주요기록과 謄錄	137
1. 實錄과 謄錄	137
2. 儀軌와 謄錄	155
3. 日記와 謄錄	166

結 論	183
-----------	-----

참고문헌	193
------------	-----

Abstract	209
----------------	-----

표 목 차

<표 1> 《經國大典》用文字式條 全文	35
<표 2> 《經國大典》藏文書條 全文	36
<표 3> 實錄 기사 내 謄錄 단어의 용례	65

그 립 목 차

<그림 1> 조선 기록관리체계의 기본 도식	22
<그림 2> 憲宗年間 《備邊司謄錄》의 체제	129
<그림 3> 憲宗年間 編纂 《備局謄錄》의 체제	130
<그림 4> 《宣懿王后祔廟都監儀軌》의 英祖 8年 6月 기사	162
<그림 5> 典亨司 編 《宣懿王后國恤謄錄》의 英祖 8年 6月 기사	162

序 論

謄錄이란 단어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배껴서(謄) 적는(錄) 것’을 뜻한다. 그런데 조선은 謄錄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배껴 적는 것’ 이상의 의미로써 사용하였다. 조선에서 謄錄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原文書의 내용 중 보존할만한 것을 선별하여 별도의 보존용 책자 등에 옮겨 적는 행위’ 또는 ‘그렇게 편찬된 기록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활용된 것이 다수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조선 후기 연구자에게 널리 알려진 《備邊司謄錄》일 것이다.

조선은 이 謄錄의 방식을 통해 수많은 기록을 편찬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비변사등록》을 비롯하여 현전하는 기록물 중 ‘謄錄’이라는 題號를 지닌 기록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朝鮮의 實錄(이하 ‘實錄’)에서 확인되는 謄錄物 또한 수십 종에 달한다. 實錄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는 謄錄物과 지금까지 실물로서 전해오는 謄錄物을 두루 살펴보면 謄錄이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활용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조선에서 謄錄은 기록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광범위한 행정영역에서 통용된 것이었다.

조선에서 공적인 기록의 관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原本 그 자체를 활용·보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原本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자와 같은 형태의 별도 기록물에 옮겨 적어 이를 활용·보존하는 것이다. 전자는 현재 소용이 있는 낱장 또는 여러 장의 文書나 置簿冊과 같은 帳簿 또는 기밀을 요하는 자료 등이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관청 간의 受發文書나 국왕에게 올린 狀啓 및 啓聞, 사관의 史草 등이 그러하다. 이들은 대체로 現用되는 기록이며, 그 활용 목적을 다하면 필요에 따라 폐기되거나, 종류별로 정리되어 이른바 久遠文書로 관리되기도 하고, 후자와 같이 별도의 기록물로 재탄생하기도 한다.

후자의 방식은 대체로 기록의 내용을 장기적으로 활용 또는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들 기록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정리한 것도 있

고, 일종의 圖式이나 官司의 座目 등 별도의 내용을 첨입하여 작성한 것도 있다. 이렇게 생산된 기록물은 그 일차적인 편찬 목적이 보존이나 활용이나에 따라 다시 두 가지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다. 일차적인 편찬 목적이 보존에 있는 것으로는 주요 國家典籍으로서 實錄을 비롯한 국가의 史書나 儀禮의 절차를 기록한 儀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남긴다는 취지에서 편찬되었으며, 그 위상 또한 여타의 기록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일차적인 편찬 목적이 활용에 있는 것으로는 《備邊司謄錄》·《議政府謄錄》·《狀啓謄錄》과 같은 謄錄物을 들 수 있겠다. 이들 등록물은 보다는 많은 인원이 문서의 내용을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 원문의 내용 중 참고할만한 부분을 추려내어 별도로 成冊한 것으로서 일종의 사본기록이다.

사실 謄錄과 같이 업무의 효율을 높이거나 기록 내용의 보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종의 寫本 기록물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동양 유교문화권 국가에 나타나는 史書편찬의 전통이나 서양 공문서의 金石文 公示 등도 일종의 사본 기록 생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의 謄錄은 기본적으로 原文書의 내용을 베껴 적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들과 유사한 모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과 정이나 그 활용·보존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들과 일정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타국의 경우 寫本記錄의 편찬은 대체로 一回的·短時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반해, 조선의 등록물은 일반 官司의 행정영역에서 보편적·지속적으로 생산·활용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더 나아가 實錄 등의 史料에서 확인되는 謄錄物은 단순한 寫本記錄을 넘어 原本과 동일한 신뢰를 지닌 기록으로 인정되었다. 즉 謄錄은 특별한 업무 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행정업무의 일환이자 신뢰할 수 있는 寫本 기록을 생산·보존하는 기록관리 방식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조선이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으로서의 謄錄을 일상적인 행정업무로 받아들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등록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구축되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조선이 바라본 문서 및 기록에 대한 인식과 이를 관리

하기 위해 운영한 각종 제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적 행위의 名分 有無와 역사의 褒貶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은 공적 행위의 文書化·史料化를 요구하였으며, 이는 유교적 관료제를 운용한 국가들에게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유교적 정치·행정체제를 운영하였던 高麗나 중국의 明·淸 모두 문서를 통한 행정을 중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국왕의 實錄까지 찬수하였다는 사실은 유교적 가치관이 문서 행정과 기록관리에 미친 영향을 짐작케 한다. 조선은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이 더욱 강화된 형태의 성리학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조선의 현실에 부합하는 기록관리제도를 운용하고자 하였다.

기존 實錄에 관한 연구의 경우 성리학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성리학과 실록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¹⁾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의 史官制度和 실록편찬제도가 성리학적 역사관에 근간하여 운영되었음을 논증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이 사관의 권한을 그토록 강하게 보장하고 국왕조차 실록의 위상을 침해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단순히 전통적인 史官尊重 인식의 작용 외에도 성리학적 가치관이 있었음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기록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성리학의 영향력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조선의 통치철학으로서 성리학과 조선 기록관리제도의 상관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조선 전기 기록관리체계가 성리학적 관료제하에서 역사편찬이라는 방향을 설정하여 성립된 것이라는 오항녕(2008)의 논문과 성리학적 세계관 하에서 개별적 기록이 개념적으로 구성되고 이 기록들이 다시 정치·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주장한 노명환(2017)의 논문이 있다.²⁾ 이들 연구는 통치철학으로서의 성리학이 조선 기록관리제도의 구축·운영에 미친 영향력을 역사 인식적 측면과 상징·기호적 측면에서 각기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 기록관리

1) 차장섭(1992), 〈朝鮮前期 實錄의 史論〉, 《국사관논총》 제32집, 국사편찬위원회; 김경수(1998), 《朝鮮時代의 史官研究》, 서울:국학자료원; 오항녕(2009),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서울:일지사; 오항녕(2018), 《실록이란 무엇인가》, 고양:역사비평사 등이 있다.

2) 오항녕(2008),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이해〉, 《기록학연구》 17, 한국기록학회; 노명환(2017),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의 관점에서 보는 조선시대 성리학 세계관과 기록·기록관리〉, 《기록학연구》 51, 한국기록학회.

제도에 미친 성리학의 영향이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현된 것이었으며, 그 영향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조선 초기 등록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기록관리체계가 성립되는 과정을 살핌과 함께 이 과정에서 조선의 통치철학이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이어서 騰錄이라는 방식을 중심으로 한 조선 고유의 기록관리체계가 등장하게 된 端緒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조선의 문서행정과 기록관리제도를 다룬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조선의 문서행정과 기록관리제도 그 자체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 많은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먼저 조선 건국 과정에서 행정체제의 개혁과 함께 전반적인 공기록물 관리체도가 개편되었음에 주목하고 그 방향성이 역사편찬의 충실성을 기함과 동시에 고려 말 행정상의 난맥을 타개하기 위함임을 제시한 윤훈표(2000)의 연구가 있다.³⁾ 그리고 조선 《經國大典》의 기록관리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 기록관리제도와 현대 기록관리제도를 비교한 백선휘(2007)의 연구도 있다.⁴⁾ 또한 정치의 공개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국왕기록을 비롯한 중요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찬·보존되었음을 살핀 신병주(2008)의 논문과 조선 관료제 및 조선 기록관리체계를 연계하여 살펴본 오항녕(2008)의 논문도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록관리제도 전반을 고찰한 논문들이다.⁵⁾

국가 차원의 일반론에서 벗어나 지방이라는 영역을 특정하여 공문서의 보존·관리 실태를 추적하고 근대개혁기 전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시기 공문서관리의 방향과 실재를 탐색하고자 한 김태웅(2000)의 연구와 규장각에서 통용된 문서의 유형과 제도를 통해 규장각 운영의 실상과 그 위상을 밝히고자 한 김건우(2012)의 연구는 조선 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가 보다 구체적·미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3) 윤훈표(2000), 〈조선초기 공기록물(公記錄物) 관리제(管理制)의 개편〉, 《기록학연구》 2, 한국기록학회.

4) 백선휘(2007), 〈《경국대전》의 기록관리 규정〉, 《기록학연구》 15, 한국기록학회.

5) 신병주(2008), 〈조선후기 기록물 편찬과 관리〉, 《기록학연구》 17 한국기록학회; 오항녕(2008), 앞의 논문.

할 수 있다.⁶⁾

이상의 논문들은 조선의 기록과 그 관리제도를 조망할 수 있는 각각의 분석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당시의 사상적·현실적 조건이 謄錄이나 實錄과 같은 조선 고유의 기록문화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이 조선의 기록문화는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되었고 운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한 논문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謄錄 그 자체를 다룬 기존 연구로는 먼저 임용한(200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법령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록물로서 등록물에 주목하였다. 그는 《經濟六典謄錄》의 분석을 통해 등록물이 법전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 일반적인 법전과 다른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보았으며 法典에 대한 등록물은 일종의 참고자료이지 별도의 법이 아니라고 보았다.⁷⁾

김상호(2011)는 《哲宗大王實錄廳儀軌》와 《純宗大王實錄廳儀軌》에 등록된 官文書의 분석을 통해 儀軌를 일종의 謄錄類로 규정하고 儀軌의 성격과 특징을 등록물의 특성과 연계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儀軌에 수록된 관문서가 지면의 7할을 차지한다는 점이 의례를 등록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됨을 들었다.⁸⁾

임민혁(2011)은 의례와 등록물의 체제가 달랐음을 제시하고, 그 이유로 왕세자 이하 신분의 의례 제작을 금했기 때문에 별개의 체제를 지닌 등록물을 생산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의례가 座目·傳敎·移文·來關·禮關·甘結·米布式·賞典·儀軌·三房·別工作·修理所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등록은 이러한 편제 없이 전교와 啓辭 및 각종 문서를 모아서 날짜순으로 정리한 일종의 일지라고 보았다.⁹⁾

6) 김태웅(2000), 〈甲午改革 前後 地方公文書管理의 변화〉, 《규장각》 2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건우(2012), 〈규장각의 문서제도와 그 위상〉, 《영남학》 2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7) 임용한(2003), 〈《經濟六典謄錄》의 편찬목적과 기능〉, 《법사학연구》 27, 한국법사학회.

8) 김상호(2011a), 〈《哲宗大王實錄廳儀軌》의 謄錄 官文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9, 한국서지학회, 356쪽; 김상호(2011b), 〈《純宗大王實錄廳儀軌》의 謄錄 官文書의 연구〉, 《서지학연구》 50, 한국서지학회.

9) 임민혁(2011), 〈조선시대 《謄錄》을 통해 본 왕비의 親迎과 권위〉, 《한국사학사학회》 25, 한국사학사학회.

조영준(2014)은 《龍洞宮謄錄》과 《龍洞宮公事冊》의 분석을 통해 국방과 관련된 등록물의 특징과 古文書의 謄書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록의 表題가 謄錄이 아니더라도 기록물의 유형상 謄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기록들이 있음을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¹⁰⁾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특정되는 등록물을 통해 등록물의 특성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등록물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주제로 삼은 각각의 등록물들은 다양한 유형이지만, 각 등록물이 적어도 ‘후대에 참고하기 위함’이라는 공통적인 목적과 ‘原文書를 抄出하여 베껴 내었다’는 공통적인 편찬체계를 갖추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연구는 모두 기록관리의 결과물로서의 ‘謄錄’에만 주목하였으며, 공적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謄錄’이 생산·활용·보존되는 체계 그 자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등록이라는 개념을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 편찬체계와 등록물의 유형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논문으로는 김혁(2000, 2002), 연갑수(2000), 오향녕(2001), 이형중(2018)의 논문이 있다.

김혁(2000)은 등록물의 성격을 크게 경국대전 체제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국대전》 반포 이전 등록물은 受敎法令集이나 功臣錄·置簿冊 등의 형태로 나타나다가, 《경국대전》 반포 이후에는 謄錄이 보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문서를 베껴 기록하는 謄書의 개념 및 책록하여 종합적으로 구비한다는 의미”로 확장되었다고 보았다.¹¹⁾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중앙관청에서 등록이 지닌 위상과 성격을 분석하여 등록물이 활용을 위한 일종의 참고서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작성 기관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음을 증빙하였다.¹²⁾

연갑수(2000)는 등록물이 조선에서 일종의 典禮에 관한 규범적 역할을

10) 조영준(2014), 〈조선후기 宮房의 謄錄 작성과 고문서의 謄書 실태 : 《龍洞宮謄錄》·《龍洞宮公事冊》의 기초 분석〉, 《고문서연구》 44, 한국고문서학회.

11) 김혁(2000), 〈藏書閣 소장 謄錄의 문헌학적 특성〉, 《장서각》 4, 한국학중앙연구원, 18~19쪽.

12) 김혁(2002), 〈朝鮮後期 中央官廳 記錄物에서 謄錄의 위상〉, 《서지학보》 26, 한국서지학회.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 등록은 일종의 규범집이자 동시에 행정의 前例로 활용되었으며, 그 유형에는 법전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법령집이나 개인들의 신분 또는 소유권을 증빙하기 위한 기록,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한 내용을 적어둔 기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¹³⁾

오항녕(2001)은 등록이라는 개념이 단일 기록물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라기보다 조선시대 기록관리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내었다. 더 나아가 조선시대 기록관리시스템은 이 謄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보았다.¹⁴⁾

이형중(2018)은 등록을 후대의 典例나 典故로 활용하기 위해 기록을 찬집한 일종의 보존용 기록물이자 동시에 그 기록물을 편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해당 논문에서는 등록물의 유형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등록물을 생산·활용·보존하는 체계인 등록체계의 작동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¹⁵⁾

위의 연구들은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조선 기록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謄錄이라는 방식이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조선에서 등록물은 대체로 일종의 前例이자 典故로서 여겨져 왔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들 등록물이 일정한 절차에 따른 생산과 보존 과정을 거쳐 왔음도 알 수 있다.

이 謄錄은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광범위한 시기 동안 활용된 기록관리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조선 초기 實錄 기사에서부터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으로써 謄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謄錄의 방식으로 생산된 기록물 또한 ‘謄錄’으로 지칭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조선시대 내내 등록이 과연 동일한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은 500년을 넘는 긴 시간을 존속하였으며, 이 기간 내에 공통적인 성리학적 통치체제를 견지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어떠한 정치적·경

13) 연갑수(2000), 〈조선후기 등록에 대한 연구〉, 《역사문화연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4) 오항녕(2001), 〈실록(實錄):등록(謄錄)의 위계(位階)〉, 《기록학연구》 3, 한국기록학회.

15) 이형중(2018), 〈조선 등록물의 유형과 그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8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제적·사회적 변동도 없었던 국가는 아니었다. 이는 조선의 기록관리제도와 그 한 축을 담당했던 謄錄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實錄에 등장하는 謄錄의 용례 분석과 함께 현전하는 등록물 등을 검토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謄錄이라는 방식을 중심으로 한 조선 기록관리제도의 전개 과정을 각각 構築期·發展期·安定期로 구분하고, 시기별 기록관리방안으로서 등록의 운용 양상을 고찰하여 등록의 개념적 실체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구축기는太祖부터睿宗까지로 상정한다. 이 시기 조선의 法的·制度的 환경은 정비되는 과정이었으며, 謄錄 또한 국지적인 영역에서만 통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는 국가 차원의 法制 정비가 진행되는 시기였으니만큼 謄錄을 비롯한 공공 영역의 기록관리제도 또한 정립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발전기는成宗부터明宗까지의 시기로서, 이 시기는成宗代 《經國大典》 반포를 통해 일차적으로 조선의 法制가 定立된 시기이다. 등록의 생산·활용·보존을 비롯한 조선의 기록관리제도 또한 法制의 정립과 함께 어느 정도 체계화될 수 있었는데, 이에 따라 등록물의 생산과 활용 또한 다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안정기는宣祖 이후로서 등록이 본격적으로 기록관리의 방안으로 활용된 시기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등록물이 본격적으로 생산·활용·보존된 시기이기도 하다. 기존의 등록물이 주로 法的 성격을 강하게 지닌 受敎·條例나 당시 가장 중요한 국가 업무 중 하나였던 外交·儀禮 등의 영역에 치중하여 편찬되었다면, 안정기의 등록물은 이외 일상의 공무 영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써 편찬·활용되었다. 실제 현전하는 등록물 다수는 이 시기에 생산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등록이 생산·활용·보존된 맥락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축기와 발전기의 경우 현전하는 실물 등록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實錄을 비롯한 史書의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謄錄의 존재를 확인·분석해야 한다는 한계가 명확히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되, 시대 구분에 따른 謄錄의 변화양상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 초기부터 등록물은 단순히 업무 참고를 위해서 편찬·활용된 것만은 아니며, 實錄의 찬수과정에서 일종의 史料로써도 활용되었다. 이는 등록물을 단순히 업무상 前例이자 典故로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등록물은 업무의 참고자료이자 동시에 행위의 證憑이 되는 것이었으며, 역사의 證據가 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謄錄이 지닌 사학사적 의의와 함께 謄錄物 자체의 史料的 가치도 입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등록이라는 방식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기록관리체계를 謄錄體系로 설정하고, 이 등록체계의 운영 양상을 통시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등록체계의 실상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조선 등록체계의 시기별 변화모습을 포착하여 그 원인과 함께 개념이 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후의 등록체계가 실제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였는지를 官撰史料와 현전하는 등록물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조선의 주요 관찬기록인 實錄·儀軌·日記를 謄錄과 비교·분석하여, 조선의 기록관리체계 내에서 등록이 지닌 위상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내고자 한다. 위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총 3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논지를 진행하였다.

먼저 1장에서는 조선 기록관리제도의 형성 과정과 함께 조선 초기 등록체계 구축의 실마리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조선은 건국 과정에서 성리학적 통치이념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성문법에 근거한 法治를 추구하였다. 조선은 《大明律》을 비롯한 明의 法制를 수용하면서 고려의 舊制 및 당시 조선의 현실을 고려한 法制를 정비하였으며,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조선이 法制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分明明律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明의 기록관리제도 운용 양상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1장에서는 이러한 양국 간의 제도적 차이에 주목하여 조선의 기록관리체도가 명과 차별화된 형태로 정립되었으며, 조선의 등록체계 또한 그 결과의 하나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조선 초기 實

錄에 등장하는 謄錄의 용례를 분석하고 조선 기록관리제도의 구축기에 등록이 기록관리의 한 방안으로서 인정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 謄錄이 실제 어떠한 형태로 활용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하였다.

2장은 謄錄이라는 개념이 확장 및 분화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謄錄이 조선의 일반적인 기록관리 방식이자 동시에 그 결과물로서 통용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현전하는 대다수 등록물은 이른바 조선 기록관리제도의 안정기 이후 생산된 것들이 대부분이기에, 구축기와 발전기 등록물에 대한 분석은 實錄을 비롯한 여타의 史料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 것은 사실이다. 다만 實錄 내 謄錄이라는 단어의 등장 빈도와 그 사용례 분석 등을 통해 謄錄이라는 개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의미로까지 확장되었는지는 충분히 논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實錄에 등장하는 謄錄의 용례 분석과 함께 현전하는 등록물을 검토하여 등록물의 유형 및 성격도 몇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謄錄物을 생산하고 활용하고 보존하는 전 과정을 등록체계로 命名하고, 이 등록체계하에서 조선의 기록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2장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선의 등록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당시의 사상적·행정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선의 등록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등록체계는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논증함으로써 조선 등록체계가 지닌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 3장에서는 또 다른 중요기록인 實錄·儀軌·日記의 편찬체계와 그 결과물을 등록과 비교하여, 조선 기록관리체계상에서 등록이 지닌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들이 조선 등록체계와는 어떠한 관계를 통해 생산·활용·보존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이들 기록이 지녔던 위상과 의미가 일반적인 등록물과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實錄의 경우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前王의 治世를 다룬 史書이자 동시에 국가 최고의 위상을 지닌 기록물로서 국왕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 찬수 과정에서부터 엄밀함이 요구되었으며, 그 활용과 보존 또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했다. 儀軌 또한 국가의 주요 儀禮 절차와 함께 관련 문서를 일정한 체제에 따라 정리한 기록으로서 실록청과 유사하게 儀軌廳이라는 별도의 관청에서 이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의궤는 御覽用과 分上用으로 나누어 보존되었다. 이처럼 의궤 또한 국가 중요 기록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편찬 과정에서의 엄정함과 소요되는 물자 또한 일반적인 관찬기록과 차별을 두고 있었다. 日記는 《燕山君日記》나 《光海君日記》같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承政院이나 奎章閣과 같은 비서기관을 비롯하여 일반 관사에서 매일의 기록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을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日記는 實錄이나 儀軌보다 그 위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다만 日記의 성격에 따라 實錄을 구성하는 時政記의 주요 史料가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아예 時政記와 비견되는 史料인 起居注 또는 日曆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實錄·儀軌·日記는 일견 謄錄과 별개의 영역을 지닌 기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기록관리체계가 謄錄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등록체계라면, 이들 기록 또한 謄錄과 단절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으리라 판단된다. 이에 조선의 중요기록인 이들 實錄·儀軌·日記와 謄錄과의 관계를 고찰하여, 조선의 등록체계가 지닌 의미를 상세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一. 조선 초기 謄錄體系의 형성

1. 謄錄과 기록관리제도의 등장

1) 등록의 개념과 이념적 토대

조선은 公的인 영역에서 많은 기록을 생산하였으며, 그 보존 또한 중시하였다. 실제 현전하는 조선의 공적 기록을 살펴보면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그 유형과 성격 또한 제각각이다. 어떤 기록은 단순히 文書の 낱장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이들 문서를 編綴한 형태도 있으며, 冊子나 圖書의 형태로 있기도 있다. 이처럼 조선에서 기록은 다양한 형태로써 생산·활용·보존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謄錄이라는 방식을 통해 편찬된 기록물은 주목할 만하다. 謄錄은 말 그대로 原文書를 베껴(謄) 적는(錄)다는 의미이다. 즉 별도로 존재하는 原文書의 내용 중 보존할만한 것을 정리하여 일종의 寫本記錄을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謄錄을 ‘베껴 적는 것’ 또는 “楷書로 깨끗하게 베껴 초록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⁶⁾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史書상에서 나타나는 謄錄의 용례를 살펴보다도 역시 대체로 문서를 베끼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외에도 과거시험 과정에서 필체로 인한 부정을 막기 위해 답안지를 베껴 적는 행위를 뜻하거나 史書 등의 찬수과정에서 초본을 正書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明實錄》과 《清實錄》¹⁷⁾, 베트남의 《大南寔錄正編》¹⁸⁾, 그리고 일본의 《天皇紀》¹⁹⁾

16) 中國社會科學院 編, 《(온라인)文學網辭典》, 〈謄錄〉, URL: <http://cd.hwxnet.com/view/jhckbpjlljbbihj.html>, 2020.01.12.자 검색; 小学館 編(2006), 《精選版 日本国語大辞典》, 〈謄錄〉, 東京:小学館; 《漢語大詞典》, 〈謄錄〉.

1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제공, 《明·清實錄》, URL: <http://sillok.history.go.kr/mc/main.do> [최종 검색일자: 2020.6.20.] 이하 같다.

등을 살펴보면 謄錄이라는 용어의 등장 빈도는 조선의 史書에 비해 상당히 적으며, 그마저도 단순히 기록을 베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淸實錄의 경우에는 漢文을 滿洲文 등으로 옮겨 적는 행위를 謄錄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明의 法典인 《대명회전》에서도 謄錄이라는 용어를 ‘科擧 시험지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易書’²⁰⁾ 또는 ‘공문서의 내용을 베껴 적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²¹⁾로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이전의 기록에서는 謄錄이라는 용어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고려사》에서 ‘謄錄’이라는 단어는 과거시험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易書를 뜻하는 단어로만 사용되고 있다.²²⁾ 謄錄이라는 단어 자체가 ‘베껴 적음’을 의미하는 일반명사이기에 고려 이전에도 謄錄이라는 단어 자체는 존재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시기의 史料가 상당히 부족하여 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高麗가 謄錄이라는 개념을 易書 외의 것으로도 인지하고 있었는지조차 불투명하다.

그러나 조선은 달랐다. 조선에서 謄錄은 보통 국가의 前例와 典故로

18)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제공, 《Đai-nam thật-lục chính-biên(大南寔錄正編)》, URL: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54100439h> [최종 검색일자: 2020.7.13.]

19)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제공, 《万国通史攬要》(《光格天皇紀》~《孝明天皇紀》), URL: <http://dl.ndl.go.jp/info:ndljp/pid/768660> [최종 검색일자: 2020.7.1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제공, 《孝明天皇紀》, URL: <http://lib.snu.ac.kr> [검색방법: “孝明天皇紀” 키워드 검색, 최종 검색일자: 2020.7.13.]

20) 科擧에서 필체를 통한 不正行爲를 방지하기 위해 답안지를 다른 필체로 베껴 적는 행위(《大明會典》卷77, 〈禮部〉36. 科擧條)를 나타내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21) 《大明會典》卷2, 〈吏部〉1, 官制條; 《大明會典》卷25, 〈戶部〉10, 雜行條; 《大明會典》卷174 翰林院條 등. 이후 인용하는 《대명회전》은 電子版 文淵閣 四庫全書(East View Information Service 제공 온라인 e-book, URL: <https://www.eastview.com/resources/books-and-e-books/siku-quanshu>, [Version 3.0])를 참고하였다. 아울러 四庫全書本은 《明會典》이라는 題號를 쓰나 본고에서는 明에서 반포한 제목을 기준으로 《대명회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22) 《高麗史》卷42, 〈世家〉(恭愍王 19年/서기 1370년) 6월 24일(辛巳): “中書省又移咨曰, (중략) 供給官, 應天府官一人, 在外, 所在府官, 收掌試卷官一人, 彌封官一人, 謄錄官二人, 對讀官四人, 受卷官二人, (후략)”. 아울러 《고려사》에서 謄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예는 이 한 건의 기사뿐이다.(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史料 데이터베이스 인용, URL: <http://db.history.go.kr/KOREA/>, [최종 검색일자: 2020.6.28.] 이후 인용하는 《高麗史》 및 《高麗史節要》 기사는 이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史料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삼을만할 기록을 베껴 적어 이를 別冊으로 비치해 이후의 參考로 삼는 행위 또는 그 책자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었다.²³⁾ 즉 조선에서 ‘謄錄’은 베껴 적는 행위 그 자체보다 原文書를 선별해 정리하여 별도의 기록을 만드는 복합적인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과물인 記錄을 뜻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다. 물론 조선에서도 이상의 의미로만 謄錄이라는 단어를 통용한 것은 아니고, 다른 국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科擧의 부정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易書 또는 단순한 謄書 및 正書を 의미하는 용어로 여전히 謄錄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였다.²⁴⁾ 이처럼 조선에서는 謄錄이라는 단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서라도 謄錄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선에서 사용한 謄錄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풀이될 수 있다. 첫째는 글을 베껴 적는다는 의미의 謄錄이다. 말 그대로 原文書의 내용을 그대로 다른 곳에 베껴 적는 것이다. 이는 謄書·謄寫·筆寫 등으로 통용되기도 하였다.

둘째는 일종의 기록관리 체계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의미로서의 謄錄이다. 原文書를 수집·정리하여 謄錄의 방식으로 成冊한 후 이를 보존하는 전반적인 체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본고에서 이는 등록체계라는 명칭으로 칭한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의 謄錄은 등록하는 방식을 통해 생산된 서책 형태의 기록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備邊司謄錄》, 《議政府謄錄》 등의 제목인 謄錄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實例이다. 실록이나 기타 사료 내에서 사용되는 謄錄이라는 단어 또한 대체로 이 의미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등록물이라는 용어로 칭하였다.

23) 김인걸(1998), 《各司謄錄 資料의 基礎調査 및 研究》, 國史編纂委員會 한국사연구지원 보고서, 4~8쪽; 국립국어원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등록〉.

24) 《成宗實錄》卷215(成宗 19年/서기 1488년) 4월 11일(甲辰); 《中宗實錄》卷20(중종 9年/서기 1514년) 9월 10일(己巳); 《明宗實錄》卷3(明宗 1年/서기 1546년) 4월 17일(癸卯); 《宣祖實錄》卷116(宣祖 32年/서기 1599년) 8월 19일(乙未) 등.(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 인용, URL: <http://sillok.history.go.kr> [최종 검색일자: 2020.6.28.] 이후 인용하는 실록기사 원문 및 해석본은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하였으며, 해석은 필자가 일부 수정·보완하여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물론 어디까지나 謄錄은 베껴 적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며, 이는 조선의 謄錄 또한 寫本記錄의 생산을 전제하는 것이었음을 뜻한다. 寫本記錄이라 함은 굳이 原本記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寫本 자체만으로는 原本을 대체하기 어려우며, 그 위상 또한 原本을 넘어서기 어렵다.

만약 謄錄이라는 방식의 본질이 寫本の 생산이라면 이 謄錄을 조선 고유의 기록 양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謄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 謄錄과 같은 형식이 일반적인 기록관리의 방안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史書 편찬의 전통이 있는 동양 국가들에 있어 기록의 활용 또는 보존을 위해 원문의 기록을 옮겨 적는 행위는 익숙한 기록의 보존 방식이었다. 實錄을 비롯한 여러 史書는 대체로 그 편찬에 있어, 史料를 취사선택한 후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옮겨 적는 과정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문의 기록을 옮겨 적어 별도의 보존용 기록을 제작하는 방식은 西洋 기록관리의 전통에서도 존재해왔음이 확인된다. 김경현(2015)의 논문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는 주요 공문서와 법령을 石碑에 새겨 공공장소에 공시하기도 하였고, 로마는 공화정 시기 뿐만 아니라 제정 시기까지도 주요 법령과 공문서 등을 청동·석재 혹은 백색서판(album)에 새겨 공공장소에 公示하였다.²⁵⁾ 이 금석문들은 단순히 특정 사안에 대한 공시 외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개인에 대한 자격 증빙을 위해서도 활용되었다. 이들 서양 고대 국가가 별도의 보존용 문서를 생산하지 않는 대신 더 큰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금석문을 공공장소에 세운 이유는 아마도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투표권이 있는 시민)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도 있었을 것이다.²⁶⁾ 여하튼 原文書를 보다 손쉽게 활용·

25) Alan L. Boegehold(1972),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Archive at Athens〉,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76, Archaeological Institute of America, 26쪽.(김경현(2015), 〈서기 1~3세기, 로마제국의 공문서 관리〉, 《서양고대사 연구》 42,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147쪽에서 재인용)

26) 김경현(2015), 앞의 논문, 152~162쪽.

보존하기 위해 내용을 ‘ 옮겨 적는 ’ 행위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행동 양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당시의 기록 보존 환경에 따른 것이었다. 근대 이전 시기까지는 원본 문서 자체가 사실상 보존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동일한 문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의 크기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原文書를 편철하기가 제한되었으며, 이를 편철하여 보관한다고 해도 이용 과정에서 해지거나 찢어지는 등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이처럼 현대적 방식의 문서 편철 및 관리체계는 종이의 규격화가 전제되어야만 했다. 종이가 규격화되기 이전까지는 특정한 몇 개 국가 또는 몇몇 용례를 제외하고 공문서에 사용되는 종이의 규격은 통일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原文書의 보관과 활용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이후 규모가 큰 이탈리아의 자치도시로서 보존 기록물의 분량이 상당수 증가한 곳에서는 제본된 형태의 장부를 비롯하여 회의록이나 사법장부 등으로 활용되는 큰 사이즈의 문서집이 존재하였다.²⁷⁾ 동양에서는 조선의 謄錄物과 유사한 문서집성책인 彙編·彙考 등이 있어 이를 업무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어떠한 형태로든 낱장의 문서를 각각 관리하는 것보다 문서를 묶어 하나의 책자 또는 문서철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그 활용과 보관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동·서양 각국에서는 기록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본을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원본을 筆寫한 기록은 어디까지나 사본이기에 원본을 본질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본이 원본과 같은 위상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공인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생산되어야 했으며, 이렇게 생산된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정이 있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제작된 사본이 원본을 갈음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야만 했는데, 그 장치는 서명이나 인장과 같은 표식이기도 하였고 성문법 등에 명시된 절차와 같은 규정이기도 하였다.

27) 안드레아 조르지, 김정하(2009), 〈이탈리아의 기록물과 기록물관리학〉, 《규장각》 3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18쪽.

앞서 언급한 로마의 사례도 이와 같았다. 제정 로마의 개인 또는 지자체는 중앙이 교부한 문서를 현대의 기록관과 같은 개념인 아카이브(Archive)에 보존·관리하였는데,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을 경우 중앙 정부에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었다. 사본이 교부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황제에게 사본의 교부를 요청해야 하며, 황제가 이를 인정하면 이에 관한 문서와 함께 사본이 교부되고 관련 내용은 금석문으로 새겨졌다.²⁸⁾ 로마에서 문서의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황제의 승인과 함께 公示라는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이다.

이처럼 原文書의 손쉬운 활용과 보존을 위해 기록의 사본을 제작하였으며, 이 사본이 특정한 과정을 거쳐 원본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는 조선의 謄錄物과 여타 국가의 사례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역사의 보편적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보편적인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러한 지향점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과정과 결과물은 각국마다 상이하다. 이는 해당 국가가 처한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에 작용했던 이념에 따른 것이다.

조선은 분명 일반적인 국가들과 달리 寫本記錄으로서의 등록물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 寫本記錄이 궁극적으로는 原文書를 대체하기도 하였다. 조선의 謄錄은 분명 原文書를 ‘베껴 적은’ 寫本記錄임에도 불구하고 前例이자 典故로서 原文書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인식되었음이 여러 史料를 통해 확인된다.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의 法典에서는 謄錄이라는 단어를 ‘法典에 준하는 효력을 지닌 기록물’ 또는 ‘일종의 典故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용하였다. 《經國大典》과 《續大典》의 각 序文에 등장하는 《謄錄》의 존재나²⁹⁾, 《經國大典》의 藏文書條에서 규정한 書狀官 日記의 謄錄 규정³⁰⁾, 그리고 《續大典》과 《大典通編》에서 확인되는 官司 謄錄物の 존

28) 김경현(2015), 앞의 논문, 168쪽.

29) 《經國大典》, 〈經國大典序〉, “(진략) 猶孜孜圖理, 恢弘制作, 嘗謂左右曰, 我祖宗深仁厚澤宏規懿範播在令章者, 曰元續六典謄錄, 又有累降教旨, 法非不美, 官吏庸愚, 眩於奉行, 良由科條浩繁, 前後牴牾, 不一大定耳.”; 《續大典》, 〈續大典序〉, “(진략) 惟我世宗, 六典謄錄, 倣于二典, 世祖, 折衷六典, 著爲經國大典, 成廟續錄, 中廟後續錄, 實羽翼大典, 而及我肅考, 有輯錄通考之申修焉.”

재³¹⁾ 등이 그리하다. 實錄에서도 謄錄이 法에 준하는 지침이나 典故로서 활용되고 있음이 다수 확인되는데, 대표적으로 《六典謄錄》이나 각종 儀禮에 관한 謄錄物 등이 있다.³²⁾ 이 외에도 다수의 업무 과정에서 謄錄物이 前例이자 典故로써 활용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謄錄物은 오히려 原文書에 앞서 참고되는 사례가 잦았는데, 이는 활용 편의성에 따른 현상이 아닌가 한다. 실제 謄錄物이 散失되자 참고를 위해 外方에 비치된 관련 文書를 수송케 한 사례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다.³³⁾ 조선에서 謄錄物은 原本을 공식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통용된 것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서술에 앞서 본 항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논지 전개를 위해 문서와 기록의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최승희(1989)의 정의에 따르면 문서는 ‘발급자와 수취자 사이에 특정한 目的을 가지고 受發되는 글’을 뜻한다.³⁴⁾ 그리고 이 문서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가 생산되는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며, 문서를 주고받는 대상 또한 명시되어야만 한다. 조선에서는 문서라는 표현 외에도 文件, 文字, 文簿 등의 표현이 함께 사용되었다. 그리고 문서행정 은 말 그대로 京外各司가 문서를 통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로서 행정의 수행을 위한 전제이다. 이 문서행정체계는 문서의 생산, 書式을 포함한 相通式의 활용, 문서의 행정상 이용과 보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0) 《經國大典》, 〈禮典〉, 藏文書條, “書狀官, 逐日記事, 回還後啓下, 承文院謄錄.”

31) 《續大典》, 〈刑典〉, 殺獄條, “(전략) 曾前參以情法, 減律之類, 雖不條列于續典, 此則俱在該曹謄錄.”; 《大典通編》, 〈大典通編序〉, “(전략) 自甲子迄今日, 絲綸之屬於關和者, 亦非一二, 而諸司謄錄, 漫無統紀, 尋流而或昧於源, 稽往而或遺於來, 舉行易眩, 舞弄多端.”; 《大典通編》, 〈禮典〉, 獎勸條, “承文院官員, 每旬, 提調講所讀書[詩, 書, (중략) 至正條格, 御製大誥, 朴通事, 老乞大, 吏文謄錄.]”

32) 《世宗實錄》卷42(世宗 10年/서기 1428년) 11월 29일(丁丑); 《世宗實錄》卷120(世宗 30年/서기 1448년) 5월 9일(癸巳); 《文宗實錄》卷5(文宗 1年/서기 1451년) 1월 25일(乙丑); 《中宗實錄》卷64(中宗 23年/서기 1528년) 윤10월 5일(癸酉); 《中宗實錄》卷83(中宗 31年/서기 1536년) 12월 4일(乙酉); 《宣祖實錄》卷132(宣祖 33年/서기 1600년) 12월 13일(壬午) 등.

33) 《仁祖實錄》卷20(仁祖 7年/서기 1629년) 5월 13일(丁酉): “禮曹啓曰, 倭人接待謄錄, 散失於兵亂中, 曾已行會于慶尙道, 使之輸送營中之文書矣.”

34) 최승희(1989), 《(改正增補版)한국고문서연구》, 서울:지식산업사, 22쪽.

조선의 공적 기록은 공문서를 포함하여 사관의 史草와 기관의 日曆, 帳簿, 橫看 등 국가 업무행위 과정에서 생산·접수한 문자 형태의 자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³⁵⁾ 그리고 기록관리체계는 이들 기록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생산·활용·보존되는 일련의 조직화된 과정을 의미한다.³⁶⁾ 본고의 序論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의 기록관리는 원본 그 자체를 활용·보존하는 방식과 원본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추려 별도의 기록물로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謄錄은 후자를 대표하는 방식 중 하나로서 본 논문에서는 이 謄錄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체계인 등록체계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의 기록관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原文 그 자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서술하겠지만 《經國大典》을 비롯한 조선의 法典에서는 공문서의 생산부터 그 활용과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原文의 경우 그 효용이 끝나면 기록을 分類하여 종류별로 묶고(作綜) 찌지를 붙여(懸籤) 관리토록 하고 있다.³⁷⁾

35) 실록에서 나타나는 ‘記錄’의 용례를 보면 그러하다. 《太祖實錄》 卷2(太祖 1年/서기 1392년) 9월 14일(壬辰): “藝文春秋館上言三事, (중략)又令都評議使司, 檢詳條例司, 每於月季, 悉書條例, 送于本館, 以憑記錄, 永爲恒式. 上皆許之.”; 《太宗實錄》 卷21(太宗 11年/서기 1411년) 6월 3일(壬辰): “議政府上應奉司事宜, 啓曰, (중략) 每於朔望, 擬出題目, 課試各呈奏啓, 第其分數, 置簿記錄, 以憑歲季試才之考.”; 《世宗實錄》 卷52(世宗 13年/서기 1431년) 5월 22일(乙酉): “承政院啓, (중략) 乞依律文, 文武官犯罪杖以上, 明白立文案, 每年一考, 記錄罪名, 九年一次通考所犯次數輕重, 以憑黜陟之法, 但贖其罪, 通考記錄及其考滿當遷, 隨其所犯次數輕重, 降職有差.”; 《明宗實錄》 卷1(明宗 卽位年/서기 1545년) 8월 28일(戊午): “[彦迪坐稍遠, 但聞其舉己名, 心疑之, 出取注書日記, 檢得其誣告之實. 然又不欲仁鏡得重罪, 乃書啓曰, 仁鏡之言, 必不如是, 恐注書記錄之誤也.]”

36) 다만 현대적 관점에서 문서와 기록의 정의는 본 논문에서 내린 정의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문서란 “(1)손으로 쓰거나 인쇄된 모든 것, (2)일정 매체에 고정된 정보나 데이터, (3) 공식 기록의 일부가 아닌 비기록(non-records)으로서 일정 매체에 고정된 정보나 데이터, (4) 증거의 입증에 사용되는 법적·공식적 성격의 자료.”로 정의하고 있다.(한국기록학회(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역사비평사, 99~100쪽.) 또한 기록은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로서, 일정한 내용·구조·맥락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한국기록학회(2008), 위의 책, 48쪽.)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61호, 2019.12.3. 일부개정].

다른 하나는 일종의 寫本記錄을 생산하는 것인데, 原文 내용 중 활용·보존할 부분을 별도의 기록물로 옮겨 적어 이를 통해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사본기록은 그 목적에 따라 보존성을 극대화 한 방식으로 編纂·收藏되기도 하고, 활용성을 고려하여 상시 열람이 가능토록 편찬·관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기록으로는 국가의 당대사이자 동시에 국왕의 국정행위를 수록한 기록물인 實錄, 국가 의례에 대한 보고자료이자 동시에 참고자료인 儀軌, 행정업무의 典故이자 前例가 되는 謄錄 등이 있다.

조선의 公文書는 기본적으로 공적인 행정업무 그 자체를 수행하기 위해 생산되는 것이었다. 국왕에게 올리는 狀啓나 疏劄, 국왕이 검토하여 내리는 啓下文書와 下批, 官司간에 오고가는 關文·牒呈·帖 등은 모두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생산되는 기록들이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상시적으로 활용된다. 이들 기록은 現用性を 지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들 기록이 언제까지나 現用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기록은 그 기간의 길고 짧음이 다를지언정 반드시 그 현재적 효용이 종료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되어있다. 업무상 직접적·상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없는 기록들은 상황에 따라 이른바 已行文書나 久遠文書로서 별도의 장소에 비치·보존되기도 하고, 아예 폐기되어 休紙로 재탄생하기도 하였다.

議政府에서 公事を 傳掌하는 일로 啓目하길,
“하나. 府中(의정부)에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文書는 六曹 郎廳을 불러와서 교부토록 하고, 이미 시행한 文書(已行文書)는 架閣庫에 옮겨 보존합니다.”³⁸⁾

戶曹에서 아뢰기를, “傳旨를 정중히 받들어, 장차 京畿의 폐단을 구제할 條件을 다음과 같이 갖추어 적습니다. (중략)

하나. 各道에서 軍器監에 납부하는 休紙는 원래 정한 수량과 추가로 정

37) 《經國大典》, 〈禮典〉, 藏文書條, “諸司諸邑文書, 分類作綜懸籤, 各藏之.”

38) 《太宗實錄》卷27(太宗 14年/서기 1414년) 4월 17일(庚申): “議政府啓目公事傳掌事, 一, 府中未行文書, 六曹郎廳招來交付, 已行文書, 移藏架閣庫.”

한 수량 공히 1,750권 및 1,020근인데, 지금 1,095권과 14,180근이 있고 1년에 소용되는 것은 불과 2,373권 및 1,020근에 불과하니 청컨대 정기에 서 공납하는 230권은 감하소서.[古文書로서 활용하지 않는 것은 세속에서 이르길 休紙라 한다.]”³⁹⁾

政院에 전교하여 말씀하시길, “전일에 刑曹가 典獄의 죄수들이 염병으로 많이 죽으니 前例에 의거하여 옛 兵曹에 옮겨 가두어야 한다 했는데, 兵曹가 (옛 兵曹에는) 久遠文書 및 군사의 布物이 보관되어 있어 옮겨 가두는 것이 편치 않다 하였다.”⁴⁰⁾

그런데 現用性を 상실한 기록이라고 해서 모두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기록은 행정상 간헐적으로 참고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였고, 어떤 기록은 하나의 典故로서 삼을만한 내용을 담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기록은 후대에 전할 중요한 史料로서의 가치를 지니기도 하였다. 때문에 그 현용가치가 종료된 기록이라 할지라도, 중요 기록의 경우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謄錄이었다.

謄錄이 조선 초기부터 공식적인 업무의 일환으로서 시행되었음은 《太宗實錄》을 통해 알 수 있다. 해당 실록의 기사에서는 禮曹가 檢詳條例司의 소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檢詳條例司는 문서를 謄錄하는 소임이 가법지 않다.”⁴¹⁾고 언급하고 있어, 적어도 이 당시부터 謄錄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이 확인된다. 다만 謄錄이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등록은 현용가치가 종료된 기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였다.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는 문서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함이 아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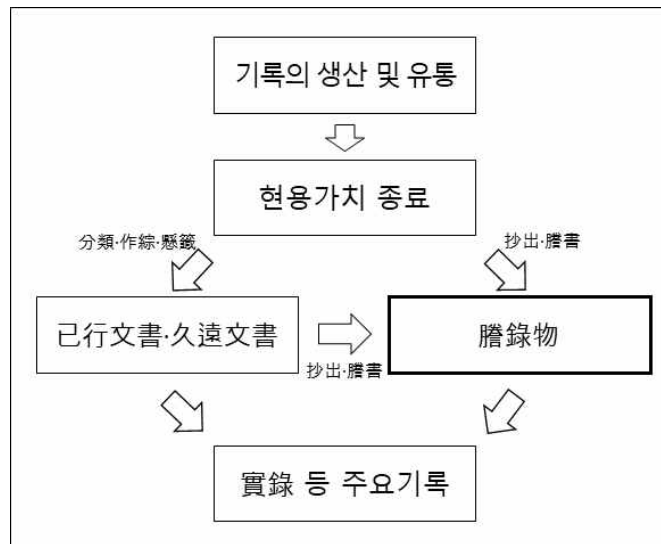
39) 《世宗實錄》卷29(世宗 7年/서기 1425년) 8월 22일(戊子): “戶曹啓, 敬奉傳旨, 將京畿救弊條件, 具錄如左, (중략) 一, 各道一年軍器監納休紙元加定之數, 共一千七百五十卷及一千二十斤, 見在一千九十五卷及一萬四千一百八十斤, 一年所用, 不過二千三百七十三卷及一千二十斤, 請減京畿所貢二百三十卷. [古文書不用者, 俗謂之休紙.]”

40) 《中宗實錄》卷98(中宗 37年/서기 1542년) 4월 8일(戊午): “傳于政院曰, 前日刑曹以爲, 典獄囚人, 染病多死, 依前例移囚于古兵曹. 兵曹以爲, 久遠文書及軍士布物藏在, 以移囚爲未便.”

41) 《太宗實錄》卷32(太宗 16年/서기 1416년) 7월 8일(丁酉): “禮曹啓, 檢詳條例司, 文書謄錄, 其任匪輕.”

시행된 문서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즉 조선에서 수행되는 기록관리의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업무수행을 위한 原文書가 생산되고 유통·시행된다. 그리고 시행이 종료된 문서는 향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존 여부가 결정되며, 그 보존은 크게 문서 자체를 보존하는 방식과 謄錄을 통한 별도의 기록책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已行·久遠文書 중 일부의 경우는 다시 선별되어 別冊에 謄錄되기도 하였다.⁴²⁾ 그리고 이들 보존문서와 등록물은 다시 實錄 등 국가 중요기록의 찬수 과정에 동원되어 중요 資料로 인용되었다. 이를 간략히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조선 기록관리체계의 기본 도식

42) 《承政院日記》149冊(孝宗 9年/서기 1658년) 3월 17일(甲寅): “禮曹啓曰, (중략), 而本曹元無謄錄, 只有積年文書, 故凡有事, 參考舊例, 則汗漫文書, 急遽之間, 不能遍考, 或憑執吏之口, 非但事體未安, 亦多襲謬之違, 不可不裒集, 取流來文書, 作一謄錄, 以便考閱之地.”(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 인용, URL: <http://sjw.history.go.kr> [최종 검색일자: 2020.6.28.] 이후 인용하는 승정원일기 기사 원문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그런데 이 謄錄은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일종의 寫本記錄을 생산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寫本이 原本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사본 생산 과정에서 상존하는 기록의 위·변조 위험과 함께 原文의 내용이 誤讀·誤解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謄錄은 대표적인 기록관리 방안으로서 다방면에 활용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지닌 등록물이 편찬·활용·보존되었다. 조선에서 등록물은 단순한 사본기록이 아닌 공무의 증빙이자 동시에 典故였으며, 더 나아가 實錄纂修 과정에서도 중시될만한 史料로까지 인정되었다.

이처럼 조선의 謄錄物이 사본기록임에도 불구하고 原文書와 동일한 신뢰를 지닌 기록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선의 기록관리제도와 함께 이 기록관리제도를 구축·운용케 한 통치이념 및 체제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조선의 등록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위해서는 조선의 통치이념 및 그 체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에 근간한 조선 기록관리제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은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新興 武人 세력과 흔히 新進士大夫로 칭해지는 新進 文人 세력에 의해 高麗를 무너뜨리고 開創한 국가였다. 조선은 국가통치이념의 철학적 근간을 性理學으로 삼았으며, 성리학적 文治主義를 통치의 기본체제로 삼았다. 이는 조선 개국 주도세력의 성향에 기인함과 함께 前朝 고려와는 차별적인 통치철학이 新王朝에 필요했기 때문이었다.⁴³⁾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의 개국세력들은 성리학을 조선의 유일한 통치이념으로 삼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우선 기존 고려 조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온 불교 세력을 공격하였고, 새로운 국가의 관료로서 성리학적 가치관이 내재화된 인력을 선발하였다. 또한 성리학의 정치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고안하였고, 이에 근간한 관료체제를 운용하고자 하였다.

43) 김충렬(1984), 《高麗儒學史》,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이병도(1987), 《韓國儒學史》, 서울:아세아문화사; 문철영(2000), 〈高麗中·後期 儒學思想 研究〉,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재훈(2001), 〈朝鮮前期 儒敎政治思想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등을 참고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의 관료제를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체제로서 분석하였는데, 대체로 국왕을 정점으로 한 文班 중심의 관료체제로 보았다.⁴⁴⁾ 대표적인 연구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먼저 조선이 유교적 이념을 기반으로 한 近世的 관료제 형태의 ‘儒敎官僚制’ 국가였다고 규정한 연구가 있다.⁴⁵⁾ 또한 朱子學(性理學)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지배체제로서 ‘兩班中心의 官僚制’ 국가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⁴⁶⁾ 그리고 조선을 양반 관료제적 국가라기보다는 ‘관인(官人, Mandarin) 국가적 집권관료제’ 국가로 인식하는 연구도 있으며⁴⁷⁾, 조선을 지배계급으로서의 사대부가 운영한 사대부사회로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구축한 국가이자 Max Weber가 정의한 근대관료제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바라본 연구가 있기도 하다.⁴⁸⁾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비록 조선이 실제의 근대 관료제형 국가로 완전히 이행되지는 못했을지라도, 儒敎的 질서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관료제 국가였음이 확인된다. 물론 고려 역시 건국 초기부터 唐·宋의 제도를 차용한 3省6部の 정치체제를 운용하고 있었다.⁴⁹⁾ 그리고 이에 더해 유교적 통치이념을 구체화하여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儒學者를 관료로 선발하여 정치·행정 분야의 핵심 역할을 각기 수행토록 하였다.⁵⁰⁾ 또

44) 한영우(1983a), 《朝鮮前期社會經濟研究》, 서울:을유문화사; 이성무(1990), 《조선시대 양반연구》, 서울:일조각; 이태진(1990), 〈朝鮮王朝의 儒敎政治와 王權〉, 《韓國史論》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김창현(1999), 《조선초기 문과급제자 연구》, 서울:일조각 등이 있다.

45) 박병련(1991), 〈朝鮮朝 儒敎官僚制의 性格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46) 김운태(1995), 《(第二全訂增補版)朝鮮王朝 政治·行政史[近世編]》, 서울:박영사.

47) 김정기(2008),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관인(mandarin)의 참여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3, 한국행정사학회.

48) 유승원(2020), 《사대부시대의 사회사: 조선의 계급·의식·정치·경제구조》, 고양:역사비평사.

49) 다만 그 운영의 실제에 대해서는 의정기관으로서 단일기관인 中書門下省이 권력을 행사하여 실제로는 2省6部로 운영되었다는 견해(변태섭(197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서울:일조각; 김대식(2010), 《고려전기 중앙관제의 성립》, 서울:경인문화사 등 참고)가 학계의 主論이나 中書門下省은 단일 기구가 아니며 中書省과 門下省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실제로도 3省6部の 운영체제가 지속되었다는 異見(이정훈(2007), 《고려전기 정치제도 연구》, 서울:혜안; 최정환(2009), 《(새로 본)高麗政治制度 研究》, 대구:경북대학교 출판부 등 참고)도 있다.

50) 김대식(2010), 위의 책, 92~106쪽.

한 과거제 실시 이후 고려의 일반적인 관인 등용은 과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과거를 통해 관계에 진출한 관료가 정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⁵¹⁾ 이 외에도 고려는 유교적 문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나름의 法制를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유교 관료제적 국가의 典型을 보였다.⁵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은 분명 前朝인 高麗와 구분될 수 있는 조선의 정치·경제·행정체제를 탄생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리학을 바라본 관료·학자 층은 조선의 건국과 함께 정치적 주류세력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이들 麗末鮮初의 성리학자들은 현실의 영역에서 성리학적 지향점을 구체화하여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에는 道學을 중시한 사림의 집권으로 인해 성리학적 관료제는 사림세력의 정치적 지향성이 더욱 강하게 반영된 형태로 완성·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조선에서 새로이 정비된 정치·행정체제의 根底에는 성리학이 있었다.

조선의 건국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이들은 性理學的 經世論에 보다 충실했던 정도전을 위시한 급진혁명파 인물들이었다.⁵³⁾ 조선이 건국될 당시 태조는 이를 주도한 정도전과 그 주변 세력을 적극 지원·의지하였으며, 정도전 또한 이성계라는 정치적 기반을 통해 자신의 성리학적 신념을 반영하여 조선의 정치·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정도전이 추구한 조선의 정치·행정체제는 이른바 朱熹가 언급한 ‘천하의 紀綱’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었다. 천하의 紀綱이란 재상이 못 직책을 통솔함과 함께 臺省을 총괄하고, 臺省은 諸路를, 諸路는 州를, 州는 縣을, 縣은 鄉을 각기 총괄하면서 천자와 재상이 서로 그 옳고 그름을 살피고 政令을 내는 것이었다.⁵⁴⁾ 때문에 정도전은 국왕과 재상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51) 박창희(1973), 〈高麗時代 官僚制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58, 역사학회, 35쪽.

52) 《高麗史節要》卷2(成宗總序): “(전략) 天資嚴正, 器宇寬洪, 立法定制, 崇獎節義, 求賢恤民, 政治有可觀者.”; 《高麗史》卷75, 〈志〉, 〈選舉 三〉, 銓注 條: “二十七年正月, 有司奏, 按令典, 工商家, 執技事上, 專其業, 不得入仕與士齒.”; 《高麗史》卷84, 〈志〉, 〈刑法〉; 《增補文獻備考》卷127, 〈刑考〉一, 〈刑制〉 등.

53) 정재훈(2001), 앞의 학위논문, 36쪽.

수행하는 통치체제와 재상이 지방 말단인 鄕까지도 직접 파악하는 齊民의 지배체제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⁵⁵⁾

정도전에게 있어 조선의 성리학적 관료제는 국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그 정점에 두면서도 재상이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정도전은 혈통에 따라 君主가 되는 이의 자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宰相은 이러한 위험요소를 통제하여 군주를 보좌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스스로를 바르게(正) 하여 군주를 바로잡고(格), 사람을 분별하여(知) 업무(事)를 맡기는(處)’ 것이 재상의 책무라고 여겼다.⁵⁶⁾ 또한 정도전은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재상을 정점으로 한 官制의 구축과 함께, 해당 官制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거를 통한 현명한 인재 수급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⁵⁷⁾ 그리고 일원적 집권체제를 확립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 유력 세력인 豪族이나 세도가인 權貴 등에 의한 私的 지배를 막고, 성리학적 理에 근간한 公的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⁵⁸⁾

정도전은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먼저 법령의 구축과 그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는 법령을 세우는 이유가 백성들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함이며, 정치와 행정은 이렇게 세워진 법(憲典)에 근거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⁵⁹⁾ 그에게 있어 법은 백성들을

54) 《朱子大全》卷11, 〈庚子應詔封事〉, “一家則有一家之綱紀, 一國則有一國之綱紀, 若乃鄉總於縣, 縣總於州, 州總於諸路, 諸路總於臺省, 臺省總於宰相, 宰相兼統衆職, 以與天子, 相可否而出政令, 此則天下之綱紀也.”(도현철(2004), 〈조선의 건국과 유교문화의 확대〉, 《동방학지》 12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7쪽에서 재인용. 《朱子大全》 원문은 電子版 文淵閣 四庫全書本을 참고하였다. 이후 같다.)

55) 도현철(2004), 위의 논문, 197~198쪽.

56) 《三峰集》卷7, 〈朝鮮經國典〉, 〈治典〉(摠序): “冢宰之謂也, 上以承君父, 下以統百官治萬民, 厥職大矣. 且人主之材, 有昏明強弱之不同, 順其美而匡其惡, 獻其可而替其否, 以納於大中之域. 故曰相也, 輔相之義也. (중략) 宋大儒眞西山之論相業曰, 正己格君, 知人處事, 旨哉, 言也. 臣愚以謂正己格君, 乃治典之本, 而知人處事, 治典之所由行也, 故於此并論之.”

57) 《三峰集》卷7, 〈朝鮮經國典〉, 〈治典〉(官制), (入官)

58) 도현철(2004), 앞의 논문, 197~200쪽.

59) 《三峰集》卷8, 〈朝鮮經國典〉, 〈憲典〉(摠序): “(전략) 爰命攸司將, 大明律譯以方言, 使

위험하여 통제하는 수단이 아닌, 올바른 정치와 행정을 이루어 형벌이 필요 없는 사회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仁政과 德治를 추구하는 정도전의 입장에서 형벌이나 법령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이어야만 했던 것이다.⁶⁰⁾ 그러나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민생의 안정을 위해 법으로써 다스려야 할 필요성도 분명 존재하였다.⁶¹⁾ 때문에 정도전은 先王이 天理에 인하여 법을 세운 것처럼, 조선 또한 天理에 따라 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⁶²⁾ 이러한 정도전의 사상은 조선의 성리학적 관료제 구축과 운영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는 태조의 즉위교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1. 前朝(고려) 말에는 율법에 정해진 제도가 없어 刑曹·巡軍府·街衢所가 각자 소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알맞지 못하였는데, (중략) 지금부터 京外의 刑을 결정하는 관원은 무릇 公私의 범죄가 반드시 《대명률》에서 추탈하는 宣勅에 해당되는 것이면 謝貼을 거두고, 자산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면 가산을 몰수하며, 그 附過還職(필자 주: 범한 죄를 적어두고 다시 관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나 贖錢을 거둬 해임하는 등의 일이면 모두 율문에 의거하여 판단하고, 그 전의 폐단은 답습하지 말며 街衢所는 폐지할 것이다.⁶³⁾

조선은 이처럼 명문화된 법에 근거하여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행정의 수단은 대체로 文書를 통하도록 하였다. 이는 생산·수발되는 공문서를 통해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성리학에서 추구한 ‘公’개념과도 연관되는 것이었다.

衆易曉，凡所斷決，皆用此律，所以上奉帝範，下重民命也.”；〈憲典〉(後序)：“臣又按憲者，六典之一，而五者莫不資是以有成。(중략) 而憲典無乎不在，輔治之法。”

60) 한영우(2002),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서울:지식산업사, 152~153쪽.

61) 《三峰集》卷7, 〈朝鮮經國典〉, 〈賦典〉(賦稅): “爲人上者，執法以治之，使爭者平鬪者和，而後民生安焉.”

62) 《三峰集》卷7, 〈朝鮮經國典〉, 〈賦典〉(賦稅): “蓋先王所以立其法者，天理也，後世所以作其弊者，人欲也.”

63) 《太祖實錄》卷1(太祖 1年/서기 1392년) 7월 28일(丁未): “一，前朝之季，律無定制，(중략) 自今京外刑決官，凡公私罪犯，必該大明律，追奪宣勅者，乃收謝貼，該資產沒官者，乃沒家產。其附過還職收贖解任等事，一依律文科斷，毋蹈前弊，街衢革去.”

조정의 기강에 이르러서는 더욱 엄격해야 하는 바입니다. 위로는 임금에서부터 아래로는 여러 執事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職業(職分)이 있어서 침범할 수 없습니다. 대개 군주가 비록 制命하는 것을 직분으로 한다 해도, (制命 시에는) 반드시 대신에게 묻고 給舍(필자 주: 給事中和 中書舍人, 즉 諫官을 의미)를 참여시켜 깊이 의논케 하여 公議가 있는 바를 가린 연후에야 王庭(朝廷)에서 밝히고 명백히 명령을 내어 공적으로 행하기에 조정은 존엄해지고 명령은 자세히 살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당한 것이 있더라도 천하가 모두 그 그릇됨이 누구에게 나왔는지를 훤히 알게 되니 임금에게만 그 책임이 오로지 닿는 것이 아니요, 議論하고자 하는 신하 또한 뜻과 말을 다해 거리끼는 바가 없게 됩니다.⁶⁴⁾

朱熹가 언급한 이 대목은 성리학적 관점에서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로는 임금에서부터 아래로는 여러 執事에 이르기까지 각 職分은 엄격히 구분되지만, 이 엄격한 상하의 구분이 군주의 獨斷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군주는 군주의 역할을, 재상은 재상의 역할을, 대간은 대간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公事는 각각의 위치에 처한 이들이 公議를 가려 명명백백하게 시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 公이라는 것은 性理學 이전의 儒敎에서도 존재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公’개념이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조직, 公共性, 평등한 분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었다면, 朱熹는 天理와 仁 개념을 결합하여 ‘公’개념의 혁신과 심화를 가져왔다.⁶⁵⁾ 朱熹에게 있어 公은 仁의 理 그 자체였으며, 天理로서의 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천지만물의 공생과 조화를 지향하는 것이 公이 되며,

64) 《晦菴集》卷14, 〈奏割〉, 〈乞瑞慶節不受賀割子〉, “至於朝廷紀綱, 尤所當嚴. 上自人主, 以下至於百執事, 各有職業, 不可相侵. 蓋君雖以制命爲職, 然必謀之大臣, 參之給舍, 使之熟議, 以求公議之所在, 然後揚于王庭, 明出命令而公行之. 是以朝廷尊嚴, 命令詳審, 雖有不當, 天下亦皆曉然知, 其謬之出於某人, 而人主不至獨任其責, 臣下欲議之者, 亦得以極意盡言而無所憚.”(본 논문에서 인용한 《晦菴集》은 電子版 文淵閣 四庫全書本을 참고하였다. 이하 같다.)

65) 나종석(2013), 〈주희의 공(公) 개념과 유교적 공공성(公共性) 이론에 대한 연구〉, 《東方學志》16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5~8쪽.

개인의 수양과 함께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은 공을 실현하는 것이다.⁶⁶⁾ 성리학적 통치철학을 적극 수용한 조선 또한 이 公論政治를 추구하게 되었다. 조선 건국 초기 公論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간원의 上書는 公論政治에 대한 당시의 지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諫官이 上書하여 말하길, “신 등이 가만히 公論이란 것을 이르건대, 天下國家의 元氣입니다. 諫諍은 공론의 根柢가 되고 佞諛는 공론의 蠱賊이 되니, (중략) 국가에 있어 공론은 진실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⁶⁷⁾

이처럼 조선에서 公論은 국가를 올바르게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이 公論이라는 개념은 사림이 집권한 이후 더욱 중시되었는데, 공론의 주재자가 사림이라는 인식이 그 근거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⁶⁸⁾ 이 公論政治 상에서는 소통·공개성·공정성·합의 등의 가치가 특히 강조되었다.⁶⁹⁾ 그렇기에 조선에서 公事인 행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으며, 그 책임소재 또한 천하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문서와 기록에 기반을 둔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공적 행위에 대한 소통·공개·합의와 그 책임소재의 구분은 물리적인 고정된 형태로 남는 공인된 문서와 기록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용이하기 때문이다. 조선이 문서 및 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했던 배경에는 성리학적 가치관에 근간한 公論政治가 있었던 것이다.

국왕이 이 公論과 原則을 무시한 전횡을 일삼거나 성리학적 가치관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臺諫은 주어진 諫爭權으로 직접 문제를 제기

66) 나종석(2013), 위의 논문, 9~11쪽.

67) 《太祖實錄》 卷2(太祖 1年/서기 1392년) 11월 9일(丙戌): “諫官上書言, 臣等竊謂公論者, 天下國家之元氣也. 諫諍爲公論之根柢, 佞諛爲公論之蠱賊, (중략) 公論之於國家, 誠不可一日而無也.”

68) 이상익(2001), 〈퇴계와 율곡의 정치에 대한 인식〉, 《퇴계학논집》 110, 퇴계학연구원, 406~410쪽.

69) 배수호&김도영(2014), 〈유학(儒學)에서의 공공성 논의: 행정학 맥락에서 이해하기〉, 《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3호, 한국행정학회, 87쪽.

하였고 史官은 史筆을 통해 그 옳고 그름을 논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왕과 신료들의 언행을 비롯한各司의 문서는 時政記와 史草 및各司에서 생산한 등록물 등에 남겨지게 된다.

敎旨에서, “지금부터 매일 朝啓에는 史官 2인이 紙筆을 가지고 입시하여 일을 기록하며, 代言과 한시에 물러가도록 하라. 朝啓 후에는 한 사람이 前例에 의거하여 일을 기록하라.”⁷⁰⁾

春秋館이 敎旨를 받들어 記事의 조목을 넓히는 의론으로써 아뢰기를, “하나, 《원육전》의 한 款을 삼가 살피건대, ‘지금 京外 大小 衙門이 무릇 시행하는 일로 勸戒가 될 만한 것은 명백하게 글로 써서 나타내 本館(춘추관)으로 보내어 증빙으로써 記事토록 하고 영구히 恒式으로 삼는다.’ 했는데, 그 후 司憲府와 義禁府는 단지 罪名啓本만 시행하고 禮曹 또한 變怪·孝順 등의 일만 간간히 보낼 뿐입니다. 그 나머지各司는 모두 거행치 않으니 심히 편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거듭 밝혀 거행하소서.

하나, 6承旨·左右司諫·議政府 舍人·書筵官 2員과 8翰林 등은 비록 이미 時事의 기록을 관장하고 있으나, (중략) 마땅히 執義 이하 및 郎廳 중 1인으로 史官을 겸하게 하시고 經筵官은 書筵의 예에 의해 2員으로 兼帶토록 하여 記事를 넓히소서. (중략)

하나, 대간의 상소와 신하들이 상서하여 일을 아뢴 것을 記事官으로 하여금 기록하여 바치게 하여 記載에 대비하소서. (중략)” 하니, 따랐다.⁷¹⁾

승정원에 전교하여 말씀하길, “世宗께서 즉위하신 이후 행하신 事跡이 碑文에 실릴 만한 것은 儒士 2인으로 하여금 日記를 考閱하여 抄錄해 아뢰도록 하라.”⁷²⁾

70) 《世宗實錄》卷30(世宗 7年/서기 1425년) 11월 3일(戊戌): “敎旨, 今後每日朝啓, 史官二人操紙筆, 入侍記事, 代言一時退出. 朝啓後, 一人依前例記事.”

71) 《世宗實錄》卷66(世宗 16年/서기 1434년) 11월 5일(戊寅): “春秋館承敎旨, 擬議廣記事之條以啓, 一, 謹按元六典一款, 今京外大小衙門凡所施行之事, 可爲勸戒者, 明白開寫, 送于本館, 以憑記事, 永爲恒式, 厥後司憲府義禁府, 只將罪名啓本, 禮曹亦將變怪孝順等事, 往往輸送. 其餘各司, 皆不舉行, 甚爲未便, 自今申明舉行. 一, 六承旨, 左右司諫, 議政府舍人, 書筵官二員, 八翰林等, 雖已掌記時事, (중략) 宜令執義以下及郎廳中一人兼帶史官, 經筵官, 依書筵例, 使二員兼帶, 以廣記事. (중략) 一, 臺諫上疏及臣僚上書言事, 令記事官錄呈, 以備記載. (중략) 從之.”

이처럼 조선의 公事는 국왕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록의 형태로 남겨져야 했다. 그리고 일부 기록은 업무수행이 종료되어 일차적인 효용이 다하게 되었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이후의 憑考를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존·관리되어야 했다. 이는 기록이 명명백백한 공적 업무 수행의 증빙이자 동시에 후대의 귀감이 되는 史蹟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조선은 상당수의 기록을 생산·보존하게 되었으며, 이는 조선이 기록을 효과적으로 활용·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화를 모색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2) 조선 기록관리제도의 구축과 그 특징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大明律》을 법 집행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成文法的 통치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대명률》을 조선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웠기에, 현실상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태조 4년(1395) 《大明律直解》와 태조 6년(1397) 《經濟六典》을 각기 편찬·보완하여 실정에 맞는 法治를 행하고자 하였다.⁷³⁾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태조의 뒤를 이은 定宗代에도 유지되었다. 정종은 즉위교서에서 성문법에 근거한 법치가 통치의 기본방향임을 다시 한 번 전면에서 내세웠다.

1. 《六典》(필자 주: 경제육전)은 정치하는 법령이니, 마땅히 六曹로 하여금 관직을 임명하는 뜻을 講求하게 하여, 각기 그 직책을 다하여 감히 혹시라도 태만함이 없게 할 것이다.⁷⁴⁾

72) 《文宗實錄》卷7(文宗 1年/서기 1451년) 4월 1일(己巳): “傳敎承政院曰, 世宗卽位以後, 行事之跡, 可載碑文者, 令儒士二人, 考閱日記, 抄錄以啓.”

73) 박병호(1995)[한국학중앙연구원 編], 《온라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URL: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자: 2018.03.01., 검색방법: “대명률직해” 키워드 검색]); 박병호(1995)[한국학중앙연구원 編], 《온라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제육전(經濟六典)〉, (URL: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자: 2018.03.01., 검색방법: “경제육전” 키워드 검색])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정종의 즉위가 조선 건국 초 성리학적 관료제의 기틀을 제시한 정도전이 피살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정도전은 제1차 왕자의 난(戊寅難) 당시 이방원의 주도하에 이른바 宗親謀害罪로 주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定宗은 이방원의 지지를 통해 국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이 설정한 조선 성리학적 법치주의의 지향과 이에 근간한 통치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의 法治는 그 시작부터 당대의 통치사상인 유교적 가치관, 그중에서도 특히 성리학적 가치관이 적극 반영된 성문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성문법은 단순히 법률을 공식적인 문자의 형태로서 편찬·공고한다는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니었다. 조선이 성문법에 따른 통치를 표방한 이면에는 고려시기부터 심화되어 온 관습법적 불합리를 성리학적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성리학이라는 가치관 하에서의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었다.⁷⁵⁾ 즉 法治는 성리학적 사상의 현실적 구현을 위한 조치였다.

때문에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성리학적 가치관을 반영한 성문법인 明의 法律을 수용하였다. 이는 당시 明이 세운 법령체계가 가장 선진화 된 것이기도 하지만, 《至正條格》과 기존의 唐律·宋律보다도 《大明律》이 유교적 가치관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법적 체계성과 합리성 또한 갖추었기 때문이었다.⁷⁶⁾ 성리학이라는 동일한 사상적 배경을 지닌 동시대 明의 법제는 조선이 성리학적 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훌륭한 참고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太祖는 이미 즉위교서에서부터 公私의 罪에 대해 《대명률》을 적용함을 천명하였다.⁷⁷⁾ 그리고 이 《대명률》은 조선 후기까지도 꾸준히 量

74) 《太祖實錄》卷15(太祖 7年/서기 1398년) 9월 12일(甲申): “一, 六典, 爲治之具. 宜令六曹, 講求命官之意, 各盡其職, 毋敢或怠.”

75) 이재룡(2004), 〈조선왕조 법제도에서의 국가관〉, 《동양사회사상》 제10집, 동양사회사상학회, 90쪽.

76) 조지만(1999), 〈朝鮮初期 《大明律》의 受容過程〉, 《법사학연구》 제20호, 한국법사학회, 5쪽.

77) 《太祖實錄》卷1(太祖 1年/서기 1392년) 7월 28일(丁未): “(전략) 自今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必該大明律, 追奪宣勅者, 乃收謝貼, (후략)”

刑의 기준으로서 활용되었다.⁷⁸⁾ 조선이 수용한 明의 또 다른 法律書로는 明 初期의 행정제도를 정리한 《大明會典》이 있다. 이 《대명회전》은 1510년(明 正德 5年) 1차 간행되었으며, 1587년(明 萬曆 15年)에 增修하여 2차 간행되었다. 이 《대명회전》은 비록 16세기 초 반포되었음에도, 洪武 年間の 《諸司職掌》을 비롯하여 《大明律》과 《皇明祖訓》·《洪武禮制》·《大明令》 등 明 初期부터 반포·시행된 典章制度를 다수 纂輯하여 시행한 것이었다.⁷⁹⁾ 조선은 《경국대전》이 있음에도 《대명회전》 또한 수용하여 이를 국가 행정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明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관습법을 차용하기도 하고, 실정에 따라 明의 법제를 변용하여 수용하기도 하였다. 儀禮나 행정의 절차 등은 《대명회전》을 참고하면서도 그것이 조선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舊例와 상이한 것이 있으면 변용하거나, 아예 취하지 않기도 하였다.

禮曹가 아뢰어 말하길, “(중략) 또한 무릇 《會典》의 예는 간혹 우리나라의 예와 크게 상이한 것이 있으니, 청컨대 《五禮儀注》를 참작하여 행하소서.”하니, 전교하여 말씀하길, “朝見하는 것을 세자는 행하지 말고, 나머지는 따한 대로 하라.”고 하셨다.⁸⁰⁾

刑律에 관한 부분 역시 《대명률》만을 따르지는 않았다. 《唐律疏議》와 《至正條格》 등 중국의 기존 율령을 비롯하여 기존 관습법 및 고유법을 바탕으로 한 累代의 受敎,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정 등을 《대명률》과 절충·보완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다.⁸¹⁾

78) 심재우(2007), 〈조선말기 형사법 체계와 『대명률』의 위상〉, 《역사와 현실》 65, 한국역사연구회, 130~140쪽; 홍순민(2007), 〈조선후기 도죄(盜罪) 장죄(贓罪)의 구성과 『대명률』〉, 《역사와 현실》 65, 한국역사연구회, 114~115쪽.

79) 《大明會典》卷首, 〈纂輯諸書〉, “諸司職掌, 皇明祖訓, 大誥, 大明令, 大明集禮, 洪武禮制, 禮儀定式, 稽古定制, 孝慈錄, 教民榜文, 大明律, 軍法定律, 憲綱.”

80) 《中宗實錄》卷50(中宗 19年/서기 1524년) 3월 5일(庚午): “禮曹啓曰, (중략) 且凡會典之禮, 間有與我國之禮, 大相異者, 請以五禮儀注, 參酌行之. 傳曰, 朝見事, 世子勿行, 餘依啓.” 이 외 同王 《中宗實錄》卷50(中宗 19年/서기 1524년) 3월 7일(壬申)자 기사에서도 賀禮에 대해 《대명회전》의 사례가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문서행정과 이에 수반되는 기록의 생산·보존·활용에 관한 규정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은 《대명률》 및 禮式과 文書式을 보다 상세히 규정한 明의 《洪武禮制》를 기본 틀로 하되, 고려의 舊制와 조선의 행정 현실을 반영한 기록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공식적인 法典에 수록하였다.⁸¹⁾

조선의 法典에 나타나는 기록관리제도는 문서행정과 기록관리를 모두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公文의 서식과 문서 수발·증빙 등을 규정하는 조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문서를 비롯한 典籍·圖書·時政記·謄錄 등 국가의 제반 공적 기록물에 관한 생산·보존·관리 규정이다. 대체로 문서행정과 관련하여 공문서의 서식과 行移 체계 및 立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은 《經國大典》〈禮典〉의 用文字式條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문서를 비롯한 기록의 전반적인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은 〈禮典〉藏文書條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후 편찬된 법전인 《續大典》·《大典通編》·《大典會通》 또한 동일하다.

여기서 언급되는 文字와 文書는 대체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實錄기사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⁸²⁾ 다만 文字라는 단어는 公文의 내용이나 體式 등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文書는 국왕부터 민간의 영역에 통용되는 公文 그 자체를 뜻하

81) 조지만(1999), 앞의 논문, 10~14쪽; 문형진(2002), <《大明律》의 전래와 한국적 변이 양상>,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175~182쪽; 정금식&조지만(2003), 앞의 논문, 226~238쪽.

82) 고려시대에도 문서 相通式을 비롯한 문서행정 규정이 있었음이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강은경(2003), <고려시대 공문서의 전달체계와 지방행정운영>, 《韓國史研究》 122, 한국사연구회; 강은경(2004), <고려시기 공문서 관리체계에서 胥吏의 地位>, 《역사교육 89》, 역사교육연구회; 강은경(2007), 《고려시대 기록과 국가운영》, 서울: 해안; 남권희(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박재우(2008), <고려시대의 관문서와 전달체계>, 《고문서연구》 33, 한국고문서학회; 박준호(2006), <《經國大典》체제의 문서 행정 연구>, 《고문서연구》 28, 한국고문서학회 등)

83) 《世宗實錄》卷29(世宗 7年/서기 1425년) 7월 4일(辛未): “兵曹啓, 今考平安監司所送建州衛僉都督筭付曰, 今後但有建州衛人民來往買賣, 印信文書, 許令施行, 毋得阻當. 則依憑印信明文, 連續來往必矣. 請自今雖有印信文字, 以無聖旨不可私通, 據理開說, 勿接待禁買賣, 只以斗升, 量給行糧送還. 從之.”; 《中宗實錄》卷93(中宗 35年/서기 1540년) 8월 17일(丙子): “戶曹判書尹任, 參判金銍啓曰, (중략) 近來如此之事, 又無例事, 故更察之, 則乃偽造文書也. (중략) 答曰, 今聞啓意, 至爲駭愕. 此云鳳城君吉禮時賞賜所用, 吉禮有何賞賜乎. 此尤爲虛事, 而其文字亦誤也.”

는 용어로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⁸⁴⁾ 때문에 文書의 書式이나 相通式 등을 규정하는 조항은 用‘文字’로, 일반적인 공문의 보존·관리를 규정하는 조항은 藏‘文書’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조선 초기 《經國大典》에 수록된 用文字式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經國大典》 用文字式條 全文

구 분	내 용
公文의 報告·行移	2품 아문은 直啓하고[서울과 지방의 여러 장수들과 承政院, 掌隸院, 司諫院, 宗簿寺 또한 직계할 수 있다.各司에서 긴급한 일이 있으면 곧 提調가 직계한다. 큰일은 啓本으로, 작은 일은 啓目으로 하며, 지방은 계목을 사용치 않는다.] (다른 관사에)직접 공문을 보내며,[相考할 일 이외에는 모두 啓한다.] 그 나머지 아문은 모두 속한 曹에 보고한다.
	二品衙門直啓 [中外諸將, 承政院, 掌隸院, 司諫院, 宗簿寺, 亦得直啓, 各司有緊事, 則提調直啓, 大事啓本, 小事啓目, 外則無啓目] 直行移 [相考事外, 皆啓] 其餘衙門, 並報屬曹.
	○무릇 중앙과 지방의 文字(문서) 형식은 (문서를 보내는 기관이) 동등 이하에는 關을 쓰고, 그 이상에게는 牒呈을 쓰며, 7품이하에게는 帖을 쓴다. [지방관이 王命을 받은 사신에게 또는 중앙과 지방의 여러 장수가 兵曹에 대해서는 모두 牒呈을 쓰며, 都摠府에서는 關을 쓴다.] ○凡中外文字, 同等以下用關, 以上用牒呈, 七品以下用帖 [外官於奉命使臣, 中外諸將於兵曹, 並用牒呈, 都摠府用關.]

84) 《成宗實錄》卷98(成宗 9年/서기 1478년) 11월 13일(庚午): “今揀擇人員, 每赴京時, 所讀史文內文義未曉處, 中朝奏啓本榜文官府相通文字體格, 一應可攷文書廣行聞見, 隨得隨習, 其難解處, 逐節質正, 期於通慣, (후략).”; 《宣祖實錄》卷78(宣祖 29年/서기 1596년) 8월 10일(乙巳): “承文院啓曰, (중략) 臣等更詳本帖, 與我國文書, 無一字近似, 兵部不爲奏知, 亦必以爲虛僞而置之也. 但播在朝報, 大小見者, 豈皆諳委我國文字體樣, 而觸目卽知其僞哉.”; 《仁祖實錄》卷40(仁祖 18年/서기 1640년) 4월 13일(甲子): “左副承旨具鳳瑞啓曰, (중략) 且諡書中文字節節未安, 亦不無彼此文書之煩, 而淸國必不知諡書有無之輕重.”

구 분	내 용
立案의 생산·관리	○관청의 文書는 모두 立案을 만들어 두어서 뒷날의 고증에 증빙 이 되도록 한다. ○官府文字, 並置立案, 以憑後考.

用文字式條는 ①국왕에게 直啓할 수 있는 아문의 범위와 직계문서의 서식 규정 ②아문 간 품계에 따른 문서식과 상통례에 관한 규정 ③관청 문서의 증빙을 위한 立案 규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왕보고문서인 啓目·啓本을 비롯해 수발공문인 關文·牒呈·帖文, 임명 및 수여식인 告身·紅牌·祿牌, 인수인계서인 解由와 증빙서인 立案 등 조선의 대체적인 공문서식도 모두 이 用文字式條에 수록되어 있다. 즉 用文字式條는 조선의 공문 생산과 행위에 관한 규정, 立案으로 대표되는 증빙기록의 생산·관리에 관한 규정 그리고 文書式의 實例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기록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규정인 藏文書條의 내용이다.

<표 2> 《經國大典》藏文書條 全文

구 분	내 용
중요기록의 생산과 보존·관리	춘추관의 時政記[승정원일기와 각 관청의 緊關(긴요)한 문서를 편찬하여 매년 말마다 책 수를 아뢴다.]와 승문원의 문서는 3년마다 인출하여 本衙門(해당 아문), 의정부 및 史庫에 보관한다. 春秋館時政記 [撰集承政院日記, 及各衙門緊關文書, 每歲季啓冊數] 承文院文書, 每三年, 印藏本衙門, 議政府, 及史庫.
중요기록의 생산	○書狀官이 매일의 일을 기록한 것은 귀환 후 啓下받아 승문원에 서 등록한다. ○書狀官逐日記事, 回還後啓下, 承文院謄錄.
기록 및 도서의 보존	○무릇 인쇄한 책은 隆文樓와 隆武樓에 따로 보관하고, 또 의정부· 홍문관·성균관·춘추관과 여러 도의 首邑(해당 지역의 중심지가 되는 으뜸 고을)에 각기 한 건씩 보관한다. ○凡印書冊, 別藏于隆文隆武樓, 又於議政府弘文館成均館春秋館, 諸 道首邑各藏一件.

구 분	내 용
기록의 보존·관리	○여러 관사나 고을에 있는 문서는 분류하여 作綜(종류별로 모음)하고 懸籤(찌지 등의 덧종이를 달음)하여 각기 보관한다. ○諸司諸邑文書, 分類作綜懸籤, 各藏之.
冊曆의 생산·배포	매년 曆日(책력)을 반포한다.[관상감에서 4천 건을 인출하여, 諸司와 諸邑 및 종친과 문무당상관 이상에게 반포한다. 제주 3읍 외 諸邑은 모두 종이를 납부하고 수령해 가되 남는 건은 종이로 바꾸어 내년에 사용한다. 교서관은 1천 건을 찍어내 여러 책을 인출할 자원을 갖추어 놓는다.] 每年, 頒曆日.[觀象監印四千件, 頒諸司諸邑, 及宗親文武堂上官以上. 濟州三邑外諸邑, 皆納紙受去, 餘件質紙, 以備明年之用. 校書館印一千件, 以備諸書印出之資.]

위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藏文書條의 내용은 크게 ①국가 중요 기록의 생산 ② 기록과 도서 등의 보존·관리 ③冊曆의 생산과 배포 등으로 구분된다. 이 藏文書條를 통해 조선 초기부터 기록을 다양한 장소에서 보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에는 冊曆이 국가의 중요기록으로서 그 생산과 배포가 법으로 통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用文字式條와 藏文書條는 조선의 문서행정과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적인 법조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상의 조문 외에도 문서행정 및 기록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여타의 법조문에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用文字式條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문서식의 존재가 그러하다. 용문자식조 외 다른 법조문에서 확인되는 公文書式으로는 국왕이 하달하는 敎書·諭書·敎旨, 국왕 상신 문서인 狀啓·上言, 국왕의 결재문서라고 볼 수 있는 下批·批答, 관에서 발급하는 路引·草料, 외교문서인 表箋·咨文 등이 있으며, 법적인 효력이 공인된 私文書式로는 文記·文券·遺書(遺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문서의 위변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도 별도 조문에 존재하고 있다.⁸⁵⁾

이처럼 조선의 기록관리제도는 공기록의 생산부터 그 보존과 관리에 이르는 사항을 일부나마 법조문의 형태로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85) 《經國大典》〈刑典〉의 禁制條, 私賤條 등.

조선의 법전에서는 公的 영역에서 문서와 기록의 활용을 단순히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에 활용된 문서 및 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성리학적 ‘公’개념과 연관하여 조선이 공적 행위에 관한 책임의식을 더욱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동시대 明律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조선의 法 체계는 당시 明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이는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도 예외가 아니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조선과 明의 기록관리 제도는 각기 다른 지향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의 차이는 조선이 明과 차별화된 기록관리제도를 수립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은 초기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고려의 제도를 토대로 明의 제도를 받아들였고, 조선의 통치 사상을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록관리제도를 한 층 더 보완·발전시켜 明文化하였다. 조선이 고유의 기록관리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조선의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기록관리제도에 관한 부분을 《대명률》 및 《대명회전》·《홍무예제》의 내용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문서행정의 절차와 그 서식을 규정한 부분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하겠다. 조선의 藏文書條와 用文字式條에서는 문서의 생산·시행·상통 등에 관한 절차와 그 서식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여타의 법조문 내에도 문서행정과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이 각각 규정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明 또한 문서행정과 기록관리에 관한 법조문은 《대명회전》과 《대명률》 양자 모두에 수록되어 있다. 《대명률》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재의 형법에 가까워 문서행정 및 기록관리의 절차를 규정하기보다 그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만 이를 통해 法式으로 규정된 문서행정 및 기록관리의 양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명률》에서 직접적으로 문서행정과 기록관리의 절차 및 시행과정을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明의 문서행정 절차 및 그 文書式과 相通式 등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法文으로는 《大明會典》〈禮部〉三十四의 奏啓題本格式과 行移署

押體式을 들 수 있다. 이들 조문에서는 유형에 따른 공문서의 활용범위·작성방법·서식 및 규식의 변천사례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대체로 그 내용은 해당 문서서식의 제정 시기·사용처·예시·변천사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문서의 생산 외 보존·관리방법까지 구체적으로 法典에 명시한 조선과는 달리 明의 法典에 기재된 문서행정 관련 규정은 대체로 공문의 서식이나 서식별 활용례에 대한 사항만을 主文으로 삼고 있다. 다만 문서의 생산·처리 등에 관한 절차는 각 조문의 말미에 기재하는 事例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⁸⁶⁾

《대명회전》에 수록된 문서의 서식과 그 시행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홍무예제》의 내용과 유사하다. 《홍무예제》는 明 洪武帝 주원장이 明을 개국한 후 儀禮와 公事に 관한 규정을 정리하여 반포한 것으로서 반포 시기는 불명이다. 《홍무예제》는 進賀禮儀·出使禮儀·祭祀禮儀·服色·文武階勳·給授文武散官定式·吏員資格·奏啓本格式·行移體式·署押體式·官吏俸祿의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奏啓本格式·行移體式·署押體式の 3개 항목이 문서행정과 관계된 것이다.⁸⁷⁾ 《대명회전》은 이 《홍무예제》를 참고한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 앞에 “洪武禮制”이라는 글로 시작하여 해당 서식과 절차가 《洪武禮制》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⁸⁸⁾ 이 외에도 여타의 公務와 관련된 문서행정의 경우 조선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공무와 관련된 조문에 문서행정에 대한 지침과 방식 등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조선 역시 초기부터 《洪武禮制》를 수용하여 공문서의 規式과 行移體制를 비롯한 각종 禮制를 정비하였다.⁸⁹⁾ 이 《홍무예제》가 조선 초 공문서의 표준서식으로 활용된 정황은 다음의 실록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

86) 예컨대 《大明會典》 卷75에는 “**事例** 洪武十五年定 凡奏啟本內官員 正面真謹僉名 當該吏典 於紙背書名畫字.”, “**事例** 洪武十五年定 一通政司 職掌出納 帝命 與諸司無行 移有徑行通政司者 以違制論” 등으로 기재하고 있다.

87) 《홍무예제》의 공문서식에 관한 연구는 박준호(2003), 〈《洪武禮制》와 朝鮮 初期 公文書 制度〉, 《고문서연구》 22, 한국고문서학회; 심영환(2009), 〈朝鮮初期 官文書의 《洪武禮制》 呈狀式 受容 事例〉, 《장서각》 21,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참고하였음.

88) 판본의 시기에 따라 “洪武間定”으로 기재된 것도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四庫全書本을 기준으로 논지를 전개하였기에 본고에서는 “洪武禮制”로 기재된 판본을 예로 들었다.

89) 박준호(2003), 위의 논문, 144~145쪽.

다.

禮曹에 명하여 戶口式을 상세히 정하도록 하였다. 漢城府가 아뢰기를, “國朝의 모든 文字格式은 전부 《洪武禮制》에 의거하는데, 유독 戶口格式은 아직 前朝(高麗)의 옛 제도를 따르니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빌건대 禮曹에 내려 詳定케 하십시오.”하니, 따랐다.⁹⁰⁾

《대명회전》의 문서식과 문서상통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홍무예제》를 인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조선 또한 초기 공문서의 서식 및 그 相通 방식을 《홍무예제》에서 참고했었다는 점은 兩國이 《홍무예제》에 기반한 공통적인 문서행정 양상을 지녔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조선은 《홍무예제》에 규정된 공문서의 서식인 奏本·啓本·照會·咨呈·筭付·呈狀·申狀·平關·牒呈·平牒·牒上·故牒·下帖 등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실제 《경국대전》에서 규정한 공식적인 문서식은 明이 사용하는 문서식을 어느 정도 따르되, 상당 부분 이를 간소화하여 啓本·關文·牒呈·下帖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⁹¹⁾ 조선이 표면적으로 明의 제후국이기에 동등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문서행정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인 조선 건국 초기에는 황제만이 쓸 수 있는 奏本과 같은 서식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양식을 사용했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박준호(2003)는 조선이 공문서의 상통 양식을 간략하게 한 이유가 행정절차의 번거로움과 그에 수반되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⁹²⁾

물론 이러한 이유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이 문서행정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고려의 제도를 참고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고려 官文書에 관한 박재우(2008)의 연구에 따르면 고려 또한 조선과 마찬가지로 문서의 규격과 서식 등이 발급자와 수취자의 관계

90) 《太宗實錄》卷30(太宗 15年/서기 1415년) 11월 15일(戊申): “命禮曹詳定戶口之式. 漢城府啓, 國朝一應文字格式, 並依洪武禮制, 獨戶口格式尚仍前朝舊制, 似爲未便, 乞下禮曹詳定, 從之.”

91) 박준호(2006), 앞의 논문, 119~120쪽.

92) 박준호(2003), 앞의 논문, 146~162쪽.

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관청 간의 문서식은 상행문서식인 狀과 평행·하행문서식인 貼(帖)으로만 구분되어 있었다. 다만 고려는 문서식을 단순화한 대신 관청과 관리의 지위에 따라 서명 방식 등 相通式에 차이를 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⁹³⁾ 조선이 明의 문서행정 제도를 적극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국대전》 체제에서 문서행정 相通式이 明의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조선에서 고려의 舊制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조선이 건국된 후 일체 公事 행정은 太祖 6年(1397)에 간행한 《經濟六典》을 따랐는데, 이 《경제육전》은 고려 말부터의 條例를 담은 것이었다.⁹⁴⁾ 정황상 조선의 문서행정제도가 《홍무예제》 등을 수용하여 정립되기 이전에는 고려의 제도를 일정 부분 준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 조선의 문서행정제도 정립 과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할 수 있다. 그러나 太宗代와 世宗代를 거치면서 明의 제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문서행정 및 기록관리제도 또한 고려의 舊制와 조선의 행정현실을 함께 고려하되 明의 제도를 수용하여 《경국대전》에 규정된 기록관리제도로서 수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다음으로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처벌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의 법전에서 기록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藏文書條나 用文字式條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후대에 편찬된 《大典通編》 藏文書條의 註에는 備邊司 郎廳의 기록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⁹⁵⁾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록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문은 〈禮典〉이 아닌 〈刑典〉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대표적인 것이 僞造條와 禁

93) 박재우(2008), 앞의 논문, 3~14쪽.

94) 《太祖實錄》卷12(太祖 6年 /서기 1397년) 12월 26일(甲辰): “都堂令檢詳條例司, 冊寫戊辰以後合行條例, 目曰經濟六典, 啓聞于上, 刊行中外.” 여기서 언급한 戊辰年은 정황상 조선 건국 바로 이전인 우왕 14년(1388)으로 판단된다.

95) 《大典通編》, 〈禮典〉, 藏文書條 “[備邊司首郎廳, 掌中外啓狀, 可憑後考者, 不謹典守, 則重勘.]”

制條이다.⁹⁶⁾ 이 외에도 문서와 기록의 虛·冒錄, 未生産, 未施行, 무단 폐기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발견되는 조문은 각각의 업무행정을 규정한 별건의 조문 내에서도 있다. 이는 기록의 생산과 그 관리가 독립적인 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절차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즉, 기록관리와 관련된 위반사항 그 자체를 처벌한다는 개념보다 공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을 처벌하는 개념이다.

이는 명의 《대명회전》도 유사하다. 行移署押體式에서 시행문서의 규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⁹⁷⁾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행정사항을 규정한 각각의 조문에서 문서행정간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刑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명률》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대명률》에서 행정에 관한 律法은 〈吏律〉公式篇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해당 편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⁹⁸⁾ 이 중 문서행정과 기록관리에 관한 처벌조항으로는 황제의 制書와 황태자의 令旨, 親王의 令旨 등을 違反·失錯·稽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制書有違條⁹⁹⁾, 制書와 御寶·聖旨를 비롯하여 주요 官文書와 印信·牌·符驗 등을 분실·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棄毀制書印信條¹⁰⁰⁾, 官文書의 시행 지연에

96) 《經國大典》, 〈刑典〉, 偽造條, “偽造印信者, 印文雖未成, 處斬, 妻子永屬諸邑奴婢. 捕告者, 給犯人財產.”; 禁制條, “毀文書重造紙者 [用紙人減二等論], (중략) 並杖一百.”

97) 《大明會典》卷75, 〈禮部〉34, 行移署押體式 “(전략) 十年, 奏定天下諸司文移紙式 (중략) 官員任內公文紙皆如式者, 考爲一最不如式者, 罪之.”

98) 講讀律令·制書有違·棄毀制書印信·上書奏事犯諱·事應奏不奏·出使不復命·漏泄軍情大事·官文書稽程·照刷文卷·磨勘卷宗·同僚代判署文案·增減官文書·封掌印信·漏使印信·漏用鈔印·擅用調兵印信·信牌 등. 이 중 棄毀制書印信條는 두 개의 조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하 《大明律》의 조문은 명 萬曆 年間に 편찬한 《大明律集解附例》에서 인용하였으며, 《大明律集解附例》는 屈萬里 主編(1986), 《大明律集解附例: 明萬曆間奉勅》, 臺灣學生書局·臺北의 판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 동일하다.

99) 《大明律》, 〈吏律〉, 制書有違條, “凡奉制書, 有所施行而違者, 杖一百, 違皇太子令旨者, 同罪, 違親王令旨者, 杖九十. 失錯旨意者, 各減三等. 其稽緩制書, 及皇太子令旨者, 一日笞五十, 每一日加一等, 罪止杖一百. 稽緩親王令旨者, 各減一等.”

100) 《大明律》, 〈吏律〉, 棄毀制書印信 一條, “凡棄毀制書及起馬御寶聖旨, 起船符驗, 若各衙門印信, 及夜巡銅牌者, 斬. 若棄毀官文書者, 杖一百, 有所規避者, 從重論. 事干軍機錢糧者, 絞. 當該官吏, 知而不舉, 與犯人同罪, 不知者不坐. 誤毀者, 各減三等. 其因水火盜賊毀失, 有顯跡者, 不坐.”; 棄毀制書印信 二條, “凡遺失制書聖旨符驗印信巡牌者, 杖九十徒二年半, 若官文書, 杖七十, 事干軍機錢糧者, 杖九十徒二年半, 俱停俸責尋, 三十日得見者, 免罪. ○若主守官物遺失簿書, 以致錢糧數目錯亂者, 杖八十, 限內得見者,

대한 처벌사항을 규정한 官文書稽程條¹⁰¹⁾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공문서의 진위 여부 등을 고찰하는 照刷를 소홀히 시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¹⁰²⁾과 시행문서를 편철하는 卷宗의 磨勘을 완료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隱漏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¹⁰³⁾ 등이 있다.

물론 《대명회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公式篇에서만 문서행정 위반 사항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것은 아니고, 〈兵律〉과 〈刑律〉에서도 문서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명시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¹⁰⁴⁾ 다만 문서행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내용 대다수는 〈吏律〉에 속해 있다. 또한 《대명회전》과 《경국대전》 모두 문서의 서식 및 그 활용에 대해 규정한 조문이 〈禮部〉 또는 〈禮典〉에 수록되어 있지만, 《대명률》 〈禮律〉에서는 오히려 문서행정에 관계된 사항을 다루고 있지 않다.¹⁰⁵⁾ 이는 대명률 체제에서 문서행정을 비롯한 국가의 전반적인 행

亦免罪。○其各衙門吏典，考滿替代者，明立案驗，將元管文案交付接管之人，違者，杖八十。首領官吏 不候交割，符同給由者 罪亦如之。”

101) 《大明律》，〈吏律〉，官文書稽程條，“凡官文書稽程者，一日吏典答一十，三日加一等，罪止答四十，首領官各減一等。○若各衙門遇有所屬申稟公事，隨即詳議可否明白定奪回報。若當該官吏不與果決，含糊行移，互相推調，以致耽誤公事者，杖八十。其所屬將可行事件 不行區處，作疑申稟者，罪亦如之。其所行公事已果決行移，或有未絕或不完者，自依官文書稽程，論罪。”

102) 《大明律》，〈吏律〉，照刷文卷條，“凡照刷有司有印信衙門文卷，遲一宗二宗吏典答一十，三宗至五宗，答二十，每五宗加一等，罪止答四十，府州縣首領官，及倉庫務場局所河泊等官，各減一等。○失錯及漏報一宗吏典答二十，二宗三宗，答三十，每三宗加一等，罪止答五十，府州縣首領官，及倉庫務場局所河泊等官，各減一等。其府州縣正官巡檢，一宗至五宗，罰俸錢一十日，每五宗加一等，罰止一月。○若錢糧埋沒，刑名違枉等事，有所規避者，各從重論。”

103) 《大明律》，〈吏律〉，磨勘卷宗條，“凡磨勘出各衙門未完文卷，曾經監察御史提刑按察使司，照刷駁問遲錯，經隔一季之後 錢糧不行追徵足備者，提調官吏以未足之數，十分爲率一分，答五十，每一分加一等，罪止杖一百。刑名造作等事，可完而不完，應改正而不改正者，答四十，每一分加一等，罪止杖八十。受財者，計贓以枉法，從重論。○若有隱漏，不報磨勘者，一宗 答四十，每一宗 加一等 罪止杖八十。事干錢糧者 一宗 杖八十，每一宗加一等 罪止杖一百。有所規避者 從重論。○官吏聞知事發，旋補文案以避遲錯者，錢糧計所增數，以虛出通關論。刑名等事，以增減官文書論。同僚若本管上司知而不舉，及符同作弊者，同罪，不知情及不同署文案者，不坐。”

104) 罗军(2014), 〈明朝的公文制度在大明律中的体现〉, 《兰台世界》2014.5月 中旬, 辽宁省档案学会, 123쪽.

105) 《大明律》〈禮律〉은 祭祀와 儀制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祭祀篇은 祭享·毀大祀丘壇·致祭祀典神祇·歷代帝王陵寢·褻瀆神明·禁止師巫邪術의 여섯 조목으로 儀制篇은 合和御藥·乘輿服御物·收藏禁書及私習天文·御賜衣物·失誤朝賀·失儀·奏對失序·朝見留難·工書陳言·見任官輒自立碑·禁止迎送·公差人員欺凌長官·服舍違式·僧道拜父母·失占天象·術士

정사항을 吏部의 소관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吏律에서는 관리가 율법의 뜻을 熟讀하고 講明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토록 하고 있다.¹⁰⁶⁾ 관리가 律法을 이해하지 못해 형벌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못할 것을 경계한 것이다. 관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행정소양과 규범을 公式篇에서 규정한 것이기에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국가행정의 기본사항인 문서행정에 관한 규정과 처벌조항도 해당 편에서 다룬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공문서에 관한 刑律일지라도 郵驛을 통한 공문의 수발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벌을 규정한 조문이 〈兵律〉에 수록되고, 문서위조 범죄에 관한 처벌규정이 〈刑律〉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¹⁰⁷⁾

박준호(2003)의 논의에 따르면 조선과 명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 조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서행정의 행태는 ‘禮’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수발되는 문서는 문서를 주고받는 관청 간의 위계 차에 따라 그 서식이 각기 다르게 정해졌다. 공문이 오가는 상대방의 위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문서의 서식은 구분되었고, 공문서에 署名하는 방식도 다르게 나타났다.¹⁰⁸⁾ 이러한 이유로 공문서의 서식과 그 行移體制, 印章 등에 관한 규정은 禮를 관장하는 禮曹나 禮部와 같은 기관의 소관이 된 것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명률》의 문서행정 관련 처벌조항은 〈禮律〉이 아닌 〈吏律〉에 속해 있다. 이는 문서행정의 시행 주체가 官吏이고 그 官吏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즉 행정법적인 내용을 담은 大典類의 法典은 六部의 업무분장을 바탕으로 해당 條文을 분류하여 수록하는 반면, 형법적인 내용을 담은 律書는 처벌 대상인 행위의 유형에 따라 그 조문을 분류한 것이다.

조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형벌의 시행에 있어 《대명률》을 준용하되

妄言禍福·匿父母夫喪·棄親之任·喪葬·鄉飲酒禮의 20개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106) 《大明律集解附例》, 〈吏律〉, 〈公式篇〉, 講讀律令律, “百司官吏, 務要熟讀講明律意, (중략)〔纂註〕(중략) 百司官吏, 能熟讀其文講明其意, 則引斷, 不謬而刑罰中矣.”

107) 《大明律》〈兵律〉郵驛篇에는 外方에서 수발하는 공문 처리 및 전달 절차의 위반 시 처벌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刑律〉詐僞篇에는 制書·詔旨·上書 등의 위조나 조작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08) 박준호(2003), 앞의 논문, 148~149쪽.

이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운용하였다.¹⁰⁹⁾ 문서행정 위반사항과 관계된 行刑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制書有違律의 적용 사례이다. 조선의 法典에서 임금의 敎旨 및 조정의 條例를 위반하거나 공식적인 문서를 위조한 경우 적용하는 刑律로서 制書有違律이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 制書는 곧 詔書를 의미한다. 엄밀히 따지면 국왕의 문서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만 적용하는 법 조항이다. 《대명률》에 대한 여러 주석서에는 이 制書有違律의 적용 범위를 천자가 직접 명령한 制書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신하가 奏聞하여 시행한 것이나 법령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모두 官文書로 분류하여 이에 관한 刑律은 官文書稽程律 등의 조문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¹¹⁰⁾ 그러나 《經國大典》을 비롯한 조선의 여러 法典에서는 제서유위율이 국왕의 교지나 명령을 위반한 사례 외에도 공문서의 僞造나 假託, 호적의 미신고, 권한의 남용 및 관리감독 소홀 등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국왕의 구체적 受敎가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의 성립 과정에서 추상화되어 편입되었고, 이것이 그대로 조문화되었기에 受敎의 위반에 대한 적용률인 制書有違律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다.¹¹¹⁾

이처럼 조선과 명의 문서행정 및 기록관리에 관한 법적 규정은 ①공문서의 서식을 법전에 수록하고 있다는 점 ②그 사용방식과 사용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공문서의 서식이 각기 구분되어 점 ③일부 공문서식은 큰 틀에서 양국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한다는 점 ④문서 작성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¹¹²⁾ 등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109) 《經國大典》, 〈刑典〉, 用律條(準據法) “用大明律”; 《續大典》, 〈刑典〉, 用律條(準據法) “依原典用大明律, 而原典續典有當律者, 從二典.”

110) 김대홍(2015), 〈조선시대 《大明律》 制書有違조 조문 연구〉, 《법사학연구》 제52집, 한국법사학회, 62~64쪽.

111) 김대홍(2015), 앞의 논문, 78쪽.

112) 《大典通編》〈禮典〉用文字式에 수록된 조문 중 “軍門通關兵曹時, 軍門楷書, 兵曹草關”라는 조문과 〈工典〉雜令에 수록된 “<續>○關內外諸上司所用紙地, 長興庫豐儲倉, 每朔定式進排, 有違定式者, 官員罷職, 下吏治罪. [楮注紙, 長一尺六寸, 廣一尺四寸, 楮常紙, 長一尺一寸, 廣一尺 <增>啓目紙, 草注紙, 一卷重十一兩以上, 次草注紙, 重九兩以上, 公事紙, 重六兩以上, 官教紙, 重四斤以上, 上品擣鍊紙, 擣鍊楮注紙, 二斤以上, 大好紙·白綿紙, 長二尺四寸五分, 廣一尺七寸五分, 重三斤十四兩, 小好紙, 長二尺二寸五分, 廣一尺五寸五分, 重二斤五兩.]”이 그러하다. 다만 명은 조선보다 문서 작성 및 그 활용의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양국 간의 차이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① 법전에서 규정하는 공문서 서식의 종류 ②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의 강도와 적용률 ③문서 및 기록의 생산의무에 관한 규정 ④문서와 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양국 간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이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분야는 바로 기록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藏文書條의 존재이다. 《경국대전》에서 문서행정의 상통 방식과 그 서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한 것은 〈禮典〉의 用文字式條로 해당 조문은 明의 서식과 그 相通例를 상당 부분 참고하되 조선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변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禮典〉 藏文書條의 경우 明과 달리 기록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明의 법체계에서는 기록의 생산과 시행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만, 조선의 법체계에서는 기록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 또한 아예 별도의 조문으로 두었다는 데 그 차이가 있다. 《經國大典》 藏文書條가 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는 달리, 明의 경우는 이처럼 문서와 기록의 보존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까지 규정한 조문이 《대명회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문서행정 관련 내용은 문서의 작성방식, 서식과 용지 규격, 문서의 行移나 勘合 등 실행 절차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大明律》〈吏律〉의 公式篇에 있는 棄毀制書印信律, 照刷文卷律, 磨勘卷宗律 등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한 처벌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있기는 하다.¹¹³⁾ 그러나 이들 조문은 대체로 문서관리의 오류로 인해 租稅나 軍事와 같은 행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측면이 더 크며, 문서관리의 절차 그 자체를 규정한다기보다 이를 누락·지연하였을 경우의 처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明에서 문서와 기록의 보존 및 관리를 등한시켰다는 의미

113) 《大明律》에서 규정한 明의 문서관리 제도는 김경록(2016), 〈明初 洪武帝의 國家統治 구상과 《大明律》〉, 《법사학연구》 53, 한국법사학회; 罗军(2014), 앞의 논문; 赵彦昌(2011), 〈明代档案管理制度研究〉, 《辽宁大学学报》第6期, 哲学社会科学版 등을 참고하였다.

는 아니다. 明 이전에도 중국의 역대왕조들은 국가차원에서 藏書制度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문서와 도서 등의 보존을 꾀하였다.¹¹⁴⁾ 明 또한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內閣, 翰林院, 通政司, 司禮監과 실무를 담당하는 六部 등이 문서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운영되었다.¹¹⁵⁾ 이들 기관은 담당업무에 따라 소관 대상 기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록의 유형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유한 書庫에 보존하기도 하고, 특정 장소에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을 이관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황실의 기록은 皇史宬에서 관리하고, 內閣의 주요 문서와 典籍은 文淵閣의 庫樓에 收藏되며, 外方에서 생산된 기록의 관리는 각처의 架閣庫가 담당하는 식이다.¹¹⁶⁾

이처럼 明 또한 문서와 기록의 보존을 위한 체계는 당연히 존재하였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기구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¹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기록의 보존 준칙이 명의 법전에 수록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기록관리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양국 간의 인식차가 존재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즉 明이 기록의 행정적 역할에 더욱 주목하여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수립하였다면, 조선의 경우는 기록의 행정적 역할에 더해 일종의 史料적 측면과 증거적 측면에도 주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조선에서 기록이란 단순히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닌 현재의 행위를 후대에 남길 수 있는 史料이자 동시에 公人이 수행한 업무행위의 證憑이기도 했던 것이다.

兩國의 이러한 간극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時政記와 관련된 규정의 유무일 것이다. 사실 시정기뿐만 아니라 實錄 찬수와 관련되는 중요 기록에 대한 보존 및 관리 규정 자체를 명의 律法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時政記 뿐만 아니라 중국 역대왕조에서 실록 편찬을 위해 작성한 起居注·日曆 등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起居注는 관직명으로서

114) 방향숙(2012), 〈중국 고대 국가의 藏書制度和 역사서의 편찬 : 漢代の 藏書制度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26, 한국사학사학회, 319~320쪽.

115) 黃才庚(1988), 〈高度中央集權主義的明朝文書及其制度研究〉, 《檔案》 5, 甘肅省檔案局, 13쪽.

116) 所桂萍(2007), 「明代檔案機構設置及其管理探究」, 江漢論壇 2007年 12月, 湖北省社會科學院, 60~62쪽; 趙彥昌(2011), 앞의 논문, 80~81쪽.

117) 방향숙(2012), 앞의 논문; 서원남(2008), 〈宋代的 문헌정리와 藏書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50, 중국어문학연구회 등.

만 언급될 뿐 시정기·기거주·일력을 비롯한 史草나 실록 그 자체의 생산·관리를 규정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實錄 자체에 관한 조문은 비록 존재하지만 ‘進實錄儀’와 같이 일종의 禮式에 관한 규정이지 時政記나 實錄 등의 생산·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내용은 아니다.

반면 조선은 문서와 기록의 행정적 역할에 더해 실록편찬을 위한 史料로서의 가치에 주목하여, 時政記의 생산에 관한 규정을 法典에 명시하고 實錄의 曝曬 등에 관한 사항도 굳이 별도의 규정으로서 남길 정도였다.¹¹⁸⁾ 이처럼 조선에서 기록이란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닌 현재의 행위를 후대에 남길 수 있는 實錄을 편찬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던 것이다.

바로 이전 세대의 통치 기록을 實錄으로 엮어내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문서와 기록을 최대한 빨리 史料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明의 경우 조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實錄의 위상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 또한 조선만큼 강력하지는 못했기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양국 간 법제적 측면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明 또한 역대왕조들과 마찬가지로 實錄이라는 當代史를 정해진 체계에 따라 정례적으로 찬수하였고, 이 외 소위 正史로 지칭되는 紀傳體 史書의 편찬 역시 중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료의 수집과 보존 또한 중시하였다. 즉 史書 편찬을 위한 목적에서 기록의 관리를 수행한다는 인식은 明에서도 분명 존재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實錄이라는 當代史 기록에 대한 인식은 조선과 상당 부분 차이를 보였으며, 그 운영과 활용 측면에서도 조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明은 實錄 찬수 과정에서 御覽用과 閱覽用을 별도 제작한다거나, 實錄을 紀傳體 史書 편찬을 위한 중간 단계 정도로 인식하기까지 하였다.¹¹⁹⁾ 이는 宋代의 實錄에 대한 인식보다도 후퇴한 것이었다.

明實錄 또한 조선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조정 각 部에서 생산·소

118) 《經國大典》〈禮典〉, 奉審條.

119) 孙卫国(2005), 《〈明实录〉与〈李朝实录〉之比较研究》, 《求是学刊》2005年 第2期, 南开大学历史学院; 钱茂伟(2010), 《〈明实录〉编纂与明代史学的流变》, 《学术研究》2010年 第5期, 广东省社会科学界联合会.

장한 기록을 수집하여 이를 정리해 수찬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 기록의 수집 과정보다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각 部에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 사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제출되는 자료의 양과 질도 통제되지 않아 천차만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神宗實錄》찬수 과정에서는 실록의 기본 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 먼저 文冊을 편찬하고자 하였는데, 착수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였다.¹²⁰⁾ 이는 당시 明에서 실록찬수를 위한 기록의 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성리학이라는 통치철학에 대한 수용 정도와도 연관되어 있다. 조선과 明 모두 성리학이라는 사상적 기반을 배경으로 통치체제를 수립·운영하였으나, 조선은 明보다 훨씬 강한 성리학적 관료체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물론 明도 몽골이 세운 元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漢族의 통일국가를 새롭게 수립하면서 성리학을 통치철학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¹²¹⁾ 그러나 실제 明은 皇帝의 권한을 상당히 중시하였고 皇帝權을 위협할 수 있는 사상은 통제·탄압하였다. 이는 성리학에서 존송하는 孟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명 태조는 孟子의 사상을 불순하다고 여겨 孟子의 위패를 文廟에서 파출시키고 그 위치를 격하하였으며 더 나아가 《孟子》의 역성혁명 사상 등을 내포한 구절 85개를 삭제한 《孟子節文》을 간행하였다.¹²²⁾ 이후 비록 명 태조가 다시 孟子의 文廟配享을 허락하고, 아들인 明 成祖는 온전한 《孟子》를 科擧 교재로 다시 채택하였지만 孟子의 위상과 그가 주장한 사상은 상당 부분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성리학은 經世를 위한 명목적 수단으로만 활용될 뿐이었

120) 钱茂伟(2010), 앞의 논문, 107쪽.

121) 明 太祖 주원장은 《大學》과 《大學衍義》를 經筵의 교재로 중시하였으며(윤정분(2006), 〈明初 經筵제도의 배경과 그 특징: 주원장의 경사 강론과 군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5, 명청사학회, 13~15쪽.), 황태자와 황자들의 교육 또한 금화학파 학자인 宋濂에게 일임하였다.(이경룡(2017), 〈원말명초 재상제 논의와 이학경제의 정주학 확정〉, 《명청사연구》 48, 명청사학회, 321~322쪽.) 또한 明 成祖 대에 들어서는 《性理大全》을 편찬하여 성리학적 경제사상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122) 朱榮貴(1995), 〈從劉三吾《孟子節文》論君權的限制與知識份子之自主性〉, 《中國文哲研究集刊》第六期(1995.3.), 中國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6쪽.

고, 실질적인 정치·행정제도의 측면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실제 明末 성리학적 가치관에 근간한 士大夫의 정치적 집단이었던 東林黨은 조선의 성리학적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군주에 대한 지극한 충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公論을 통한 君權의 제한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음에도, 絶對皇權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다. 이들은 군주에 대한 자발적 복종과 순응을 전제로 한 성리학적 공적 질서의 구축과 公論의 중시를 주장하였지만 이조차도 제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기에 결국 숙청되었다.¹²³⁾

조선 또한 체제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성리학을 활용하였음은 明과 동일하나, 성리학적 명분론이 통치자의 통치행위까지도 구속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선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왕을 비롯한 조선의 지배층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성리학적 준칙을 따라야 했다. 조선의 지배층, 특히 그 정점인 국왕은 성리학적 사상에 입각하여 백성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존재가 되어야 했으며, 그 역할과 의무는 후대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만 했다.

특히 조선의 국왕은 지극히 존귀한 자이자 국가통치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자이지만 국왕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이 없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존재였다.¹²⁴⁾ 그러나 실제 모든 군주가 성리학적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왕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이러한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았다. 때문에 조선은 국왕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계를 구성하면서도 국왕이 성리학적 질서를 벗어날 때를 대비하여 經筵이나 三司제도와 같은 안전장치를 기존보다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記錄이라는 존재 또한 국왕을 견제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써 활용되었다. 국왕의 국정활동은 기록을 통해 남겨지며 지배층 전체에 노출되었는데, 특히 국왕조차 통제할 수 없었던 史官이라는 존재는 국왕의 언

123) 장현근(2016), 〈충군(忠君) 관념과 명대 동림당인(東林黨人)의 정치심리: 강요된 복종인가 자발적 의지인가?〉, 《아태연구》 제23권 4호, 국제지역연구원, 140~149쪽.

124) 《朱子大全》 卷72, 〈皇極辨〉, “其曰, 曰天子作民父母, 以爲天下王云者, 則以言夫人君, 能立至極之標準, 所以能作億兆之父母, 而爲天下之王也, 不然, 則有其位無其德, 不足, 以首出庶物統御人群, 而履天下之極尊矣.”

행과 더불어 국정과 관계된 주요 문서까지 열람할 수 있었던 존재였다.¹²⁵⁾ 이 史官의 기록을 통해 국왕의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남게 되며, 기록은 다시 史가 되어 만세토록 남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국왕이 이를 방해할 수는 없었다. 조선에서 기록이라는 행위는 국왕을 비롯한 公人에 대해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기록이라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곧 성리학적 세계관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²⁶⁾ 그리고 이러한 인식하에서 조선은 기록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法으로서 규정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법과 제도는 그 시대의 지배이념을 반영하여 구성되며, 조선의 법과 제도는 명보다 더욱 강한 성리학적 이상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구축·운영되었다. 이는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의 기록관리제도는 기록의 유통과 활용에 관한 사항 외에도 생산과 보존에 관한 사항까지 명시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이 기록을 단순히 행정적 소용만을 위한 것으로서 보는 것이 아닌, 證憑이자 典故를 위한 것으로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史書의 史料로서 바라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臚錄 또한 이러한 이념적·제도적 배경하에 주요한 기록관리방안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125) 오수창(2003), 〈국왕과 신료의 역학관계〉,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 인조~현종 시기》, 서울:아카넷, 44~46쪽. [한국역사연구회 17세기 정치사 연구반 編]

126) 유승원(2020), 앞의 책, 377쪽; 노명환(2013), 앞의 논문, 259~261쪽.

2. 謄錄體系 구축의 端緒

1) 주요 기록의 관리방안으로서 등록의 대두

앞서 조선의 公事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록의 형태로 남겨지며, 이는 후대에까지 전해지는 역사로서 여겨지게 되었기에 기록의 보존·관리가 중시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성리학적 통치이념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이는 조선이 명과 달리 문서와 기록의 보존·관리를 법조문으로 규정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조선에서 시행하는 公事는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문서는 그 사실관계가 증빙될 수 있는 立案과 함께 보존·관리되어야 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서술하는 文書 또한 법적 절차에 따라 보존·관리되어야 했다. 이는 朱熹가 말한 “명백히 명령을 내어 공적으로 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이다.¹²⁷⁾ 이는 현대 기록관리제도에서 말하는 기록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기록의 설명책임이란 “개인, 조직 또는 시스템에 책임이 부여된 활동의 결정에 대하여 주로 기록을 통해 답변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¹²⁸⁾

실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록관리는 공식적인 법적·행정적 절차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그리고 이 기록관리의 핵심인 공공기록물은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생산·보존·관리된다. 이는 공공기록물이 설명책임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기록관리의 ‘설명책임’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공적 행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검증 가능한 기록으로 입증해야만 하기에 특히 중시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 개념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전유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기록의 설명책임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업무수행의 정당성을

127) 《晦菴集》卷14, 〈奏劄〉, 〈乞瑞慶節不受賀劄子〉, “(전략) 以求公議之所在, 然後揚于王庭, 明出命令而公行之.”

128) 한국기록학회(2008), 앞의 책, 148쪽.

입증해야만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요구되겠지만, 업무수행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때문에 관료제 국가에서는 그 통치이념을 불문하고 기록의 설명책임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성리학적 관료제 국가인 조선에서는 이 설명책임이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 작동되었다. 조선의 공식적인 행정은 그 절차가 문서로 남겨졌으며, 문서의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立案이 함께 보존되어야 했다. 또한 조선에서는 문서의 서식과 상통식 등을 비롯하여 기록관리에 관한 처벌사항 또한 法典에 명시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조선에서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公事의 전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¹²⁹⁾

이처럼 조선의 기록관리제도는 기록의 生産부터 相通·活用·保存에 이르는 전반적인 管理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록은 각 직분에 따른 公事を 부끄럼 없이 수행하였다는 증빙이 되었기에, 기록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올바른 절차에 따라 생산·보존·관리되어야만 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리학적 역사관에서는 후대를 위한 역사, 즉 기록을 통한 역사서술을 중시하였다. 조정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국왕을 비롯한 주요 인사의 言行이나 민간의 행위까지도 實錄을 비롯한 다양한 기록에 남겨진 이유는 기록이 단순히 행정을 위함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성리학적 역사인식 하에서 현재의 공적 행위는 후대에 전해져야 했으며, 그 옳고 그름을 평가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조선에서 기록관리는 역사서술적 측면에서도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조선에서 기록은 단순히 행정을 위한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기록은 국가의 政令을 명명백백하게 세우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행위의 자취를 남기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조선은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 즉 기록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공고화해야만 했다. 엄격한 절차에 따른 기록의 보존·관리만이 문

129) 조선 각 기관의 일기나 등록물이 현대적 의미의 설명책임을 구현한 기록물이라는 견해는 이미 김현영(2008), 〈조선시대의 문서와 기록의 위상 : 사초, 시정기에 대한 재검토〉, 《고문서연구》 32, 한국고문서학회, 58쪽과 이형중(2018), 앞의 논문, 209쪽에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른바 기록의 설명책임이 어떠한 배경에서 받아들여지고 구현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진한 감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의 설명책임이 조선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서를 비롯한 기록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존·관리된 기록들은 업무의 前例이자 동시의 역사의 龜鑑이 되었다. 이처럼 조선에서 기록은 현재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지만, 미래를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조선에서 국가행정의 자취는 곧 史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이면서 공적 행위의 판단 기준을 성리학적 명분에 두었고, 이 공적 행위의 옳고 그름을 누군가가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고 관리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의 사관제도가 이전의 왕조인 고려나 중국의 여타 왕조에 비해 질적으로 강화·발전한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였다.¹³⁰⁾ 또한 공적 행위의 證憑으로서 그리고 후대를 위한 史料로서의 기록을 올바르게 생산·보존·관리하기 위해 법으로써 기록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기록을 효과적으로 활용·보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原文書의 중요 내용을 정리하여 별도의 책자에 옮겨 적는 謄錄의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이 原文書의 보존을 도외시한 채 謄錄만을 기록관리의 수단으로써 활용한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한 《경국대전》 藏文書條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 여러 관사나 고을에 있는 문서는 분류하여 作綜하고 懸籤하여 각기 보관한다.¹³¹⁾

해당 조문은 행정문서의 보존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서는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된 문서는 모아 묶어내며, 이렇게 정리된 문서에는 찌지 등을 붙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즉 조선 또한 문서 그 자체를 유형별로 정리한 형태로서 보존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기록이 오랜 시간 동안 관리되기 어려워 漏落되거나 散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130) 노명환(2017), 앞의 논문, 251쪽.

131) 《經國大典》〈禮典〉, 藏文書條, “○諸司諸邑文書, 分類作綜懸籤, 各藏之.”

전교하여 말씀하길, “근래 諸司의 문서는 관리된 이들이 대개 엄하게 단속하지 않아 散逸되는 것이 태반이라, 매년 考閱할 때마다 의거할 곳이 없으니 불가하다. 지금부터는 중국 조정의 사례에 의거하여 모든 衙門은 각각 木莊을 두고, 매년 매달마다 무릇 이미 시행한 문서는 分類·作綜·懸籤하여 별도로 目錄으로 만들어 인수인계[解由]하되, 傳掌하거나 出納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해당 관리가 친히 감독하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¹³²⁾

禮曹가 아뢰어 말하길, “(중략) 다만 왕세자가 동쪽에 入侍하시면 客使는 으레 西壁에 위치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항상 동쪽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문서[久遠文書]는 散逸되어 일일이 상고하여 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쪽으로 옮긴 것이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래에는 모두 이 예를 따르고 있습니다.”¹³³⁾

따라서 중요 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미 《경국대전》 반포 당시부터 承政院日記와 各衙門의 중요한 문서[緊關文書]를 撰集한 時政記와 외교 관련 업무를 수행한 承文院의 文書는 3년마다 印出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¹³⁴⁾ 여기서 印出이란 목판이나 활자 등을 통해 冊版을 만들어 책자의 형태로 찍어내는 것을 뜻한다. 이는 時政記와 承文院의 외교 관련 문서를 3년마다 수집하여 책자 형태로 찍어내 관리하였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 文書의 印出은 原文書 내용을 그대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추려내거나 별도의 정리과정을 거친 후 이루어졌으리라

132) 《成宗實錄》卷66(成宗 7年/서기 1476년) 4월 28일(辛丑): “傳曰, 邇來諸司文書, 爲吏者率不檢莊, 散逸太半, 每遇攷閱, 無所據依, 不可. 自今依中朝例, 每衙門各置木莊, 每年每月凡已行文書, 分類作綜懸籤, 別作目錄解由, 傳掌出納之際, 必須該官親監, 毋使亡失.”

133) 《明宗實錄》卷10(明宗 5年/서기 1550년) 10월 15일(乙亥): “禮曹啓曰, (중략) 但王世子入侍於東, 則客使位例在西壁, 不然則常在東. 久遠文書散逸, 不得一一考定, 其移置於東, 未知起自何時, 近來皆沿襲此例.”

134) 《經國大典》〈禮典〉, 藏文書條, “春秋館時政記 [撰集承政院日記, 及各衙門緊關文書, 每歲季啓冊數] 承文院文書, 每三年, 印藏本衙門, 議政府, 及史庫.”

추정할만한 실록 기사가 있다.

禮曹가 承文院의 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길, “(중략) 다만 院(승문원)에 謄錄은 단지 1건만 보관하고 있어 수많은 관원이 두루 보기 어려우니, 年例인 것은 제외하고 그 긴요한 문서만을 취하여 鑄字所가 印出토록 하여 각자가 열람하여 강습하도록 하십시오.” 하니, 이를 따랐다.¹³⁵⁾

撰集廳이 아뢰어 말하길, “여러 역적의 문서를 거의 다 지어냈으니, 역적 肆(臨海君 李肆)의 推案을 마땅히 印出해야겠습니다. (중략) 또한 역적 肆의 推案은 이미 한 본을 正書하여 올렸는데, 啓下해 주신 후 인출하고자 하여 감히 아뢰입니다.”¹³⁶⁾

이상의 사례와 같이 당시에 이루어진 중요문서의 印出은 原文書를 편철하여 그대로 인쇄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인출할 내용을 정리하고, 이 정리된 기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후술할 謄錄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국대전》에서는 文書의 謄錄에 관한 규정도 존재한다. 使臣으로서 기록을 담당한 書狀官의 日記를 啓下받아 승문원이 謄錄하여 관리토록 한 것이다.¹³⁷⁾ 이는 기록의 謄錄化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조문인데, 앞에서 언급한 《광해군일기》 기사의 推案 印出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謄錄物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書狀官은 使行간 매일의 사건과 외교 관련 사항 등을 기록으로 남겨 국왕에게 보고해야 했는데, 바로 이 보고기록이 原文으로 관리된 것이 아닌 謄錄으로써 보존·관리된 것이다. 다량의 동종 기록물 편찬이나 국가 주요 典籍의 간행이 아닌 이상에는 印出의 방식보다 謄錄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을 것이

135) 《世宗實錄》卷51(世宗 13年/서기 1431년) 1월 21일(丙戌): “禮曹據承文院牒呈啓, (중략) 但院藏謄錄, 只有一件, 數多官員, 難以遍閱. 除年例外, 撮其緊要文書, 令鑄字所 印出, 各自披閱講習, 從之.”

136) 《光海君日記》卷139(光海君 11年/서기 1619년) 4월 23일(丙子): “撰集廳啓曰, 諸逆文書, 幾盡撰出, 逆肆推案, 當爲印出, (중략) 且逆肆推案, 已爲正書一本以進, 啓下後當爲印出之意敢啓.”

137) 《經國大典》〈禮典〉, 藏文書條, “○書狀官逐日記事, 回還後啓下, 承文院謄錄.”

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各司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시로 생산하는 寫本記錄의 경우는 대체로 謄錄의 방식으로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조선은 초기부터 原文書 자체를 관리하기보다 이를 갈음할 수 있는 寫本記錄을 편찬하여 그 활용성과 보존성을 높이려 하였다. 물론 조선이 印出·謄錄의 대상이 되는 문서 原本의 보존·관리를 도외시킨 채, 寫本記錄의 관리만을 중시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선의 謄錄처럼 原文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록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寫本記錄이 수시로 활용된 것 또한 드문 사례이다. 그렇다면 조선은 어떻게 謄錄을 일반적인 寫本이 아닌 기록보존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이를 공식화할 수 있었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은 건국 초부터 관료제에 따른 문서행정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른 公事의 명명백백함을 추구하고자 행정의 문서화를 추구하였으며, 성리학적 역사관을 토대로 현재의 행위를 후대가 평가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서 當代史인 實錄을 편찬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록을 효율적으로 보존·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그 방식 중 하나로 謄錄이라는 방식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근대 유교문화권 국가들이 고수해 온 史書편찬 전통과도 일부 관련되는 것인데, 기록의 보존·관리가 史書의 편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原文書를 보존하는 방식보다 편찬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보존하는 방식이 익숙하게 활용되었기 때문이다.¹³⁸⁾ 史書를 편찬하는 과정에서는 원본 기록 그 자체를 묶어 정리하는 것보다 기록에 담긴 공적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별도의 정리된 冊子의 형태로 남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수단이었는데, 이를 일반 문서행정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實錄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實錄은 그 특성상 역사 敍述이자 동시에 기록의 모음집으로서의 성격도 지

138) 윤훈표(2000), 앞의 논문, 130쪽.

나게 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실록이 당대에 생산되는 時政記·起居注·日曆을 비롯하여 각종 圖書와 공문서 등의 기록을 기반으로 편찬되기 때문이다.¹³⁹⁾ 正史로 지칭되는 紀傳體 史書의 경우 해당 왕조가 멸망한 후 후대의 왕조에서 그 정통성을 잇는다는 명목하에 찬수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實錄은 동일한 왕조 내에서 前代 국왕의 역사를 서술하는 當代史이다. 때문에 실록은 상대적으로 現時性이 있는 기록을 史料로 적극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미 그 찬수과정에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내용의 是非曲直에 대한 논란이 항상 대두될 위험이 있었다. 그렇기에 實錄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된 기록에 근거하여 서술될 필요가 있었다. 조선의 경우 실록의 찬수를 위해 국가가 공적 영역에서 다수의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서 謄錄이 적극 활용되었다.

조선이 처한 행정적·경제적 상황 또한 謄錄이 조선의 중요한 기록관리 방안의 하나로써 운영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먼저 甲午改革 이전까지 조선의 공문은 규격화되지 못하였으며, 문서의 크기는 제각각인데다가 대부분 전지 크기의 낱장 형태로서 존재하였기에 成冊된 형태로 관리된 중국의 고문서에 비해서도 그 보관이나 활용 면에서 불리하였다.¹⁴⁰⁾ 이처럼 문서 각각의 크기가 상이했기에 原文書를 편철하는 방식은 상당히 불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보존의 편의와 효율을 위해 成冊의 형태로 謄錄하는 방식이 더욱 선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등록물을 비롯한 서적·의궤 등도 散逸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서책형이라는 특성상 적어도 낱장 문서 또는 문서철보다 보관이 용이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 조선은 종이 생산량이 부족하였기에, 종이 자체가 귀한 품목으로 여겨졌다. 紙匠과 서리·노비 등이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冊文과 공문 등을 훔쳐 이익을 꾀하기도 하였고, 좋은 종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啓辭에는 품질이 좋은 종이를 쓰지 못하도록 한 조치까지 내려질

139)李建宏(2003),〈中国古代实录编纂研究〉,《档案学通讯》2003年 第2期,中国人民大学, 54쪽.

140) 권태억(1994),〈갑오개혁 이후 공문서 체계의 변화〉,《규장각》1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92쪽; 정진영(2014),〈한중 고문서의 외형적 비교 고찰: 嶺南과 徽州를 중심으로〉,《고문서연구》45, 한국고문서학회, 198쪽.

정도였다.¹⁴¹⁾ 이로 미루어 볼 때 謄錄이 이루어진 목적 중의 하나로 불필요한 원문서 및 사본문서를 폐기하여 그 종이를 재활용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조선은 戰亂이나 火災 등으로 인해 문서가 燒失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였는데¹⁴²⁾, 이는 謄錄이라는 기록관리체계가 선호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兩亂에 의한 문서의 燒失을 비롯하여, 영조대 화재로 인한 《승정원일기》의 소실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¹⁴³⁾ 원문과 사본기록을 파편적으로 보존하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謄錄冊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나 보존성 측면에서나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光海君 시기에도 종이가 부족하여 戶曹가 여러 上司에서 사용하는 종이와 함께 謄書해야 할 등록물의 분량까지 줄여주길 청하기도 하였다.

호조가 아뢰기를, “근래 여러 上司에서 사용하는 종이 비용의 수가 끝이 없습니다. (중략) 여러 도감의 謄錄은 후일의 考閱을 대비하는 것에 불과하여 단지 서넛 건만 등록해도 또한 후대에 전하기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네 건을 더 謄書하기에 이르니 응당 들어가는 종이가 극히 많아지며, 모두 擣鍊한 楮注紙를 쓰는데 한 권 값이 또한 綿布 서넛 필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쌓아둔 것이 고갈되는 때를 당해 변통하여 널 길이 없으니, 청컨대 모든 도감의 등록 건수는 舊例에 의거하여 추가로 謄書하지 말도록 하고, 御覽件 외에는 모두 草注紙를 사용케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생략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전교하여 말씀하길, “윤희한다.”¹⁴⁴⁾

141) 《世祖實錄》 卷15(世祖 5年/서기 1459년) 2월 18일(辛未); 《世祖實錄》 卷40(世祖 12年/서기 1466년) 11월 17일(乙酉); 《宣祖實錄》 卷216(宣祖 40年/서기 1607년) 9월 1일(辛卯); 《光海君日記》 卷15(光海君 1年/서기 1609년) 4월 24일(甲戌); 《承政院日記》 283冊(肅宗 7年/서기 1681년) 6월 3일(甲申) 등.

142) 《世宗實錄》 卷28(世宗 7年/서기 1425년) 5월 24일(癸巳); 《端宗實錄》 卷2(端宗 卽位年/서기 1452년) 8월 6일(丙寅); 《中宗實錄》 卷21(中宗 9年/서기 1514년) 12월 3일(辛卯); 《肅宗實錄》 卷63(肅宗 45年/서기 1719년) 1월 27일(庚子); 《肅宗實錄》 卷59(肅宗 43年/서기 1717년) 3월 16일(辛未); 《英祖實錄》 卷115(英祖 46年/서기 1770년) 10월 20일(壬辰) 등.

143) 《英祖實錄》 卷60(英祖 20年/서기 1744년) 10월 13일(丙辰).

144) 《光海君日記》(中草) 卷12(光海君 2年/서기 1610년) 9월 21일(癸亥): “戶曹啓曰, 近來

비록 倭亂 이후 조선의 재정이 어려운 시기였다고는 하나 종이가 항상 부족했고, 소용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음이 확인된다.¹⁴⁵⁾ 때문에 후일의 考閱을 위해 편찬하는 謄錄에 소요되는 종이도 최대한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에서 謄錄이라는 기록관리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종이 수급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

이상과 같이 조선은 관리의 용이성이나 경제적 문제 등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謄錄이라는 기록관리 방식을 활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 謄錄이라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등록의 운용 양상이 시기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변화와 함께 변동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초기 등록의 형태와 활용

조선시대 공적인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 기록관리방안인 謄錄을 분석하고 그 실체를 살피기 위해서는 당연히 謄錄의 實物을 비롯하여 사료 등에 나타난 謄錄의 용례 등을 선행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조선 기록관리제도가 안정화된 후기 등록의 경우 당시 편찬된 謄錄이라는 題號의 기록은 다수 현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의 중요 기록정보가 謄錄으로서 보존·활용된 상황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은 그렇지 않다. 조선 기록관리제도의 구축기와 발전기에 편찬된 ‘謄

諸上司紙地用下之數，無有紀極。(중략) 諸都監謄錄，不過備後日之考閱，只謄三四件，亦足以傳後。而至於加書四件，應入紙地極爲浩大，皆用擣鍊楮注紙，一卷之價，亦不下綿布三四匹。當此國儲告竭之時，辦出無路，請諸都監謄錄件數，竝依舊例，勿爲加書，御覽件外，皆用草注紙，以省浮費何如。傳曰，允。”

145) 實錄 찬수의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하는 洗草 또한 기밀의 유지라는 목적 외 종이의 재활용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연구도 존재한다.(김현영(2008), 앞의 논문, 46쪽.) 실제 실록 외에도 《國朝寶鑑》이나 《瑤源譜略》의 편찬과정을 비롯하여 空名帖의 잔여분까지도 洗草라는 형식을 통해 폐기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린다.(이형중(2018), 앞의 논문, 214쪽.)

錄’이라는 명칭의 기록물 중 현전하는 것은 상당히 소수이기에 실물을 통한 구축기·발전기의 謄錄物의 분석은 한계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조선 초기 구축기의 것은 더욱 그러하다. 조선 전 시기 내내 ‘謄錄’이라는 개념이 동일하게 작용하였는지도 불명확하기에 현전하는 조선 후기 등록물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념을 조선 초기와 중기의 그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비록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實錄에 나타난 謄錄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조선 기록관리제도의 구축기와 발전기에 나타난 謄錄의 형태와 그 활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실제 조선의 실록기사에 나타난 ‘謄錄’이라는 표현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된다.

먼저 실록 전체에서 謄錄이라는 단어가 나타난 기사 수를 총 1,123건으로 확인된다.¹⁴⁶⁾ 이 중 宣祖 즉위 이전인 조선 기록관리제도의 구축기와 발전기 당시의 實錄에 나타난 ‘謄錄’이라는 단어의 등장은 총 263건의 기사에서 확인된다. 안정기의 등록물을 중심으로 한 실제 분석은 후술할 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고, 본 절에서는 이 263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축기와 발전기 謄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록을 통해 확인되는 조선시대 謄錄의 용례는 크게 ①단순히 문서를 베껴 적는 행위, ②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답안지를 다른 필체로 베껴 옮기는 행위, ③前例가 될 만한 문서의 내용을 별도의 책자에 베껴 적는 행위 및 이를 통해 편찬된 기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②번은 科擧 시험지의 필체를 숨기기 위해 답안을 옮겨 적는 행위 또는 이를 담당한 관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宋代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시험장에서 필체를 이용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高麗와 朝鮮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이는 易書라는 용어로도 표현되었다. 다만 실록 내 해당 용어의 사용 빈도는 조선 전 시

146) 이는 《高宗實錄》과 《純宗實錄》을 포함한 수치이다. 또한 《光海君日記》中草本과 正草本, 《宣祖實錄》과 《宣祖修正實錄》, 《顯宗實錄》과 《顯宗改修實錄》, 《肅宗實錄》과 《肅宗實錄補闕正誤》, 《景宗實錄》과 《景宗修正實錄》에서 중복된 기사는 1건으로 계산하고, 중복되지 않고 나타나는 기사들은 별도로 계산한 수치이다. 《高宗實錄》과 《純宗實錄》을 제외하면 謄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의 수는 총 1,029건이다.

기를 통틀어 살펴보다라도 여타의 사례들에 비해 확연히 낮게 나타난다.

①은 초기부터 문서의 寫本을 만드는 행위나 별도의 필사본을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로써 사용되고 있다.¹⁴⁷⁾ 다만 단순한 筆寫일 경우 謄書 또는 謄寫 등의 표현이 보다 자주 사용되며, 후대로 갈수록 謄錄이라는 표현은 ③번의 의미인 謄錄物을 편찬하는 행위에 한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實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謄錄의 의미는 ③의 ‘前例가 될 만한 문서의 내용을 별도의 책자에 베껴 적는 행위 및 이를 통해 편찬된 기록’이다. 이 ③의 등록물은 謄錄이라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기록물이지만, 그 결과물은 기록이 다루는 주제나 그 편찬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정 官司에서 매일의 공무를 정리한 기록도 謄錄이라 지칭하였고, 국왕의 受敎나 국가의 條例 등을 정리한 기록도 謄錄이라 지칭하였다. 또한 名簿와 같은 臺帳이 謄錄으로서 간주되기도 하였다.

등록물의 생산·보존·활용 양상 그 자체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지만, 시기에 따라 주로 편찬되는 등록물의 성격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축기와 발전기·안정기간의 간극이 크다.

건국 初期 구축기의 謄錄은 대체로 法典을 보조할 수 있는 기록 또는 이 기록을 편찬하기 위한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되었는데, 보통 국왕의 受敎 및 국가의 條例를 베껴 적은 것을 주로 지칭하였다.

禮曹에서 아뢰길, “本曹의 檢詳과 錄事 등은 무릇 條例와 謄錄을 相考할 일이 번잡하여, (후략)”¹⁴⁸⁾

禮曹에서 아뢰길, “지금 修撰色이 올린 새로운 《續六典》 및 《元六典》은 청건대 鑄字所로 하여금 800건을 인출토록 하여 京外 各衙門에 반

147) 《太宗實錄》卷34(太宗 17年/서기 1417년) 8월 22일(乙巳); 《世祖實錄》卷23(世祖 7年/서기 1461년) 1월 3일(甲辰); 《世祖實錄》卷38(世祖 12年/서기 1466년) 1월 18일(辛酉) 등.

148) 《世宗實錄》卷34(世宗 8年/서기 1426년) 12월 3일(壬戌): “禮曹啓, 本曹檢詳錄事等, 凡條例謄錄相考事繁, (후략).”

포한 후, 예전의 元典과 續典은 거두도록 하십시오. 또 謄錄은 한 때 행할만한 것이지 永世의 典이 아니므로 단지 10건만 작성토록 하고, (후략)”¹⁴⁹⁾

물론 이 외에도 외교 관련 참고기록을 편철한 것이나 功臣錄 등의 존재가 확인된다.¹⁵⁰⁾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吏文謄錄》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開國定社佐命三功臣謄錄》이다. 功臣謄錄의 경우는 공신 자손의 자격을 증빙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忠勳府에서 아뢰길, “(중략) 청컨대 兵曹와 司憲府 受敎에 의거하여 開國·定社·佐命 功臣謄錄과 三功臣 官案, 府(충훈부)에 보관한 謄錄·官案, 춘추관에 보관한 三功臣謄錄에 杲(李佇의 妾子, 李杲)와 字殷(張思吉의 妾孫)을 良妾子로 고쳐 적게 하십시오.”하니, 따랐다.¹⁵¹⁾

화포의 주조법 및 규격 등 국가 군사에 관한 기밀을 기록한 《銃筒謄錄》의 편찬·활용 사례 또한 조선이 초기부터 국가 중요 기밀과 관련된 내용을 등록물의 형태로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¹⁵²⁾ 다만 이러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한해 나타나고, 대다수 謄錄物은 여전히 法典을 보조·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구축기 실록에 등장하는 謄錄이 대체로 法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中期인 발전기부터는 謄錄이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된

149) 《世宗實錄》卷34(世宗 8年/서기 1426년) 12월 15일(甲戌): “禮曹啓, 今修撰色所進新續六典及元六典, 請令鑄字所印八百件, 頒京外各衙門後, 收舊元續典. 且謄錄, 可行一時, 非永世之典, 只書十件. (후략).”

150) 《世宗實錄》卷47(世宗 12年/서기 1430년) 3월 18일(戊午); 《世宗實錄》卷51(世宗 13年/서기 1431년) 1월 21일(丙戌); 《端宗實錄》卷13(端宗 3年/서기 1455년) 1월 21일(丁卯) 등의 기사에서는 《吏文謄錄》을 비롯한 외교문서 관련 등록물의 존재가 확인되며, 《太宗實錄》卷32(太宗 16年/서기 1416년) 7월 8일(丁酉); 《世宗實錄》卷77(世宗 19年/서기 1437년) 6월 6일(甲子) 등에는 功臣과 관련된 등록물의 존재가 확인된다.

151) 《世祖實錄》卷11(世祖 4年/서기 1458년) 윤2월 11일(己巳): “忠勳府啓, (중략) 請依兵曹司憲府受敎, 於開國定社佐命功臣謄錄, 及三功臣官案, 府藏謄錄官案, 春秋館藏三功臣謄錄, 杲及字殷竝以良妾子改書, 從之.”

152) 《世宗實錄》卷121(世宗 30年/서기 1448년) 9월 13일(丙申); 《文宗實錄》卷4(文宗 卽位年/서기 1450년) 10월 5일(乙亥); 《世祖實錄》卷40(世祖 14年/서기 1466년) 11월 17일(乙酉) 등.

다. 실록 기사에서 등장하는 발전기 이후의 등록물을 분석하면, 외교관계에 관한 것과 일반 행정에 관계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이후에도 지속되는데, 안정기로 갈수록 實錄에 등장하는 謄錄의 용례도 대체로 官司의 일반 행정문서를 별도의 책자에 옮겨 적는 행위 또는 그 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조선에서 謄錄이라는 단어의 용례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 受敎나 條例를 선별하여 옮겨 적은 기록으로서 法典을 보조할 수 있는 기록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구축기 등록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外交 특히 對明外交와 관계된 文書를 정리한 것으로 成冊하여 관리하는 기록이다. 이는 국가체제가 정립되어 가는 발전기부터 중점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업무의 典故로서 등록물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당시는 外交 그 중에서도 특히 對明 事大外交가 중요한 시기였으며, 특히 中宗은 反正을 통해 왕위에 올랐으니만큼 그 무엇보다도 外交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이 시기 外交 관련 등록물이 다수 언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기타 공무상 증빙 또는 활용을 위해 문서 내용을 정리한 기록이다. 이는 발전기 이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안정기 이후 편찬되는 등록물의 대다수가 이러하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아래의 <표 3>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3> 實錄 기사 내 謄錄 단어의 용례

구분		등록의 용례(건)				총계(건)
		수교·조례	외교관련	기타 공무	科擧의 易書	
구축기	태종	2	0	2	0	4
	세종	49	3	3	0	55
	문종	10	0	1	0	11
	단종	5	1	0	0	6
	세조	9	0	4	0	13
	예종	0	0	1	0	1
소계		75	4	11	0	90
발전기	성종	5	7	3	1	16
	연산군	1	3	3	0	7
	중종	3	61	38	2	104
	인종	0	3	0	0	3
	명종	1	14	28	0	43
소계		10	88	72	3	173
총계		85	92	83	3	263

위의 <표 3>을 보면 조선 기록관리제도 구축기와 발전기에 謄錄의 활용 대상이 변천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일단 구축기인 태종~예종 대까지만 하더라도 謄錄이라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 受敎나 條例 등을 정리한 기록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실록에서 謄錄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太宗代인데, 해당 기사 또한 謄錄을 條例文書를 베껴 정리하는 행위로서 지칭하고 있다.

의정부가 公事傳掌의 일로 啓目하길,
“(중략) 하나, 各年の 條例文書로 謄錄하지 않은 것은 예조로 보내시고,
이미 등록한 것은 架閣庫에 보관하십시오.¹⁵³⁾

이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各年 條例文書로서 謄錄한 것과 謄錄하지

153) 《太宗實錄》卷27(太宗 14年/서기 1414년) 4월 17일(庚申): “議政府啓目公事傳掌事, (중략) 一, 各年條例文書, 未謄錄事, 送禮曹, 已謄錄事, 藏架閣庫.”

않은 것이 구분되어 있으며, 謄錄한 조례문서는 架閣庫에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謄錄이라는 방식을 통해 條例文書를 정기적으로 별도의 기록물 형태로 엮어내어 관리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대체로 이는 檢詳條例司가 주관하였다.¹⁵⁴⁾

구축기의 謄錄이 受敎나 條例같은 일종의 규정이나 명령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배경에는 조선 초기 法制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의 고려는 중국의 율법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성문법의 시행보다 각각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왕의 처결을 전례로 삼는 王法 체계를 이루었다.¹⁵⁵⁾ 반면 조선은 합리적인 法治를 위하여 건국 후 《大明律》을 刑律의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았으며, 《洪武禮制》를 禮制의 준거로 삼았다.¹⁵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건국된 초기에는 성문법을 통한 체계적인 법의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첫째, 조선과 환경적 상황이 다른 明의 律法과 制度를 그대로 조선에 이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고려의 옛 제도 또한 法典의 형태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에 별도의 法典編纂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적·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조가 초기 즉위교서를 통해 儀章과 法制는 대체로 기존 고려의 것을 따를 것이라 천명¹⁵⁷⁾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었다.

그렇기에 조선은 《經國大典》이라는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成文法이 등장하기 전까지 明의 律法과 함께 고려의 舊制 및 그간의 행정 관련 條例文書 등을 참고하여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극을 계속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때문에 조선은 우선적으로 고려에서부터 시행된 條例 등을 베껴 정리한 《經濟六典》을 편찬하여 成文化된 法治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54) 《太宗實錄》卷32(太宗 16年/서기 1416년) 7월 8일(丁酉): “以禮曹郎官一員, 兼檢詳條例司檢詳官. 禮曹啓, 檢詳條例司, 文書謄錄, 其任匪輕.”

155) 박병호(1996), 《근세의 법과 법사상》, 서울:진원, 32쪽.

156) 박준호(2003), 앞의 논문, 144~145쪽; 조지만(1999), 앞의 논문, 3쪽.

157) 《太祖實錄》卷1(太祖 1年/서기 1392년) 7월 28일(丁未).

都堂에서 檢詳條例司로 하여금 戊辰年(필자 주: 高麗 禡王 14년, 1388) 이후 마땅히 행해야 할 條例를 책으로 베껴 내 제목을 경제육전(經濟六典)이라 이르고, 주상께 啓聞하여 中外에 간행하였다.¹⁵⁸⁾

이후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행정 條例와 지침 등을 法典에 반영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이는 《續六典》의 간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議政府가 각 品의 陳言을 의논한 것으로 啓聞하길, “(중략)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의 條令과 判旨로서 六典(《經濟六典》)에 실리지 않았어도 萬歲의 법이 될 만한 것은 간택하여 책을 만들어 續六典으로서 板을 간행하여 시행하십시오.”¹⁵⁹⁾

그러나 《경제육전》과 《속육전》으로도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위의 실록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당시 法典은 이른바 萬世不變의 金科玉條로 여겨졌는데, 단순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까지 이 法典에 포함하기에는 어려웠다. 때문에 일시적인 방편으로서 前例로 활용할만한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 이를 謄錄物로서 편찬하게 된다. 이 謄錄物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태종 14년(1414) 실록기사에 나타난 사례와 같이 참고를 위해 이미 시행한 條例文書 등을 베껴 적은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육전》이나 《속대전》과 같은 法典이 미처 포괄하지 못했거나 條文간 法意가 충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서의 法令을 수록한 ‘錄’의 일종이다.¹⁶⁰⁾ 사실 양자 모두 受敎나 條例 등을 별도의 기록으로서 편찬한 것이었으며, 法典을 보조하는 前例로서 여겨진 것은 동일하다. 다만 전자의 경우 특정 관

158) 《太祖實錄》卷12(太祖 6年/서기 1397년) 12월 26일(甲辰): “都堂令檢詳條例司, 冊寫戊辰以後合行條例, 目曰經濟六典, 啓聞于上, 刊行中外.”

159) 《太宗實錄》卷8(太宗 4年/서기 1404년) 9월 19일(丁巳): “議政府議各品陳言以聞, (중략) 殿下即位以後, 條令判旨, 六典所未載而, 可爲萬世法者, 簡擇成書, 以續六典, 刊板施行.”

160) 《世宗實錄》卷34(世宗 8年/서기 1426년) 12월 3일(壬戌); 《世宗實錄》卷42(世宗 10年/서기 1428년) 11월 29일(丁丑) 등.

청 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이루어진 작업의 결과물이며 그 위상 또한 일반 官司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典故 수준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국가사업으로서 法典에 준해 편찬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그 결과물 또한 법전의 하위 개념으로서 임시법 또는 시행령 등에 가까웠다.¹⁶¹⁾ 가장 대표적인 후자의 사례가 바로 세종대 편찬한 《六典謄錄》이다.

詳定所提調 星山府院君 李穰 등이 《六典》 다섯 권과 《謄錄》 한 권을 올렸다. 箋文에 말하길, “(중략) 일시의 임시적인 편의로서 영구한 법이 아닌 것은 따로 篇目을 만들어 《六典謄錄》으로서 그 綱領을 모으고 그 중복됨을 제거하여 요체를 명백하게 드러내 상고하고 징험할 만하니 (후략)”¹⁶²⁾

이처럼 당시의 法典과 대다수 謄錄物은 기존의 條例·敎旨 등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는데, 이 중 영구히 남길만한 것은 法典으로,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참고할만한 것은 謄錄으로 각기 나누어 정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육전》과 《속육전》 모두 傳敎와 條例文書를 수집하여 엮은 형태의 受敎輯에 가까웠다. 또한 당시의 法典은 법조문도 장황할 뿐만 아니라 각 조문 간의 일관성도 유지되기 어려웠다.¹⁶³⁾ 때문에 謄錄을 통해 法의 허점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다.

世祖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법전들과 등록을 정리한 《經國大典》 편찬을 추진하였다.¹⁶⁴⁾ 이후로도 《경국대전》은 여러 번의 수정·개편을 거쳐 成宗 16年(1485)에 들어서야 최종적으로 勘校를 완료해 이른바 ‘乙巳大典’의 체제로서 반포·시행되었다. 그리고 《경국대전》은 더 이상 수정을 가할 수 없는 萬世不變의 成憲으로 간주되었다.¹⁶⁵⁾

161) 임용한(2003), 앞의 논문, 173~188쪽.

162) 《世宗實錄》卷42(世宗 10年/서기 1428년) 11월 29일(丁丑): “詳定所提調星山府院君 李穰等, 撰六典五卷, 謄錄一卷以進. 箋曰, (중략) 一時權宜, 非經久之法, 則別爲篇目, 以六典謄錄, 撮其綱領, 芟其重複, 要使坦然明白, 可考而徵, (후략).”

16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編(1993), 《經濟六典輯錄》, 서울:다은, 4쪽.

164) 《經國大典》〈經國大典序〉, “我祖宗深仁厚澤, 宏規懿範, 播在令章者, 曰元續六典謄錄, 又有累降敎旨, 法非不美, (중략) 今欲斟酌損益, 刪定會通, 爲萬世成法.”

165) 《成宗實錄》卷165(成宗 15年/서기 1484년) 4월 8일(甲子): “傳于承政院曰, 大典勘校後, 依大明律例, 毋令輕易紛更. 如有請改者, 立法論罪, 何如. 承旨等啓曰, 上敎允當.”

《경국대전》의 등장으로 인해 조선은 成文法에 근간한 統治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法典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했던 謄錄 또한 외연적 확장을 이룸과 동시에 그 개념이 분화되었다. 조선의 성문법 체제가 완비되면서 소위 하위법으로서의 《謄錄》이나, 각 官司에서 업무와 관계된 受敎 및 條例를 정리한 謄錄 모두 그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 <표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경국대전》이 국가 大典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시작한 성종대 이후부터 謄錄의 의미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김혁(2000)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국대전》체제 이후 謄錄의 법전적 기능이 《경국대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謄錄은 문서를 베껴 책록해 구비하는 것으로서 남게 된 결과라고 판단하였다.¹⁶⁶⁾ 그러나 현전하는 《受敎謄錄》이 宣祖부터 高宗에 이르는 시기의 受敎를 정기적으로 편찬했다는 점에서 受敎 등을 謄錄하는 행위는 《경국대전》체제 성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전의 보조적 기능 또한 소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⁶⁷⁾

현재 확인할 수 있는 《受敎謄錄》의 체계는 비록 法典처럼 六典체제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刑罰이나 爭訟·褒賞·禁制 등 주요 사안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주제별로 국왕의 수교와 관련 문서 등을 謄錄해 정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안정기에 편찬된 《수교등록》 또한 구축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法典의 보조적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국대전》반포 이후 법전을 보조하는 역할로서의 謄錄은 분명 이전에 비해 實錄에서 그 등장 빈도가 상당히 감소하였음은 사실이다. 또한 이와 반비례하여各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기록을 별도로 成冊한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서의 ‘謄錄’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 이는 분명 《경국대전》의 편찬이 謄錄의 외연 확장과 개념 분화에 일정한 계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것이 오로지 《경국

166) 김혁(2000), 앞의 논문, 18~19쪽.

167)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受敎謄錄》(奎12867의 1,奎12867의3, 奎12982, 奎15142, 古5125-23) 등이 있다.

대전》의 영향이라고 보기에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실제 《경국대전》 이후에도 준법전적 성격을 지닌 등록물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종 재위 전후 나타난 등록의 외연적 확장과 개념의 분화는 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그 배경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二. 謄錄體系의 실체적 분석

1. 등록체계의 전개와 謄錄物

1) 등록의 외연적 확장과 개념 분화

앞서 구축기의 謄錄物은 대체로 法典을 보완하는 임시법 또는 하위법의 역할을 위해 편찬되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謄錄의 準法典的 성격이 약화됨과 동시에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典故로서의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계기가 《경국대전》의 반포일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러나 謄錄의 외연적 확장과 개념 분화가 일어난 이유를 오로지 《경국대전》의 반포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구축기의 등록물이 오로지 準法典的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니었으며, 準法典的 성격을 지닌 각각의 등록물조차도 그 찬수 목적과 위상에 있어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檢詳條例司나各司에서 受敎 및 條例文書를 찬집한 등록물과 국가의 임시법으로서 편찬한 등록물은 엄연히 별도의 기록으로 간주되었다.

禮曹判書 李承孫이 아뢰어 말하길, “세종대왕 18년간의 傳旨 및 受敎를 提調와 別監을 세워 纂集토록 하고, 이어서 ㉠謄錄을 만들도록 하소서.” (중략) 左承旨 鄭而漢과 同副承旨 朴仲孫이 아뢰어 말하길, “각 년의 傳旨 및 受敎가 의정부 및 육조各司에 흩어져 있으니, 한 둘 유생의 힘으로는 이를 모아 撰錄하기 쉽지 않겠습니다. (중략)”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각처의 ㉠謄錄을 모두 승정원에 모으도록 하고, 모은 후에는 혹 都監을 세우거나 혹 유생에게 명하여 알맞게 처리토록 하라.”¹⁶⁸⁾

168) 《文宗實錄》卷9(文宗 1年/서기 1451년) 8월 10일(乙亥): “禮曹判書李承孫啓, 世宗大

위의 실록 기사에서 謄錄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각기 다른 위상의 기록물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기존의 《등록》에 누락된 세종 15년(1433)부터 세종 32년(1450)간의 傳旨와 受敎를 편찬하여 추가로 찬집하고자 한 것이며, 이때의 謄錄은 확실히 法典에 준하는 위상을 지닌 기록이다.¹⁶⁹⁾ 그러나 ㉡의 謄錄은各司에서 자체적으로 해당되는 국왕의 傳旨와 受敎를 정리한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지침으로 활용된 것이었다. 즉 ㉡의 謄錄은 중앙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 주도로 별도의 편찬과정을 거쳐 ㉠의 謄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¹⁷⁰⁾

이는 당시에 謄錄으로 지칭되는 기록이 모두 단일한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즉 謄錄은 그 시작부터 이미 외연 확장과 개념의 분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성종 재위기간 이전의 謄錄物의 편찬 방식이나 이후 시기의 등록물 편찬 방식 그 자체는 동일하다. 原文書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을 抄出하여 기록하거나, 아예 全文을 수록하여 활용·보존하는 방식이다.

戶曹가 아뢰길, “本朝의 서울과 지방의 관리가 金銀錢穀을 출납하는 文字(문서)에 단지 서명하고 印을 찍기만 하기 때문에, 간교한 무리들이 관청의 문서를 위조하여 錢物을 몰래 훔쳐 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 조정의 法制에 의거하여 서명하고 印을 찍은 후 勘合하여 시행토록 하십시오. 서울 내各司에 移文하는 것은 문서를 감합하여 무시로 相考토록 하고, 外防은 都觀察使가 謄錄에 옮겨 적어 본문은 曹로 還送케 하여 글자를 상고토록 하십시오.”하니, 이를 따랐다.¹⁷¹⁾

王十八年間, 傳旨及受敎, 設提調別監纂集, 續成謄錄. (중략) 左承旨鄭而漢, 同副承旨朴仲孫啓曰, 各年傳旨及受敎, 散在議政府及六曹各司, 以一二儒生之力, 未易徵會撰錄. (중략) 上曰, 各處謄錄, 皆令聚於承政院, 已聚後, 或設都監, 或命儒生, 隨宜處之.”

169) 《文宗實錄》卷6(文宗 1年/서기 1451년) 2월 18일(丁亥): “司憲府啓, 續典及謄錄撰定後, 自癸丑正月, 至庚午年, 世宗朝十八年間, 傳旨及受敎嘉謨善政, 永爲遵守之事甚多, 而雜於一時常行之事, 文籍汗漫, 大小臣民, 未能周知, 奉行官吏, 眩於考閱, 勢難舉行, 良法美意, 漸至廢墜, 不可不慮. 請依續典, 撰集廣布. 從之.”

170) 김혁(2000), 앞의 논문, 15~16쪽.

171) 《太宗實錄》卷34(太宗 17年/서기 1417년) 8월 22일(乙巳): “戶曹啓, 本朝京外官金銀錢穀出納文字, 只用署署踏印, 奸巧之徒偽造官文, 盜用錢物. 自今依中朝法制, 署署踏印後勘合施行, 移文京中各司, 則勘合文書無時相考, 外方則都觀察使傳書謄錄, 將本文還送

이는 태종 재위 기간 金銀錢穀의 출납과 관련하여 盜用을 막기 위해 해당 文書의 勘合을 시행토록 한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서울의各司는 각기 文書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 수시로 勘合토록 하였고, 外方의 경우 勘合을 위해 原文書를 戶曹로 보내도록 하였다. 서울의 경우 거리가 가까워 수시로 勘合이 가능하였으나 지방은 그렇지 못하여 原文書를 아예 戶曹에서 관리토록 한 것이었다. 다만 外官에서도 관련 문서를 활용·상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原文書를 都觀察使가 별도로 謄錄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謄錄은 原文書의 내용을 그대로 별도의 책자 등에 옮겨 적는 행위를 뜻한다. 謄錄은 이처럼 건국 초기부터 원문서의 내용을 베껴 업무용·증빙용 사본기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인지도였으며, 謄錄의 대상 또한 受敎·條例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이미 구축기부터 廣義의 개념으로서 謄錄과 狹義의 개념으로서의 謄錄이 함께 통용되었음을 뜻한다. 謄錄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록을 베껴 적어 정리한다’라는 단순한 개념을 뜻하는 것이었기에, 이렇게 생산된 기록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써 사용되기도 한 것이었다. 이는 오히려 등록물의 유형과 그 성격이 다양화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謄錄의 방식을 활용해 편찬된 기록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謄錄’이 일반명사화되었기에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기록이 대폭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안정기까지도 지속되는데, 표제에 ‘謄錄’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지 않은 기록을 謄錄으로 일컫거나 儀軌 및 각종 日記 기록 등도 謄錄으로 混稱하는 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¹⁷²⁾

사실 앞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또는 장기적 보존이나 대내외 유포 등을 위해 原文書의 寫本을 생산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謄錄은 단순한

于曹，字畫相考，從之。”

172) 儀軌를 謄錄으로 지칭한 사례는 《光海君日記》卷21(光海君 1年/서기 1609년) 10월 16일(甲子); 《光海君日記》卷29(光海君 2年/1610년) 5월 27일(辛未); 《孝宗大王寧陵山陵都監儀軌》의 〈都監儀軌事目〉 등에서 확인되며, 日記를 謄錄으로 지칭한 사례는 《承政院日記》114冊(孝宗 1年/서기 1650년) 7월 9일(庚申); 《典客司日記》와 《宣傳官廳日記》標題의 ‘謄錄’과 ‘日記’ 혼용 사례 등에서 확인된다.

寫本이 아닌 原本을 대체할 수 있는 기록으로 여겨졌으며, 그 활용 또한 一回的 또는 短時的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謄錄은 기록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통용되었다.

고려에서도 중요한 기록은 사본을 제작하여 활용·보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式目都監의 判案이 어지러워 이를 다시 謄寫하여 보관할 것을 杜景升이 건의한 사례를 통해 당시에도 중요한 기록은 복본 및 사본을 제작하여 활용·보존했음을 알 수 있다.¹⁷³⁾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判案문서 개개의 사본을 만들어 재정리한다는 의미인지 조선의 謄錄처럼 成冊하여 관리하자는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고려시대의 史料가 상당히 부족하여 그 실상을 상세히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고려의 기록관리 또한 나름의 일정한 체계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謄錄과 같은 유형의 기록을 정기적으로 편찬한 사례나 업무상 활용했다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高麗가 조선의 謄錄과 같은 방식을 보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조선과 동시대 국가인 明 또한 繕寫라는 공문 사본제작의 개념이 존재하였지만, 대체로 이는 공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正書한다는 개념에 가까웠다.¹⁷⁴⁾ 이는 업무에 수시로 활용하기 위해 原文書의 내용을 별도의 書冊 형태로 옮겨 적는 조선의 謄錄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輯錄·彙集·彙考 등이 조선의 등록물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들 또한 조선의 등록물처럼 각 관사가 업무상 참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시 생산·활용한 것은 아니었다. 《明實錄》상에서 이러한 기록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황제의 명으로 인해 생산되는 모습을 보이며, 그 활용도도 크지 않다. 물론 實錄이 조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실을 일일이 수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주요 대사와 前代 編輯한 書籍은 모두 적는다는 明實錄 纂修凡例를 고려해 본다면 이들 기록이 주요 국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¹⁷⁵⁾

173) 《高麗史》卷100, 〈列傳〉, (杜景升), “景升與同列奏, 式目都監所藏判案, 國之龜鏡, 部秩錯亂, 漸難稽考, 宜加檢討, 謄寫以藏, 從之.”

174) 趙彥昌(2011), 앞의 논문, 75~76쪽.

175) 《明實錄》의 纂修凡例는 각 황제 실록의 卷首에 기재되고 있는데, 황제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국가 주요 大事(주요 儀禮 및 外交 관련 사안, 法令 및 條例

이렇듯 조선은 그 초기부터 他國과는 달리 謄錄이라는 방식을 기록의 관리방안으로서 적극 활용하였다. 구축기 실록 기사에서 확인되는 등록물의 편찬·활용 사례를 살펴보다도 국왕의 受敎나 事大文書, 銃筒 관련 문서, 功臣 관계 문서 등 국가의 중요 기록이 謄錄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에 謄錄된 기록 또한 原本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謄錄의 대상이 이들 중요 국가기록에서 일반적인 행정문서로까지 확장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 중 하나로 조선 실록찬수체계의 정비를 들고자 한다. 앞에서 明과 조선의 기록관리제도 차이에 대해 서술한 바 있는데, 그 배경에는 實錄으로 대표되는 기록관리의 목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등록체계를 살펴보면 謄錄이 어떻게 조선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개념의 외연적 틀을 확장할 수 있었는지를 논증할 수 있을 것이다.

앞 장의 <표 3>을 통해 《成宗實錄》부터 등록의 주요 용례가 변화되는 모습이 감지되기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으로 謄錄이라는 용어에 準法典的 성격이 약화되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典故’로서의 성격이 더욱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燕山君日記》부터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는 정치·제도적 변화에 따라 조선의 실록찬수체계가 본격적으로 정비된 시점과 멀지 않다.

成宗 이전 조정의 주도세력은 이른바 훈구 세력으로 통칭되는 기존 공신세력들이었다. 특히 世祖의 政變을 통해 등장한 靖難功臣 세력은 院相制를 통해 성종 치세 초기까지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成宗이 親政을 실시하면서 金宗直을 위시한 사림세력들의 정계 진출이라는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실록에서는 경연 기사 및 사론의 증가라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¹⁷⁶⁾ 또한 예문관 참외관인 奉敎·待敎·檢閱 등 이른바 專任史官을 중심

의 변동, 주요 관직의 除拜, 군사 관련 사안 등)는 모두 쓰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히 成祖 永樂帝·宣宗 宣德帝·英宗 正統帝·憲宗 成化帝·孝宗 弘治帝·武宗 正德帝의 실록 修纂凡例에는 “一, 凡纂修先朝實錄, 及編輯書籍皆書.”라 하여 편집된 서적 또한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으로 한 사관제도가 갖춰지게 되며, 史草를 비롯한 史料의 보존 원칙과 실록청 각방 堂上과 郎廳의 직무체제 등도 이 시기 정비된 것으로 판단된다.¹⁷⁷⁾

흥미롭게도 실록 내 謄錄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의 확장 및 분화 또한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조선 초기부터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등록물 그 자체는 존재하였음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吏文謄錄》, 《銃筒謄錄》 등은 이미 《세종실록》에서 그 존재가 나타난다.¹⁷⁸⁾ 《睿宗實錄》에서는 의정부와 육조의 謄錄에 임금의 政事가 기재된다는 표현을 통해 국왕의 재결을 받은 公事가 등록물로 남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¹⁷⁹⁾ 아울러 中宗代 內藏되어 있던 《日本國書契謄錄》이 太宗부터 成宗시기까지의 對日本 외교기록을 정리한 것이었음도 확인된다.¹⁸⁰⁾ 즉 일반적으로 알려진 업무의 典故로서 등록물은 이미 성종 이전부터도 생산되고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각 관사에서 등록물을 다수 편찬·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성종대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성종실록》 이후부터 공적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典故로서의 등록물에 대한 기사가 급증했다는 점은 성종대부터 이러한 등록 기록물의 편찬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 成宗代 나타난 정치적·행정적 변화에 주목하였다. 먼저 이 시기에는 經筵制度가 정비되면서 성리학적 통치철학과 역사인식의 심화가 이루어졌으며, 《經國大典》을 비롯한 《國朝五禮儀》·《八道地理志》 등의 편찬을 통해 국가 통치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확실하게 다져지고 있었다. 이는 조선이 초기 건국 과정의 혼란을 극

176) 차장섭(1992), 앞의 논문, 32~33쪽.

177) 오향녕(2009), 앞의 책, 309, 325, 394쪽.

178) 《世宗實錄》 卷51(世宗 13年/서기 1431년) 1월 21일(丙戌); 《世宗實錄》 卷121(世宗 30年/서기 1448년) 8월 3일(丙辰); 《世宗實錄》 卷121(世宗 30年/서기 1448년) 9월 13일(丙申) 등.

179) 《睿宗實錄》 卷5(睿宗 1年/서기 1469년) 4월 27일(庚辰): “人君政事, 載在議政府六曹謄錄, 臣雖不書, 自有載籍.”

180) 《中宗實錄》 卷98(中宗 37年/서기 1542년) 윤5월 21일(庚午): “以內藏日本國書契謄錄, 下于領議政尹殷輔曰, 今考內藏謄錄, 則自太宗朝, 以至成廟時, 別幅有銀槓銀盃等物, 則銀器, 自古齎來也.”

복하고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實錄의 찬수체계도 정비되면서, 實錄에 수록된 史料의 생산과 보존 등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高麗 및 唐·宋 이후 중국의 여러 국가들이 기록의 관리를 위해 膳錄과 유사한 방식을 일부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달리 왜 국가 전반적인 기록관리체계로서 등록체계가 작동되지 못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 국가는 모두 조선과 동일하게 實錄을 찬수하였으며, 史官制度를 운영하였고, 기록의 수집 및 정리를 위한 史館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실록찬수체계와 조선의 그것은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고려의 경우 史藁로 확인되는 史草와 유사한 성격의 기록을 史官들이 작성하여 실록찬수에 활용하였으며, 조선의 時政記와 유사한 성격의 日錄 또는 日曆도 편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¹⁸¹⁾ 그러나 조선에 비해 기록의 충실함 및 실록찬수체계의 엄밀성 등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高麗의 實錄은 조선처럼 절차에 따라 實錄廳이 설치되어 찬수작업을 주관한 것이 아닌 監修國史 이하 修撰官들이 국왕의 명을 받아 수찬하는 방식이기에 체계적으로 실록을 찬수하기 어려웠다.¹⁸²⁾ 심지어 권력자가 實錄의 찬수 과정이나 史官의 활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¹⁸³⁾ 더욱이 군주가 實錄을 열람하기도 하였는데 忠烈王 복위 후 33년(1307)에 元에 체류하던 忠宣王의 요청에 따라 고려의 實錄을 元으로 보낸 적

181) 오항녕(2009), 앞의 책, 302~311쪽.

182) 《高麗史》卷15, 〈世家〉(仁宗 卽位年/서기 1122년) 9월 19일(乙亥): “命修睿宗實錄, 以寶文閣學士朴昇中, 翰林學士鄭克永, 寶文閣待制金富軾, 充編修官.”; 《高麗史》卷22, 〈世家〉(高宗 14年/서기 1227년) 9월 4일(庚辰): “監修國史平章事崔甫淳, 修撰官金良鏡任景肅俞升旦等, 撰明宗實錄, 藏於史館, 又以一本, 藏於海印寺.”; 《高麗史》卷26, 〈世家〉(元宗 8年/서기 1267년) 10월 29일(壬午): “命監修國史李藏用, 同修國史柳璈, 修撰官金坵許珙, 修神熙康三代實錄.”

183) 《高麗史》卷100, 〈列傳〉(崔世輔): “有人訴重房曰, 修國史文克謙, 直書毅宗被弑事, 弑君天下之大惡. 宜令武官兼之, 使不得直書. 克謙聞之懼, 密奏王. 王重違武臣意, 然惡其非舊制, 乃授世輔同修國事. 世輔擅改事爲史, 由是毅宗實錄, 脫略多不實.”; 《高麗史》卷105, 〈列傳〉(俞千遇): “(진략) 嘗爲史官, 不修史藁曰, 當時國家事, 皆晉陽公所爲, 吾蒙恩厚, 何敢傳其惡於後世.”; 《高麗史》卷132, 〈列傳〉(辛旽): “史官尹紹宗在傍, 旽顧謂曰, 毋妄書國事, 吾將取觀之.”

이 있을 정도였다.¹⁸⁴⁾

이는 중국의 여러 왕조 또한 다르지 않았는데 실록이 편찬되기 시작하면서 唐太宗이나 憲宗처럼 실록을 帝王이 직접 열람한 사례도 있었고, 실록 편찬 과정에서 宰相들이 사관에게 직접 쓴 시정기를 전달하기도 하였다.¹⁸⁵⁾ 그리고 宋代에는 문인들이 實錄을 공공연하게 열람하기까지 했다.¹⁸⁶⁾ 심지어 후대인 명·청 시기에는 아예 어람용 실록이 따로 제작되기도 하였다.¹⁸⁷⁾

물론 조선 또한 실록의 찬수 과정에서 曲筆에 관한 是非가 일기도 하였고, 이 과정에서 閔粹의 史獄이나 戊午士禍, 安名世 사건 등의 史禍·史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상대적으로 실록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엄격한 편찬과 관리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선에서 실록은 국왕조차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史官이 직접 해당 실록의 일부를 열람하고 내용을 발췌해 보고하는 등 실록에 대한 접근 자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조선이 고려나 중국에 비해 실록찬수체계의 엄밀성과 기밀성을 중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184) 《高麗史》卷32, 〈世家〉(忠烈王 33年/서기 1307年) 11월 25일(丙戌): “以前王命, 遣直史館尹頤, 奉先代實錄一百八十五冊, 如元. 時人皆不可曰, 祖宗實錄, 不宜出之他國.”

185) 《貞觀政要》卷7, “玄齡等, 遂刪略國史爲編年體, 撰高祖太宗實錄, 各二十卷, 表上之, 太宗見, 六月四日事.”; 《舊唐書》卷15, “史臣蔣係曰, 憲宗嗣位之初, 讀列聖實錄, 見貞觀開元故事, 竦慕不能釋卷.”; 《唐會要》卷64, “是宰相記天子事, 以授史官之實錄也.”; 《資治通鑑綱目》卷41下, “○周制, 宰相撰時政記, 月送史館[時政記自此始, 從姚璹之請也, 胡氏曰, 唐制, 宰相修史, 固非善法, 然記注之官不廢, 則猶可考實, 今直使宰相撰時政記, 月送史館, 則僞美而易惡假善, 而蓋非實事, 不必書, 書事不必實, 而不復可信矣.” (이상의 문헌은 電子版 四庫全書 인용하였음. 이하 동일.) 宰相이 직접 쓴 시정기를 史館에 보내고자 한 최초의 목적은 史官이 누락할 수 있는 史草를 보완하고자 한다는 선의에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훗날 실록편찬 과정에서 권력의 개입에 따른 曲筆이 우려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186) 朱熹는 본인이 宋代 황제들의 實錄을 보았음을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다.《朱子語類》卷91, 〈禮〉八, 〈雜儀〉, “某後來看祖宗實錄, 乃是教大晟樂時士人所服 (후략)”; 《朱子語類》卷104, 〈朱子〉一, 〈自論爲學工夫〉, “嘗云, 向時得徽宗實錄, 連夜看, 看得眼睛都疼.”; 《朱子語類》卷107, 〈朱子〉四, 〈寧宗朝〉, “嘗觀徽宗實錄, 有傳極詳, 似只寫行狀墓誌, (후략)” 등

187) 서인범(2014), 《〈明實錄〉의 刊行·收藏과 朝鮮 유입》, 《동국사학》 57집,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86~90쪽; 김선민(2012), 《舊滿洲檔》에서 《滿漢實錄》까지 : 청 태조실록의 편찬과 수정, 《史叢》 7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57쪽.

조선의 통치사상인 성리학이 역사의 直筆直書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존의 유교적 역사관을 강화한 성리학적 역사관은 인간의 존재를 우주론적 관점에서 규정하였고, 이는 내세의 부정과 함께 후세라는 현실적 존재가 ‘나’를 평가하는 잣대이자 평가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다. 즉 성리학에서 史는 인간에게 있어 “존재구속적”인 것이 된 것이다.¹⁸⁸⁾ 성리학적 통치체계를 구축하고 국왕조차 이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요구했던 조선은 동시대 중국의 왕조나 前朝 고려에 비해 실록의 편찬과 관리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물론 성리학적 통치질서의 구축은 조선에서만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고려 중기 이후부터 성리학적 소양을 지닌 인사들이 정계에 진출하고 있었으며, 明과 淸 또한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고려나 명·청에 비해 보다 강력한 성리학적 통치 질서가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

성리학의 도입은 고려 충렬왕 시기 安珦에 의해서였다. 당시 고려는 무신정권을 거치면서 문치주의가 쇠퇴하게 되었으며, 몽골의 침입을 받아 부마국으로까지 전락하게 된 상황이었다. 때문에 당시 고려가 수용했던 元代 性理學은 도덕적 실천주의를 강조한 것이었다.¹⁸⁹⁾ 그러나 여말선초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성리학은 사회개혁을 위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개인 수양을 위한 학문을 넘어 사회 제도의 변혁을 위한 학문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회 제도의 변혁을 주장하는 성리학자들에 의해 조선이 건국될 수 있었다. 즉 고려에서 성리학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시간도 그러한 사상적 역량도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조선과 동시대 국가이자 성리학을 통치철학으로 받아들인 明과 淸 또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먼저 황제권의 존재가 너무도 컸다. 이민족인 元

188) 오항녕(1999), 〈性理學의 歷史觀의 成立 : 超越에서 現實로〉, 《조선시대사학보》 9, 조선시대사학회, 17~22쪽.

189) 도현철(2018), 〈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과 문치 확대〉, 《역사비평》 2018년 겨울호(통권 제125호), 역사비평사, 209~210쪽; 정성식(1996), 〈麗末鮮初의 歷史的 轉換과 性理學的 對應에 관한 研究: 鄭圃隱과 鄭三峯의 思想的 特性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47~48쪽.

을 몰아내고 한족 통일국가를 건설한 明과 만주족 우위의 국가를 건설했던 淸 모두 정상적인 상황에서 국가를 승계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 국가는 건국 초기부터 무력에 의한 국가통일 또는 왕조교체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무력을 통솔한 건국 황제의 권한이 비대할 수밖에 없었다. 明은 초기부터 丞相으로 대표되는 宰相職을 없앴으며, 군주 전제체제를 확립하였다. 물론 조정에서 宰相의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에 실질적으로 재상의 기능을 수행한 직책으로서 內閣大學士라는 職이 존재하였지만, 명목상 황제의 秘書와 顧問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明은 황제의 측근으로서 宦官을 적극 활용하여 관료들을 견제하였다. 淸 또한 八旗制度의 운영 및 환관기구의 폐지 등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明과 유사한 절대 皇權 중심의 통치체제를 견지하였다. 황제는 원칙적으로 성리학적 규범에 따라 통치하는 자였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황제에게 성리학적 규범을 철저히 따를 것을 요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는 달랐다. 이는 조선의 건국이 특정 집단의 무력이나 권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의 개창은 이성계 개인이 지닌 威名과 강력한 사병으로 대표되는 武力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지만, 역성혁명의 명분을 제시하고 새 왕조의 기틀을 구축한 것은 성리학적 소양을 지닌 사대부들이었다. 이들 사대부들이 신 왕조 건국에 미친 영향력은 명·청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때문에 조선의 개창 그 시점에서부터 국왕은 專制的 君主라기보다 성리학적 이상을 정치로 구현해야 하는 자리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道學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사림세력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이러한 경향성은 점차 강해지게 되었다. 조선에서 人君이라는 지위는 존귀하지만 天下萬民의 마음을 얻기 위해 仁한 마음을 다해야 하는 존재였다.¹⁹⁰⁾ 그리고 만약 人君이 그 명분을 다하지 않으면 한낱 匹夫로 전락할 수도 있었다.¹⁹¹⁾ 때문에 국왕은 經筵 등의

190) 《三峰集》卷7, 〈朝鮮經國典〉, 〈正寶位〉, “人君之位, 尊則尊矣貴則貴矣. 然天下至廣也, 萬民至衆也, 一有不得其心, 則蓋有大可慮者存焉. (중략) 然所謂得其心者, 非以私意苟且而爲之也, 非以違道干譽而致之也, 亦曰仁而已矣.”

191) 《孟子》〈梁惠王章句下〉, “齊宣王問曰, 湯放桀, 武王伐紂,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曰, 臣弑其君可乎. 曰, 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자리를 통해 끊임없는 자기수양을 요구받았으며, 三司의 諫言을 용인하고 言路를 보장하여야 했다.

이는 조선의 실록이 고려나 명·청을 비롯한 타국의 실록보다 강력한 위상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였다. 국왕의 언행을 기록하여 실록에 남겨야 한다는 원칙부터가 공적인 영역에서의 ‘성리학적 설명책임’을 구현하기 위함이었으며, 국왕은 이 과정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됐다. 물론 연산군처럼 이 원칙을 거스르고자 하는 군주는 그職을 유지할 수 없었다.

전교하여 말씀하길,

“임금이 두려워하는 바는 史일 뿐이다. 《春秋》에서 이르길 ‘아버이를 위해 隱諱한다.’고 했는데 史官이 된 자는 단지 時政만을 기록하는 것이 마땅하다. 임금의 일을 기록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근자의 사관은 임금의 일을 곧장 쓰면서 오히려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데, 아래 것의 일은 은휘하고 쓰지 않으려 하니 죄가 크다. 이제 사관에게 영을 내려 이미 임금의 일을 쓰지 못하게 했지만, 史가 없는 것만 못할 것이다. 임금이 정사를 행하는데 史에 구속되는 것은 가하지 않다.”¹⁹²⁾

연산군의 이러한 언행은 결국 中宗反正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¹⁹³⁾ 이는 조선에서 국왕이라고 할지라도 성리학적 원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란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史’를 중시하였으며, 특히 當代史인 實錄은 그 嚴正함을 위해 국왕조차 함부로 열람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史官制度和 실록찬수체계 또한 강화되었으며, 실록 찬수를 위한 자료의 생산

未聞弑君也.”

192) 《燕山君日記》 卷63(燕山君 12年/서기 1506년) 8월 14일(辛酉): “傳曰, 人君所畏者, 史而已. 春秋云, 爲親者諱, 爲史者但當記時政, 不宜書君上之事. 頃者史官, 君上之事, 則書之, 猶恐不及, 在下之事, 則諱而不書, 罪亦大矣. 今則已令史官, 不得書君上之事, 然不若無史之爲愈也. 人君行事, 不可拘於史也.”

193) 《中宗實錄》 卷1(中宗 1年/서기 1506년) 9월 2일(戊寅): “[史臣曰, (중략) 卽位以後, 日記史草, 如有直言議論, 盡令割削, 家藏史草, 亦令收入, 且令不記人君過失, 盡革兼帶春秋之號, 以他官, 稱校史官, 使撰集卽位後實錄. (중략) 自古荒亂之主雖多, 未有如燕山之甚者也.”

과 수집·보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의 등록체계가 실록찬수를 위한 목적에서 확대·강화되었음은 동시대 명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명은 중국 實錄纂修의 전통을 이어나간 국가였으며, 조선과 마찬가지로 찬수된 實錄은 別置하여 보존하였다. 다만 조선의 實錄과 명의 實錄은 동일한 當代史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위상과 활용도를 지녔다. 먼저 명의 대학사였던 陳于陞(1545~1597)가 올렸던 상소를 통해 實錄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살펴보자.

建隆(宋 太祖)이후 編年の 體書を 일러 日曆이라 하였습니다. 곧 여러 관사가 奏對한 사실을 모은 것은 時政紀(필자 주: 時政記)라 칭하고, 株下(필자 주: 周에서 문서와 기록을 담당하 下史로 史官을 뜻함)가 보고 들어 취한 것은 起居의 부류가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이를 윤색하여 日曆을 만들고 修撰하여 實錄으로 완성하였는데, 史官이 채택한 것을 구비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紀·表·志·傳의 體書는 일러 正史라 합니다. (중략) 우리 황조는 법제를 세워 모든 것이 前代보다 뛰어나지만 史書만은 홀로 列聖의 實錄만 있어 金匱石室에 보관하니 단지 송대의 編年日曆의 체제를 모방한 것과 같습니다. 단지 備史라고만 일컬을 수 있고, 正史로 일컬을 수 없습니다.¹⁹⁴⁾

陳于陞는 實錄을 가리켜 備史라 하여 紀傳體로서의 國家 正史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備史의 정확한 의미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문맥상 正史를 위해 구비되는 역사 정도로 읽혀진다. 즉 實錄은 時政記·起居注를 日曆의 체제로서 修撰된 것으로서, 正史 편찬 이전의 중간단계 기록으로 본 것이었다. 동시기 명의 관료였던 薛三省(1558~1634) 또한 實錄과 正史

194) 《皇明經世文編》卷426, 〈恭請聖明敕儒臣開書局纂輯本朝正史以垂萬世疏〉: “自建隆後, 編年之書, 謂之日曆. 即所稱采百司奏對事實, 為時政紀. 取柱下見聞, 為起居類. 次而潤色之為日曆, 修而成之為實錄. 以備史官之采擇者是已. 其紀表志傳之書謂之正史. (중략) 我朝建立法制, 事事超越前代, 而史書獨有列聖實錄, 藏之金匱石室, 似只依倣宋世編年日曆之體. 但可謂之備史, 未可謂之正史.” 해당 상소는 명의 《神宗顯皇帝實錄》卷264(萬曆 22年/서기 1593년)에도 일부 수록되어 있다.(해당 문헌은 電子版 四庫全書 인용하였음. 이하 동일.)

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국가의 正史는 累朝의 실록에서 취해 짓는 것이고, 실록의 典故는 또한 매년의 纂注에서 취해 안감으로 삼는 것이며, 起居注와 六曹編纂은 실록의 저본이 된다. 실록 또한 正史의 成案이다. 고로 반드시 실록이 신중한 후에야 正史가 마땅해지며, 纂注를 자세히 한 이후에야 實錄이 완비된다. 195)

이러한 인식은 모두 實錄이 正史의 바탕이 되는 자료로 여겨졌음을 뜻한다. 즉 적어도 明代에서 史書 편찬의 개념은 日曆·時政記·起居注를 바탕으로 實錄이 편찬되고, 이 實錄을 통해 正史가 찬수된다는 도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薛三省은 실록의 典故가 纂注에서 취한 것이고, 起居注와 六曹編纂이 “實錄의 底草”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纂注는 글자 뜻 그대로 보면 注를 纂輯한다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起居注 및 時政記같은 유형의 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六曹編纂의 경우 명확하게 그 의미를 설명할만한 史料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六部の 章奏를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¹⁹⁶⁾ 이는 일종의 公車文類 기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疏劄 등을 인명·일자·주제 등으로 묶여 정리한 公車文類 기록은 일종의 등록물로도 분류될 수 있는데, 조선에서는 이들 기록을 《疏劄謄錄》 등으로 칭하였다. 이처럼 실록의 찬수를 위해 조선의 등록물과 유사한 기록을 활용하였음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조선처럼 다수의 등록물이 활용된 사례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明은 이들 기록을 實錄 편찬을 위한 기본 사료로서 활용하였지만, 唐·宋代에 정해진 日曆·時政記·起居注 중심의 실록찬수체계를 따르지는 않았다. 明의 實錄을 연구한 孫卫国(2005)의 논문에 따르면 宋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정기·기거주·일력 그리고 臣僚들의 墓碑行狀을 수집하고

195) 《薛文介公文集》卷3, 〈移閣列實錄條例揭帖〉, “國家之正史, 取裁于累朝之實錄, 而實錄之典故, 又取衷于每年之纂注, 起居注與六曹編纂, 卽實錄之底草, 實錄又正史之成案也. 故必實錄愼而後正史當, 纂注詳而後實錄略.”(해당 문헌은 電子版 四庫全書 인용하였음. 이하 동일.)

196) 钱茂伟(2010), 앞의 논문, 106~109쪽.

이를 중심으로 실록을 찬수하였지만, 明은 관직으로서의 起居注를 두고 운용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起居注 기록을 생산하지는 못하였다. 때문에 明 초기에는 일력 및 황제의 諭旨를 모은 기록인 欽錄簿 등을 편찬하여 實錄의 찬수 과정에 활용하였고 후대에는 諸司의 상주문서인 奏牘과 조정의 기록을 주로 활용하였다. 문제는 실록뿐만 아니라 실록의 사료조차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 사료의 편찬·정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明實錄의 찬수는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¹⁹⁷⁾

이상의 사례와 같이 明에서도 實錄은 중요한 역사기록이었지만, 국가 최고의 위상을 지닌 기록으로서는 여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실록 찬수를 위해 수집되는 사료는 제한적이었고, 실록 찬수과정과 그 사료의 편찬·정리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완성된 실록의 보존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明에서도 실록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기록이었으나 正本이 아닌 副本은 御製文字를 비롯한 古今의 서적 등과 함께 內閣에 보존되었으며, 후기 들어서는 아예 어람용 및 열람용 실록이 별도로 편찬될 정도였다. 심지어 실록이 민간에 유출되기도 하여 읽혀지기도 하였다.¹⁹⁸⁾ 이는 明에서 성리학적 역사관이 발현되지 못해 當代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實錄을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實錄을 단순히 正史의 底本이자 史料의 하나로만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實錄은 달랐다. 조선 이후 또 다른 왕조가 들어섰다면 역시 조선의 기록을 토대로 한 正史가 편찬되었겠지만, 적어도 조선이라는 왕조 체제 안에서 實錄은 그 자체로서도 역사서술의 종착지가 되었다. 때문에 조선에서 실록의 찬수는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수집되는 史料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은 時政記를 중심으로 하되 經筵日記, 承政院日記를 비롯한 각사의 謄錄物과 주요 緊關文書까지도 실록찬수를 위한 수집의 대상으로 삼았다.

197) 孫卫国(2005), 앞의 논문, 118쪽.

198) 孫卫国(2005), 위의 논문, 118쪽.

實錄廳 堂上 魚世謙·李克墩·柳洵·洪貴達·尹孝孫·許琛 등이 筭子를 올려 말하길, (중략) “대저 실록을 수찬하는 例는 承政院日記, 時政記, 經筵日記, 諸司謄錄 그리고 무릇 상고할 만한 문서는 모두 다 모아 年를 나누고 房을 나누어 각기 밝게 살펴 바로잡아 편집하게 하고, (후략)”¹⁹⁹⁾

즉 적어도 燕山君朝 이후 조선에서 謄錄物은 이중적인 기능을 지닌 기록으로서 운영되었던 것이다. 하나는 현재 업무 행위의 證憑이자 동시에 지속적으로 참고할만한 典故로서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實錄 찬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史料로서의 기능이다. 그리고 이 實錄의 史料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등록물은 기존에 비해 보다 많은 범위의 기록을 수집해야 했고, 보다 철저한 체계하에서 관리되어야 했다.

성리학적 정치철학과 역사인식은 이러한 조선의 실록 중심 기록관리의 경향성을 더욱 강화시킴과 함께 등록체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성리학적 인식하에서 기록이란 공적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통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절대자나 무형의 그 무언가가 아니라, 통치의 기록과 그 기록으로 구성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朱熹가 弟子 趙師淵과 함께 《資治通鑑綱目》을 저술한 이유도 기존 史書의 결과중심주의와 같은 문제점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옳고 그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²⁰⁰⁾ 朱熹는 그 序例를 통해 史가 ‘天道를 밝히고, 人道를 정하며, 鑑戒를 나타내고, 幾微를 드러내기’ 위함임을 명백히 하였다.²⁰¹⁾ 즉 朱熹가 추구하는 史의 목적은 성리학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天道를 어지럽히고 人道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

199) 《燕山君日記》卷30(燕山君 4年/서기 1498년) 7월 21일(乙卯): “實錄廳堂上魚世謙, 李克墩, 柳洵, 洪貴達, 尹孝孫, 許琛, 安琛上筭曰, (중략) 大抵實錄修撰之例, 承政院日記, 時政記, 經筵日記, 諸司謄錄, 凡可考文書悉皆裒集, 分年分房, 使各斤正編輯, (후략).”

200) 《資治通鑑綱目》〈資治通鑑綱目序例〉, “先正溫國司馬文正公, 受詔編集資治通鑑, (중략) 紹興初, 故侍讀南陽胡文定公, 始復因公遺稿, 修成舉要補遺若干卷, (중략) 故嘗過不自料, 輒與同志, 因兩公四書, 別爲義例, 增損櫟括, 以就此編.”(해당 문헌은 電子版 四庫全書의 《御批資治通鑑綱目》을 인용하였으며, 이하도 같다.)

201) 《資治通鑑綱目》〈資治通鑑綱目序例〉, “歲周於上而天道明矣, 統正於下而人道定矣, 大綱概舉而監戒昭矣, 衆目畢張而幾微著矣.”

한 책임을 萬世토록 지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후대가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²⁰²⁾ 그에게 있어 史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수단이어야 했다. 즉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史를 통해 현재의 행위를 돌아보고, 현재의 행위를 史로 남겨 미래의 행위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史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편찬되어야 하는 것이며,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읽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을 歪曲하거나 隱諱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朱熹의 역사관에서는 孔子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일어났다고 남길 수 없고, 일어난 사실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남길 수는 없다. 朱熹에게 있어 《춘추》는 단지 그 자체로 사실을 드러낸 것이기에, 經에 근거하여 本末을 따지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옳고 그름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다만 이는 공자에 의해 베껴져 여기(《춘추》) 둔 것인데, 보는 이가 스스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바가 있을 뿐이다. 만약 공자를 어르고 설득해 남을 포폄한 것을 거두고, 그 관작을 덜며, 그 관작을 주고, 그 공을 상주고, 그 죄를 벌한다면 어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 관직의 유무와 사람에게 공이나 죄가 있음은 공자라 하더라도 남에게 주거나 뺏을 수 없는 것이다.²⁰³⁾

『춘추』는 단지 당시의 일을 바르게 쓴 것이니, 당시의 治亂과 興衰를 보고자 하면 한 글자에서 褒貶을 올려 정해서는 안 된다. (중략) 孔子의 때에 이르러 皇·帝·王·伯의 道가 땅에서 쓸려나가 고로 공자가 《춘추》를 지은 것이다. 겹치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리 옮겨 적어 당시의 일이 이와 같음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끌었는데, 어찌 옛 사서를 인용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으랴? ²⁰⁴⁾

202) 《朱子語類》卷83, 〈春秋〉, 〈綱領〉, “聖人作春秋, 正欲褒善貶惡, 示萬世不易之法.”

203) 《朱子語類》卷83, 〈春秋〉, 〈綱領〉, “只是被孔子寫取在此, 人見者自有所畏懼耳. 若要說孔子, 去褒貶他, 去其爵, 與其爵, 賞其功, 罰其罪, 豈不是謬也. 其爵之有無, 與人之有功有罪, 孔子也予奪他不得.”

204) 《朱子語類》卷83, 〈春秋〉, 〈綱領〉, “春秋只是直載當時之事, 要見當時治亂興衰, 非是

史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라는 대전제는 단지 《춘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朱熹는 國史의 편찬도 사실을 올바르게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本朝(宋)의 史는 日錄을 뼈대로 하고 다른 책을 참고한다. 이제 마땅히 史院에 六房 관리를 두어 각기 本房의 일을 전담하여 관장토록 해야 한다. (중략) 한 관리에게 전담하여 담당토록 하고, 월마다 史院으로 (기록을) 송부토록 한다. 이와 같이 한 연후에야 붓을 들어 쓸 곳이 있을 것이며, 다른 날 史가 완성된 후에는 五房의 문서 또한 각각 보존해서 누락됨에 대비해야 한다.²⁰⁵⁾

朱熹는 역사편찬 과정에서 日錄을 중심으로 하되, 실무관인 六房의 관리를 통해 기록을 확보하고, 史書가 완성된 뒤에도 기록을 보존하여 훗날의 누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朱熹는 日錄의 생산, 專任人力을 통한 기록의 수집 및 정리, 史書 편찬 후 史料가 된 기록의 지속 보존을 애기한 것이다. 즉 史書를 편찬함에 있어 엄격한 절차와 사실에 근거한 서술이 이뤄져야 함을 뜻한다. 이는 현대의 역사적 설명책임(Historical accountability)이라는 개념을 연상시킨다. 이 역사적 설명책임은 앞에서 언급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과 유사하지만 그 설명의 대상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닌 후대의 불특정 다수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역사적 설명책임은 역사적 평가를 위해 기록으로서 당시의 공적 행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Dirks(2004)의 “기록(archives)은 현재뿐만 아니라 역사적 차원에서 설명(또는 규명)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표현은 기록이 역사적 평가의 기반이 됨을 의미한다.²⁰⁶⁾

於一字上定褒貶. (중략) 到孔子時, 皇帝王伯之道埽地, 故孔子作春秋. 據他事實寫在那裏, 教人見得當時事是如此, 安知用舊史與不用舊史.”

205) 《朱子語類》卷107, 〈朱子〉四, 〈寧宗朝〉, “本朝史以日錄爲骨, 而參之以他書, 今當於史院置六房史, 各專掌本房之事. (중략) 如此然後, 有可下筆處, 及異日史成之後, 五房書亦各存之, 以備漏落.”

206) Dirks, John M.(2004), 〈Accountability, History, and Archives: Conflicting

O'Toole(2004)은 현재 관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더라도,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을 위하여 기록과 그 기록의 관리자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²⁰⁷⁾ 이 역사적 설명책임은 기록의 생산자 또는 관리자가 기록을 통해 역사적 포럼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관리자는 기록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존·관리되는 기록을 史料로 활용하고, 역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史學者를 비롯한 기록의 이용자 몫이 된다.

물론 성리학적 역사관에서 역사의 서술자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이를 史評과 같은 글로서 남겨야 했다. 이를 통해 후대를 교화할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역사서술의 재료가 되는 기록 또한 그 생산과정에서부터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 성립된 성리학적 제도 하에서 성리학적 소양을 지닌 이들에 의해 서술된 것이었다. 때문에 성리학적 가치관에 반하는 사실은 기록의 생산시점부터 숨겨지거나, 우회적으로만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는 분명 현대의 역사적 설명책임이라는 개념과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다는. 기록의 생산과 관리 과정에서 당시의 공적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리학적 관점에서도 역사를 서술하기 위한 史料로서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는 실체여야만 했다. 역사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주관이 들어갈지언정 史料로서의 기록 자체는 공인된 사실이어야 했다. 공인된 절차를 거쳐 생산·이용·보존되는 기록은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공인된 사실이 되며, 이 맥락에서 허용되지 않는 허위는 강력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 및 관리된 공인된 사실은 공공기록이자 후대를 위한 史料가 된다. 역사적 평가를 위해 기록을 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는 측면에서 성리

Priorities or Synthesized Strands?》, 《Archivaria》 57,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30쪽.

207) O'Toole, James(2004), 〈Archives and historical accountability: toward a moral theology of archives.〉, 《Archivaria》 58,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10~13쪽.

학은 분명 현대적 의미의 역사적 설명책임을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성리학적 역사인식은 역사적 설명책임을 위한 기록의 공적인 생산과 관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성리학적 역사인식하에서 생산되고 보존되는 公事기록은 후대에 남겨야 할 歷史의 일부로 인식되었다. 공공의 영역에서 수행한 모든 행위는 박제되어 후대에 전해져야 했으며, 그 행위에 대한 毀譽褒貶 또한 남겨진 기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했다. 이 기록은 업무수행의 증빙인 공문서를 비롯하여, 史草나 時政記 또는 각 기관의 日記와 謄錄物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었다. 기록이 史가 되기 위해 해당 기록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기록의 보존과 관리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다만 史草는 원칙적으로 실록이 찬수된 이후 洗草 내지 燒却하여야만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해당 기록에 기재되는 내용의 민감성 때문이었다. 때문에 사초의 공개는 史官의 업무영역을 축소·위축시킬 우려가 있었기에 정치적 고려에 따라 여타의 기록과는 달리 비공개가 원칙이었으며 실록 찬수 후에는 폐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실록의 史料인 《승정원일기》나各司의 謄錄物 및 緊關文書 등은 그렇지 않고 지속 보존되었다. 이는 이들 기록의 일차적인 목적이 어디까지나 업무의 활용에 있었기 때문이다.

성리학적 가치관이 국가 운영의 제 1원리로 중시되었던 조선에서도 성리학적 역사인식에 토대를 둔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앞에서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이 조선의 공식적인 법전에 편입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나는 행정효율을 위함이다. 문서행정에 필요한 사항과 서식을 법전에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의 소요를 막고 기록의 법적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록을 활용하여 역사를 서술하기 위함이다. 《경국대전》에서 時政記의 생산과 보존을 규정한 조문이 대표적이다.²⁰⁸⁾ 이는 조선이 문서를 행정적 수단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며, 역사적 평가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음

208) 《經國大典》〈禮典〉, 藏文書條, “春秋館時政記 [撰集承政院日記, 及各衙門緊關文書, 每歲季啓冊數], 承文院文書, 每三年, 印藏本衙門, 議政府, 及史庫.]”

을 나타낸다.

이처럼 成宗代 국가 행정체계가 전체적으로 정비됨과 동시에, 이와 동시에 춘추관의 검임사관 인력 확대 및 기능 강화가 이루어져 실록의 찬수 또한 기존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의 등록체계도 실록편찬을 위한 방안으로서 그 외연이 확장되고 이에 따른 개념적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재편된 등록체계 하에서 행정을 위한 수단으로써, 그리고 당대사 편찬을 위한 사료로써 등록물은 생산·활용·보존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의 등록체계는 실록편찬체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발전기 이후부터 편찬되는 등록물은 광범위한 행정영역을 다루는 다양한 형태로써 등장하게 되었다.

2) 등록물의 분류와 유형별 특징

조선은 일종의 寫本記錄인 謄錄物을 상시적으로 생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되는 등록물의 성격 또한 상당히 다양하였다. 대다수의 국가가 특정한 상황이나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 사본을 만들거나 발췌 문서집을 만들었다면, 조선에서 謄錄物은 이와 관계없이 규격화된 업무절차에 따라 상시적으로 생산·편찬되었다. 거의 대부분 관서에서 생산·접수한 문서는 分類·整理·評價·選別 및 抄出 등의 과정을 거쳐 등록물로 재탄생하였다. 이들 등록물은 매일의 기관 업무 현황을 기재한 일지부터 특정한 사안을 보고 또는 참고하기 위한 자료집, 사실관계 증빙을 위한 공문서철 등 다양한 형태로서 존재하였다. 조선에서 謄錄은 말 그대로 기록관리 업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자 동시에 그 부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에서는 어떠한 등록물을 생산하여 활용하였는가?

등록물의 유형이나 성격에 대한 분류는 기존 등록에 대한 연구에서도 시도된 바다. 그 중에서 특히 연갑수(2000)의 등록 생산목적을 중심으로

한 분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²⁰⁹⁾ 그러나 등록물의 생산목적에 중심으로만 분류하기에는 등록물 생산 당시의 맥락과 그 형식 등을 도외시하게 될 위험이 있다.

각각의 등록물은 등록체제로 통칭되는 공통적인 생산·활용·보존·관리 과정을 거치지만, 그 결과물로서의 등록물은 생산주체나 생산목적, 謄錄의 대상이 되는 原文書의 성격 등에 따라 별개의 특성을 지닌다. 물론 謄錄이라는 기록의 편찬 방식상 각각의 유형이 단절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등록물의 경우는 다양한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등록물을 그 편찬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더하여 등록물의 성격 또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등록물의 대상은 현전하는 실물 등록물 및 實錄에서 그 속성이 확인 가능한 등록물에 한정토록 하겠다. 등록물의 체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실질적인 등록물의 유형과 성격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등록물은 먼저 그 편찬 방식에 따라 단순히 原文書 내용만을 베껴 적어 정리한 편철형 등록물과 이 편철형 등록물에 별도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서술하여 작성하는 첨입형 등록물로 나눌 수 있다.

편철형 등록물은 대체로 原文書의 全文 또는 일부를 베껴내어 별도의 책자로 纂輯한 것으로서 말 그대로 공문서의 寫本이다. 이 과정에서 등록되는 기록의 순서는 개체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체로 원본기록의 유형이나 생산일자에 따라 정리된다. 해당 유형으로 작성되는 등록물에는 국왕의 受敎나各司의 條例文書를 등록한 등록물, 外交·軍事·治安·築成 등 각 행정 분야에서 생산된 일정 기간의 文書를 책자 형태로 등록하여 일종의 자격 증빙이나 업무의 典故로서 활용하기 위한 등록물 등이 있다. 대체로 원문서에 변형을 거의 가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첨입형 등록물은 편철형 등록물과 마찬가지로 原文書의 全文 또는 일

209) 연갑수(2000), 앞의 논문, 195~196쪽.

부를 베껴낸 것이 기록 구성의 대다수를 이루지만, 편철형 등록물과는 달리 原本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첨입형 등록물은 원본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謄錄한 것에 더해 추가적인 정보를 기입한 기록이다. 대체로 국왕의 일상 또는 특정 기관의 座目 및 動靜에 관한 사항 등이 그러하다. 또한 등록물의 활용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圖式이나 班次圖 등을 끼워넣기도 하였다.

첨입형 등록물에는 각 관청에서 매일의 업무기록을 정리한 관청일지 형식의 등록물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대표적으로 《承政院日記》나 《備邊司謄錄》 등이 있다. 또한 儀軌와 유사한 체제로 구성된 《文禧廟營建廳謄錄》이나 《昭慶園謄錄》의 경우 일반적인 행사 관련 등록물과는 달리 班次圖나 圖式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또한 첨입형 등록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편철형 등록물과 첨입형 등록물은 이처럼 그 편찬 방식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된다. 또한 내용의 구성 방식에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이것이 각 등록물의 성격이나 위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각 등록물의 성격과 위상은 오히려 해당 등록물의 생산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여러 등록물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가. 준법전적 성격

준법전적 성격을 지닌 등록물은 法典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록물로서 그 謄錄의 대상 또한 국왕의 傳敎·受敎와 條例 등 일종의 規範의 기록으로 한정되어 있다.²¹⁰⁾ 당시의 관점에서 法典에 수록된 法文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法典이 개정·보완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검토가 요구되었다.²¹¹⁾ 《續大典》을 비롯한 《大典通

210) 이형중(2018), 앞의 논문, 201쪽.

211) 《續大典》 卷首, 〈英廟朝御製題續大典卷首勅勅後昆〉, “古往今來, 有國有典, 經國大

編》·《大典會通》 등 《경국대전》 이후 간행된 法典이 대체로 기존 法文을 직접적으로 수정·삭제하기보다, 이전의 原法文 아래에 추가·변경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거나 주석을 다는 방식을 취한 것 또한 法典의 不變性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法典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당시의 시각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法典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사안이나 法意가 퇴색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준법전적 성격의 등록물이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준법전적 성격의 등록물은 실질적으로 法典에 준하는 위상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여타의 등록물이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참고하기 위함이라면, 이 준법전적 성격의 등록물은 말 그대로 법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일종의 法例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들 준법전적 성격의 등록물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활발하게 편찬·활용되었는데, 그 생산과정의 일단을 초기 실록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吏曹에서 아뢰기를, “禮曹에 속한 檢詳條例司의 檢詳官은 마땅한 자로 택하여 검차토록 下批하시되 자주 체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무릇 敎旨가 있으면 모두 謄錄하되, 그 중 元·續六典에 실리지 않을 것도 法으로 삼을만한 것은 長官에게 품하여 이어서 찬집토록 하시고 후일에 相考하여 만일 누락된 것이 남아있으면 檢상관에게 죄를 묻도록 하십시오.”하니 따랐다.²¹²⁾

禮曹에 傳旨하시길, “무릇 문서를 찬집하는 일은 비록 여럿과 더불어 의논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어려운 것인데, 지금은 예조의 檢詳 1員이各司의 受敎條件의 文辭를 고쳐 따로 책 하나로 만들고 있다. 그 受敎의 본

典,我國典章,撰文之由,纖悉序文,金科玉條,開卷瞭然,如我涼德,何敢增撰.今者續典,只輯三錄.”;〈英廟朝御製續大典小識復勅群工〉,“今者,大典續成,意固在也.一時令飭,便作受敎.自有律文,隨時低昂,官吏眩於奉行,小民莫能措手,輯三錄成績典,刪其繁正其要.頒此典之後,復蹈前轍,則纂輯之意焉在.此後雖有飭敎者,若非載於金石之典,作爲不刊之文,則六曹京外,自可舉行.”

212) 《世宗實錄》卷24(世宗 6年/서기 1424년) 5월 25일(己亥): “吏曹啓, 禮曹所屬檢詳條例司檢詳官, 擇其可當者, 兼差下批, 毋得數遞. 凡有敎旨, 悉皆謄錄, 其中非元續六典所載, 而可爲法者, 稟于長官, 連續撰集, 後日相考, 如有遺漏, 檢詳官論罪. 從之.”

래 뜻과 후에 法으로 삼을만한 것의 여부를 만드시 다 알아 상세히 신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고쳐서 찬집하지 말게 하고 오직 등록에만 상세히 모두 기재하라.”²¹³⁾

이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조선 초기부터 국왕의 敎旨는 검서관에 의해 謄錄되었으며, 누락 시 책임소재 또한 검서관에게 있었다. 둘째, 당시 法典의 역할을 수행했던 《元六典》과 《續六典》에 수록되지 않았더라도 法으로서 삼을만한 敎旨는 등록물과 같은 별도의 형태로서 정리되어 편찬·활용되었다. 셋째, 초기 준법전적 성격의 등록물은 문서의 내용을 수정·정리하여 수록되었다가, 후에는 단순히 全文을 그대로 베껴 적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기록으로서 현전하는 등록물 중 대표적인 것은 《各司受敎》와 《受敎謄錄》類 등이 있다. 《각사수교》²¹⁴⁾의 체제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官司 중심의 1차적인 분류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吏·戶·禮·兵·刑·工의 六曹에 더하여 漢城府·掌隸院로 구분하여 해당 官司에 내린 受敎를 기관별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 외 追錄 5조문이 있는 식이다. 각 기관별 정리된 受敎 및 啓目·別單 등은 다시 일자 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만 《受敎謄錄》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현전하는 《수교등록》은 다루는 주제가 제각각인데 禮曹 소관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다룬 등록물도 있고²¹⁵⁾, 向化人에 관한 사안을 다룬 등록물도 있으며²¹⁶⁾, 宣傳官廳에 내린 수교를 별도로 모아 정리한 등록물도 있다.²¹⁷⁾ 이들 《수교등록》은 대체로 주제와 상관없이 일자별로 하달된 수교를 등록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다루는 주제를 중심으로 1차 분류한 후 다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교를 등록하기도 하였다.

213) 《世宗實錄》 卷41(世宗 10年/서기 1428년) 9월 1일(庚戌): “傳旨禮曹, 凡撰集文書, 雖與衆共議, 猶難也. 今禮曹檢詳一員, 將各司受敎條件, 修改文辭, 別爲一書, 其受敎本意及可爲後法與否, 必未能悉知, 而詳載之. 自今除修改撰集, 唯於謄錄, 詳悉記載.”

214)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各司受敎》(奎7901)

215)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受敎謄錄》(奎12867의1)

216)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受敎謄錄》(奎12867의3)

217)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宣傳官廳受敎謄錄》(奎9857)

《수교등록》은 조선 초기의 준법전적 등록물이나 《各司受敎》·《受敎輯錄》 등과는 달리 官司에서 해당 관사업무와 관계되는 각각의 受敎를 謄錄하여 자체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장각에 현전하는 《宣傳官廳受敎謄錄》 및 聽訟과 관련된 국왕의 受敎를 담은 장서각 소장 《受敎謄錄》²¹⁸⁾ 그리고 承政院日記에 나타나는 刑曹 《受敎謄錄》의 존재를 통해 확인된다.

이날 정오에 임금께서 文政殿에 들시었다. (중략) 李曙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刑曹에 감히 있었는데, 처음에는 本部에 受敎謄錄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 후에야 한 사람에게 올범을 적용한 일로 인해 비로소 謄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른바 등록이란 것이 대부분 순서가 없었습니다.”²¹⁹⁾

이는 준법전적 성격의 등록물 모두가 국가적 차원에서 편찬되는 것은 아니며, 각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국왕의 受敎를 따로 편찬해 각각 활용·관리하기도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후에 언급할 공문서철 성격의 등록물과 유사한 체제와 성격을 지닌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업무에 수시 참고할 수 있도록 受敎라는 원본문서를 그대로 베껴내어 업무기능별 또는 일자별로 정리한 것이 그러하다. 물론 국왕의 명령으로서 受敎는 일반적인 공문서에 비해 강력한 법적 위상을 지니고 있었기에 비록 《수교등록》류 기록이 공문서철 성격의 등록물과 유사하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등록물에 비해 보다 강력한 법적 위상을 지닌 기록으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공문서철적 성격

218) 장서각 소장 《受敎謄錄》(K2-3435)

219) 《承政院日記》 49冊(仁祖 13年/서기 1635년) 9월 15일(壬戌): “是日午正, 上御文政殿. (중략) 李曙曰, 臣曾者忝在刑曹, 初不知本部有受敎謄錄矣. 久後因一人照律, 始知有謄錄, 而所謂謄錄, 多無倫序.”

공문서철의 성격을 지닌 등록물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등록물이다. 이들 등록물은 대체로 업무 행위나 자격을 증빙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하고, 기존에 시행한 사안의 전말을 참고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들 공문서철 성격의 등록물 중 단순히 사실관계의 확인만을 위한 등록물일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立案을 일자 또는 출처별로 정리해 등록하거나 아예 臺帳식으로 사실만 나열해 놓기도 하였다.²²⁰⁾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과 세세한 내용까지 참고하기 위해 편찬한 등록물일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모든 수발 공문을 등록해놓기도 했다.

공문서철적 성격을 지닌 등록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등록물이 단일 업무에 관한 기록만을 등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繼後謄錄》은 양자의 입적에 관한 문서를, 《同文彙考》은 외교와 관련된 문서를, 그리고 《疏筭謄錄》과 같은 公車文類 기록은 국왕에게 접수된 疏筭만을 등록하고 있다.

또한 공문서철 성격의 등록물은 자료집 성격의 등록기록과 달리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기록을 다루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²²¹⁾ 즉 자료집 성격의 등록물이 《晉州樵軍作變謄錄》 또는 《孝明世子喪葬謄錄》처럼 특정 사건 또는 사안에 한정하여 一回性으로 정리된 기록이라면, 공문서철 성격의 등록물은 지속되는 일반 행정업무와 관계된 기록을 연속적으로 정리한 기록물이라 볼 수 있겠다.

이들 공문서철적 성격의 등록물 중 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기록물로는 대표적으로 공신과 그 자손의 성명·자격 등을 작성한 功臣謄錄類나 양자의 입적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등록한 《繼後謄錄》 등이 있다. 이들 기록은 단순히 名簿나 臺帳처럼 정보가 나열된 형태의 기록은 아니며 대체로 원본 공문서를 일자별로 등록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해당 등록물의 찬수 목적은 개인의 자격 증빙 또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일반적인 등록물과는 달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名簿 또는 立案을 중심으로 原文書의 전문 또는 일부를 抄錄한 경우가 많다.²²²⁾

220) 이형중(2018), 앞의 논문, 201~202쪽.

221) 이형중(2018), 앞의 논문, 201쪽.

규장각 소장 《繼後臚錄》²²³⁾의 예를 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을 臚錄하는 형태에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유사한 立案 양식을 따라 일자순으로 정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그 양식은 아래와 같다.

一曹 啓目 □□(지역명) □□□(現·舊 직위) ◇◇◇(이름)無後 以 □□□□□□□(양자 입적 대상의 신원: ○○○의 子 ○○○ 등) 立 後事. 門長 △△(직위) △△△(이름) 同議呈狀據向前, ○○○(양자입 적대상자)乙 ◇◇◇ 繼後何如 某年號某月某日 某承旨 某某次知 啓 依允

이러한 등록물은 수발되는 原文 모두를 보존한다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필요한 부분만을 抄出·臚錄하는 정형화된 형태의 기록이라 할 수 있겠다.

국가 및 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의 전후 사정과 그 결과를 남겨 향후의 증빙 및 전고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산한 등록물로는 《同文彙考》, 《推案及鞫案》 및 疏筭臚錄類 등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外交나 刑事같이 국가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기능에 관계된 기록을 前例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 구성은 대체로 생산주체 또는 해당 업무기능의 세부 항목별로 1차 정리한 후 다시 이를 일자 순으로 정리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들 등록물의 가장 큰 특징은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단일한 업무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접수되는 기록을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다는 것이다. 현대의 일반적인 공문서철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등록물이라 할 수 있겠다.²²⁴⁾

그 한 가지 예로써 《同文彙考》²²⁵⁾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정조 연간에 발간한 것으로서 인조 이후 對中國·對日本 외교문서를 엮어

222) 이형중(2018), 위의 논문, 205쪽.

223)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繼後臚錄》(奎12869)

224) 이형중(2018), 위의 논문, 206쪽.

225)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同文彙考》(奎660, 奎15331의1)

낸 기록이다. 크게 原編·別編·補編·附編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附編만 日本과의 外交 관련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각각의 編은 條目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條目은 封典·哀禮·進賀·進香 등 외교 관련 업무의 세부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條目は 다시 세세부 업무별(建儲·冊妃·追崇 등)로 재분류되어 이에 해당되는 외교문서가 일자에 따라 등록되어 있다.

義禁府에서 죄인의 供招 등을 등록한 《推案及鞫案》 또한 이와 같은 형식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謀逆과 같은 重罪에 대한 推案과 鞫案을 사건별로 1차 정리하고, 각 사건 내에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原文書를 등록하고 있다. 각각의 文案과 관련된 推鞠에 참여한 인원들의 명단이 그 참석 여부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도 특기할만하다. 또한 이에 대한 국왕의 批答 및 추국의 결과도 함께 정리되어 있다. 이처럼 공문서철적 성격의 등록물은 단일 업무 기능에 대한 기록만을 수합하여 등록해 정리한 형태의 기록으로서, 여타 성격의 등록물에 비해 업무상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들 공문서철 성격의 등록물은 일반적인 업무기록으로서 그 생산 절차나 활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실물 등록물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등록물은 말 그대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일상의 자료로서 그 편찬 배경 및 편찬자나 보존에 관한 정보를 따로 수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 공문서철적 등록물의 생산·활용에 관한 단서는 實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 우선 實錄 등을 통해 살펴보면, 이들 공문서철 성격의 등록물로 분류될 수 있는 기록들이 편찬·활용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조강에 나아갔다. (중략) 領事 柳順汀이 말하길, “金世瑀와 權福은 직임이 같은 郎官입니다. 天使(필자 주: 明의 使臣)가 임박해 와 사무가 번극하고 謄錄할 것 또한 많으니, 일시에 모두 체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여겨 그리 아뢴 것뿐입니다.”²²⁶⁾

226) 《中宗實錄》卷5(中宗 3年/서기 1508년) 1월 29일(丁卯): “御朝講, (중략), 領事柳順汀曰, 金世瑀權福同任郎官也. 天使臨近, 事務煩劇, 謄錄亦多, 以此意謂不可一時俱遞,

이 기사는 당시 兵曹佐郎으로서 홍문관 副修撰을 겸한 權福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 金世瑀이 明 使臣의 응대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며, 그 역할 중 하나로 문서의 謄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칙사의 接伴과 같이 지속적인 업무에 관한 등록물이 별도로 존재하였으며, 그 생산은 실무급인 郎廳職이 주관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들 공문서철적 성격의 등록물은 지속적인 업무의 결과로서 발생한 문서를 정리한 것이기에 새로운 사례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편찬되었다. 이 공문서철적 등록기록의 생산은 상설관사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兵曹가 아뢰기를, “扈衛大將은 이미 차출하였으니 摠府 근처에 入直할 것으로 일찍이 전교하셨습니다. 그러나 公廨로서 합당한 곳이 없습니다. 옛 承文院에 비록 撰集廳을 설치했다고는 하나 各廳의 房舍에 빈 곳이 많이 있다 합니다. 호위대장을 그 곳에 입직시키는 것이 어떠합니까?”
(중략) 【찬집청은 各年 獄事 문서를 謄錄하는 곳이다.】²²⁷⁾

이렇게 생산되는 공문서철 성격의 등록기록은 대체로 각 官司에 비치하여 관련 업무의 참고자료로서 또는 사실관계의 증빙으로서 활용되었다.

憲府가 아뢰어 말하길, “(중략) 지난번 定國(南定國)이 本府에 呈狀하여 말하길 ‘南獬가 나의 繼後立案을 위조된 것이라 하여 내쫓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禮曹謄錄 및 남해의 上言을 가져다 이를 살펴보니, 謄錄 내에는 지난 무신년 윤씨가 상언하였는데 夢得이 일찍이 후사를 이었다가 죽은 일을 일일이 들어 정국을 양자로 삼아 제사를 받들

故啓之耳.”

227) 《光海君日記》(中草本) 卷44(光海君 10年/서기 1618년) 4월 2일(辛卯): “兵曹啓曰, 扈衛大將已爲差出, 摠府近處入直事, 曾有傳教. 而無公廨可舍處, 舊承文院, 雖設撰集廳, 而各廳房舍, 多有空處云. 扈衛大將, 使之入直其處何如. (중략) 【撰集廳, 謄錄各年獄事文書之所也.】

게 하여 줄 것을 원하였기에 특별히 상의 은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가 상언한 내용에는 정국의 계후입안이 위조라 하고 청원을 따라 判下한 것이 의심된다 하였으니, 남해의 흉악함과 패역함이 지극합니다.”²²⁸⁾

이상의 실록기사들을 통해 공문서철 성격의 등록물이 생산·활용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전하는 공문서철 성격을 지닌 등록물의 실물과 실록 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공문서철적 등록물만의 특징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공문서철 성격의 등록물은 지속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원본 기록을 등록하여 편찬된 기록이다. 둘째, 공문서철 성격의 등록물은 그 활용 목적에 따라 원본기록의 謄錄 범위와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만을 나열해 놓기도 하고, 문서 전문을 수록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핵심 내용만 간추려 정리하기도 한다. 셋째, 공문서철 성격의 등록물은 업무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편찬되었다. 이는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동일업무에 관한 공문서철적 등록물의 존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업무지침서적 성격

업무지침서로서의 성격을 지닌 등록물은 일종의 지침서·설명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기록이다. 현대의 매뉴얼 개념과 유사하다.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생산되는 기록이기에 보통 문서의 서식과 적용례, 주요 절차, 그리고 관련 공문서 등이 등록의 대상이 된다. 다만 그 편찬 체제가 규정화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위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조선 전기의 《吏文謄錄》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 《儀註謄

228) 《明宗實錄》卷15(明宗 8年/서기 1553년) 9월 11일(甲寅): “憲府啓曰, (중략) 頃者定國呈狀于本府曰, 南獬以我之繼後立案, 爲偽造, 而黜送設計云. 臣等取禮曹謄錄及南獬上言, 而見之, 則謄錄內, 去戊申年, 尹氏上言, 歷舉夢得曾爲繼後身死之事, 願以定國爲後奉祀, 特蒙天恩, 而南獬上言內, 以定國繼後立案爲偽造, 以判下從願, 爲可疑. 然則獬之凶悖極矣.”

錄》 등이 해당 성격을 지닌 등록물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들 기록은 업무와 관계된 기록을 정리하여 등록한다는 측면에서 일견 공문서철 성격을 지닌 등록물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원문서를 거의 그대로 등록하여 편철형 등록물로서의 체제를 갖춘 공문서철 성격의 등록물과 달리 이들 업무지침서 성격의 등록물은 침입형 등록물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대체로 공문서 외에도 서식이나 절차·기준 등을 해당 등록물 내에 추가적으로 갖추어 기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형태로 등록물을 구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록 현전하고 있지는 않으나 實錄에서 확인되는 《吏文謄錄》은 이 업무지침서의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기록으로 볼 수 있다. 實錄에서 최초로 《吏文謄錄》이 등장하는 기사는 世宗 13년(1431) 1월의 다음 기사이다.

禮曹가 承文院의 牒呈에 의거해 아뢰길, “(중략) 吏文謄錄은 오직 吏文의 체제를 삼가 본받은 것만이 아니고 本國의 事大에 관한 節目도 갖추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원의 관원은 모두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원이 보관한 謄錄은 단지 1건만 있어 수많은 관원이 편람하기 어렵습니다. 해마다 시행하는 관례를 제외한 긴요 문서를 추려 鑄字所로 하여금 印出하게 하여 각자가 살펴 강습토록 하소서.”라고 하니 따랐다.²²⁹⁾

여기서 《이문등록》은 승문원의 관원이 익혀야 할 내용이 구비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수의 인원이 활용하기 위해 여러 부를 인쇄하기까지 했음이 확인된다. 즉 여기서 《이문등록》은 말 그대로 외교 실무에 직접적으로 참고·활용하는 기록인 것이다. 이후로도 《이문등록》은 정기·수시로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여 편찬·반포되었다.

229) 《世宗實錄》 卷51(世宗 13年/서기 1431년) 1월 21일(丙戌): “禮曹據承文院牒呈啓, (중략) 吏文謄錄, 非唯矜式吏文體制, 具載本國事大節目, 本院官員務要悉知, 但院藏謄錄, 只有一件, 數多官員, 難以遍閱. 除年例外, 撮其緊要文書, 令鑄字所印出, 各自披閱講習. 從之.”

議政府가 禮曹의 牒呈에 의거하여 상신하길, “吏文謄錄은 매 5년마다 한 차례 書寫하고, 10년마다 한 차례 印出토록 하소서.”하니, 따랐다.²³⁰⁾

京外의 史庫에 보관하는 《吏文謄錄》 2건은 承文院이 매 5년마다 謄錄을 撰集하여 올리는데, 이것은 己巳年에서부터 癸酉年에 이르기까지의 5년 것이다.²³¹⁾

이 《이문등록》은 단순히 반포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교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承文院의 관원들은 《이문등록》을 의무적으로 講讀하여야 했으며, 해당 등록물을 가지고 시험까지 쳐야만 했다.

承文院 提調가 吏文習讀官의 勸課 조건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중략) 하나, 《至正條格》·《大元通制》·《吏文謄錄》 및 모든 중요한 吏文은 매일 10장 이상 읽는 것으로 하되, 항시 나오는 提調가 날마다 장부에 기록하고, 節季에는 都提調가 한 차례 모이도록 하여 한 달 읽은 것 중 세 곳을 골라 읽히고 그 읽은 장수를 각각의 이름 밑에 모두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소서.”²³²⁾

심지어 成宗 연간에는 《이문등록》을 경연에서 講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당시 對明 事大外交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²³³⁾

230) 《世宗實錄》卷121(世宗 30年/서기 1448년) 8월 3일(丙辰): “議政府據禮曹呈申, 吏文謄錄, 每五年一次書寫, 十年一次印出. 從之.”

231) 《端宗實錄》卷13(端宗 3年/서기 1455년) 1월 21일(丁卯): “京外史庫所藏吏文謄錄二件, 承文院每五年撰集謄錄以進, 此自己巳至癸酉五年事也.”

232) 《成宗實錄》卷98(成宗 9年/서기 1478년) 11월 13일(庚午): “承文院提調議啓吏文習讀官勸課條件, (중략) 一, 至正條格, 大元通制, 吏文謄錄及凡干吏文, 每日所讀限以十張以上, 常仕提調逐日置簿, 每節季都提調一會, 一朔所讀撰出三處, 所讀張數各於名下具錄以啓.”

233) 《成宗實錄》卷129(成宗 12年/서기 1481년) 5월 7일(辛巳): “傳于經筵廳曰, 朝講除童子習, 進講吏文謄錄.”; 《成宗實錄》卷145(成宗 13年/서기 1482년) 윤8월 13일(己卯): “御晝講, 講吏文謄錄, 至中朝於外國人出入搜檢榜文.”

현전하는 업무지침서 성격의 등록물로는 《儀註膳錄》類 중의 일부가 있다. 《의주등록》은 보통 왕실 및 국가에서 시행하는 儀禮에 관한 절차와 주요 사항을 정리한 기록이다. 이 중에는 勅使를 迎接 및 答禮하는 의례도 포함되는데, 이 勅使 관련 《의주등록》 중 일부는 업무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실제 顯宗~肅宗 연간에 편찬된 《儀註膳錄》²³⁴⁾을 살펴보면 먼저 청사신이 칙사를 보낸 이유를 구분하여 勅使의 접대 절차를 다르게 수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慰問·訃告·太子冊封 등 다양한 명목에 따라 勅使가 파견되었으며, 각 명목에 따라 사신을 접대하는 儀式에 차이가 있다. 각 명목하의 접대의례는 다시 頭註를 통해 세세히 구분되는데, 예컨대 孝宗의 國恤과 관련된 기록은 迎使弔賻及諡祭儀·下馬宴儀·見官禮儀·受賜弔儀·受賜祭儀·迎賜諡祭及弔賻儀·接見勅使時出還宮儀·上馬宴儀 등으로 나뉘어 기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상황에 따른 의례 절차가 기술되어 있으며, 중간중간 국왕에게 상황을 전하는 啓辭가 膳錄되어 있다. 실제 이러한 유형의 등록물이 외교 과정에서 생산·활용되었음이 實錄에서도 확인된다.

戶曹判書 蘇世讓, 司饗院提調 興原君 李瓊, 兵曹判書 尹任, 戶曹參判 鄭百朋, 禮曹參判 金光轍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天使를 支供하는 그릇의 수와 음식의 종류를 의논하여 정할 것을 전교하셨습니다. 다만 전에도 이에 대한 膳錄이 없지는 않았지만 各年 天使의 支供에 일정한 범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들건대 延接都監이 바야흐로 膳錄을 편수한다 말하니 신 등이 오늘 갑작스레 의논하여 정할 수 없을 듯합니다. 도감이 膳錄을 마무리한 후에 참작하여 하심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²³⁵⁾

임금께서 백관을 거느리고 釋服하였다. 司憲府가 아뢰어 말하길, “내일은 하례를 받는 날인데 임시로 정지토록 하신 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儀

234) 장서각 소장 《儀註膳錄》(K2-4791)

235) 《中宗實錄》卷84(中宗 32年/서기 1537년) 4월 16일(甲子): “戶曹判書蘇世讓, 司饗院提調興源君瓊, 兵曹判書尹任, 戶曹參判鄭百朋, 禮曹參判金光轍等議啓曰, 天使支供器數饌品議定事, 傳教矣. 但前此非無膳錄也, 而各年天使支供, 皆無定式. 今聞延接都監, 方修膳錄云. 臣等於今日, 似不得卒然議定, 都監膳錄既畢後, 參酌爲之何如. 傳曰, 如啓.”

註에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勅使를 영접한 날 天使의 下馬 등에 대한 연회를 행하였기에 고로 사세가 별안간 급박하면 혹 하지 않는 때도 있었는데, 예조에서 범연히 膳錄을 상고하여 아뢴 것입니다.”²³⁶⁾

위 두 기사에서 언급하는 ‘膳錄’은 前後의 맥락을 따져볼 때, 勅使의 접대에 관한 의례를 담은 등록물을 뜻한다. 현전하는 《儀註膳錄》 다수는 대체로 禮曹가 관할하는 업무와 관계된 것이기에 禮曹에서 편찬한 것으로 확인되나, 위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은 都監에서도 해당 등록물을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성격의 등록물은 공문서철로서의 등록물과 달리 기존 업무행위의 證憑으로 활용되기보다 진행하는 업무의 前例 또는 規式으로서 인용되는 모습이 여럿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에도 지침서로서의 등록물이 주요 업무 처리 과정에 있어 상당한 공신력을 지닌 기록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라. 관청일지적 성격

관청일지의 성격을 지닌 등록물은 해당 官司가 생산·수집하는 문서 및 기록을 비롯하여 官司의 업무 動靜과 人事, 관원의 服務 상황, 관사 회의록 등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작성되어 있어 한 기관의 활동을 통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²³⁷⁾ 이는 관청일지의 성격을 지닌 등록물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특징들이다.

관청일지의 성격을 지닌 등록물 중 일부는 그 題號를 ‘膳錄’과 ‘日記’로 혼용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아예 ‘日記’라는 명칭만 둔 것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전자는 《典客司膳錄》을 《典客司日記》로 그리고 《宣傳官廳日記》를 《宣傳官廳膳錄》로 혼용하여 편찬한 사례 등이 그러하다.²³⁸⁾

236) 《中宗實錄》卷42(中宗 16年/서기 1521년) 5월 3일(甲寅): “上率百官, 釋服. 憲府啓曰, 明日, 乃是受賀之日, 而有權停之命, 此儀註所無之事也. 往時則迎勅即日, 行天使下馬等宴, 故事勢卒迫, 或有不爲之時, 禮曹泛考膳錄以啓耳.”

237) 이형중(2018), 위의 논문, 202쪽.

238) 이형중(2018), 앞의 논문, 202~203쪽.

후자는 《承政院日記》가 그러하다. 관청일지 성격의 등록물 일부가 日記로 통칭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 기록이 일자별로 매일 정리되는 형식이었기에 이를 ‘日記’라는 명칭으로 지칭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관청일지 성격의 등록물에서만 日記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收養承嫡日記》²³⁹⁾의 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양승적일기》는 收養子의 적통 승계에 관한 立案을 정리한 기록이다. 해당 등록물은 入養 관련 立案을 斜出하면서 이를 담당관원의 押印과 함께 일자별로 등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 구성과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공문서철 성격을 지닌 등록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극히 드문 사례이지만 매일 정리되는 등록물을 日記로 칭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청일지의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등록물로는 《備邊司謄錄》과 《議政府謄錄》 그리고 《承政院日記》 등을 들 수 있겠다. 다만 《승정원일기》의 경우는 일반적인 관청일지에 비해 보다 큰 범주의 국정기록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승정원 자체가 국왕의 비서조직이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국왕의 동정을 중심으로 《승정원일기》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관청일지 등록물의 전형으로는 《비변사등록》이 있다. 《비변사등록》은 조선 중기 이후 설치된 備邊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일자별로 정리한 기록인데, 현전하는 《비변사등록》은 광해군부터 고종에 이르는 시기를 다루고 있다. 《비변사등록》의 체제를 살펴보면 매월의 기사 첫머리에 座目を 두어 기관의 인력 현황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후 일자별로 비변사의 운영과 관련된 문서를 謄錄하거나 국정에 관한 논의를 기입하고 있다.

이 좌목의 존재를 통해 《비변사등록》이 儀軌的인 속성을 갖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도 하다.²⁴⁰⁾ 그러나 《承政院日記》나 《典客司謄錄》에서도 확인되는 座目の 존재를 고려해보면 오히려 기관일지로서 기관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239)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收養承嫡日記》(奎13038)

240) 연갑수(2000), 앞의 논문, 197쪽.

싶다. 물론 《議政府謄錄》의 사례와 같이 관청일지 성격의 등록물임에도 座目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座目과 달리 이들 관청일지 성격의 등록물에 나타나는 座目은 근태 여부가 함께 기재된다는 점에서 소속 인원의 근무 현황 및 업무 책임자를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보다 크다 하겠다.

《비변사등록》을 비롯한 관청일지 성격의 등록물은 그 특성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공문서가 주로 등록되며, 그 외에도 국왕과의引見 내용이나 기관 운영에 관한 논의 사항 및 事目·節目 등의 업무 시행 조목 등이 포함된다. 때문에 관청일지 등록물의 경우 그 내용을 통해 기관의 업무 영역을 분석하기가 용이하다.

일례로 肅宗 29年(1703)의 《비변사등록》 기사를 통해 당시 비변사 업무기능을 분석해보면 당시 비변사가 상당히 넓은 국정 영역을 소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기 《비변사등록》 기사는 좌목을 제외하고 총 262건인데, 人事 관련 내용은 62건의 기사에서 나타나며, 外交는 59건, 軍政은 43건, 刑政 28건, 賑恤 27건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당시 비변사의 핵심 임무가 인사·외교·군사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관리의 임용, 과거 및 취재의 시행, 공무역의 실시, 해상의 방비, 축성, 對淸·對日 외교, 표류민 송환, 이재민 구휼, 세금의 감면, 良役變通, 관리의 징계, 기구의 설치와 폐지, 직제의 분장, 陵幸 관리 등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처럼 관청일지 성격의 등록물은 해당 기관의 업무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1차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이 관청일지 등록물을 편찬하기 위해 원문서를 등록하는 행위 그 자체는 하급관료인 胥吏들이 담당하였으나, 실제 그 책임주체는 해당 관청의 실무자인 郎廳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 吏胥들의 글은 볼만한 것이 많았다. 일찍이 《備局謄錄》을 취하여 보았었는데, 그 글이 오래된 것일수록 더욱 좋았고, 왕왕 굳건하고 빼어난 곳도 있었다. 근일에는 여러 관청의 문서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모두 가볍고 초라하며 거친 것들인데, 규장각 서리는

특히 더 심하다.²⁴¹⁾

이는 비변사의 등록인 《備局謄錄》이 吏胥에 의해 기재되었음을 보여주는데 正祖의 언급이다. 비변사에 소속된 胥吏 중에서도 문서 작성의 보조와 원문서의 謄書를 담당하는 書吏가 관청 제반 등록물의 필기도 담당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의 임무는 문서를 베껴 등록에 수록하는 것에 불과할 뿐, 등록의 작성과 편찬을 주관하는 업무는 실무자인 비변사 郎廳 그 중에서도 文郎廳이 실질적으로 주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먼저 《비변사등록》의 편찬 과정에서 비변사 내 주요 기록들을 정리하여 선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을 書吏 혼자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조선에서 기록의 관리는 문과 급제자 출신의 參下官 이하 관료 또는 관서의 규모에 따라 당하관 이하 관료가 실무와 관서의 문서를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비변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비변사 文郎廳이 실제 문서의 관리 책임을 지고 있었음은 다음의 기록에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副應教 鄭栻과 校理 吳命恒·洪致中 등이 應旨笥子를 올리니, 모두 14조로, “(중략) 그 아홉에, 備局에서 기밀하고 중요한 것을 전적으로 관장하고, 文郎廳은 堂下의 문신 가운데 識慮가 있는 자를 택하여 그 수를 조금 늘리고, 여러 道의 文簿를 분장하여 상세히 살피도록 해서 覆奏할 때에 提稟하게 하면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²⁴²⁾

鎭厚(閔鎭厚)가 또 청하기를, “備局의 文郎廳 세 자리는 四館(필자 주: 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교서관)의 參下官 중에서 명성이 있는 자를 벼슬시켜 붓을 잡고 공문을 돌리게 하고, 武郎廳과 마찬가지로 20개월을 기한으로 하여 6品으로 승진시켜 미리 양성하는 방도로 삼으소서.”²⁴³⁾

241) 《弘齋全書》卷163, 〈日得錄 三〉, “近古吏胥之書多可觀, 嘗取見備局謄錄, 其書逾久而逾好, 往往有遒勁絕奇處. 近日百司文書之入眼者, 類皆浮輕潦率, 而閣吏爲尤甚.”

242) 《肅宗實錄》卷50(肅宗 37年/서기 1711년) 10월 8일(癸亥): “副應教鄭栻, 校理吳命恒·洪致中等, 上應旨笥, 凡十四條. (중략) 其九, 備局專管機要, 文郎廳擇堂下文臣有識慮者, 稍廣其數, 分掌諸路文簿, 詳細考閱, 提稟於覆奏之時, 則必有裨益.”

뒷장에서 별도로 서술하겠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인 등록물의 편찬 책임은 書吏가 아닌 郎廳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관청일지 성격을 지닌 등록물은 1차적으로 관청의 업무일지로서 작성되었지만 사실관계를 證憑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그리고 참고할만한 업무의 典故로써도 활용되었다.

또 전교하여 말씀하시길, “일전에 문을 밀치고 3품 이하들이 모두 함문으로 들어왔는데 어찌 이와 같은 기강이 있는가? 그 무리들이 비록 들어오더라도 이익될 바가 없는데 필히 무릅쓰고 들어오고자 하였다. 백관 이하 下吏나 백성의 무리도 장차 차례로 들어올 것이냐? 《議政府謄錄》과 《政院日記》에 이 전교를 베껴 넣고 만일 이를 범하는 자가 있거든 攔入律을 적용하라.”²⁴³⁾

전교하여 말씀하시길, “(중략)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일마다 전례에 어둡기만 하니 이같이 하여 점차 오래되면 兵曹와 京外 營門에서도 陵幸할 때 사용하는 포장과 군병을 내는 사례를 마땅히 모르게 될 것이다. 兵曹로 하여금 謄錄에 기재된 전례를 뽑아내어 草記한 후 서울의 軍門과 경기의 영문 및 開城·江華·廣州에 내어 주어 각각 베껴 두도록 하여 古例를 알게 하고, 또 1건을 《備邊司謄錄》에 신도록 하라.”²⁴⁵⁾

이는 국왕의 명령을 관청일지 성격의 등록물에 기재하고 이를 향후의 지침으로 활용토록 한 것인데, 이들 성격의 등록물이 단순히 일개 기관

243) 《肅宗實錄》卷59(肅宗 43年/서기 1717년) 1월 26일(辛巳): “鎮厚又請備局文郎廳三窠, 以四館參下官, 有名稱者差下, 執筆回公, 一如武郎, 限二十朔, 陞六品以爲儲養之道.”

244) 《正祖實錄》卷39(正祖 18年/서기 1794년) 4월 14일(庚午): “又教曰, 日者排闥, 三品以下, 皆入閤門, 豈有如此紀綱. 渠輩雖入, 無所益而必欲冒入. 百官以下吏民之屬, 亦將次次入來乎. 議政府謄錄及政院日記中, 謄置此教, 如有犯者, 當用攔入律.”

245) 《正祖實錄》卷47(正祖 21年/서기 1797년) 8월 8일(甲辰): “教曰, (중략) 然以今人事事昧例之習, 若此而稍久, 則兵曹與京外營門, 當不知陵幸時出用布城與軍兵之例. 令兵曹, 抄出謄錄所載前例草記後, 出給京軍門畿營及, 松沁廣州, 各令謄置, 俾知古例, 亦以一件, 載之備邊司謄錄.”

의 업무일지로만 활용된 것이 아니라 국정에 관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마. 자료집적 성격

자료집의 성격을 지닌 등록물은 개별 기록이 다루는 주제나 체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록이다. 그 체제 또한 일정하지 않아 일부는 편철형 등록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등록물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첨입형 등록물의 특성을 나타낸다.

다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보고서 또는 사례집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며, 해당 등록물이 다루는 주제 또한 일회적이거나 단일한 사안 및 사건에 한정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²⁴⁶⁾ 예컨대 특정 民亂討伐에 관한 사안의 보고나 개별 儀禮의 절차를 정리한 의례류 기록이 그러하다.

보고를 위한 자료집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등록물의 實例로써 《英祖戊申別謄錄》²⁴⁷⁾을 들 수 있다. 《영조무신별등록》은 영조 4년(1728년) 嶺南에서 발발한 이인좌의 난(이하 ‘戊申亂’)을 진압하는 과정을 정리한 기록이다. 토벌과정에서 오고 간 공문서와 亂의 진압 후 軍功者를 정리하여 보고한 啓辭, 반란 주동자들에 대한 供招 등이 등록되어 있다. 수록된 모든 기록은 戊申亂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것이며, 무신란의 발발부터 사후 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 해당 등록물에 수록된 啓辭 중 일부는 《備邊司謄錄》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²⁴⁸⁾ 이는 하나의 原文書가 단일한 謄錄物에만 謄錄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편찬되는 각각의 謄錄物에 중복되어 수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246) 이형중(2018), 위의 논문, 201쪽.

247)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英祖戊申別謄錄》(奎15049)

248) 《備邊司謄錄》(英祖 4年/서기 1728년) 3월 24일; 《備邊司謄錄》(英祖 4年/서기 1728년) 3월 28일 등.

있다.

儀軌와 유사하게 특정 儀禮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의궤류 등록물 또한 자료집의 성격을 지닌 등록물이라 볼 수 있겠다.²⁴⁹⁾ 일례로 《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의 경우 속지의 題名이 ‘儀軌’로 명시되어 있음에 반해 겉표지 題名은 ‘謄錄’으로 되어 있으며, 《文禧廟營建廳謄錄》은 그 구성과 내용이 여타의 儀軌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謄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²⁵⁰⁾ 이 외에도 행사에 관한 기록들을 謄錄으로 지칭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마치 의궤와 의궤류 등록물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지할 여지가 있으나, ‘儀軌’와 儀軌類 등록물에 대한 개념적 구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의궤는 국왕에게 보고 및 후대에 참고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국가 주요 행사 기록으로 행사 절차와 예산, 인력소요, 관련 공문 등을 등록한 기록이지만, 儀軌廳을 통해서만 편찬되며 그 목적 또한 활용보다 保存에 중점을 둔 기록이다. 의궤류 등록물은 그 체제가 의궤와 거의 동일하지만 상대적으로各司에 비치하여 유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후술할 3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이들 자료집 성격의 등록물은 내용에 따라 일부는 공문서철 등록물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또 업무설명서 등록물과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공문서철 성격의 등록물이나 업무설명서 성격의 등록물이 하나의 공통된 업무주제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謄錄하거나 기술하는 방식이라면, 자료집 성격의 등록물은 특정한 단일 사건 또는 사안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현전하는 자료집 성격의 등록물은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그 생산과 보존에 관한 단서는 현전하는 등록물 내에서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자료집적 등록물의 특성상 관련 등록 내에 그 생산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소수의 실록기사와 기타 단서를 통해 자료집 성격을 지닌 등록물의 활용 일단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249) 앞에서 예시로 언급한 《思悼世子喪葬謄錄》과 《孝明世子喪葬謄錄》 외에도 《明安公主嘉禮謄錄》, 《文禧廟營建廳謄錄》 등 의궤와 유사한 체제의 등록물이 다수 존재한다.

250) 연갑수(2000), 앞의 논문, 197쪽; 이형중(2018), 앞의 논문, 208쪽.

전교하여 말씀하시기를, “國初 및 成宗朝 태묘와 궁궐 營建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公事와 傳敎, 啓辭를 남김없이 考出하여 한 글자도 누락됨 없이 등록하여 책을 만들라. 1건은 안으로 들이고 1건은 해당 관사가 위에서 의거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든 연후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251)

이 실록기사에 따르면 편찬된 자료집 성격의 등록물은 국왕에게 올리거나 관련 부서에 비치하여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國葬都監에서 아뢰기를, “(중략) 甲寅年 仁宣王后의 國恤 때는 壬申年 《仁穆王后國恤謄錄》에 의거하여 小駕의 例를 마련하였다고 했습니다.252)

이는 國恤 시의 절차를 참고하기 위해 자료집 성격의 등록물인 《仁穆王后國恤謄錄》을 활용한 실록기사이다. 이처럼 자료집 성격의 등록물은 행사나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생산·활용되었지만, 동시에 등록물 본연의 기능인 업무의 典故로서도 활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지금까지 여러 등록물이 지닌 성격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성격을 대표하는 등록물의 사례 및 각 성격별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기에서 분석한 등록물은 현전하는 등록물 일부에 한한 것이기에, 위에서 정리한 특정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 유형의 등록물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현전하는 등록물의 성격은 이상의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의 등록물은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활용된 기록이었다. 이들 등록

251) 《宣祖實錄》卷185(宣祖 38年/서기 1605년) 3월 12일(丙戌): “傳曰, 國初及成宗朝太廟宮闕營建時, 自初至終, 凡一應公事, 與夫傳敎啓辭, 無遺考出, 不落一字, 謄錄作冊, 一件入內, 一件該司, 上以爲依據之地然後, 更議處之.”

252) 《純祖實錄》卷7(純祖 5年/서기 1805년) 6월 1일(癸丑): “國葬都監啓言, (중략) 而甲寅年仁宣王后國恤時, 依壬申年仁穆王后國恤謄錄, 以小駕例磨鍊云矣.”

물은 오로지 原文書를 그대로 베낀 형태로서 편찬되기도 하였고, 추가적인 서술을 더하여 편찬하기도 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일회성으로 편찬되기도 하였고,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생산된 업무문서를 統括하여 편찬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형태로서 각기 생산·활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록들은 공통적인 생산·활용·보존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등록체계로 규정될 수 있는 일련의 조선 기록 관리체계이다. 이 등록체계는 아래로는 屬衙門이나 지방 官衙의 단순한 문서에서부터 위로는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문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었으며, 조선 기록관리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2. 등록체계 운영의 실상

1) 생산과정과 생산주체

성리학이라는 학문은 기록의 생산과 보존에 대한 당시 관료들의 인식을 강화시켰으며, 더 나아가 실록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역사인식을 고취시켰다. 조선에서 실록이라는 기록은 그 어느 기록보다도 중시되었으며, 이 실록을 찬수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도 상당하였다. 그렇기에 실록의 찬수를 전제로 한 기록의 관리는 중시되었고, 실록의 사료로서 謄錄의 생산·보존 과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실록의 찬수과정은 實錄廳 義軌를 비롯한 다양한 사료와 더불어 기존의 연구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으나, 등록물의 생산이나 보존 등에 대한 체계는 여전히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등록체계의 전 과정을 다양한 사료를 통해 조망하고, 거칠게나마 등록체계의 실체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등록물의 생산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논의는 기존의 논문에서 다룬 바 있다.²⁵³⁾ 이 중 하우봉(1991)의 논문은 《通信使謄錄》이라는 특정 등록물에 한해 분석한 것이고, 나머지의 논문은 등록이라는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들의 논의를 토대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을 더해 조선의 등록물 생산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등록의 생산 방식은 ①原文書의 수집 → ②등록대상 문서의 選別 및 抄出 → ③ 선별·초출된 문서의 謄錄 → ④검토 및 간행 순이다. 이는 등록물의 成冊이라는 한 부분에 대한 것이지, 조선 등록체계하에서 등록물이 생산되는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한 것은 아니다. 조선에서 등록물이 생산되는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록물의 생산 배경과 생산 주체, 생산 맥락과 생산 기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53) 하우봉(1991), 《〈通信使謄錄〉의 史料的 性格》, 《한국문화》 1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15~516쪽; 김혁(2000), 앞의 논문, 19~30쪽; 연갑수(2000), 앞의 논문, 200~203쪽; 이형중(2018), 앞의 논문, 210~212쪽.

조선은 성리학적 관료제하에서 활발한 문서행정이 이루어진 국가이자 동시에 성리학적 역사관에 근간한 사관제도가 운영된 국가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은 공적 행위의 是非를 가릴 수 있는 증빙으로서 기록을 남겨야 했으며, 이는 행정과 역사의 영역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조선은 수많은 기록을 생산하게 되었고, 이들 기록을 효과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등록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생산된 모든 문서를 등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불필요한 문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의 문제는 차치하 고서라도, 이렇게 생산된 등록물은 오히려 효용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컸다. 등록물의 부피가 늘어난 만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탐색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문서를 등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原文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원본 보존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기도 하였다.

생산되는 문서를 모두 보존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문서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동일하다. 실질적으로 가용 가능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선에서는 原文書의 散失이나 漏落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으며, 심지어 등록물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였다.²⁵⁴⁾

때문에 한정된 자원하에서 실질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나마 등록이라는 방법을 통해 핵심적인 사항만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등록물의 생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凡例가 필요했다. 그래야만 등록물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생산되든 지간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각 謄錄物 凡例의 세부 내용은 아직까지도 밝혀진 바가 없지만, 실록의 기사나 여타 등록 기사의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록물의 범례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254) 《明宗實錄》 卷34(明宗 22年/서기 1567년) 1월 20일(丙子); 《宣祖實錄》 卷22(宣祖 21年/서기 1588년) 3월 26일(乙酉); 《光海君日記》 卷56(光海君 4年/서기 1612년) 8월 1일(壬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조정의 典故로는 단지 《禮曹謄錄》만이 있을 뿐인데, 애초 부문을 나누고 세목을 세운 것이 없었습니다. 彙集의 사례처럼 일이 일어나는 대로 기록해 두기만 할 뿐인지라 두서가 없어 어지럽고, 권질도 원래 많았는데 썩어 폐물이 된 것이 절반에 다다르니 일이 하나라도 생기면 급히 살펴보기도 어렵습니다. 간혹 일찍이 제도를 정한 바가 있어 명백히 근거할 수 있는 것이라도 겨우 십수년이 지나면 망연하여 이러한 일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한탄스럽고 애석할만합니다. 이제 만약 한 두명의 낭관을 골라 차정하고 本曹에 있는 등록을 모두 취해 각기 종류에 따라 나누어 그 처음과 끝을 기재하도록 하며, 또한 당상 중 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이를 전담토록 하고 범례를 의논하여 정하도록 한다면 소요되는 시간이 한 달의 공력을 넘지 않고 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²⁵⁵⁾

전교하여 말씀하시길, “(중략) 이번에 칙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하여 각 연도의 등록을 모으도록 이미 명하였는데, 하물며 이들 상고할 만한 各體의 문서겠는가? 식견이 있고 사리를 깨달은 譯官을 별도로 정하여 승문원 제조 2원에 딸려 表奏文에서부터 手本에 이르기까지 책자로 만들고, 도제조가 凡例를 지어낸 것을 들어 이를 따라 교서관에서 활자로 찍어내도록 하고, 옛 규례에 의거해 의정부 이하 아문에 나누어 두라.”²⁵⁶⁾

서명선이 말하길, “이제 《비국등록》 범례의 일로써 양달할 바가 있습니다. 가령 戶口를 논하는 것이 1권인데, 이미 戶口의 항목이 있고 그 수가 3권입니다. 이후에 또 호구의 항목이 있습니다. 범례가 어지러운 것이 많아 이제 교정을 마친 고로 이에 가져 들이려 합니다.” 임금께서 말씀하길, “들여오라.”²⁵⁷⁾

255) 《承政院日記》 711冊(英祖 6年/서기 1730년) 9월 22일(戊子): “我朝典故, 只有禮曹謄錄, 而初無分門立目, 以類彙集之例, 隨事錄置, 亂無頭緒, 卷秩既多, 朽弊居半, 一有事故, 猝難尋見, 間亦有曾所定制, 明白可據者, 纔過十數年, 茫然不知有此事, 誠可歎惜. 今若擇差一二郎官, 盡取本曹所在謄錄, 各以類分, 載其首末, 仍以堂上中一人, 久任句管, 議定凡例, 不過費時月之工, 可以成書.”

256) 《正祖實錄》 卷18(正祖 8年/서기 1784년) 10월 9일(辛卯): “敎曰, (중략) 今因支勅事, 各年謄錄, 既命彙集, 況此等可考各體文字乎, 別定有識解事譯官, 承文院提調二員眼同, 自表奏以至手本, 作成冊子, 都提舉撰出凡例, 仍令校書館活印, 依古例分置政府以下衙門.”

257) 《承政院日記》 1490冊(正祖 5年/서기 1781년) 7월 30일(庚午): “命善曰, 今以備局謄

조선에서 時政記나 實錄, 《承政院日記》 등 주요 기록물의 편찬과정에서 凡例를 만들어 활용하였음은 이전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이다. 이들의 범례를 살펴보면 수집대상 문서의 범위와 인용 방식 등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위 기사에서 나타난 등록물의 범례 또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활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凡例는 각 등록물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등록물의 편찬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내의원이 아뢰기를, “중전의 産室을 설치하는 일에 대해 지금 史官 金大德의 장계를 보니 매우 소루합니다. 평상시 節目은 해당되는 官司의 등록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史에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는데, 형세가 그러한 것입니다.”²⁵⁸⁾

이 기사는 중전의 産室廳을 설치하는 節目에 관해 논하는 것인데, 사관이 기존의 實錄에서 상고할 만한 부분을 제출한 것이 매우 소루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를 담당하는 官司의 등록물에 이 절목을 상세하게 기재하기 때문임을 들고 있다. 이는 등록물의 유형에 따라 등록되는 문서의 범위와 내용의 상세함 정도에 차이를 두었음을 의미한다. 實錄 찬수를 위한 기본자료로서의 時政記에 대한 纂修凡例와 實錄 그 자체의 纂修凡例가 實錄 편찬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등록물의 범례 또한 그 기록의 구성과 목적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각 등록물의 편찬을 위해 범례가 구성되면 이에 따라 등록할 문서들이 수집·선별되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문서들은 폐기되거나 休紙로 재

錄凡例事, 有所仰達者矣. 如以戶口論之一卷, 已有戶口之目, 而數三卷, 以後又有戶口之目. 凡例多有紊亂處, 今已校正故, 茲以持入矣. 上曰, 入之.”

258) 《宣祖實錄》卷160(宣祖 36年/서기 1603년) 3월 22일(戊寅): “內醫院啓曰, 中殿産室排設事, 今見史官金大德狀啓, 則殊爲疎漏. 平時節目, 自有該司謄錄, 其不詳載於史, 勢也.”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李克均이 변방 방비에 대한 事目을 馳啓하길,
“하나, 본도의 군사들은 겨울과 여름에도 갑주를 풀지 못해 갑옷이 다하여 해졌습니다. (중략) 신의 의견으로는 京外의 오래 보관한 장부·문서 休紙를 本道에 많이 보내어 절도사로 하여금 (紙甲을) 제조토록 하여 파견 군사 중 무재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분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259)

吳翹이 병조의 말로 아뢰길,
“(중략) 본조 및 비변사, 예조, 호조 등 아문의 대수롭지 않은 장계문서로 뒷날 고찰과는 무관한 것과 비록 고찰할만한 것일지라도 이미 등록에 실은 것은 각기 그 관청의 郎廳에게 명하여 직접 고찰하여 내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모두 軍器別造廳에 수송케 하여 紙甲을 만들어 적을 방어하는 것에 실제 사용되도록 하고, (후략)”²⁶⁰⁾

이 두 기사는 군사들에게 종이로 만든 갑주인 紙甲을 분급하기 위해 기존 오래된 문서들을 재활용하자는 의견을 담고 있다. 다만 그 시행여부는 명확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京外各司가 문서 및 등록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오랫동안 보존하는 문서들은 뒷날 고찰할만한 것이 아니면 休紙로 재활용될 수 있었다. 또한 原文書가 고찰할만한 것일지라도 일단 등록물에 그 내용이 등록되어 있다면, 그 원본 문서는 그 효용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보았다. 즉 각 관사가 생산·접수한 문서들은 일차적으로 분류되어 보존되었고, 이 중 효용가치가 있는 문서를 선별하여 등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효용가치가 없어 등록될 가능성이 없는 문서나, 이미 등록

259) 《燕山君日記》卷35(燕山君 5年/서기 1499년) 10월 23일(己酉): “李克均馳啓備邊事目, 一, 本道軍士冬夏不解甲, 甲盡破 (중략) 臣意, 以京外久藏簿書休紙, 多輸本道, 令節度使製造, 赴防軍士中有武才人, 宜先分給何如.”

260) 《承政院日記》18冊(仁祖 5年/서기 1627년) 5월 22일(丁亥): “吳翹, 以兵曹言啓曰, (중략) 本曹及備邊司禮曹戶曹等衙門, 閑慢狀啓文書, 無關於後考者, 及雖係可考, 已載謄錄者, 則竝令各其司郎廳, 親執考出, 竝爲輸送於軍器別造廳, 制造紙甲, 以爲禦敵實用. (후략).”

이 되어 原文書를 보존할 필요가 없는 문서는 폐기되었다. 이를 통해 등록이라는 행위가 문서의 내용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등록을 해야 할 기록이 있으면 먼저 해당 기록에서 등록할 부분을 선별하고 1차적으로 이를 옮겨 적어 등록물의 초본을 만들었다. 草謄錄이라는 이름의 등록물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儀軌 기록물에서 草謄錄의 생산이나 수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물품을 나열한 기사가 발견되기도 하였다.²⁶¹⁾ 이는 등록물의 최종본을 만들기 전 일종의 草本으로서 草謄錄을 생산하는 절차가 존재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일단 현전하고 있는 草謄錄이 있어 그 실물을 확인해 볼 수 있다.²⁶²⁾ 또한 《宣祖實錄》의 기사에서도 등록물의 초본으로서 草謄錄이라는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승정원에서 회계하여 말하길, “臣 등이 禮曹의 草謄錄을 가져다 살폈는데, (중략) 丁酉年 이상의 《祭文謄錄》이 산실되어 달리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예조의 초등록에 이미 京奠物이라 쓰여 있으니 곧 제사를 시행한 절차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제사가 없었다면 祭文이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²⁶³⁾

이 기사에서는 승정원이 禮曹의 草謄錄을 살펴 예전에 제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음을 아뢰고 있다. 여기에서 《祭文謄錄》으로 지칭되는 등록물은 아마도 왕실 또는 조정에서 주관하는 제사의 祭文을 수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유년 이전의 등록물이 유실되었기에 제사 시행의 여부를 확

261) 《嘉禮都監儀軌》, “一, 草謄錄修正時, 雜上下捧上算板, 及文書出草次白休紙一斤, (후략).”; 《英宗大王實錄廳儀軌》, “本廳郎廳仕日, 及草謄錄修正次, 厚白紙三卷, (후략).”; 《景慕宮樂器造成廳儀軌》, “本廳草謄錄時所用, 黃筆眞墨各五, 白紙三卷, 白休紙一斤, (후략).”

26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璿源譜略修正草謄錄》(奎 12986), 《御製草謄錄》(奎 12998), 《丙子四月本寺草謄錄》(奎 13003), 《通信使草謄錄》(奎 15067)의 4건과 장서각 소장 《山陵都監草謄錄》(K2-3563), 《仁元王后國恤草謄錄》(K2-3000), 《貞聖王后國恤草謄錄》(K2-3009), 《義興縣公事草謄錄》(K2-3661)의 4건 등이 있다.

263) 《宣祖實錄》 卷162(宣祖 36年/서기 1603년) 5월 18일(癸酉): “政院回啓曰, 臣等取考 禮曹草謄錄, (중략) 丁酉以上祭文謄錄散失, 他無可考之路, 但禮曹草謄錄, 既書京奠物云, 則明有行祭節次, 似無祭而無文之理.”

인하기 위해 草謄錄까지 동원한 것이었다.

草謄錄이 완성되면 그 내용을 재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正書하여 正本 등록물을 성책해 보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草謄錄은 현전하는 등록물의 양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만 남아있는데, 등록물이 완성되면 草謄錄은 폐기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두고 보존 후 처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실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이 草謄錄이라는 존재가 모든 등록물을 대상으로 생산되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중요 기록에 한해 草本으로서의 草謄錄이 생산된 것은 확인되며, 草謄錄이라는 명칭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등록물의 일부가 草本으로서 제작된 정황 등은 나타난다. 일부 등록물 중 草書나 行書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일자 등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등록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기록이 일종의 草本은 아니었을까 싶다. 다만 이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등록물의 편찬이 이처럼 정해진 범례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시행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된다. 등록물의 실질적인 편찬 주체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이는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官廳은 보통 堂上 이상 고위 관료, 實務職으로서의 郎廳, 그리고 이들 실무직 郎廳을 보조하며 실질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胥吏로 구성된다. 堂上 이상 고위 관료는 기관의 총괄 및 관리감독을 담당하며, 郎廳은 기관 행정의 실무를 전담한다. 胥吏는 그 役에 따라 書吏·書寫·錄事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皂隸·羅將 등 護衛나 雜役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역할 구분은 등록물의 편찬 과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등록물의 편찬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堂上 이상 관료와 文書의 내용을 평가하여 등록할 부분을 분류·지정하는 郎廳, 郎廳이 지정한 문서를 별도의 책자에 옮겨 적는 胥吏 등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다. 다만 胥吏職群은 문서를 다룰 수 있는 書吏와 글자를 베껴 적는 업무를 수행하는 書寫 정도만이 편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각 직무별로 등록물

의 생산을 수행한 과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堂上 이상 고위 관료이다. 이들의 역할은 凡例와 같은 등록 기준을 정하고, 실제 등록물의 편찬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앞에서 인용한 《承政院日記》와 《正祖實錄》의 기사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전략) 당상 중 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이를 전담토록 하고 범례를 의논하여 정하도록 한다면 소요되는 시간이 한 달의 공력을 넘지 않고 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²⁶⁴⁾

도제조가 凡例를 지어낸 것을 들어 이에 따라 교서관에서 활자로 찍어 내도록 하고, 옛 규례에 의거해 의정부 이하 아문에 나누어 두라.²⁶⁵⁾

이들 기사에서 凡例를 정하는 주체가 堂上 이상의 고위 관료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實錄이나 儀軌와 같은 중요 기록의 편찬과정에서도 이른바 總裁官으로서 都提調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편찬을 나누어 담당하는 各房 또한 堂上을 두어 해당 房의 총괄을 담당케 하여 고위 관료들이 전반적인 진행 사항을 감독하게 하였다. 다만 이들 堂上 이상 관원들은 등록물의 생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대체로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각 官司의 郎廳과 같은 실무직군이다. 이들은 각 관사에서 문서관리를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등록물의 편찬을 지휘한다. 原文書를 평가하여 등록할 기록을 선별하고 등록된 기록을 검토하는 것 또한 대체로 이들이 수행하였으며, 중요기록의 경우는 이들이 직접 謄書·謄寫하기도 하였다.²⁶⁶⁾ 郎廳들이 조선의 기록관리 업무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264) 《承政院日記》 711冊(英祖 6年/서기 1730년) 9월 22일(戊子): “(전략) 仍以堂上中一人, 久任句管, 議定凡例, 不過費時月之工, 可以成書.”

265) 《正祖實錄》 卷18(正祖 8年/서기 1784년) 10월 9일(辛卯): “都提舉撰出凡例, 仍令校書館活印, 依古例分置政府以下衙門.”

266) 이형중(2018), 앞의 논문, 216~217쪽.

[英陵과 寧陵의 獻官(祭官) 및 비변사와 승문원의 낭청이 공문을 회람시킬 때와 각 군을 徵召하는 關文을 지닌 將校에게도 모두 말을 지급한다.]²⁶⁷⁾

[비변사의 首郎廳(최선임 낭청)은 중앙과 지방의 계문과 장계를 관장하며, 후에 참고 될 만한 것을 엄히 지키지 못한다면 곧 중하게 책임을 묻는다.]²⁶⁸⁾

해당 규정은 비록 備邊司와 承文院의 郎廳에 한정된 것이지만, 이들 기관에서 실질적인 문서행정과 기록관리의 실무자는 郎廳職이었음이 확인된다. 비변사와 승문원 외에도各司의 기록관리 실무자가 낭청들이었음은 여러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사간원이 아뢰어 말하기를, “무릇 公事를 入啓할 때는 십분 상세히 살펴 누락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달 12일 정사에 경상도 관찰사 吳祥의 宰批를 입계할 때 쓰는 것을 누락하여 기록하지 않아 주상의 전교가 있음에까지 다다랐으니 지극히 놀랄 일이 되었습니다. 宰批를 베껴 쓰고 唱準(필자 주: 소리 내어 읽어가며 교정함)하는 임무가 전적으로 色郎廳에게 있는데, 처음부터 이미 신중치 못해 누락하여 쓰고, 또 唱準하지도 않아 그릇된 것을 고치지도 않았으니 그 한만하고 소홀하여 자신의 편의대로 하고 그 임무를 살피지 않음이 심합니다. 청컨대 이조의 색낭청을 파직하소서.”²⁶⁹⁾

전교하시길, “아뢴 대로 하라. 또한 막중한 犯贓에 관한 문서를 禁府에

267) 《續大典》〈兵典〉驛馬條, “[陵寧陵獻官, 備邊司承文院郎廳回公時, 各軍徵召關文, 實持將校, 並給馬.]

268) 《大典通編》〈禮典〉藏文書條, “[備邊司首郎廳, 掌中外啓狀, 可憑後考者, 不謹典守, 則重勘.]”

269) 《明宗實錄》卷29(明宗 18年/서기 1563년) 8월 14일(庚申): “諫院啓曰, 凡公事入啓之際, 十分詳察, 俾無遺漏, 本月十二日政, 慶尙道觀察使吳祥宰批入啓之時, 落書不錄, 以致自有教, 至爲駭愕. 宰批書寫唱準之任, 專在於色郎廳, 始既不謹而落書, 又不唱準而改謬, 其爲慢忽自便, 不察其任極矣. 請吏曹色郎廳罷職.”

서 보관하여 두지 않아 후에 고찰할 수 없는 처지에 두게 하니 극히 잘못된 것이다. 색낭청을 추고하라.”하였다.²⁷⁰⁾

이는 문서와 기록을 관장하는 色郎廳이 각사에 있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들 낭청직들이 책임을 졌음을 보여준다. 임시기구인 都監이나 廳 등에서도 분류·초출·등서 등 기록과 관계된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은 郎廳職이었다.²⁷¹⁾

마지막은 각 관청에 딸린 書吏와 書寫들이다. 이들은 낭청을 보조하여 해당 관청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를 점검하기도 하고, 낭청의 지시에 따라 原文書를 베껴 등록물에 적어 넣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낭청직들이 각 아문의 기록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직책이라면, 이들 書吏와 書寫는 기록의 등록과 보관 등을 실제로 수행하는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尙運(유상운)이 말하기를, “예조는 관원이 자주 교체되고 승문원은 아랫사람(下人)이 문서를 專掌하여, (문서를) 모아 책질로 만드는 것을 책임지게 할 수 없으니 따로 비변사의 有司堂上 및 낭청 1인을 정하여 이 일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예조와 승문원의 하인은 불러들여 문서를 搜檢토록 하고 등록을 만들게 하여 혹 1건은 강화에 둔다면 전과 같은 소루한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²⁷²⁾

여기서 “예조와 승문원의 下人”이라 지칭한 대상이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보통 實錄과 《承政院日記》에서 下人이라는 단어를 從僕이라는 뜻보다 ‘아랫사람’ 또는 ‘下吏’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니만큼, 下人이 胥吏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예

270) 《承政院日記》22冊(仁祖 6年/서기 1628년) 9월 21일(戊寅): “傳曰, 依啓. 且莫重犯 贓文書, 禁府不爲藏置, 使無後考之地, 極爲非矣. 色郎廳推考.”

271) 이형중(2018), 앞의 논문, 217쪽.

272) 《肅宗實錄》卷29(肅宗 21年/서기 1695년) 7월 3일(癸亥): “尙運曰, “禮曹則官員數遞, 承文院則下人專掌文書, 不可責其哀集成秩, 別定備局有司堂上及郎廳一人, 主管此事, 招致禮曹承文院下人, 使之搜檢文書, 作爲謄錄, 或置一件于江華, 似無如前疎漏之弊矣. 上許之.”

조와 승문원의 書吏들이 등록물의 편찬을 담당했다는 뜻이 된다. 書吏들이 등록물의 편찬을 담당한 사실은 또 다른 기사에도 있다.

睦敍欽이 迎接都監儀軌廳의 말로 아뢰기를, “(중략) 등록의 중요한 일은 중간에 그칠 수 없으니 부득이 다시 번거롭게 요란케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書寫 8인은 수를 줄일 수 없고 書吏 2인 가운데 1인은 減下하고 使令 2명 가운데 1명을 감하하여 이번 달의 料布를 감한 수에 의거하여 題給하고 기한 안에 일을 완전히 마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뢰입니다.”하니, 전교하길 “알았다.”하였다.²⁷³⁾

예조에서 아뢰길, “본조에서 제향에 관한 의례를 품한 바, 사대교린 등의 각 항 절목은 본래부터 유래되어 온 定式이 있었고 본조는 원래 등록이 없어 단지 매년 쌓인 문서만이 있었습니다. 고로 무릇 일이 있어 舊例를 참고하는데 문서들은 汗漫하여 급박한 때에도 두루 살필 수 없어 혹 업무를 담당할 서리의 입에 기대기도 하였으니 비단 사리와 체면이 편치 않을 뿐더러, 그릇된 것을 이어받아 어긋나는 것이 많으니 (문서를) 모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온 문서를 취합하여 하나의 등록을 만들어 이로써 편히 고열할 근거로 하되, 본조는 본래 米布가 나올 곳이 없으며 또한 繕寫할 書吏도 없습니다. 종지와 붓·먹은 본조에서 조처하여 준비케 하되, 서사의 料布를 변통하여 낼 길이 없으니 서사 2명의 요포를 1달의 기한으로 정해 該曹에서 題給토록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시길 “윤택한다.”고 하셨다. ²⁷⁴⁾

○ 綱: 각사에서 能書하는데 吏屬을 사용하면서 빙자하는 폐단에 대해 신

273) 《承政院日記》45冊(仁祖 12年/서기 1634년) 10월 8일(辛卯): “睦敍欽, 以迎接都監儀軌廳言啓曰, (중략) 而膳錄重事, 不可中輟, 不得已復煩瀆擾. 其中書寫八人, 則不可減數, 而書吏二人內, 一人減下, 使令二名內, 一名減下, 今朔料布, 依減數題給, 趁限完畢 在所不已, 惶恐敢啓. 傳曰, 知道.”

274) 《承政院日記》149冊(孝宗 9年/서기 1658년) 3월 17일(甲寅): “禮曹啓曰, 本曹所稟祭享儀禮, 事大交隣等各項節目, 自有流來定式, 而本曹元無膳錄, 只有積年文書, 故凡有事, 參考舊例, 則汗漫文書, 急遽之間, 不能遍考, 或憑執吏之口, 非但事體未安, 亦多襲謬之違, 不可不哀集, 取流來文書, 作一膳錄, 以便考閱之地, 而本曹本無米布出處, 且無繕寫書吏, 紙地筆墨, 則自本曹措備, 而書寫料布, 無路辦出, 書寫二名料布, 限一朔令該曹題給, 何如. 傳曰, 允.”

척하길 명하셨다.

○ 目: 校正 閣臣 徐有防과 朴祐源이 아뢰기를,

“(중략) 신들은 그동안 여러 번 칙교를 받았기에 언제나 閣吏로 하여금 大小의 書役을 담당하게 합니다. 御製는 寫字官을 差備하여 준비케 하고, 綸綍은 綸綍書寫書吏가 있고, 《일성록》은 書寫吏가 있습니다. (중략) 본각은 吏屬의 수효가 매우 적어서 확보한 서사가 2인뿐이므로 각종 문자를 謄出하는 일이 항상 기일을 어기게 됩니다.”²⁷⁵⁾

이 기사들은 각 관청에서 謄錄을 편찬하는 데 있어, 書吏와 書寫를 실무인력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書吏와 書寫는 각각의 역할이 달랐는데, 書吏가 보통 문서의 생산 및 관리의 실무를 담당했다면 書寫는 문서를 正書하거나 그림을 베껴 적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아마 胥吏 중에서 글씨가 좋은 이들을 선별해 書寫의 직함을 맡겼을 것이다. 단 여기서의 書寫는 書寫官과 다른 직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통 書寫官은 큰 행사에 차출되는 품계를 지닌 文官들이었고, 일반적인 書寫는 胥吏의 한 職으로서 각 관사에 배치되어 있었다.

書吏는 문서의 考出과 受發, 謄書 등을 담당하였고, 書寫는 1차 정리된 등록물을 다시 正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관청일지 성격을 지닌 등록물의 경우는 해당 관청의 낭청직이 日歷을 작성하면 書吏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력을 모아 정서하여 등록물에 등록하였다.²⁷⁶⁾ 다만 기밀을 요하는 문서의 경우 郎廳職이 직접 謄書·謄錄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경연에 임어하였다. 강이 끝나고 同知事 李克培가 아뢰길, “여러 도의 軍籍은 이미 뽑아 오고 있으나, 그 수효가 매우 번잡하니 청컨대 《大典》에 의거하여 군적을 고치도록 하소서. 다만 병조는 일이 번잡하여 낭청이 한가하지 않으니, 청컨대 승문원·성균관·교서관의 權知員(수습관원)

275) 《日省錄》 166冊(正祖 9年/서기 1785년) 2월 24일(甲辰): “○綱: 命飭各司能書吏使用憑藉之弊. ○目: 校正閣臣 徐有防 朴祐源啓言, (중략) 而臣等前後屢承飭教, 故每令閣吏擔當大小書役, 而御製則差備待令寫字官, 綸綍則有綸綍書寫書吏, 日省錄則有書寫吏焉. (중략) 本閣吏屬數額甚鮮, 而所得書寫只有二人, 各項文字謄出之役, 每致愆期.”

276) 이형중(2018), 앞의 논문, 217~219쪽.

4~5인으로 군적을 쓰게 하십시오.” 하니, 주상께서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領事 申叔舟가 답하길, “《大典》에 정한 軍額을 따르는 것이 매우 옳으니, 마땅히 堂下官으로 평소 군적을 아는 자 2인을 택해 군적을 만들고, 三館(승문원·성균관·교서관)의 權知員 4~5인으로 書寫하게 하소서.” 277)

전교하여 말씀하시길, “국가비밀의 일은 많은 이가 듣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기에 단지 韓健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한 것이다. (중략) 또 注書는 書寫의 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들어가 참여하는 것뿐이다.” 278)

宗簿寺가 아뢰길, “璿源錄은 금년 4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이제 완전히 마쳤습니다. 寶牒 또한 마땅히 別件으로 謄寫하여 같은 때에 五臺山 및 太白山에 나누어 보관해야 하는데, 本寺에는 원래 草冊이 없고 단지 正案 1건이 江華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本寺 낭청에게 말을 지급하여 내려 보내 등사하여 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279)

이상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등록물의 생산주체가 조직 내 직급에 따라 구별되며, 그 역할 또한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당상 이상의 고위 관료는 總責으로서 凡例와 編纂節目 등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등록물의 생산 방향을 규정하고, 낭청 이하 실무관원은 각사의 문서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으로서 하달된 범례와 함께 문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등록할 原文書를 抄出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書吏·書寫 등의 胥吏職은 낭청에 의해 초출된 기록을 등록책으로 옮겨 적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낭청의 기록관리

277) 《成宗實錄》卷51(成宗 6年/서기 1475년) 1월 20일(庚午): “御經筵, 講訖, 同知事李克培啓曰, 諸道軍籍今已抄來, 然厥數太冗, 請依大典更籍, 但兵曹事繁, 郎廳無暇, 請以承文院, 成均館, 校書館權知員四五人, 書籍. 上顧問左右, 領事申叔舟對曰, 從大典定軍額甚可, 宜擇堂下官素諳軍籍者二人, 成籍, 以三館權知員四五人書之.”

278) 《成宗實錄》卷233(成宗 20年/서기 1489년) 10월 3일(丁亥): “傳曰, 國家秘密之事, 不宜衆聽, 故只令韓健鞠之. (중략) 且注書有書寫之事, 故不得已入參耳.”

279) 《仁祖實錄》卷21(仁祖 7年/서기 1629년) 7월 21일(甲辰): “宗簿寺啓曰, 璿源錄自今年四月始役, 今已完畢. 寶牒亦當別件謄寫, 一時分藏于五臺及太白, 而本寺元無草冊, 只正案一件, 藏在江華. 本寺郎廳給馬下送, 謄寫以來宜當.”

업무 또한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등록물은 그 목적에 따라 각사에 나눠져 활용·보존되었다.

2) 활용과 보존

조선에서 등록물은 신뢰할 수 있는 典故가 되었기에 업무 과정에서 1차적으로 膳錄을 상고하는 것은 항시 있는 일이었다. 등록물의 활용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국가 대사는 물론이거니와 宮人의 喪과 같은 부분까지도 등록물을 활용토록 하였다.

전교하시길, “이제부터 따로 1司를 설치하여 제조와 낭청을 두고 米糲(싸라기)을 관장토록 하여 奉常寺의 사례에 의거토록 하라. 무릇 궁인의 喪이 있으면 곧 공급하도록 명하되, 만약 부족한 것이 있으면 봉상시에 납입한 물품으로 그 모자라는 바를 보충하라. 또 이전 궁인의 喪에는 등록이 없는 고로 일에 그릇됨이 많았으니, 이제 등록을 구비하여 뒷날 상고할 것으로 삼으라.”하였다.²⁸⁰⁾

예조가 아뢰기를, “勅使를 맞이하는 일은 그 전례를 상고하여 天子의 使臣 鄭同이 오고갈 때의 일 및 聖節使 韓僎이 칙서를 가지고 왔을 때의 일에 대해 등록을 살펴 書啓하였으나, 世宗의 大祥 전 進賀使 趙由禮가 칙서를 가지고 왔을 때의 일 및 文宗 大王的 小祥 전 謝恩使 朴仲林이 칙서를 가지고 온 것 등의 일과 같은 것은 모두 등록에 없었습니다. 本曹의 문서가 화재를 겪은 뒤로는 散逸되어 상고할 수 없으니 청컨대 널리 《政院日記》를 상고하소서.” (중략) 전교하여 말씀하시길, “《정원일기》를 널리 상고하도록 하여 啓하는 것이 可하겠다.”고 하였다.²⁸¹⁾

280) 《燕山君日記》卷59(燕山君 11年/서기 1505년) 9월 15일(丙申): “傳曰, 自今別設一司, 置提調郎廳, 掌米糲, 依奉常寺例. 凡有宮人之喪, 輒令供辦, 如有不足, 則以奉常寺所納之物, 補其所乏. 且前此宮人之喪, 無膳錄, 故事多舛誤, 今膳錄以備後考.”

281) 《中宗實錄》卷70(中宗 26年/서기 1531년) 2월 30일(乙酉): “禮曹啓曰, 迎勅事, 考其前例, 則其在天使鄭同出來時事, 及其時聖節使韓僎, 勅書齎來事, 則考膳錄書啓, 而如世宗大祥前, 進賀使趙由禮, 齎勅來時事, 及文宗大王小祥前, 謝恩使朴仲林, 齎來勅書等事,

심지어 업무에 등록물을 참고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이에 의존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등록물은 憑考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편찬되었는데, 후대로 가면서 前例를 상고한다는 핑계로 등록물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기도 하고 업무 과정에서 등록물에 기재된 前例만을 쫓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承文院 都提調 및 大提學 申光漢 등이 아뢰길, “知製敎 등이 表文을 짓는데 힘을 들이지 않으므로 비록 지어 올린 글이라도 쓸 수가 없는데 張玉과 南應龍은 마음대로 쓰지도 않으니 추고하소서.”

[京師에 보내는 표문은 제멋대로 하여 마음을 갖춰 지으려 하지 않으면서 매번 謄錄을 돌려가며 베껴 써 대제학에게 올린다. (중략) 祭文 및 홍문관 月課 제술도 모두 등록을 적어, 혹 두 사람이 하나의 등록을 적었다가 주상 앞에서 드러나기도 하였다. 아! 직분을 다하지 않는 폐단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전교하시길,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282)

전교하여 말씀하시길, “(중략) 어찌 前例를 족히 묻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견이 미치지 못해 매번 일을 처리함에 있어 該曹의 謄錄을 상고한다. 만일 하나의 등록으로 천하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인형에게 등록을 지고 다니게 하여도 천하를 다스리기 족할 것이다. 283)

이는 달리 생각하면 등록물이 조정의 大小事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널리 그리고 상당히 자주 활용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則皆無謄錄. 本曹文書, 經火後, 散逸不可考也. 請廣考政院日記. (중략) 傳曰, 政院日記, 令廣考以啓可也.”

282) 《明宗實錄》卷3(明宗 1年/서기 1546년) 4월 28일(甲寅): “承文院都提調, 及大提學申光漢等啓曰, 知製敎等, 不用力作表文, 故雖製進之文不可用. 而張玉南應龍, 則專不作, 請推. [赴京表文, 專不用意製之, 每傳寫謄錄, 而進于大提學 (중략) 如祭文及弘文館月課之製, 皆書謄錄. 或有二人書一謄錄, 而見露於上前者. 吁不職之弊, 可勝救哉.] 傳曰, 如啓.”

283) 《宣祖實錄》卷104(宣祖 31年/서기 1598년) 9월 25일(丁未): “傳曰, (중략) 何前例之足問乎. 我國之人, 識見不逮, 每當處事, 考該曹之謄錄. 若一謄錄, 可以處天下之事, 則使偶人, 負謄錄而行, 足以治天下矣.”

이 등록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먼저 참고를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을 소관한 官司를 확인하고, 이 官司의 郎廳이 사안과 관계된 문서나 등록물 등을 찾는다. 그리고 해당 기록을 찾게 되면 그 내용을 考閱하여 抄出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다만 장기적으로 편람해야 할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별도의 抄謄錄 또는 謄錄抄를 만들어 두기도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중략) 대개 列聖의 主面에 쓰여 있는 것과 《冊寶謄錄》에 기재된 것이 과연 증감한 차이가 있으니, 《實錄謄錄抄別單》과 《香室祝文謄錄》을 아울러 가져다 상고하여 처리하도록 품지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²⁸⁴⁾

李台佐가 나아가 말하길, “(중략) 그 중에서 전해오는 文書を 일일이 맡아 검토하여 門目を 나누고 부류를 가려 한 책자로 만들어 편리하게 考閱하니 그만둘 수 없습니다. (중략) 옛 相臣 金構가 本司의 오랜 文簿를 모아 분류하고 《抄謄錄》이라 이름하여 考閱하기에 편리토록 하였으나, 분류에 상세함과 가지런함이 여전히 부족합니다.”²⁸⁵⁾

《광해군일기》에 등장하는 《실록등록초별단》은 실록에서 따로 초출한 것을 적어 單子 형식으로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치는 않다. 다만 이와 유사한 제목의 기록들로 현전하는 것을 살펴보면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備邊司謄錄抄》(古 4255-13)와 장서각이 소장하고 있는 《禁衛營抄謄錄》(K2-3300) 및 《御營廳抄謄錄》(K2-3360) 등이 있다. 모두 원 등록물을 토대로 하되 필요한 부분만을 따로 초출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등록물이 다루는 기간은 짧게는 1년 내외에서 길게는 2백여년에까지 이른다.

284) 《光海君日記》卷17(光海君 1年/서기 1609년) 6월 28일(丁丑): “禮曹啓曰, (중략) 大概列聖主面所書, 與冊寶謄錄所載, 果有增減之異同, 實錄謄錄抄別單, 香室祝文謄錄, 竝爲取考停當, 稟旨施行何如. 傳曰, 依啓.”

285) 《承政院日記》687冊(英祖 5年/서기 1729년) 6월 21일(甲午): “台佐進曰, (중략) 自中流來文書, 一一句檢, 分門抄類, 成一冊子, 以便考閱, 有不可已矣. (중략), 故相臣金構, 彙分本司久遠文簿, 名以抄謄錄, 以便考閱, 而分類猶欠詳整.”



<그림 3> 憲宗年間 《備局謄錄》의 체제

위의 <그림 2>과 <그림 3>을 비교해보면 그 체제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비변사등록》의 기본 체계는 ①일자, ②좌목, ③기사 순으로 구성되며 각 일자 아래에 비변사의 전반적인 업무 관련 기사를 적는 전형적인 관청일지 성격의 등록물이다. 그러나 憲宗 연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국등록》은 座目이 나타나지 않으며, 撮要·政事·前望·解由·呈辭·疏批 등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기사들을 1차 분류하였고, 필요시 각 주제어 하에 傳敎나 啓辭 등이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관청일지 성격의 등록물이 아닌, 공문서철적 성격을 지닌 등록물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備邊司謄錄》과 《備局謄錄》이라는 명칭의 차이에 따른 것은 아니다. 관청일지 성격의 등록물인 《備邊司謄錄》 표제에도 備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며, 실록 등의 기사를 살펴보더라도 備局 자체가 備邊司와 동일한 단어로 활용되었다. 당시에 공문서철 성격의 등록물인 《비국등록》과 관청일지 성격의 등록물인 《비변사등록》을 구분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리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향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다시 이 두 기록의 비교 분석으로 돌아가서, 이들 기록을 각기 살펴보면 등록물의 활용 목적에 따라 동일한 原文書를 가지고 별도의 등록물을 만들거나 이미 존재하는 등록물을 토대로 체제를 재구성한 형태의 등록물을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등록물은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위의 사례들처럼 抄出本을 만들거나 아예 다른 형태의 등록물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일본 1책만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여러 벌을 필사 및 인출하여 複本 및 寫本의 형태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吏文謄錄》은 오직 吏文의 체제만을 지키게 함이 아니며, 본국의 事대에 관한 節目을 구비하여 기재한 것이니 本院(승문원)의 관원들은 힘써 다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院에서 보관하는 謄錄이 단지 1건만 있어 수많은 관원들이 두루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연례마다 하는 것은 제외하고 긴요한 문서만을 취해 鑄字所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도록 하여 각자 나눠 열람하고 강습하게 하십시오.²⁸⁷⁾

예조가 아뢰기를, “춘추관의 謄錄은 江華史庫에 보관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상께서 전교하신 것에 의거해 이어서 繕寫하여 춘추관에 보관하였습니다만, 다시 들어보니 顧 天使 때의 등록은 아직 춘추관에 보관하여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迎接都監이 이제 바야흐로 朱 天使 때의 등록 2건을 繕寫하니, 도감에게 한시에 베껴 적게 하여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²⁸⁸⁾

이 등록물들은 각사에서 업무상 활용되는 사례가 많기에 일반적으로는

287) 《世宗實錄》卷51(世宗 13年/서기 1431년) 1월 21일(戊戌): “吏文謄錄, 非唯矜式吏文體制, 具載本國事大節目, 本院官員務要悉知, 但院藏謄錄, 只有一件, 數多官員, 難以遍閱. 除年例外, 撮其緊要文書, 令鑄字所印出, 各自披閱講習.”

288) 《宣祖實錄》卷203(宣祖 39年/서기 1606년) 9월 21일(丁亥): “禮曹啓曰, 春秋館謄錄, 先爲藏置於江華史庫事, 依上教, 隨後繕寫, 藏置春秋館矣. 但更爲聞見, 則顧天使時謄錄, 時未藏置於春秋館云. 迎接都監, 今方繕寫朱天使時謄錄二件, 令都監, 一時謄書, 分藏爲當.”

해당 관사에 이를 직접 비치하여 사용하였다. 아무래도 등록물의 생산 목적 자체가 업무상 참고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를 수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예조가 아뢰기를, “仁獻王后 考妣(필자 주: 돌아가신 부모)의 기일과 탄생일에는 전례에 의거하여 제사를 차리려는데, 西原府夫人 韓氏와 平山府夫人 申氏를 모두 함께 제사지내는 것은 前例가 없을 뿐더러 또한 근거할 수 있는 문서도 없습니다. 다만 봉상시에서 보관한 謄錄을 보니 神懿王后 이하 각대 왕후의 돌아가신 어머니 기일에는 모두 하나의 위패만을 하였습시다.”²⁸⁹⁾

忠勳府에서 아뢰기를, “이전부터 역적들의 田民을 매년 내려주시어 本府를 접대하셨는데, 祖宗朝로부터 내려온 옛 규례로서 本府가 보관한 謄錄에 실려 있습니다.”²⁹⁰⁾

이는 각 관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등록물은 해당 관청에서 보존하면서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 관청의 文書庫는 크게 현재 舉行文書를 관리하는 공간인 樓下庫와 그 효용이 지나간 久遠文書를 관리하는 공간인 樓上庫로 구분되어 있었다.²⁹¹⁾ 京外 관사 중 일부는 자체적인 文書庫를 보유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곳도 존재하였는데, 이 경우는 관청 내 별도의 문서 보존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것이었다.²⁹²⁾ 조선의 등록물 또한 각사의 문서고 및 별도 보존공간에 보존되었을 것이며, 등록물과 같은 憑考를 위한 기록은 그 특성상 樓上庫에 두었을 것이다.²⁹³⁾

289) 《仁祖實錄》卷27(仁祖 10年/서기 1632년) 12월 8일(辛未): “禮曹啓曰, 仁獻王后考妣忌辰節日, 依例設祭, 而西原府夫人韓氏, 平山府夫人申氏, 竝皆設祭, 既無前例, 又無可據文書. 但見奉常寺所藏謄錄, 神懿王后以下各代王后妣忌日, 則皆爲一位.”

290) 《承政院日記》276冊(肅宗 6年/서기 1680년) 4월 18일(丁丑): “忠勳府啓曰, 自前逆賊田民, 每以賜給, 以爲接待本府, 祖宗朝流來古規, 載在本府所藏謄錄.”

291) 이한희(2007), <조선시대 기록물의 생산 및 처리과정과 보존>, 《서지학연구》 37, 한국서지학회, 306~310쪽.

292) 김태웅(2000), 앞의 논문, 143쪽.

293) 이형중(2018), 앞의 논문, 212쪽.

그러나 모든 등록물이 행정의 일선인 관청에서만 보존된 것은 아니었다. 문서나 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인 《경국대전》의 藏文書條를 보면, 대체로 기록을 보존한 곳은 隆文樓와 隆武樓, 議政府·弘文館·成均館·春秋館·諸道の 首邑 및 史庫 등이었음이 확인된다.²⁹⁴⁾ 이 외에도 架閣庫·版籍庫·戶籍庫 등이 문서를 보존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²⁹⁵⁾ 이들 공간 또한 등록물이 보존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조선에서는 등록물이 여러 건으로 편찬되면 이들을 이상의 各處에 두고 관리하였다. 조선 초기까지는 대체로 이를 架閣庫에 보존한 것으로 보인다.²⁹⁶⁾ 다만 세조 때 가각고를 혁파한 이후로는 의정부의 서고 등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²⁹⁷⁾ 이 외에도 용문루와 용무루에서 등록물을 보존한 정황 또한 확인된다.

南原君 梁誠之가 상소를 올려 말하길, “(중략) 하나, 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해보건대 《銃筒》(필자 주: 《銃筒謄錄》을 뜻함)은 兵家の 비밀스러운 책임입니다. (중략) 이제 춘추관에 한 건이 있고 文武樓에 21건이 있는데, 만일 간사한 사람이 훔쳐가서 이익을 삼는다면 백성들의 해를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²⁹⁸⁾

또한 아뢰길, “臣(필자 주: 尹漑)의 뜻으로는 비록 異代의 서책일지라도 오히려 거두어 모으는 것이 가한데 하물며 祖宗께서 창제하여 후세에 수범으로 한 것이겠습니까? 이 건책들은 이제 다 흩어져 없어졌으니, 청컨대 거두어 간인하시어 文武樓와 法司(필자 주: 刑曹·漢城府·義禁府)에 보관하시고, 만약 《大典》에 막히는 곳이 있거든 참고하는 것이 어떠하겠

294) 《經國大典》〈禮典〉, 藏文書條, “春秋館時政記[撰集承政院日記, 及各衙門緊關文書, 每歲季, 啓冊數.] 承文院文書, 每三年, 印藏本衙門, 議政府及史庫.”; “凡印書冊, 別藏于隆文隆武樓, 又於議政府, 弘文館, 成均館, 春秋館, 諸道首邑, 各藏一件.”

295) 남권희(1986), 〈架閣庫考〉, 《서지학연구》 1, 한국서지학회, 129쪽; 이한희(2007), 위의 논문, 302~314쪽.

296) 《太宗實錄》卷27(太宗 14年/서기 1414년) 4월 17일(庚申): “議政府啓目公事傳掌事, (중략) 一, 各年條例文書, 未謄錄事, 送禮曹, 已謄錄事, 藏架閣庫.”

297) 이한희(2007), 앞의 논문, 305쪽.

298) 《成宗實錄》卷138(成宗 13年/서기 1482년) 2월 13일(壬子): “南原君梁誠之上疏曰, (중략) 一, 臣竊觀銃筒, 兵家秘書也, (중략) 今春秋館有一件, 文武樓有二十一件, 萬一奸人偷竊以爲利, 則生民之害, 可勝言哉.”

습니까?”하니, 상께서 말씀하시길, “아뢰 뜻이 마땅하다.”고 하셨다.²⁹⁹⁾

여기서 文武樓라 지칭하는 것은 隆文樓와 隆武樓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일반 서적 외에도 등록물 또한 거두어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등록물 같은 경우는 實錄과 함께 아예 史庫에 봉안하여 관리하기도 하였다.

禮曹에서 아뢰어 말하길, “(중략) 大臣들의 뜻이 일치하지 않아 香山謄錄이 올라오기를 기다린 후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할 것으로 啓下하셨었습니다. 이제 香山謄錄 내에 親祭의 예가 있지 않으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여 말씀하시길, “알았다.”고 하셨다.³⁰⁰⁾

禮曹에서 아뢰어 말하기를, “(중략) 신 등이 이미 寧邊謄錄을 다시 상고하길 청하여 史官을 보내어 史庫를 여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吉日을 이달 25일로 啓下하셨는데 大禮를 앞당겨 청하면 반드시 미처 사실을 상고하여 오지 못할 것이니 극히 염려가 됩니다. 감히 아뢰입니다.”³⁰¹⁾

여기서 香山과 寧邊이 지칭하는 바는 당시 寧邊郡 妙香山에 둔 外史庫를 지칭한 것이다. 이후 이 묘향산 사고는 赤裳山 史庫로 이전되었다. 이 당시 묘향산 사고에 등록물을 일부 보관하였다는 것인데, 등록물을 보관한 史庫는 이 묘향산 사고만이 아니었다.

전교하여 말씀하길, “兵火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典古文書가 散失된 것

299) 《明宗實錄》卷24(明宗 13年/서기 1558년) 4월 22일(己亥): “又啓曰, (중략) 臣意雖異代之書, 猶可收聚, 況祖宗創制, 垂範後世者乎. 右件冊, 今皆散亡. 請收而印之, 藏於文武樓及法司, 如遇大典有礙處, 參考何如. 上曰, 啓意當矣.”

300) 《宣祖實錄》卷136(선조 34년/서기 1601년) 4월 15일(壬午): “禮曹啓曰, (중략) 而大臣之意不一, 待香山謄錄上來後, 更議處之事, 啓下矣. 今者香山謄錄內, 未有親祭之例, 何以爲之. 敢稟. 傳曰, 知.”

301) 《宣祖實錄》卷151(宣祖 35年/서기 1602년) 6월 21일(辛亥): “禮曹啓曰, (중략), 臣等已請更考寧邊謄錄, 至遣史官而開史庫. 吉日以今月二十五日啓下, 大禮進定, 必未及查考馳來, 極爲悶慮. 敢啓.”

이 거의 다이니 무릇 상고할 바가 있어도 취할 수가 없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모든 謄錄 각 건을 전부 써서 實錄을 봉안한 곳에 나누어 보관하라.”³⁰²⁾

光海君 시기에는 아예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등록물을 實錄과 마찬가지로 각 史庫에 봉안케 했다. 그러나 실제 생산된 모든 등록물이 史庫에 봉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전하는 實錄形止案 등을 살펴보면 《璿源普》와 列聖의 御製 및 實錄·儀軌 등이 보관되어 있고, 이 외 《高麗史》를 비롯한 朱熹의 서적 및 《三綱行實謄錄》과 같은 간행물이 함께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여러 형지안 및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더라도 조선에서 편찬한 등록물이 빠짐없이 함께 봉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³⁰³⁾ 대체로 열람보다는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등록물이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³⁰⁴⁾

이처럼 등록물은 각 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생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당상 이상의 고위직을 비롯한 낭청 직급의 실무직 및 書吏와 書寫 등의 서리직까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참고할 만한 문서를 모아 등록물을 편찬한 후에도 열람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이를 다시 초록한 謄錄抄가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들 등록물은 각사의 문서고에 수장되었으나 그 중요도에 따라 別置되었고, 심지어 일부 등록물은 史庫에 봉안되기까지 하였다.

조선이 등록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조선 기록관리제도는 등록물의 편찬과 보존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조선에서 보존의 대상이 되는 문서들은 1차적으로 선별의 과정을 거쳐 등록물로 재탄생 하였으며, 이들 등록물은 다시 實錄·儀軌·日記 등과 같은 또 다른 관찬기록의 편찬·보존 과

302) 《光海君日記》卷23(光海君 1年/서기 1609년)12월 21일(戊辰): “傳曰, 兵火之餘, 我國典故文書, 散失殆盡, 凡有所考無可取, 則自今以後, 凡謄錄各件, 俱書分藏于實錄奉安處.”

303) 史庫의 形止案에 수록된 서책에 관한 연구는 배현숙(1979), 〈五臺山史庫와 收藏書籍에 대하여〉, 《서지학연구》 1, 한국서지학회; 안미경(2017), 〈17세기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목록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71, 한국서지학회 등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304) 이형중(2018), 앞의 논문, 221쪽.

정과 연계되어 작동하였다.

三. 조선 기록관리체계 내 謄錄의 위상

지금까지 등록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謄錄이 조선에서 주요한 기록 관리 방안으로서 폭넓게 활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조선 기록관리체계 내의 또 다른 중요기록인 實錄·儀軌·日記는 등록과 상이한 기록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 등록은 이들 기록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그리고 등록과 이들 기록간에 일정한 위상 차이가 존재하였는지 등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실제 實錄·儀軌·日記는 그 위상과 목적이 제각각이지만 편찬과정을 살펴보면 모두 謄錄과 유사하게 원본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별도의 기록물로 완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분명 일반적인 등록물과는 다른 방향성을 지닌 기록이며, 그 명칭 또한 ‘謄錄’이 아닌 별개의 단어로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등록물과 實錄·儀軌·日記는 생산 과정에서부터 활용·보존에 이르는 방식에도 차이점이 나타난다. 때문에 조선의 전반적인 기록관리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중요 기록과 등록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實錄·儀軌·日記와 등록의 연관성을 각각의 구체적 實例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선에서 謄錄이라는 행위가 지닌 의미를 다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實錄과 謄錄

본 절에서는 먼저 實錄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2장에서 조선의 등록체계가 어떻게 정립되어 갔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이에 따르면 謄錄은 조선에서 공적인 문서의 활용과 보존을 보다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등록물은 대체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편찬되었는

데,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본을 마련하여 史庫 등의 주요 공간에 별도로 存置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등록물이 행정의 典故로서만 활용된 것은 아니었다. 다수의 등록물은 史料로서도 활용되었다. 즉 등록체계는 國史, 그중에서도 특히 實錄의 찬수를 위한 토대로서 운영되기도 한 것이다.

유교적 역사관에서 인간의 행위는 유교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그렇기에 인간의 행위는 史書라는 형태의 기록으로 남겨졌으며, 이 史는 현재와 미래를 사는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또한 최고 권력자인 국왕의 행위조차 누군가가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 그리고 그 기록이 영원히 남아 후대에 전해진다는 것은 현실 권력에 대한 구속력을 발휘하기에는 충분하였다. 성리학의 등장은 이러한 유교적 역사인식을 한 층 더 철학적으로 심화시키게 되었으며, 朱熹의 史에 대한 인식은 直筆과 史論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성리학적 관점에서 史는 사실에 근거해 기술되어야 하는 것이며,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편찬된 史는 현실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조선 또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史를 중시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當代史인 實錄을 중시하였다.

실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조선 건국기부터 존재하였다. 고려와 달리 조선은 前王의 昇遐 후 바로 실록을 찬수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공정성과 기밀성을 유지하여 實錄의 신뢰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사료 또한 엄격하게 검수·관리되었다. 太祖代 실록편찬의 주관기관이었던 春秋館에서 올린 上言을 살펴보자.

藝文春秋館이 세 가지 일을 上言하였다.

“하나, 매번 正殿에서 萬機를 재결하고 신료들을 접견하실 때는 빌건대 史臣에게 좌우로 入侍토록 명하시어 일의 크고 작음과 무관하게 모두 더 들어 듣게 하십시오.

하나, 充修撰이하 兼官은 빌건대 각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史草로 만들고 本館(藝文春秋館)으로 모두 보내도록 하십시오.

하나, 本館이 京外의 크고 작은 衙門에 직접 牒하도록 하시어 무릇 시행한 바가 政令에 관계되고 勸戒로 전할 만한 것은 명백하게 공문으로 보내도록 하고, 또한 都評議使司와 檢詳條例司에 명하시어 月의 마지막 날마다 條例를 모두 써서 本館으로 보내 憑考로서 기록하는 것을 영구한 恒式이 되도록 하십시오.”

상이 이를 모두 허락하였다.³⁰⁵⁾

이는 당시 실록의 편찬을 주관하는 예문춘추관에서 실록 편찬을 위해 아뢴 내용으로, 크게 ①史官의 入侍 ②兼史官들의 史草 작성과 관리 ③ 중요 기록의 수집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즉 실록을 편찬하는 기관과 핵심인력들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중요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함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專任이나 兼任을 막론하고 史官은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史草로 남겨야 하며, 각 아문은 政事에 관한 중요 내용을 기록물의 형태로 춘추관에 보내야 했다. 이 모든 과정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도록 하였다. 史草는 사관이 納入하면서 본인의 署名을 기재해야 했고,各司의 관원은 공문서의 시행을 署名을 통해 실시해야 했다. 史草의 納入時 史官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睿宗 재위 시 直筆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사초에 사관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난 것이나 仁宗代에도 사초에 제출자의 성명을 쓰지 말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啓가 올라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³⁰⁶⁾ 예종 당시에는 기존과 같이 사관의 성명을 사초에 적어 납입케

305) 《太祖實錄》卷2(太祖 1年/서기 1392년) 9월 14일(壬辰): “藝文春秋館上言三事, 一, 每於正殿, 裁決萬機, 接見臣僚之際, 乞令史臣入侍左右, 事無大小, 咸使與聞. 一, 兼官充修撰以下, 乞令各以見聞, 錄爲史草, 悉送本館. 一, 許令, 本館直牒京外大小衙門, 凡所施行關政令垂勸戒者, 明白移文, 又令都評議使司, 檢詳條例司, 每於月季, 悉書條例, 送于本館, 以憑記錄, 永爲恒式. 上皆許之.”

306) 《睿宗實錄》卷5(睿宗 1年/서기 1469년) 4월 11일(甲子): “獻納張繼弛, 將本院議啓曰, 史貴直筆, 今春秋館收史草, 令各書姓名於冊, 史草非但記國家事, 士大夫善惡得失皆記之.”; 《仁宗實錄》卷1(仁宗 1年/서기 1545년) 윤1월 17일(庚辰): “諫院啓柳之蕃事, 又啓曰, (중략) 今當設局修史之時, 雖不得不使大臣監修, 請於家藏史草, 勿書其名, 使秉筆者, 得伸其志. (후략).”

했으나 인종 때의 논의에서는 다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당분간 사초에 사관의 성명을 적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明宗 즉위 이후 다시 사초에 사관의 성명을 적는 방식으로 회귀하게 된다.³⁰⁷⁾

이러한 논의는 사초 내용에 대한 사관의 책임과 신변보장의 문제 때문이다. 실제 閔粹의 史獄처럼 사관들이 권력자를 두려워해 자신이 적은 사초의 내용을 改削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³⁰⁸⁾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관의 직필을 위해서 익명으로 사초를 제출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관이 책임있는 직필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이름자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다. 양자 간의 논쟁은 정치적 이유에서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史에 대한 直筆을 추구하기 위해 촉발되기도 한 것이었다. 이는 달리 생각하면 기록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였다.

물론 이 기록의 책임성은 비단 史草에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 초기 시행되는 공문서 중 보존이 필요한 문서는 立案과 같은 증빙을 함께 비치하도록 한 것이나³⁰⁹⁾, 法典에서 立案을 통한 공문서의 證憑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한 것³¹⁰⁾ 그리고 중요 문서를 謄錄物로 만들어 이후의 憑考를 가능토록 한 조치 등은 모두 이러한 기록의 책임성이라는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히 實錄이라는 국가의 史를 편찬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록의 책임성이 더욱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기록의 책임성을 고수하고자 하는 사관의 直書直筆과 史料의 충실함,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실록찬수체계의

307) 《明宗實錄》卷9 (明宗 4年/서기 1549년) 1월 13일(甲申): “豐城府院君 李芑, 左議政 黃憲, 右議政沈連源, 同議啓曰, 家史不書名, 非古, 祇教人偷也. 議者或謂, 書名則無直筆之人, 此尤不然. 古之操史筆者, 雖斧鉞在前, 尙且不避而書之. 若慷慨之士, 則君相過惡, 猶且面折廷爭, 獨於家史, 安有畏忌. 今已納者, 不必追書, 其未納者, 依古書名, 永爲恒式. 答曰, 如啓.”

308) 《睿宗實錄》卷5(睿宗 1年/서기 1469년) 4월 27일(庚辰): “命領議政韓明澮, 寧城君崔恒, 都承旨權域等, 鞫康致誠, 致誠對曰, 臣在春秋館, 同僚崔命孫謂臣曰, 閔粹欲見史草, 而求見汝矣. 吾覓粹史草出外, 謂粹曰, 何爲而欲見乎, 粹云, 欲改書梁誠之大司憲時事. 臣卽授粹史草, 久之粹持史草而來, 臣受之, 授書吏李貴林, 令印改書處.”

309) 《太宗實錄》卷16(太宗 8年/서기 1408년) 8월 7일(壬午): “議政府乃使, 檢詳李陽明, 齎關字立案, 啓曰, 看詳本府奉王旨行移關內, 京外罪囚四字, 摠指輕重之罪而言.”

310)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官府文字, 並置立案, 以憑後考.”

엄정함을 통해 實錄은 그 권위와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조선은 초기부터 실록찬수체계의 정립을 위해 實錄纂修를 전담하는 임시기구로서 實錄廳을 두기도 하였다. 시정기 사초의 수집·관리는 춘추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국왕 승하 후 본격적인 실록의 편찬은 實錄廳이라는 별개의 기구를 두어 주관토록 한 것이었다. 이 실록청은 《端宗實錄》에서 처음 그 명칭이 나타난다.³¹¹⁾

실록청 체제 이전의 실록편찬은 領春秋館事의 직함을 지닌 재상이 주도하여 편찬하는 방식이었고, 그 장소 또한 실록편찬을 주관하는 재상의 거처와 가까운 곳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운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³¹²⁾ 다만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世宗實錄》의 찬수부터는 후대 實錄廳의 운영처럼 各房이 재위기간을 담당하여 分纂한 것으로 추정된다.³¹³⁾ 실록청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端宗代와 가까운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시기부터 실록청의 설치와 함께 各房 纂修體制가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³¹⁴⁾

이러한 실록찬수체계는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었는데, 이 실록청 운영에 대한 一端은 實錄廳儀軌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현전하는 實錄廳儀軌는 규장각이 소장한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와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등 총 12편이 있으며, 《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와 《端宗大王實錄附錄撰輯廳儀軌》를 포함하면 총 14편이 된다. 이들 의례를 통해 일반적인 실록청찬수의 과정을 살펴보면 실록청은 대체로 전체를 관장하는 都廳과 재위기간별 기사를 찬집하기 위한 3房으로 구성된다. 재위기

311) 《端宗實錄》卷9(端宗 1年/서기 1453년) 11월 4일(丙辰): “吏曹參議辛碩祖啓曰, 今日臣與領議政【世祖諱】, 左議政鄭麟趾坐春秋館實錄廳.”

312) 《太宗實錄》卷18(太宗 9年/서기 1409년) 8월 28일(丁卯): “命領春秋館事河崙, 修太祖實錄, (중략) 傳旨柳觀等曰, 太祖實錄, 聽晉山府院君指畫編修以進.”; 《世宗實錄》卷23(世宗 6年/서기 1424년) 3월 1일(丁丑): “春秋館會于德興寺, 始修恭靖大王恭定大王兩朝實錄.”; 《世宗實錄》卷48(世宗 12年/서기 1430년) 4월 26일(丙申): “命左議政黃喜, 右議政孟思誠, 監修太宗實錄. 前此, 卞季良專摠修史, 素多疾病, 未能早暮, 其居第在興德寺傍, 故移史庫於興德寺. 至是, 季良卒, 故命喜等監修, 遂移史局于議政府. 季良之撰實錄也.”

313) 《文宗實錄》卷12(文宗 2年/서기 1452년) 2월 22일(丙戌): “始撰世宗實錄, 許誦, 金銚, 朴仲林, 李季甸, 鄭昌孫, 碩祖等, 分年撰修.”

314) 오항녕(2009), 앞의 책, 389쪽; 한우근(1988), 〈朝鮮前期 史官과 實錄編纂에 관한 研究〉, 《진단학보》 66, 진단학회, 114쪽.

간이 길거나 찬집한 기사가 많을 경우에는 최대 6房까지 늘려 운영하였다. 일단 조직 구성이 정해지면 실록찬수를 위한 凡例를 두고 이에 따라 刪節·纂修·校正·謄錄·粉板謄錄·印刷 등이 이루어졌다.³¹⁵⁾

여기서 확인되는 사실은 실록청 설치와 함께 실록찬수를 위한 범례와 절차가 규정되었고, 이 범례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록의 찬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실록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록의 史料로 활용할 수 있는 기록의 수집·분류·정리를 차례대로 거쳐야 했다. 각 房에서는 분류·정리되어 배분된 기록을 평가하여 선별하고 선별된 기록은 謄書하여 初草로 만든다. 이후 初草를 都廳 郎廳이 校正하고 堂上이 검토하여 재정리·재교정을 거쳐 中草를 만들며, 이후 최종 정리된 기록을 인쇄하여 춘추관을 비롯한 史庫에 奉審한 것이 실록이 된다.³¹⁶⁾

이는 實錄의 편찬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原文書나 기록물 등을 인용하여 베껴 적는 謄錄의 방식과 유사함을 명백히 드러낸다. 수집되는 1차 또는 2차 사료들의 진위를 검증하고, 실록에 수록될만한 기록인지를 평가한 후에야 이를 謄書하는 방식은 실록을 찬수하기 위해 수집되는 기록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原文書에 대한 검증은 내용의 진위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그래야만 기록의 신뢰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世宗實錄》 편찬 당시 사관 이호문이 黃喜에 대해 쓴 기록의 처리 여부를 두고 일어난 논쟁을 보면 이러한 고민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세종실록》을 편찬하였다. 지춘추관사 鄭麟趾가 史臣 李好問이 黃喜의 일을 기록한 바를 보고 이르길,
“이것은 내가 듣지 못한 바인데, 정상이 지나치고 근거도 없는 것 같아 마땅히 여러 의논을 하여 정해야 한다.”하고, 영관사 皇甫仁, 감관사 金宗瑞, 지관사 許誦, 동지관사 金銚·李季甸·鄭昌孫, 편수관 辛碩祖·崔恒과 더불어 장차 호문이 쓴 바로 조목에 따라 의논하고자 하여 말하길, (중략)

315) 해당 내용은 정구복(1992), 〈조선초기의 춘추관과 실록편찬〉, 《택와허선도선생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서울:일조각, [택와허선도선생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編]; 신병주(2009), 앞의 논문; 오항녕(2009), 앞의 책 등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316) 한우근(1988), 앞의 논문, 113~114쪽.

三問이 또 말하기를, “호문의 사초를 자세히 살피니 오랫동안 烟塵에 묻혀 종이 색이 모두 누런데 오직 이 한 종이만 깨끗하게 희어 비슷하지 않다. 그것은 사사로운 뜻에서 나와 追書한 것이 명백하다. 삭제한들 무슨 해가 있겠는가?”³¹⁷⁾

사관 李好問이 黃喜의 출신과 추문 등에 대해 기록한 사초에 대해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대다수는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초의 폐기를 두고는 논쟁이 일어났다. 성삼문은 해당 사초의 보존 상태가 다른 사초와 다를 것을 들어, 이것이 훗날에 추가로 사사로이 쓴 것임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폐기를 주장하였다. 즉, 사초의 내용 자체에 대한 진위 여부도 중요했지만 해당 사초가 과연 정당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생산·보존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처음부터 엄격한 실록찬수체계를 운용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행위가 기록으로 남겨질 뿐만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이 평가된다는 것은 통치자의 입장에서 썩 유쾌한 일이 아닐 것이다. 실제 조선 초기부터 기록, 특히 국왕과 관련된 기록을 두고 국왕과 신료, 고위관료와 하위관료 간에 미묘한 긴장이 존재하였다. 국왕들이 실록이나 사관의 史草를 열람하고자 하면 신하들이 이를 만류하기도 하였으며³¹⁸⁾, 전임사관들의 입시 범위를 두고 논쟁이 이는가 하면³¹⁹⁾, 고위관료와 하위관료가 실록의 찬수 과정이나 사초의 收納 문제 등으로 충돌하기도 하였

317) 《端宗實錄》卷2(端宗 卽位年/서기 1452년) 7월 4일(乙未): “時撰世宗實錄, 知春秋館事鄭麟趾, 見史臣李好問所記黃喜之事, 以爲, 此非吾所聞, 似過情不根, 當僉議乃定. 與領館事皇甫仁, 監館事金宗瑞, 知館事許詡, 同知館事金銚李季甸鄭昌孫, 編修官辛碩祖崔恒, 將好問所書, 逐條議之曰, (중략) 三問又曰, 審觀好問史草, 久埋烟塵, 紙色皆黃, 而惟此一紙, 潔白不類, 則其出於私意而追書也, 明矣, 削之何傷.”

318) 《太祖實錄》卷7(太祖 4年/서기 1395년) 6월 9일(辛未); 《太祖實錄》卷14(太祖 7年/서기 1398년) 윤5월 1일(丙子); 《太祖實錄》卷14(太祖 7年/서기 1398년) 윤5월 1일(丙子); 《太祖實錄》卷14(太祖 7年/서기 1398년) 6월 12일(丙辰); 《世宗實錄》卷80(世宗 20年/서기 1438년) 3월 2일(丙戌) 등.

319) 《太祖實錄》卷7(太祖 4年/서기 1395년) 6월 9일(辛未); 《定宗實錄》卷1(定宗 1年/서기 1399년) 1월 7일(戊寅); 《太宗實錄》卷1(太宗 1年/서기 1401년) 5월 8일(丙申); 《太宗實錄》卷20(太宗 10年/서기 1410년) 10월 29일(壬戌); 《太宗實錄》卷24(太宗 12年/서기 1412년) 11월 20일(辛丑); 《世宗實錄》卷78(世宗 19年/서기 1437년) 9월 8일(乙未) 등.

다.³²⁰⁾

이 같은 갈등 속에서 결국 국왕이 실록과 사초를 열람한 사례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세종은 바로 前代인 太宗의 실록을 열람할 수 없지만, 太祖나 定宗의 실록은 열람할 수 있다고 하며 이를 열람하였다.³²¹⁾ 睿宗은 계유정난 당시의 상황을 적은 史草를 열람하기도 하였다.³²²⁾ 燕山君은 實錄을 보지 못하게 하는 弘文館·藝文館의 관료들을 국문하도록 명했을 뿐만 아니라, 金駟孫의 史草 등을 빌미로 戊午士禍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³²³⁾ 이는 이해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시기에 편찬되는 當代史가 자칫하면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음을 뜻한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成宗代 前後부터 실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심화 및 이른바 士林으로 대표되는 道學을 중시하는 세력이 정계에 진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후기로 갈수록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中宗代 趙光祖를 위시한 신진사림들은 金宗直으로 대표되는 成宗代의 사림세력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국왕의 수양과 성리학적 명분의 확립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實錄이라는 기록의 위상은 이전보다도 더욱 강화되기 시작한다.

士林으로 대표되는 세력들에게 있어 군주는 사대부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수양에 힘써야 하는 사람이며, 이를 통해 君師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만 하는 존재였다.³²⁴⁾ 군주는 비록 존귀하지만 그 자체로 존귀한 것이 아니라 君師로서 지극한 표준을 세울 수 있어야만 존귀한 것이다.

320) 《太宗實錄》卷18(太宗 9年/서기 1409년) 8월 28일(丁卯); 《太宗實錄》卷18(太宗 9年/서기 1409년) 9월 1일(庚午); 《太宗實錄》卷19(太宗 10年/서기 1410년) 1월 11일(戊寅); 《世宗實錄》卷26(世宗 6年/서기 1424년) 12월 1일(壬寅); 《端宗實錄》卷6(端宗 1年/서기 1453년) 5월 7일(癸亥) 등.

321) 《世宗實錄》卷82(世宗 20年/서기 1438년) 9월 25일(丙午): “(전략)…至是日視事畢, 諸臣皆退, 獨留墩教曰, (중략) 太宗實錄, 予不可見矣. 其令春秋館入太祖恭靖王實錄于內. 上見實錄, 還出付墩教曰, (후략)”

322) 《睿宗實錄》卷5(睿宗 1年/서기 1469년) 4월 18일(辛未): “傳于春秋館曰, 魯山時日記, 及癸酉年靖亂時史草入內. 予欲觀凡例.”

323) 《燕山君日記》卷30(燕山 4年/서기 1498년) 7월 13일(丁未): “傳曰, 弘文館藝文館謂, 不宜見實錄, 若平時則此言可矣. 今欲考大事, 而强爲不可, 是必有情, 其下義禁府鞠之(후략)”

324) 김정신(2008), 〈朝鮮前期 勳舊·士林의 政治思想 比較〉,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12쪽.

때문에 이들은 경연의 적극 시행과 국왕의 修己治人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왕의 행위 또한 史筆를 통해 그 옳고 그름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여겼으며, 이를 위해 국왕이 실록을 열람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여겼다.³²⁵⁾

이러한 인식은 사림세력에 속한 史官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켰다. 사림세력에 속한 사관들은 天理에 따라 현재의 옳고 그름을 써 후대에 남기는 것, 즉 當代의 사실을 남기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야말로 學者의 자세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국왕과 정치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수단이라 믿었다. 그리고 이는 실록의 纂修體系에도 영향을 끼쳐, 실록이라는 기록의 위상을 국왕도 침범하지 못할 것으로까지 끌어올리게 된 것이다.

이는 실록이라는 당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리학의 심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成宗實錄》이후부터 사론이 증가하는 현상 또한 당시 사림 세력이 지닌 역사적 인식, 즉 옳고 그름을 명백히 드러내어 후대를 교감코자 한다는 역사적 책임의식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을 기재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인 史論을 병기하는 실록의 방식은 결국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록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도 다룬 바 있지만 성리학적 관료제하에서 공적 기록의 설명책임이 중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적 행위의 무결성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책임소재를 입증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공적 행위를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후대의 鑑戒로 삼을 수 있는 올바른 근거로 삼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즉 조선에서 공공기록은 역사적 사실을 기재하기 위한 史料이자 동시에 史論의 근거자료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조선 조정의 公事는 더더욱 기록이라는 물리적 형태로 남아야 했으며, 기록의 생산과 보존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다. 업무를 위해 생산된 공문서를 비롯하여各司에서 편찬

325) 차장섭(1992), 앞의 논문, 34~35쪽.

하는 謄錄物, 사관에 의해 생산되는 時政記, 국왕 사후 편찬되는 실록 등 국가의 공식 행위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으로서 생산·활용·보존되었다. 그래야만 올바른 公事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행위의 주체자의 옳고 그름이 萬歲토록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기록할 수는 없었다. 기록된 것이 역사에 남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했으며, 자료로 활용된 기록 또한 신뢰할 수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조선의 실록찬수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춘추관이 아뢰기를, “법전 내에 춘추관 時政記는 《승정원일기》 및 각 아문의 緊關文書를 찬집하여 매해의 마지막에 그 책 수를 아뢰도록 되어 있는데, 예문관 참하관 봉교 이하 8명을 두어 史의 편수를 전담하여 관장토록 합니다. 下番 檢閱은 항상 승정원에 나아가 《政院日記》를 베껴 내고, 上番 이상은 항상 춘추관에 나아가 각 아문의 艱難文書를 가져다 상고하여 시정기를 찬수합니다. 한번이 써낸 바에 만약 疏漏함이 있으면, 상변이 곧 糾檢하고, 또 소루함이 있으면 次次로 규검합니다. 매 포핍 때마다, 편찬한 시정기를 가져다
춘추관 당상들이 모두 모여 조사해 살펴 이로써 殿最의 증빙으로 삼습니다.”³²⁶⁾

이는 춘추관에서 시정기의 생산 절차가 단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藝文館 소속으로서 春秋館 記事官을 겸하는 전임사관 8인이 각사의 緊關文書나 《승정원일기》를 그저 베껴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한 시정기마다 1차 또는 2차·3차의 검수과정을 거쳤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춘추관 전임사관의 殿最는 이 시정기 찬수의 충실성에 따라 매겨졌음도 확인된다. 때문에 사관들은 본인의 고과를 위해서라도 시정기를 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록의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해야만

326) 《宣祖實錄》卷201(宣祖 39年/서기 1606년) 7월 19일(丙戌): “春秋館啓曰. 法典內, 春秋館時政記, 撰集承政院日記, 及各衙門緊關文書, 每歲季啓冊數, 藝文館參下官奉教以下, 置八員, 專掌修史. 下番檢閱, 常仕政院, 謄出政院日記, 上番以上, 常仕春秋館, 取考各衙門緊關文書, 纂修時政記. 下番所書, 如有疎漏, 則上番糾檢, 而又有疎漏, 則次次糾檢. 每當褒貶之時, 將所撰時政記, 春秋館堂上齊會查看, 以憑殿最.”

했다.

이러한 조치는 실록의 편찬과 관리 절차가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록에 수록되는 原기록 자체가 신뢰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실록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실록에 수록될 사료가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어야만 했기에, 기록의 생산과 관리 과정이 통제될 필요가 있었다. 앞 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조선이 時政記를 비롯한 기록의 생산·관리과정까지 법령으로서 규정한 이유는 단순한 업무효율의 제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실록에 수록될 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시정기와 사초 외 국가 政事와 관계된 각 衙門의 등록물 또한 1차 자료로서 실록찬수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실록이 국왕 개인의 기록이 아닌 국가의 史로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실록이 國王을 중심으로 서술되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國事の 주체가 국왕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실제 서술의 초점은 國事 그 자체인 것이다. 즉 실록에 인용되는 등록물들의 핵심은 국왕의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친 政事に 관한 것이며, 그 평가 또한 국왕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 政事に 관한 것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국왕을 보좌하는 신료들과 각 衙門의 행위 또한 역사적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국가에서 생산한 기록이 언제든지 실록편찬의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앞에서 살펴본 《燕山君日記》의 기사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대저 실록 수찬의 例는 승정원일기·시정기·경연일기·여러 관사의 謄錄과 무릇 가히 상고할 수 있는 문서를 모두 모아 해를 나누고 房을 나눠 각각 살펴 바로잡아 편집토록 하며, 여러 신하의 史草는 연월일에 따라 全文을 바르게 써서 그 사이에 붙여 넣으니 짧은 말과 글귀(片言隻字)라도 加減할 수 없습니다. 편수한 것을 都廳에 올리면 都廳은 각 房의 堂上을 소집하여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더불어 의논하는데, 비록 일이 사소한 것이라도 틀림없는 사실이면 두고 아니면 곧 삭제합니다. 하물며 國家大事이겠습니까?³²⁷⁾

이를 통해 《승정원일기》·《경연일기》·各司의 謄錄·기타 可考文書 등이 실록찬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各司의 謄錄은 말 그대로 각衙門에서 관리하는 등 록물이며, 기타 可考文書 또한衙門 간 相通했던 공문서를 뜻한다. 대체로 국왕의 동정에 관한 기사보다는 공식 업무에 관한 기록들이다. 《승정원일기》와 《경연일기》 또한 국왕의 거동만을 기록했다기보다는 국왕이 신료들과 더불어 政事를 수행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기에, 국왕의 동정 외에도 일반 공문서 등이 謄錄되어 있는 자료들이다.

이는 후대에도 동일하였는데 실록 편찬의 핵심이 되는 時政記는 《경국대전》에 아예 그 생산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고, 《注書日記》 등은 起居注로써 그리고 《承政院日記》는 日曆으로써 시정기와 상호 보완하여 인용되었다.³²⁸⁾ 여기서 日曆은 冊曆이라기보다는 매일의 기록을 뜻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正祖 대의 규장각 일지기록인 《內閣日曆》이다. 이 외에도 日曆이라는 명칭이 매일의 국정 기록을 뜻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기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승정원일기》를 宋의 日曆과 같다고 한 기사 및 국왕의 講學에 관한 日錄을 만들 것을 상소한 것에 대한 批答에서 이를 日曆이라고 칭한 기사 등이 있다.³²⁹⁾ 起居注는 대체로 承政院의 注書가 작성하는 기록을 뜻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高麗의 예에 따라 起居注라는 직책을 따로 두었으나 후대로 가면서 起居注의 역

327) 《燕山君日記》卷30(燕山君 4年/서기 1498년) 7월 21일(乙卯) 1번째 기사: “大抵實錄修撰之例, 承政院日記, 時政記, 經筵日記, 諸司謄錄, 凡可考文書, 悉皆裒集, 分年分房, 使各斤正編輯, 諸臣史草, 隨年月日, 直書全文, 附入其間, 片言隻字, 不得有所增減, 編成上之都廳, 都廳招集各房堂上, 共議去取, 雖事之小者, 的實則存之, 否則削之, 況國家大事乎.”

328) 《英祖實錄》卷82(英祖 30年/서기 1754년) 7월 1일(戊寅): “大司憲南泰齊上書, 略曰, (중략) 嗚呼, 金櫃石室之藏, 尙請改修, 況銀臺起居注乎, 況非起居注, 而只是凶逆文字之載錄於日記者, 則尤不容不燒毀也.”; 《正祖實錄》卷16(正祖 7年/서기 1783년) 7월 1일(庚寅): “上謂承旨曰, 政院日記, 卽宋朝日曆之體. 其當秘而不當洩, 無異史草之嚴.”

329) 《正祖實錄》卷16(正祖 7年/서기 1783년) 7월 1일(庚寅): “上謂承旨曰, 政院日記, 卽宋朝日曆之體. 其當秘而不當洩, 無異史草之嚴, 則近年以來, 一任吏胥之手, 全無典守之實, 大失記注之責.”; 《純祖實錄》卷5(純祖 3年/서기 1803년) 7월 16일(戊申): “校理姜浚欽疏, (중략) 且言, 講學一事, 係是萬化源頭, 請作日錄, 以稽勤否. 批曰, 所陳諸條, 言甚切至, 殊庸嘉尙. 日曆修進事, 自內亦有所載錄, 足以自考講學之勤慢矣.”

할은 承政院의 注書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³³⁰⁾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등록물을 실록찬수과정에서 자료로써 활용되었다. 여러 《實錄廳纂修儀軌》의 내용을 통해 謄錄物이 후대의 실록찬수과정에서도 동원되었는데 실록의 찬수를 위해各司에서 보낸 各樣 文書 및 謄錄·朝報·推案을 돌려보낸다는 甘結의 내용이나, 實錄의 纂修 및 校正 과정에서 謄錄物을 임시로 취합해 待令하라는 甘結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³³¹⁾

이렇게 수합된 史料는 정리되어 記事로서 작성되며 이 기사에 사관의 사론을 함하여 실록으로 완성된다. 이처럼 실록에 수록되는 기록은 기본적으로 시정기·사초와 같은 사관의 기록 외에도 각 官司에서 생산·활용한 문서와 이를 통해 찬수한 등록물까지 모두 망라한 것이었다.

그런데 앞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에서 實錄이 지닌 의미는 단순히 공공기록을 찬집한 것이 아니었다. 實錄은 국가 최고의 위상을 지닌 기록으로서 후대에까지 전해질 기록이며, 행위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드러내야 하는 史書였다. 그렇기에 실록은 엄정한 찬수체계를 거쳐야 했으며, 史料에 대한 검증 또한 중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따라 실록찬수에서 史料로서의 기록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생산·선별·정리·평가될 필요가 있었으며, 이는 실록찬수체계의 定立과 함께 더욱 강화되었다.

실록찬수체계의 정립과 함께 실록찬수를 위해 수집되는 기록의 범위 또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各司에서 보존한 중요문서 외에도 여러 등록물이 실록찬수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수집·활용되었다. 이는 평시의 행

330) 《太祖實錄》卷1(太祖 1年/서기 1392년) 7월 28일(丁未): “定文武百官之制, (중략) 門下府, 宰臣掌百揆庶務, (중략) 起居注一, 左右補闕各一, 已上正五品.”; 《顯宗改修實錄》卷10(顯宗 4年/서기 1663년) 11월 16일(庚辰): “大司諫金始振等啓曰, 今之注書, 卽古之起居注也.”

331)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甘結秩〉, 辛丑二月十六日: “本廳修史之役既已完畢, 當初各司所送各樣文書及謄錄朝報推案還下, 次各其司別定色史一一受去事.”; 《憲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甘結秩〉, 辛亥三月二十五日: “今此實錄校正時, 備邊司年分災結總錄及謄錄, 兩司啓辭笏記, 自甲午十一月至己酉六月, 各其司掌吏權聚待令事.”; 《憲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甘結秩〉, 庚戌十一月十六日: “爲知悉舉行事, 今此實錄纂修時, 政院內閣日記, 日省錄外, 備邊司狀啓, 禁府推案, 承文院事大文書詔勅, (중략) 禮曹各項儀註憲章, 可考文書, 御史書啓, 諸般文書及謄錄, 自甲午十一月至己酉六月, 盡數權聚待令.”

정문서나 등록물이 언제든 實錄에 수록될 수 있는 史料로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때문에各司에서는 업무의 前例를 든다는 측면 외에도 공적 행위의 증빙이자 동시에 국가 행위의 흔적인 史料로서 등록물을 생산·보존하게 되었다.

이 실록은 당대의 사실을 후대에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자 동시에 국왕과 국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평가한 當代史였기에, 그 특성상 열람과 활용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明의 사례와 달리 조선에서 實錄은 그 비밀을 유지해야만 하는 기록이었다. 물론 참고할만한 다른 기록이 없을 경우 부득이하게 史官을 통해 實錄의 내용을 考出토록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이러한 행위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반드시 史官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抄出하여 활용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原文書를 그 효용이 끝날 때까지 관리하기도 곤란하였다. 原文書를 장기적으로 보존하여 활용하는 것보다는 謄錄하여 별도의 책자로 관리하는 것이 업무활용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나 더욱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장기적·영구적으로 남길 만한 典故로서 상시로 활용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보존기록인 등록물을 생산하여 수시로 활용하게 되었다.

內醫院에서 아뢰어 말하길, “중전의 產室을 排設하는 일입니다. 지금 史官 金大德의 장계를 보니 매우 소루합니다. 평시의 節目은 該司의 謄錄에 있기 때문에 史書에 자세히 신지 않은 것이니 사세가 그러한 것입니다.”³³²⁾

위 기사는 조선에서 謄錄物과 實錄의 대표적 차이를 보여준다. 實錄은 그 纂修凡例에 따라 수록할 내용의 범위와 정도를 다르게 두고 있다. 모든 기록을 國史인 實錄에 수록할 수는 없기에 그 輕重과 詳略에 따라 기록을 분류 및 요약하여 찬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등록물은 기관 또는 사

332) 『宣祖實錄』 卷160(宣祖 36年/서기 1603년) 3월 22일(戊寅): “內醫院啓曰, 中殿產室排設事, 今見史官金大德狀啓, 則殊爲疎漏. 平時節目, 自有該司謄錄, 其不詳載於史, 勢也.”

안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는 것이기에 보다 많은 기록을 보다 상세하게 담아낼 수 있었다. 때문에 위의 내용처럼 謄錄物에만 産室廳 설치와 관련된 상세한 節目이 기재되었으며, 實錄과 같은 史書에는 해당 부분이 제외되거나 소략하게만 정리되었던 것이다.

實錄은 국가 주요 기록을 찬집한 기록이지만, 보존이 철저한 대신 열람은 상당히 제한되었다. 原文書는 보존·정리하여 활용토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보존 과정에서 散逸·漏落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때문에 등록물은 原文書와 實錄의 중간단계로서 기록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형태로서 정립된 것이다.

앞 장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선에서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公事의 명명백백함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며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기록 자체는 행정업무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증빙으로 내세우기 위함이다. 때문에 조선의 등록체계는 행정상 증빙의 필요와 함께 史料로서의 기능을 함께 따져 운영된 것이다. 생산 및 접수된 공문서는 《경국대전》의 규정을 따라 각 官司에서 分類·作綜하고, 여기에 懸籤하여 열람의 용이성을 보장하였으며, 이렇게 정리된 문서들 중 오랜 기간의 보존이 필요한 기록들은 등록을 통해 등록물로 편찬되었다. 대체적으로 京外各司의 日歷 및 緊關文書가 謄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 謄錄이 기록관리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조선 등록체계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행정의 결과로 기록이 남고, 기록의 결과로 역사가 남는다.’는 것이다.

춘추관에서 교지를 받들어 記事 조목을 넓히는 것에 대한 의론을 헤아려 아뢰길,

“하나, 삼가 《元六典》의 한 조목을 살피니 ‘이제 京外의 크고 작은 아문이 무릇 시행한 일은 명백하게 드러내 옮겨 써 本館에 보내도록 하고, 이로써 記事의 증빙으로 하는 것을 영구히 恒式으로 삼는다.’ 하였습니다. (중략) 하나, 예문·춘추 두 館은 본디 하나였고, 또한 예문直提學과 直館 2員은 특별한 업무가 없으니, 마땅히 청렴하고 곧으면서 文學이 있는 자

를 택해, 법식에 따라 사관을 겸대하도록 하고 매일 本館에 자리하여 모든 대소 아문이 보고하는 문서를 항상 점검을 가해 연월 순으로 편찬하여 이에 따라 곧 撰錄케 하고, (후략)”³³³⁾

위의 기사처럼 조선에서 경외 각사의 文書는 단순히 행정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된 것이 아니었다. 時政記의 편찬을 위해 京外의 크고 작은 衙門은 모두 춘추관에 시행한 일을 문서로 제출해야 했으며, 국왕과 중앙기관에 보고하는 문서 또한 그 경중에 따라 등록되었다는 사실은 행정문서가 일회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미 행정적 처분이 끝난 문서도 그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로 등록되어 관리된 것이다. 조선에서 문서의 수명-실제로는 문서 내용의 수명-은 행정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실록과 등록물이라는 보존기록물의 편찬과 관계된 것이었다.

현대 기록관리 방법론에서는 영구보존기록물로 선별된 原文書는 그 상태 그대로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실록은 엄밀히 말해, 현대 기록관리의 관점에서는 영구보존기록물로 볼 수 없다. 또한 실록은 原文書의 내용도 그대로 수록한 것이 아니라 편찬 과정에서 요약·편집이 이루어지며, 史論처럼 직접적으로 撰者가 새로운 기록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현대적 의미의 영구관리기록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原文書 내용의 영구보존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실록편찬 또는 등록물의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들 기록들이 일종의 영구보존기록으로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미 오항녕(2001)과 김현영(2008)의 논문에서 조선의 實錄을 일종의 영구보존기록물(archives)로 분석한 바 있다.³³⁴⁾ 만약 實錄을 조선의 영구보존기록물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實錄에 수록되는 기록은 조선의 史

333) 《世宗實錄》卷66(世宗 16年/서기 1434년) 11월 5일(戊寅): “春秋館承教旨, 擬議廣記事之條以啓, 一, 謹按元六典一款, 今京外大小衙門, 凡所施行之事, 可爲勸戒者, 明白開寫, 送于本館, 以憑記事, 永爲恒式, (중략) 一, 藝文春秋二館, 本爲一體, 且藝文直提學直館二員, 別無職事, 宜擇清直有文學者, 依式兼帶史官, 日坐本館, 凡大小衙門供報文書, 常加點檢, 編次年月, 隨即撰錄, (후략)”

334) 오항녕(2001), 앞의 논문, 92~93쪽; 김현영(2008), 앞의 논문, 55쪽.

的 영역에서 영구히 보존해야 할 기록으로 선별된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등록물은 행정의 영역에서 영구히 보존해야 할 기록으로 선별된 것이자 동시에 실록을 찬수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實錄에 수록될 수 있는 기록의 유형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凡例라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었다. 實錄 纂修凡例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실록 찬수범례는 비록 각 국왕의 實錄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시정기를 비롯하여 《注書日記》, 內外兼春秋가 기록한 것, 備邊司의 狀啓軸, 禁府의 推案과 刑曹의 相考가 가능한 緊要文書, 《事變推鞠注書日記》 등의 全文 또는 일부를 實錄에 수록해야 할 기록으로서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³³⁵⁾

이들 기록은 실록의 찬수범례에 포함된 시점부터 이미 1차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기록물로 분류되는 것이며, 실록청에서 일종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록이라는 형태의 국가 최고 위상의 영구보존기록물이자 當代史로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조선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공공기록은 최종적으로 실록이라는 국가 공인 當代史에 수록되기 위한 평가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이 중 일부는 原文書의 형태로써 凡例에 포함되어 직접적으로 영구보존의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일부는 《승정원일기》나 기타 등록물에 수록된 2차 기록의 상태로 평가되었다.

이는 실록의 찬수를 위해 등록물이 자료 수집의 중간단계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모든 기록이 등록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등록물이 생산·활용됨에 따라 중요문서일수록 단일한 또는 복수의 등록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문서의 내용은 보존될 가치가 있음이 증명된 것이었다. 즉 실록찬수체계하에서 등록체계는 문서의 1차적 선별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등

335) 實錄과 時政記 纂修凡例에 대한 연구는 강문식(2010), 〈儀軌를 통해 본 《英祖實錄》의 편찬 체계〉, 《조선시대사학보》 54, 조선시대사학회; 김현영(2008), 앞의 논문; 오항녕(2003), 앞의 논문; 오항녕(2004), 〈조선후기 국사체계(國史體系)의 변동에 관한 시론: 실록(實錄)에서 일성록(日省錄)으로〉, 《역사와 현실》 52, 한국역사연구회; 오항녕(2006), 〈正祖 초반 《英祖實錄》 편찬에 대한 연구〉, 《민족문화》 29, 한국고전번역원 등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록물은 原文書와 실록을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동시에 행정영역의 영구보존기록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 儀軌와 謄錄

조선은 주요 의례의 진행이나 건축물·악기·서적 등의 제조·제작시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모든 과정이 끝나면 儀軌廳을 별도로 설치하여 ‘儀軌’라는 명칭의 보고서를 편찬하였다.³³⁶⁾ 이 儀軌는 주요 儀禮가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각종 기록을 분류별로 謄錄하고, 필요시 그림 등을 추가로 삽입하여 책자로 정리한 기록이다. 이 儀軌라는 명칭의 기록은 조선 이전의 高麗에도 존재하였고, 중국에서도 편찬한 기록이었다.

중국의 사료에서 나타나는 ‘儀軌’라는 용례를 살펴보면 보통 국가의례와 관련된 威儀나 法度 등을 지칭하고 있고 있으며, 특히 佛教에서는 그 개념이 확장되어 禪僧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지칭하고 있다.³³⁷⁾ 고려에서도 儀軌라는 명칭의 기록은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에서도 ‘儀軌’라는 이름을 가진 서적 31종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불교 또는 도교의 의례집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³³⁸⁾ 《高麗史》 林樸의 列傳에는 홍건적의 난 때 典校祭享의 의례를 땅에 묻어 감추었다는 기사가 나타난다.³³⁹⁾ 이 역시 의례와 관련된 절차서 또는 규범집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중국과 고려에서 儀軌라는 기록은 일종의 의례집 또는 규범집으로서 받아들여졌다.

조선 또한 의례는 국왕과 왕실 儀禮와 관련된 기록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중국과 고려와는 달리 서술의 대상은 국가의 공식적인 중요 행사에 한하였으며, 그 서술 체제 또한 단순히 의례의 절차나 모습을 담는 것을 넘어 의식 및 행사와 관련된 공문서까지 함께 수록·정리하여 相考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6) 김문식&신병주(2005),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파주:돌베개, 20쪽; 김해영(2018), 《조선왕조의 의궤와 왕실 행사》, 서울:현암사, 24쪽.

337) 신명호(2011), 〈조선 초기 儀軌編纂의 배경과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59, 조선시대사학사, 14~15쪽.

338) 신명호(2010), 〈조선건국 후 왕실의례 정립과 의궤〉, 《조선왕조의례 학술심포지움 발표집》, 국립문화재연구소, 116~123쪽; 신명호(2011), 앞의 논문, 16~18쪽.

339) 《高麗史》 卷111, 〈列傳〉, (林樸): “南遷時, 春秋史籍, 典校祭享儀軌, 掘地以藏. (후략).”

禮曹에 薦新하는 법을 상세히 살펴 啓聞토록 명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宗廟에 앵두(櫻桃)를 薦新하는 것이 儀軌에 기재되어 있는 바, 반드시 5월 朔과 望에 제사할 때 겸행토록 되어 있다.”³⁴⁰⁾

이 기사는 이미 太宗 때부터 宗廟에 薦新하는 의식의 절차와 그 상세 사항 등을 ‘儀軌’에 수록하여 활용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다만 의례가 국가의례만을 주제로 하여 편찬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에서 의례는 특정한 물건을 제조할 때의 製造規式을 정리한 것을 뜻하기도 하였다.³⁴¹⁾ 대표적으로 문종 재위 당시 甲造船의 제조 규식을 의례로 삼도록 한 것이나 정조 재위 당시 건축한 華城의 城役儀軌 등이 그러하다.³⁴²⁾ 이 외에도 건국 후 景福宮 造成에 관한 役事를 정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景福宮造成儀軌》의 존재나 太祖·定宗 《喪葬儀軌》의 존재 등을 통해 조선 초기부터 이미 중요 의례나 제조규식에 관한 儀軌가 편찬되어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⁴³⁾

이처럼 조선 초기의 의례 또한 현전하는 의례와 유사한 역할과 위상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儀軌를 참고하여 의례를 진행토록 한 사례 및 의례를 여러 벌 만들어 架閣庫 및 史庫 등의 장소에 奉安토록 한 사례 등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³⁴⁴⁾

다만 현전하는 儀軌기록은 등록물과 마찬가지로 17세기 이후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며,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의례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선조 34년(1601년) 편찬한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와 《懿仁王后山陵

340) 《太宗實錄》 卷21(太宗 11年/서기 1411년) 5월 11일(辛未): “命禮曹稽考薦新之法以聞. 上曰, 宗廟薦櫻桃, 儀軌所載, 必於五月朔望祭兼行.”

341) 김해영(2018), 앞의 책, 23~24쪽.

342) 《文宗實錄》 卷7(文宗 1年/서기 1451년) 5월 25일(壬戌); 《正祖實錄》 卷45(正祖 20年/서기 1796년) 11월 9일(庚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華城城役儀軌》 (古 4250-13).

343) 《成宗實錄》 卷172(成宗 15年/서기 1484년) 11월 4일(丁亥); 《世宗實錄》 卷16(世宗 4年/서기 1422년) 5월 28일(甲申).

344) 《太宗實錄》 卷24(太宗 12年/서기 1412년) 8월 28일(庚辰); 《世宗實錄》 卷34(世宗 8年/서기 1426년) 12월 15일(甲戌); 《文宗實錄》 卷1(文宗 卽位年/서기 1450년) 5월 4일(丁未); 《世祖實錄》 卷26(世祖 7年/서기 1461년) 12월 8일(甲戌); 《世宗實錄》 卷30(世宗 7年/서기 1425년) 11월 24일(己未); 《世宗實錄》 卷41(世宗 10年/서기 1428년) 8월 27일(丙午) 등.

都監儀軌》이다.³⁴⁵⁾ 현존하는 의궤기록의 경우 儀軌事目을 통해 그 편찬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반해, 이전 시기 의궤기록의 경우는 그 편찬과정이 實錄 및 기타 史料를 통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때문에 본 절에서는 그 시대적 범위를 조선 후기로만 한정하여 등록물과 의궤의 차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儀軌事目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선 후기 의궤의 찬수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儀禮 행사가 끝나면 儀軌의 찬수를 위한 儀軌廳을 설치한다. 이 의궤청은 행사의 성격이나 업무상 편의를 고려하여 합당한 官司에 설치되었으며, 보통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한 都監을 해산한 후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였다. 이는 의궤 편찬 과정에서의 편의를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궤청이 설치되면 實錄廳의 사례와 유사하게 각 房을 나누어 행사 과정에서 생산·수발된 문서를 수합하여 정리하고, 이를 다시 유형별·일자별로 구분해 별도로 謄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초본을 正書 또는 印刷하고, 御覽用과 分上用으로 나누어 각기 粧綴해 완성된 형태로서 편찬하게 된다.³⁴⁶⁾

이처럼 의궤는 기본적으로 원 문서를 베껴 적는 방식인 謄錄을 통해 편찬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儀軌기록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록마다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目錄·座目·啓辭·관청 간 受發文書(移文·牒呈·關文·甘結 등으로 구분)·稟目·論賞·各房 謄錄·別工作 謄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啓辭와 官廳文書는 말 그대로 등록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뒤에 나열되는 各房과 別工作 기록 또한 의례 진행 및 의궤청 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다시 謄錄하여 정리한 것이다.

때문에 의궤는 큰 범주에서 謄錄과 동일한 기록물로도 볼 수 있다. 실

345) 국립중앙박물관 編(2012), 앞의 책, 12쪽.

346) 儀軌의 편찬과정에 대한 이상의 서술은 국립중앙박물관 編(2012), 앞의 책; 김문식&신병주(2005), 앞의 책; 김문식(2010), 「『儀軌事目』에 나타나는 의궤의 제작 과정」, 《규장각》 3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신병주(2006), 「광해군 시기 의궤의 편찬과 그 성격」, 《남명학연구》 22,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신병주(2009), 「『實錄廳儀軌』의 편찬과 제작 물자에 관한 연구: 《영종대왕실록청의궤》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8, 조선시대사학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제 조선에서도 儀軌와 謄錄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실록을 비롯한 다수의 사료에서 등장하며, 심지어 의궤기록 내에서도 해당 의궤를 謄錄으로 칭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의궤의 편찬 과정과 소요 인력, 보존 장소 등을 규정한 儀軌事目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번 祔廟謄錄을 만들 때 응당 행해야 할 여러 일을 참작해 마련하여 후면에 기록하옵기에, 후면에 기록한 것을 시행함이 어떠합니까?
(중략) 하나. 謄錄 9건으로 御覽용 1건이며, 그 나머지 8건은 의정부·종묘서·춘추관·예조·강화부·태백산·오대산·적상산성 등의 처소에 分上하옵소서.³⁴⁷⁾

都監儀軌의 여러 일을 마련하여 뒤에 기록하옵기에, 후면에 기록한 것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중략) 御覽謄錄의 종이는 草注紙로 하고 分上하는 건은 楮注紙로 하여, 該曹가 들일 수량을 進排토록 하옵소서.³⁴⁸⁾

이상의 儀軌事目的 내용에서 謄錄으로 지칭되는 기록은 분명히 해당 儀軌기록을 뜻한다. 《光海君日記》에는 아예 儀軌를 《儀軌謄錄》이라는 명칭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³⁴⁹⁾ 《의궤등록》이라는 별개의 등록물이 있었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의궤등록이라는 단어가 나타난 기사들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의궤등록은 해당 의궤를 등록한다는 용법이나 의궤 기록 그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외 儀軌에서 이를 편찬하는 행위를 ‘謄錄’이라는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음

347) 《宣懿王后祔廟都監儀軌》, 〈祔廟都監儀軌事目〉, “今此祔廟謄錄成籍時, 應行諸事參酌磨鍊後錄爲白去乎, 依後錄施行何如. (중략) 一. 謄錄九件內, 御覽一件, 其餘八件乙良, 議政府 宗廟署春秋館禮曹江華府太白山五臺山赤裳山城等處, 分上爲白齊.”

348) 《孝宗大王寧陵山陵都監儀軌》, 〈都監儀軌事目〉, “都監儀軌諸事磨鍊後錄爲白去乎, 依後錄施行何如. (중략) 御覽謄錄紙則草注紙, 分上件則楮注紙, 令該曹入量進排爲白齊.”

349) 《光海君日記》卷21(光海君 1年/서기 1609년) 10월 16일(甲子): “且儀軌謄錄, 亦當修正, 依他都監例, 都廳郎廳等官, 當爲啓下, (중략) 傳曰, 役未畢而不可先修儀軌.”; 《光海君日記》卷29(光海君 2年/1610년) 5월 27일(辛未): “沈喜壽以爲, (중략) 其時所遵倣者, 不越乎五禮儀一書, 又有該曹儀軌謄錄, 想必每次沿襲, 宜無有相遠者.”

도 발견된다.

하나. 甘結. 지금 이 實錄儀軌를 謄錄하여 正本을 인출할 때, 松煤墨 10냥과 黃蜜 2냥을 급히 바칠 일.³⁵⁰⁾

하나. 甘結. 지금 이 和緩翁主嘉禮儀軌를 謄錄할 때, 사용할 白休紙 두근을 해당 시각 내에 위 아래로 바칠 일.³⁵¹⁾

이처럼 당시의 시각에서도 儀軌는 謄錄의 방식으로 편찬되는 기록으로 간주되었으며, 더 나아가 儀軌를 謄錄으로도 지칭하기도 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현전하는 이른바 儀軌類 등록물을 살펴보다라도, 그 체제와 내용이 儀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등록물은 모두 儀軌의 체제와 유사하게 기록을 분류·등서하고 있으며, 채색된 班次圖를 비롯한 圖式 등도 의궤와 동일하게 수록하고 있다.³⁵²⁾

그렇다고 해서 謄錄과 儀軌를 동일한 의미로서 받아들이긴 어렵다. 儀軌는 분명 謄錄보다 위상을 지닌 기록으로서 인지되고 있었음이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의궤가 謄錄으로 지칭된 배경에는 原文書를 베껴 별도로 성책한 것이라는 의미로써 謄錄이라는 표현을 광의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기록만이 ‘儀軌’로 命名된 것이 아닌가 한다.³⁵³⁾

먼저 儀軌로 命名되기 위해서는 儀軌廳이나 儀軌都監 등에서 그 편찬이 이루어져야 했다. 英祖代 《承政院日記》 改修 과정을 다룬 《改修日記謄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50) 《顯宗大王實錄改修廳儀軌》(癸亥 四月初一日), “一, 甘結. 今此實錄儀軌謄錄正本印出時, 松煤墨十兩, 黃蜜二兩, 急急進排事.”

351) 《和緩翁主嘉禮謄錄》(己巳 七月初七日四), “一, 甘結, 今此和緩翁主嘉禮儀軌謄錄時, 所用白休紙二斤, 當刻內上下進排事.”

352) 연갑수(2000), 앞의 논문, 197쪽. 해당 논문에서 예로 든 《文禧廟營建廳謄錄》외에도 《慶嬪禮葬所謄錄》, 《昭慶園謄錄》, 《慶嬪嘉禮時嘉禮廳謄錄》 등도 圖說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모든 儀軌가 圖式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만큼, 圖式의 존재 유무만으로는 謄錄과 儀軌를 구분할 수 없으리라 본다.

353) 이형중(2018), 앞의 논문, 208쪽.

洪啓禧가 말하길, “무릇 廳을 세워 거행한 일에는 반드시 儀軌가 있는데, 日記廳은 儀軌廳을 반드시 설치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前後의 筵敎, 草記, 移文과 捧甘의 부류는 구비하여 기록해 승정원에 두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³⁵⁴⁾

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이다. 첫째, 儀軌는 儀軌廳이 세워진 후 찬수되는 기록이다. 儀軌廳을 설치해야 해당 기록은 儀軌로 지칭되는 것인데, 해당 기사를 수록한 《改修日記謄錄》의 경우 의궤청이 설치되지 않았기에 承政院日記 개수과정을 다른 기록을 ‘謄錄’으로만 지칭하였던 것이다. 이 외에도 현전하는 의궤 대다수는 都監이나 廳과 같은 임시기구를 통해 제작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의궤청이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의궤를 편찬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은 孝宗의 祔廟 관련 의궤부터인데, 이전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각 都監이나 都廳이 별도의 儀軌成籍處所 등을 마련하여 의궤를 편찬하였다.³⁵⁵⁾ 이처럼 조선은 의궤의 편찬을 위해 기존의 상설 조직 대신 의궤를 편찬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둘째, 儀軌廳 또한 관련 의례 또는 행사의 위상에 따라 그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의궤청은 모든 의례 또는 행사가 종료된 후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상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홍계희는 承政院日記의 개수가 의궤청이 설치될 정도의 위상을 지닌 행사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儀軌라는 명칭의 기록이 별도의 위상을 지닌 儀軌廳을 통해서만 편찬되는 것이며, 이러한 위상을 갖지 못한 의례 또는 행사일 경우에는 의궤가 따로 편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의궤가 없는 행사의 경우 행사와 관련된 기록은 일반적인 등록물의 형태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儀軌가 일반적인 등록물과는 다른 목적에서 생산되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앞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등록물의 생산 목적

354) 《改修日記謄錄》(丁卯十一月初九日): “啓禧曰, 凡設廳舉行之事, 必有儀軌. 日記廳則不必設儀軌廳, 而前後筵敎草記移文捧甘之屬, 不可不備錄留置於政院矣. 舉行諸節目, 當以節目啓下, 而日記封進之後, 則便成政院事, 使該房承旨主之何如.”

355) 김해영(2018), 앞의 책, 61~72쪽.

은 실록찬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史料로서의 가능성도 존재하였지만, 어디까지나 1차적인 생산목적은 관련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典故이자 기존 행위에 대한 憑考로서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儀軌는 다르다. 儀軌 또한 儀禮의 참고자료로서 상당히 자주 활용되고 있음은 實錄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궤의 1차적인 편찬 목적은 후대에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 전승하기 위함이었다. 실제 일반적인 등록물과 의궤의 편찬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의궤는 실록과 유사하게 별도의 의궤청이나 권설기구가 설치되어 해당 기구에서 각 房에서 수집된 기록을 草本으로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正書하고 粧綴하여 완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편찬된 의궤는 御覽用과 함께 별도로 보존·활용을 위한 分上用 複本을 여럿 마련해 史庫를 비롯한 중요 各處에 두어 분산·보존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등록물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궤청이 아닌 별도의 廳이나各司에서 자체적으로 편찬하였으며, 표지 또한 화려하게 꾸며지지 않았다. 또한 의궤의 경우 그 편찬을 위한 별도의 소용 물품 등이 동원되었으며 그 물품의 규격과 수량 등도 節目 등으로 정해져 의궤에 수록된 반면, 등록물의 경우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처럼 의궤는 실록과 유사하게 保存에 방점을 둔 기록이었다. 때문에 의궤는 잘 정리된 楷書體로 筆寫되거나 활자 등을 통해 印刷되었고, 그 구성 또한 目錄·座目·啓辭·行移文書·各房謄錄·別工作 등 정형화되어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의궤류 등록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등록물 중 일부는 초서체로 작성되어 있기도 하고, 오탈자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謄書만 해 놓은 경우도 존재하였다. 심지어 동일한 原文書를 수록한 기사를 보더라도, 의궤와 등록물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傳曰元
同日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曰本都監郎廳前應教金鎮南監造官前奉奉魚有或前奉奉徐仁修時無職名令該書依例口 傳付軍職冠帶常仕何如
傳曰元
壬子六月初七日禮曹
啓曰祠 廟郎目中飲福宴禮例唐錄 啓下矣奉考勝錄則辛卯年祠 廟時飲福宴因
孝宗大王 下教議大臣權停矣今書何以爲之哉 稟
傳曰今亦推傳
壬子六月初八日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曰今此祠 廟時 敬徽殿母寶奉審後當修數奉安於宗廟所在冊寶識亦且奉審然後可無長短大小不齊之患臣奉都監堂郎當爲奉審矣吉日令禮曹從違推擇何如
傳曰元
同日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曰今此祠 廟時 祭器皆當以 敬徽殿即今所用者當爲移用而其中蓋蓋各二銅三並蓋具新造之意敬
傳曰知道
壬子六月十一日禮曹
啓曰因祠 廟都監 啓辭 宗廟 敬徽殿母寶識奉審

<그림 4> 《宣懿王后祔廟都監儀軌》의 英祖 8年 6月 기사

八月朔祭生緯一口內具黃海道生緯二首生緯三尾京畿禱祭生緯一口內具忠清道生緯二首生緯三尾京圻預告祭生緯一口內具江原道生緯二首生緯三尾京圻告勳駕祭生緯一口內具黃海道生緯二首生緯三尾京圻啓係元
壬子六月初八日
一祠廟都監郎廳以都提調意啓曰今此祠 廟時敬徽殿母寶奉審後當係數奉安於 宗廟十二室而如或未盡之患則所當修補 宗廟所在冊寶識亦且奉審然後可無長短大小不齊之患臣奉都監堂郎當爲奉審矣吉日令該書從違推擇何如傳曰元
一祠廟都監郎廳以都提調意啓曰今此祠 廟時祭器皆當以 敬徽殿即今所用者當爲移用而其中蓋蓋各二銅三並蓋具新造之意敬 傳曰知道
壬子六月初九日
曹單子因祠 廟都監啓辭 宗廟 敬徽殿母寶識奉審吉日令該書推擇何如傳曰元
日官推擇則今六月十二日爲吉日同日日本由及都監堂上本署提調照同奉審事知委何如啓係所啓施行
壬子六月十二日

<그림 5> 典亨司 編《宣懿王后國恤謄錄》의 英祖 8年 6月 기사

<그림 4>는 《宣懿王后祔廟儀軌》의 일부로 宣懿王后의 신주를 宗廟에 봉안하는 祔廟 절차와 관련된 공문을 등록한 부분이다. <그림 5> 역시 <그림 4>와 마찬가지로 祔廟와 관련된 동일 공문을 기록한 등록기사이다. 이 두 기록 모두 동일한 공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 등록물에 비해 의궤가 보다 정제된 형태로서 기사를 정리하고 있다. 등록물의 경우 기사 및 글자 간격의 여유 정도와 편집의 세밀함, 서체 등이 의궤에 비해 떨어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동일 내용의 公文書를 참고하여 謄錄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서술적 차이가 존재한다. 의궤와 등록물 모두 壬子年(英祖 8年) 6월 초8일의 기사가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의궤의 기사가 보다 구체적이며 오탈자 등도 수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두 기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④ 《宣懿王后祔廟儀軌》 壬午 六月 初八日：都監郎廳，以都提調意啓曰，今此祔廟時，敬徽殿冊寶奉審後，當依數奉安於宗廟第十二室，而如或有未盡之患，則所當修補，宗廟所在冊寶櫬。亦且奉審然後，可無長短大小不齊之患，臣率都監堂郎，當爲奉審矣。吉日，令禮曹從速推擇何如。傳曰，允。

⑤ 《宣懿王后國恤謄錄》 壬午 六月 初八日：一，祔廟都監郎廳，以都提調意啓曰，今此祔廟時，敬徽殿冊寶奉審後，當依數奉安於宗廟十二室，而如或未盡之患，則所當修補，宗廟所在冊寶櫬。亦且奉審然後，可無長端大小不齊之患，臣率都監堂郎，當爲奉審矣。吉日，令該曹從速推擇何如。傳曰，允。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첫째, ④의 경우는 ⑤등록물의 오탈자를 수정하여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동일한 原文書를 각기 참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

고, ㉠가 ㉡의 기록을 참고하면서 수정하여 成冊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가 별도의 原文書 正書本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의례가 ㉡등록물보다 정제된 형태로서 편찬되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의 등록기사는 禮曹에서 편찬한 것이기에 禮曹를 ‘該曹’로 표현하고 있으나, ㉠에서는 이를 ‘禮曹’로 달리 지칭하고 있다. 이는 原文書를 등록할 때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이 아니라, 편찬주체나 상황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여 기록하였음을 드러낸다. 즉 原文書의 謄錄과정에서 기록의 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했음을 뜻한다. 다만 기록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수정한 흔적이 없는데, 이는 謄錄이라는 행위 자체가 기록의 내용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례와 등록물은 큰 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편찬되었고 당시의 인식으로도 광의적 등록의 개념에 의례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실제 그 체제와 운영의 실상을 살펴보면 양자 간에 구분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의례의 경우 儀軌廳을 통해서만 편찬될 수 있었다. 의례청은 일정한 위상을 지닌 儀禮 또는 行事가 종료된 후 설치되었는데, 동일한 행사라 할지라도 의례청이 세워지지 않으면 관련 기록이 儀軌로서 편찬되지 못했다. 반면 ‘謄錄’은 의례청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행사에 관한 문서를 정리하여 편찬한 기록이다. 때문에 儀軌는 한 건의 행사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단일 기록으로서 편찬되는 반면, 謄錄物은 동일한 행사를 다루더라도 작성 주체에 따라 다양한 구성과 내용을 지닌 여러 本의 기록이 존재하고 있다.

謄錄物과 儀軌 모두 국가 주요 행사에 대한 典故로서 활용되었지만, 謄錄은 업무상 활용에 보다 중점을 둔 기록이며 儀軌는 保存과 傳授에 보다 중점을 둔 기록이라는 차이도 있다. 특정 의례나 행사와 관련하여 등록물은 동일한 행사에도 그 절차별·관사별로 여러 판본의 기록이 생산되었고 수시로 활용되었으나, 의례의 경우 의례청이 주관하여 단일한 기록으로 편찬하고 중요 장소에 보존하였다.

또한 의궤는 일반적인 국가기록보다 한 층 더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實錄처럼 접근이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국왕조차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상을 지닌 기록은 아니었지만, 후대에 지속적으로 보존할만한 軌範이자 동시에 국가 중요 기록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 찬수과정의 엄정함과 정교함은 일반적인 등록물의 편찬과정에 비할 바가 아니며, 소요되는 물자의 품질과 규모 또한 상당하였다. 의궤가 완성된 후의 보존·관리 또한 상당히 철저히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儀軌는 實錄과 마찬가지로 그 생산과정과 보존형태, 편찬 목적 등이 일반적인 등록물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기록이었다. 비록 의궤가 謄錄과 유사한 방식으로 편찬되는 기록이라 할지라도, 그 1차적인 생산목적은 후대를 위한 보존에 있었으며 그 위상 또한 일반적인 등록물에 비해 확고히 높았다고 할 수 있겠다.

3. 日記와 謄錄

日記라는 단어의 경우 廢王의 實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承政院日記》와 같이 일지의 성격을 지닌 등록물이나 일자별로 정리된 기록물 그 자체를 뜻하는 용어로도 활용되었으며, 私家에서는 개인이 작성하는 매일의 기록을 뜻하는 용어로도 활용되는 등 그 용례의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 이 日記 중에서 특히 국가가 편찬하는 官撰日記의 경우 謄錄으로서 지칭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는 당시에 日記와 謄錄의 개념적 구분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 官撰日記는 謄錄物과 동일한 개념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가? 정답은 日記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日記라는 단어가 謄錄만큼이나 폭넓게 활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日記로 지칭되는 관찬기록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단정하여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편찬한 官撰日記는 일자별로 정리되어 작성된 기록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각기 다른 위상과 쓰임을 지녔다.

오항녕(2001)은 實錄과 日記, 謄錄에 대해 實錄을 최정점으로 두고, 廢王의 日記와 官廳日記를 그 다음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謄錄物을 가장 아래로 둔 조선 기록관리의 위계를 제시한 바 있다.³⁵⁶⁾ 그러나 日記라는 용어 그 자체로는 ‘일별로 기록한 謄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해당 논문에서는 官司日記의 사례로 보통 《承政院日記》·《堂後日記》·《注書日記》·《經筵日記》 등을 제시하면서, 이들 기관이 국왕의 비서 및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별도로 日記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³⁵⁷⁾ 그러나 日記가 조선의 등록체계하에서 별도의 층위를 구성하는 단일한 유형의 기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한다. 日記라는 명칭이 여타 등록물에 비해 특수한 지위를 점한 기록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日記라는 용

356) 오항녕(2001), 앞의 논문, 106쪽. 해당 논문에서 오항녕 또한 일기와 등록 사이에 명확한 기록의 위계가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지만, 등록과 일기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사례 또한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357) 오항녕(2001), 위의 논문, 106쪽.

어가 일자별로 정리된 기록을 지칭하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에 日記를 단일한 성격과 위상을 지닌 기록으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각에서 이러한 日記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日記를 謄錄物과는 전혀 별개의 성격을 지닌 기록으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承政院日記》처럼 기관의 일지로서 ‘日記’라는 명칭을 그 題號로 사용하는 기록들은 《備邊司謄錄》이나 《議政府謄錄》과 그 체제가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지형 등록물과 이질적인 유형의 기록물로서 인식되기도 하였다. 廢王의 實錄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日記’라는 용어 또한 조선 官撰日記의 위상과 개념을 규명함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日記라는 단어가 단순히 일자별로 정리한 기록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활용되었는지 아니면 일지형 기록 중 특수한 위치를 점한 기록을 별도로 日記라는 명칭을 두어 格을 높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관련 연구자들 간에도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조선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지닌 기록물인 實錄조차 등록체계를 통해 편찬되는 기록으로 규정하느니만큼, 조선의 官撰日記 또한 그 위상과 유형을 막론하고 모두 등록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官撰日記의 위상과 유형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크게 세 범주로 나누었으며, 범주별 일기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들 日記가 등록체계하에서 어떻게 개념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등록물과의 위상 차이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 협의의 등록물로 속하는 日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논하고자 하였다.

조선에서 편찬한 官撰日記는 國王관련 日記와 官廳관련 日記로 1차 구분할 수 있다. 國王관련 日記는 燕山君이나 光海君과 같은 廢王의 實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官廳관련 日記는 각 관청에서 서술하는 관청일지 성격의 등록물이나 일자별로 정리된 공기록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다. 문제는 《日省錄》이나 《承政院日記》같은 기록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承政院日記》는 국왕의 비서조직인 承政院이

주관하여 작성한 매일의 기록으로서 국왕의 동정이나 군신간의 논의 및 국왕보고 문서의 내용 등을 주로 기재하고 있다. 正祖 연간 편찬되기 시작한 《日省錄》 또한 국왕의 일기 형식을 취해 작성된 것으로서, 당시 正祖가 새로이 국왕의 국정 자문 및 보필을 위한 기구로서 세운 奎章閣에서 주관하여 편찬한 기록이다. 이들 기록은 그 편찬주체나 서술과정을 살펴보면 官廳日記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할 듯 하지만 실상 그 서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國王의 言行 및 傳敎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실록의 역할을 수행한 폐왕의 日記는 ‘實錄型日記’로, 국왕의 비서조직에 의해 매일의 국왕동정을 기록한 日記는 ‘秘書日記’로, 그 외 일반의 官司에서 일자별로 기록을 정리한 형태의 등록물은 ‘官廳日記’로 각기 구분하여 논지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먼저 實錄型日記인 《燕山君日記》와 《光海君日記》에 대해 살펴보고록 하겠다. 廢王의 實錄을 日記로 지칭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록이 일별로 기록을 謄錄하여 정리한 방식을 취하였기에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廢君일지라도 국왕의 位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에 왕실의 권위 보호라는 측면과 더불어 일기 내 機密 및 史論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서 폐왕의 일기를 實錄에 준해 편찬·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實錄이라는 명칭은 쓸 수 없었고, 찬수의 주관도 實錄廳이 아닌 日記廳이나 纂修廳에서 이루어졌다.

정승 등이 아뢰길, “선왕의 史는 실록이라 칭하나 燕山의 史는 실록으로 말하는 것이 불가하니 日記修撰의 칭호로 局을 설치하고, 대제학 金勘으로 監春秋館事を 삼아 편수를 관장하게 하십시오.”³⁵⁸⁾

춘추관이 아뢰길, “(중략) 이제 魯山·燕山의 사례에 의거하여 광해의 일기를 찬집하여 내소서. 대략 實錄廳을 본떠 摠裁官과 都廳 및 各房 堂上·郎廳을 차출하고 加出(정원 외 인력)을 알맞게 헤아려 修正에 함께 힘을

358) 《中宗實錄》卷1(中宗 1年/서기 1506년) 11월 16일(辛卯): “政丞等啓曰, 先王史, 則以實錄稱, 燕山史, 則不可以實錄言, 以日記修撰稱號設局, 以大提學金勘爲監春秋館事, 專掌編修.”

들이도록 하시고 이로써 史事를 무겁게 하십시오.”하니, 상이 따랐다.³⁵⁹⁾

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燕山君日記》의 경우 日記廳이 설치되어 찬수작업을 수행했었고, 《光海君日記》의 경우에는 纂修廳이 설치되어 또한 찬수작업을 수행했었다.³⁶⁰⁾ 두 경우 모두 實錄廳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찬수 당시에는 《魯山君日記》라는 제명으로 편찬된 《端宗實錄》 또한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추정된다. 이는 위 기사의 “魯山·燕山の 사례에 의거하여 광해의 일기를 찬집”했다는 구절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찬수청이 아뢰길, “光海朝의 日記 수정 시 찬수청으로 칭호했으니, 이제 장차 宣廟朝의 실록을 수정하는데 있어 그 호칭을 그대로 쓰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컨대 實錄修正廳이라 칭호하소서.”하니, 따랐다.³⁶¹⁾

대신과 備局(備邊司)의 여러 신하들을引見하였다. 이에 앞서 崔錫鼎이 《續錄》과 《輿地勝覽》을 대제학이 주관하도록 명할 것을 청하고, 후에 纂修廳으로 칭해 (후략)³⁶²⁾

상께서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명하시길 대신에게 日記廳을 맡아 담당하라 하셨다. 이에 앞서 갑자년에 일기(필자 주: 승정원일기)가 모두 불났는데 이 때에 이르러 廳을 설치하고 당상과 낭청을 차출하여 纂輯케 했다. 史局을 중히 여기는 뜻에서 이 명이 있었다.³⁶³⁾

359) 《仁祖實錄》卷6(仁祖 2年/서기 1624년) 6월 29일(辛亥): “春秋館啓曰, (중략) 今依魯山燕山例, 撰出光海日記, 略倣實錄廳, 差出摠裁官, 都廳及各房堂上郎廳, 量宜加出, 併功修正, 以重史事. 上從之.”

360) 이는 각각 《中宗實錄》卷9(中宗 4年/서기 1509년) 9월 12일(辛丑) 기사와 《仁祖實錄》卷29(仁祖 12年/서기 1634년) 5월 17일(壬寅)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61) 《孝宗實錄》卷18(孝宗 8年/서기 1657년) 1월 12일(乙卯): “纂修廳啓曰, 光海朝日記修正時, 以纂修廳稱號, 今將修正宣廟朝實錄, 不可仍用其號. 請以實錄修正廳稱號. 從之.”

362) 《肅宗實錄》卷34(肅宗 26年/서기 1700년) 3월 20일(癸丑): “引見大臣備局諸臣. 先是崔錫鼎, 請續錄輿地勝覽, 令大提學主管, 後稱以纂修廳, (후략)”

363) 《英祖實錄》卷63(英祖 22年/서기 1746년) 5월 20일(乙卯): “上引見大臣備堂, 命以大臣句管日記廳. 先是, 甲子日記盡燬, 至是設廳, 差出堂郎纂輯, 以重史局之意, 有是命.”

이상의 기사들을 통해 實錄廳이라는 명칭이 實錄의 찬수를 주관하는 기관에 한해서만 붙여질 수 있었으며, 이 외 관찬사업의 주관기관은 纂修廳·日記廳 등으로만 호칭되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儀軌도 儀軌廳이나 儀軌都監이 세워져 편찬된 기록에 한해서만 儀軌로 지칭하였고, 그렇지 않은 기록들은 의궤와 동일한 체제 및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謄錄’으로 지칭되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實錄이나 儀軌와 같은 주요 국가 기록물은 주관하는 기관의 명칭까지 달리할 정도로 별도의 위상을 지녔음이 명백하다.³⁶⁴⁾ 즉 조선의 관찬기록 중에서 실록과 의궤는 여타의 기록에 비해 별개의 위상을 지닌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등록물을 포함한 그 외 기록들은 비록 그 중요도에 따라 위상의 차이가 존재했을 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실록형일기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명칭과 찬수과정에 있어서는 격을 한 단계 낮추어 운용하되, 實錄에 준한 위상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廢王의 日記가 여타의 實錄과 마찬가지로 史庫에 안치되며, 그 출납 또한 엄격하게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實錄과 실록형일기 간의 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史庫에 보존된 기록들의 목록인 形止案의 일부에서 《光海君日記》를 《光海君實錄》으로 표현한 사례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해당 形止案 목록의 머리말에는 《光海君日記》를 그대로 日記로 기록하고 있지만 책수의 都合을 기록하는 말미에는 《光海君實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대체로 仁祖 23年(1645)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實錄考出形止案》³⁶⁵⁾에서부터 孝宗 8年(1657)의 형지안³⁶⁶⁾까지 이 표현은 이어지는데, 두 가지의 가정을 할 수 있겠다.

하나를 당시 形止案을 작성할 당시의 실수가 고쳐지기 전까지 반복 지

364) 김혁(2002) 또한 논문에서 儀軌와 등록물의 체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과 의궤와 등록의 용어가 혼용된다는 점에서 의궤를 등록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기록을 생산하는 관청의 위계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김혁(2002), 앞의 논문, 108쪽.)

365) 《實錄考出形止案》(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3731)

366) 《實錄曝曬形止案》(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3734)

속된 경우이다. 형지안의 작성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형식 또한 이전의 것을 답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오류의 지속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록의 形止案을 작성하는 관리들이 史官들이었음을 생각해보면, 이들이 實錄과 日記의 개념을 혼동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러한 오류가 십여 년을 넘게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의 가정은 당시 謄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實錄과 日記라는 단어 또한 광의의 개념으로서 일반적인 보통명사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다.

光海朝때의 實錄을 江華府·五臺山·赤裳山の 史閣에 다시 보관하였다.³⁶⁷⁾

즉 日記는 편년체로 작성된 기록을 지칭하는 일반 용어로 그리고 實錄은 국왕의 국정 기록을 지칭하는 일반 용어로 사용되었기에, 實錄型日記를 實錄의 범주에 들어가는 개념으로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의 시각에서 謄錄은 실록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抄出·謄書 과정을 거친 모든 기록을 의미하며, 日記는 편년체로 작성된 모든 기록을 의미하였다. 민간에서 일자별로 기록한 책을 日記로 칭한 것 또한 日記라는 단어가 일자별로 서술한 기록이라는 보통명사였기 때문이다. 實錄 또한 마찬가지로 국왕의 일지형 등록물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써 사용되었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光海君日記》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實錄으로 지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光海君日記》상에서 實錄을 日錄으로 지칭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처음에 명하시어 實錄을 상고토록 하였는데, 監春秋館事 李恒福과 知事 李爾瞻 등이 모두 모여 들추어 찾아보았다. 이이첨이 太宗日錄 중 한 조목을 찾아내었는데, 이르길 (후략)³⁶⁸⁾

367) 《肅宗實錄》卷7(肅宗 4年/서기 1678년) 9월 19일(丁巳): “還藏光海朝實錄于江華府, 五臺山, 赤裳山史閣.”

368) 《光海君日記》卷67(光海君 5年/서기 1613년) 6월 6일(癸巳): “初命考實錄, 監春秋館事李恒福, 知事李爾瞻等, 咸會披繹. 李爾瞻考得太宗日錄中一條曰, (후략)”

그러나 日記와 實錄이 고유명사로 지칭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다. 이는 英祖가 實錄形止案을 두고 신하들과 논의한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다.

상께서 말씀하시길, “《光海日記》는 形止案에 없는가?” 말하길, “그러합니다.” 상께서 말씀하시길, “의궤는 없는가?” 말하길 “단지 實錄만을 기재하였습니다.”³⁶⁹⁾

이는 實錄과 실록형일기가 각각 고유명사로 사용될 때는 그 용례의 구분이 명확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實錄과 日記라는 고유명사의 분리는 정통과 비정통을 구분하는 단어를 史書에서 엄격히 사용토록 규정한 朱熹의 綱目書體의 원리를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폐왕을 君으로 지칭하고, 그들의 實錄을 日記로 격하한 것은 名號에 따라 옳고 그름을 역사에 밝히기 위함인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록관리제도 하에서 實錄과 실록형일기를 구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實錄과 실록형일기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正統論的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별개의 제도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실록형일기가 조선의 등록체계하에서 여타의 등록물보다 상위의 위상을 지닌 이유 또한 해당 일기가 廢王의 시대를 다룬 것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實錄의 체제를 따르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秘書日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秘書日記는 그 내용이 國王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기록이지만 단일 官廳에서 생산하는 기록으로서 대표적인 秘書日記로는 《承政院日記》를 들 수 있겠다. 이 秘書日記는 軍國機務의 機密을 비롯해 국왕과 왕실의 내밀한 부분까지 담고 있었다. 때문에 국왕의 권위 및 국가의 기밀 보호 측면에서 여타의 관찬기록에 비해 특별히 관리될 필요가 있었다.

369) 《承政院日記》1343冊(英祖 49年/서기 1773년) 9월 25일(辛巳): “上曰, 光海日記, 不在於形止案乎. 曰, 然矣. 上曰, 儀軌不在乎. 曰, 只書實錄矣.”

호조가 啓하기를, “臣曹(戶曹)에서 謄出한 바는 단지 《政院日記》 중 禮單 物件일 뿐입니다. 《정원일기》는 진실로 外司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때의 狀啓가 있는지 여부는 臣曹가 능히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³⁷⁰⁾

承政院은 정3품아문에 불과하였음에도 조선의 職制 하에서는 그 이상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承政院이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면서 동시에 국왕의 비서기구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正祖代 承政院과 함께 국왕의 자문과 비서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奎章閣 또한 그 직품상으로는 중2품아문이었지만 역시 승정원과 마찬가지로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 기관은 상급아문에 문서를 行移할 때에도 牒呈式이 아닌 平關式을 사용하였는데, 이들 기관이 본래의 衙門職品과는 관계없이 문서행정상에서 타 官司에 비해 우위를 점한 이유는 국왕의 명을 출납한다는 기관의 특성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처럼 이들 기관은 항상 내밀한 곳까지 국왕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승정원과 규장각의 관료들은 자연스럽게 국왕의 동정에 관계된 것을 비롯하여 軍國機務에 관한 기밀한 사항을 기록으로서 남기고 관리하게 된 것이었다.

上께서 승지에게 일러 말씀하시길, “《정원일기》는 곧 宋朝 日曆의 체제이다. 마땅히 비밀히 할 것이니 누설되서는 안될 것이니, 史草의 엄격함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 近年 이래로 吏胥의 손에 일임하고 전혀 典守하는 실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記注하는 책임을 크게 잃은 것이다.”³⁷¹⁾

正祖는 《承政院日記》를 가리켜 중국 宋의 日曆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宋의 實錄은 時政記·起居注·日曆 등을 인용하여

370) 《承政院日記》 43冊(仁祖 12年/서기 1634년) 4월 27일(壬午): “戶曹啓曰, 臣曹所謄出者, 只是政院日記中禮單物件而已. 政院日記, 則固非外司所得窺見者, 其時之有狀啓與否, 非臣曹之所能知也.”

371) 《正祖實錄》 卷16(正祖 7年/서기 1783년) 7월 1일(庚寅): “上謂承旨曰, 政院日記, 卽宋朝日曆之體. 其當秘而不當洩, 無異史草之嚴, 則近年以來, 一任吏胥之手, 全無典守之實, 大失記注之責.”

찬수하는 방식이었는데, 《承政院日記》는 日曆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기록으로서 인정되고 있었다. 이는 《日省錄凡例》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國朝의 史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春秋館에는 時政記가 있고 承政院에는 日記가 있다. 이는 곧 左史와 右史의 職任이다. 時政記라는 것은 記事官이 時政의 득실을 모두 논하여 史庫에 보관하는데 다른 이들은 이를 볼 수 없다. 日記는 매일 院의 관리가 六房의 문서를 끈으로 꿰어 모아 다음 날 아침에 초벌로 묶는데 이를 일러 傳敎軸이라 한다. 입직한 注書가 大冊에 그 事蹟의 緊慢함을 헤아리지 않고 손수 다 기록하고 疏筭은 그 끝에 연이어 적어 政院에 보관한다.³⁷²⁾

여기서 지칭하는 承政院의 日記는 비단 《承政院日記》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기관인 承政院에서 注書가 편찬하는 《注書日記》 또한 起居注로서 중시되었으며, 이 외에도 承政院이 편찬하는 日記의 종류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承政院日記》를 비롯한 承政院에서 편찬하는 日記가 日曆, 時政記 등과 비견되는 기록으로서 중시되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는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大司憲 南泰齊가 글을 올렸는데 대략 말하길, “(중략) 또한 우리 조정으로 말하자면, 옛 判書 李植이 朱墨의 뜻을 따라 宣廟(宣祖)의 實錄을 수정하길 청하셨습니다. 아! 금궐나 석실에 보존한 것도 오히려 개수를 청하는데 하물며 銀臺(승정원)의 起居注이겠습니까? 더구나 起居注도 아니며 단지 凶逆한 글이 日記에 실려 있는 것인데 더욱 불살라 없애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³⁷³⁾

372) 《日省錄凡例》〈序〉, “國朝史有二焉, 春秋館有時政記, 承政院有日記, 此卽左右史之職也. 時政記者, 記事官蓋論時政之得失, 藏之史庫, 他人不得見焉. 日記則每日院吏以繩穿集六房文書, 翌朝草裝之, 謂之傳敎軸, 入直注書以大冊, 不計其事蹟緊漫, 手自全錄, 疏筭則連書於其末, 藏之政院矣.”

373) 《英祖實錄》卷82(英祖 30年/서기 1754년) 7월 1일(戊寅): “大司憲南泰齊上書, 略曰, (중략) 且以我朝言之, 故判書李植, 以倣朱墨之意, 請修宣廟實錄. 嗚呼, 金櫃石室之藏, 尙請改修, 況銀臺起居注乎, 況非起居注, 而只是凶逆文字之載錄於日記者, 則尤不容不燒

銀臺의起居注란 《注書日記》를 지칭한다.起居注는 注書를 칭하는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하였고, 이들 注書가 작성하는 《注書日記》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³⁷⁴⁾ 南泰齊의 말에 따르면 기록의 보존·관리의 중요성은 ①實錄, ②《注書日記》, ③《承政院日記》 순으로 정리된다.

다만 承政院에서 편찬하는 등록물을 日記라는 명칭으로 통칭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承政院 注書 교체 時, 전임 注書가 후임 注書에게 承政院이 보존·관리하는 日記들을 인수인계하기 위해 작성한 《承政院日記傳掌冊》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전하는 《承政院日記傳掌冊》 3책에서 확인되는 承政院 주관 편찬 기록으로는 《承政院日記》를 비롯하여 《事變日記》, 《鞠廳日記》, 《勅使日記》, 《國恤日記》, 《山陵日記》 등이 있다.³⁷⁵⁾ 흥미로운 점은 이들 承政院이 주관하여 편찬·보존하는 日記가 꼭 기관일지형 등록의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鞠廳日記》나 《勅使日記》·《國恤日記》처럼 공문서철형 등록물과 같은 형태의 특징을 지닌 것도 日記의 명칭으로 존재한다.³⁷⁶⁾ 물론 이들 日記 기록은 모두 일자별로 정리된 기록이라는 日記 본연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타 官司의 유사기록의 경우 謄錄이라는 표제가 붙는 것이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승정원의 기록만 日記로 지칭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인 등록물의 경우 3~4일 또는 그 이상의 일정한 주기로 문서를 선별·등서한 것과 달리 承政院은 매일 아침마다 문서를 編綴하여 謄書 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였기에 승정원에서 편찬되는 등

毀也.”

374) 《顯宗改修實錄》 卷10(顯宗 4年/서기 1663년) 11월 16일(庚辰): “大司諫金始振等啓曰, 今之注書, 卽古之起居注也.”; 《承政院日記》 617冊(英祖 2年/서기1726년) 5월 22일(癸丑): “注書趙明翼疏曰, (중략) 況此堂后之任, 古之起居注也.”; 《承政院日記》 1701冊(正祖 16年/서기 1792년) 3월 27일(丙申): “記注官安經心書啓, (중략) 傳曰, 知道. 見卿書啓, (중략) 此非獨卿等所諱聞, 抑亦注書, 書於起居注, 史官載之時政記, 則卿等之所謂同云乎者何事, 異云乎者又何說.”

375) 憲宗 9年(1843), 哲宗 2年(1851), 哲宗 14年(1863) 각각 편찬된 것으로 承政院이 주관하는 書冊의 인수인계 사항을 작성하고 있다.(명경일(2016), 〈조선 후기 事變假注書日記의 사료적 가치〉, 《규장각》 4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11~116쪽.)

376) 명경일(2016), 위의 논문, 119~128쪽.

록물을 매일의 기록이라는 의미의 日記로서 칭하였을 것이다. 承政院의 문서등록체계는 최근 《承政院日記》의 傳敎軸에 대한 명경일(2014)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承政院에서 문서관리의 편의를 위해 承政院의 출납문서를 묶은 문서철을 傳敎軸이라 하며, 이 傳敎軸은 매일마다 편철되었다.³⁷⁷⁾ 그리고 이 전교축은 承政院의 日記 편찬과정에서 그대로 등서되었으며, 疏筭처럼 전교축에 수록되지 않은 기록은 傳敎軸을 베껴 적은 후 日記의 말미에 이어 적는 방식으로 일기를 편찬하였다.³⁷⁸⁾ 《日省錄》 또한 草本 작성 시 이 傳敎軸을 활용하였다.³⁷⁹⁾ 또한 그 편찬방식도 승정원일기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매일 등록하는 방식으로 편찬된 기록을 보통 日記나 日曆 등으로 지칭하였다. 이는 또 다른 비서기구의 기록인 규장각의 《內閣日曆》 또한 마찬가지이다.³⁸⁰⁾ 그러나 이들 日記 또한 臚錄의 방식으로 편찬되는 등록물임을 변함이 없으며, 그 臚書의 간격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실제 日記를 臚錄으로 통칭한 사례는 상당수 확인된다.

李一相이 아뢰어 말하길, “전교하셨습니다만, 臣 등이 舊例를 상세하게 적은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本院(承政院)의 臚錄을 한편으로는 考出하고, 또 한편으로는 禮曹 및 成均館을 시켜 급박하게 前例를 고찰하여 回啓한다는 뜻으로 바로 분부하였으니 감히 아뢰입니다.”하였다.

전하여 말씀하시길, “日記 내용을 살펴보는 것에 불과할 뿐이니, 該曹(禮曹) 및 本館(成均館)에 물을 만한 것이 아닐 듯하다. 그 草記를 還入하라.”하였다.³⁸¹⁾

377) 명경일(2014),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臚錄 체계〉, 《고문서 연구》 44, 한국고문서학회, 89~90쪽.

378) 명경일(2014), 위의 논문, 90쪽.

379) 《日省錄凡例》〈總例〉, “日省錄出草時, 當日內事端, 不可先後倒錯. 故雖有傳敎軸, 次序若有可疑, 則考檢於朝報分撥中次序, 出草後, 必考正書朝報, 以準誤字及遺漏條件.”

380) 《正祖實錄》卷11(正祖 5年/서기 1781년) 2월 13일(丙辰): “內閣日曆, 倣政院日記之例, 每日入直閣臣修正, 檢書官編寫, 而筵話之事係本閣者, 入侍注書, 錄送本閣.”

381) 《承政院日記》114冊(孝宗 1年/서기 1650년) 7월 9일(庚申): “李一相啓曰, 傳敎矣, 臣等未得詳記舊例, 本院臚錄一邊考出, 一邊使禮曹及成均館, 急急考例回啓之意, 卽已分付矣, 敢啓. 傳曰, 不過考見日記中而已, 該曹及本館, 則似非可問也, 其草記還入.”

이는 成均館 儒生들의 捲堂으로 인해 空館의 상황이 발생하자 孝宗이 前例를 찾아볼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한 승정원의 답변이다. 여기서 承旨 李一相이 승정원의 謄錄을 고출함과 동시에 禮曹와 成均館에도 前例를 고출하여 회신토록 하라는 임금의 뜻을 전하겠다고 啓하자, 孝宗은 日記만 살펴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답한다. 여기서의 日記는 문맥상 앞에서 李一相이 언급한 承政院의 謄錄을 의미하며, 이는 《承政院日記》 또는 적어도 承政院이 보관 중인 日記기록을 謄錄으로 지칭하기도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鄭經世와 鄭廣成이 아뢰어 말하길, “天使의 禮單에 대한 일체의 일을 政院에서 謄錄한 것은 모두 散失되었으나, 禮曹에 있는 都監謄錄을 가져다 고찰해 보니 (후략)”³⁸²⁾

朴信圭가 말하길, “鎭圭는 곧 신의 아우입니다. 嫌疑하여 감히 可否하기 어렵지만, 여러 政院謄錄을 고찰하여도 이러한 定奪은 없었습니다.”³⁸³⁾

金在魯가 말하길, “《政院謄錄》과 《議政府日記》에 혹(顯宗 이상 윗대의 御押 글자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上께서 말씀하시길, “注書를 보내 그것을 묻도록 하라.”³⁸⁴⁾

이상의 기사들은 모두 承政院에 謄錄으로 지칭되는 기록들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며, 謄錄과 日記의 명칭이 혼동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純祖代의 都承旨 朴宗薰이 《承政院日記》의 가치를 언급한 부분에서는 아예 이 謄錄의 체계를 통해 《承政院日記》가 편찬되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³⁸⁵⁾

382) 《承政院日記》4冊(仁祖 3年/서기 1625년) 2월 24일(癸卯): “鄭經世, 鄭廣成啓曰, 天使禮單一事, 政院謄錄, 雖盡散失, 而都監謄錄之在禮曹者, 取來披考, (후략)”

383) 《承政院日記》267冊(肅宗 4年/서기 1678년) 12월 3일(己巳): “信圭曰, 鎭圭, 卽臣之弟也. 嫌不敢可否, 而考諸政院謄錄, 則無此定奪矣.”

384) 《承政院日記》954冊(英祖 19年/서기 1743년) 2월 30일(甲寅): “在魯曰, 政院謄錄·議政府日記中, 似或有之也. 上曰, 注書出而問之.”

385) 명경일(2016), 앞의 논문, 106~107쪽.

宗薰이 말하길, “우리 조정의 文獻으로는 政院日記만한 것이 없는데, 대개 그 일의 실상을 모아 갖춰놓으니 그 고찰함에 있어 믿을만한 증빙이 됩니다. 謄錄의 체제로써 史策의 용도까지 겸하니 그 긴요하고 중합은 이와 같습니다. 注書로서 당직하는 이가 매일 살펴 수정하되 남의 손을 빌려 謄書하지 못하며 경연에 入侍하여 말한 것에 이르러서는 더욱 엄한 비밀에 속하므로, 비록 遞任된 이후일지라도 필히 冠帶를 차고 들어와 몸소 繕寫해야 합니다. 매 翌月の 20일 전에 책으로 만들어 남입하면 처음에는 해당 房이 처음 대조하여 살펴보고 당상관을 차출하여 말아 관리토록 합니다.³⁸⁶⁾

《承政院日記》 또한 謄錄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보를 가감없이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서 내용을 선별·요약하여 수록한 기록이기에 謄錄의 體制라는 표현이 나타난 것이다.³⁸⁷⁾ 이처럼 秘書日記 또한 謄錄物의 범주에 속한 기록유형의 한 형태로서 취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편찬이 매일의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日記라는 명칭을 둔 것으로 보이며, 기록 내용상의 기밀과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보존준칙을 세워 철저하게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時政記의 생산·보존 준칙과 큰 차이가 없는 바, 이들 기록이 日記라는 별개 위상을 지닌 유형의 기록이어서가 아니라 그 내용상 기밀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즉 이들 秘書日記의 관리가 중시된 것은 어디까지나 日記가 담고 있는 내용 때문이지, 이들이 ‘日記’이기 때문이 아님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官司에서 편찬한 官廳日記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官廳日記의 경우는 謄錄이라는 명칭과 혼용되는 사례가 實錄型日記나 秘書日記보다 훨씬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인 관청일기가 등록물과 구분될만한 기록적 특성을 지니지는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

386) 《承政院日記》 2047冊(純祖 16年/서기 1816년) 8월 24일(庚子): “宗薰曰, 我朝文獻, 莫如政院日記, 蓋其該括事實, 憑信掌考, 以謄錄之體, 兼史策之用, 其爲緊重, 有如是矣. 注書之當直者, 按日修正, 毋得借手謄書, 至於入侍筵話, 尤屬嚴祕, 雖遞任之後, 必冠帶入來, 躬自繕寫, 每於翌月念前粧冊以納, 則自該房而考準, 差堂上而句管.”

387) 명경일(2016), 위의 논문, 107쪽.

다.

우선 각 官司에 의해 편찬된 官廳日記 중 ‘謄錄’과 ‘日記’라는 명칭을 表題와 內題에 각각 혼용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된다. 이러한 사례로는 앞서도 언급한 《典客司日記》와 《宣傳官廳日記》가 대표적이다.³⁸⁸⁾ 이는 당시에도 일반적인 官廳日記의 경우 日記와 謄錄이라는 명칭의 개념적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들 기록에서 명칭 혼용의 사례가 단발적인 1~2권에만 그친 것이 아니기에 편찬 과정의 誤記라고 할 수 없다. 典客司와 宣傳官廳이 承政院이나 奎章閣과 같이 국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기관도 아니었기에 이들 관청의 일기 명칭이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고 보기도 어렵다.

동일한 주제로 작성된 관청일기와 등록물이 각각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또한 하나의 근거가 된다. 禮曹稽制司에서 편찬한 宣懿王后 魚氏의 國恤관련 기록인 《宣懿王后國恤日記》³⁸⁹⁾와 역시 동일 사건을 주제로 禮曹 典享司와 長生殿에서 각각 편찬한 《宣懿王后國恤謄錄》³⁹⁰⁾의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宣懿王后國恤日記》는 영조 6년(1730년) 庚戌 6월 29일부터 동년 11월 8일까지 선의왕후 상례에 관한 사항을 초서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군신간의 논의 내용과 더불어 상례 간 필요한 節目·事目 등과 公文이 일자별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으로 《宣懿王后國恤謄錄》이 2책이나 더 존재한다. 하나는 예조 典享司에서 편찬한 것으로서 선의왕후 승하 전일인 영조 6년(1730년) 庚戌 6월 28일부터 시작하여 영조 8년(1732년) 8월 10일까지의 국상 절차를 기재하고 있다. 역시 선의왕후 상례에 관한 사항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있으며, 내용은 군신간의 논의 사항을 비롯해 관련 공문 및 각종 소요 물품에 대한 單子 등이 주로 기재되어 있다. 또 다른 《宣懿王后國恤謄錄》은 예조 長生殿에서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⁹¹⁾ 이 《宣懿王后國恤謄錄》은 선의왕후 승하 일

388) 이형중(2018), 앞의 논문, 202~203쪽.

389) 예조 계제사 編, 《宣懿王后國恤日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2964)

390) 예조 전향사 編, 《宣懿王后國恤謄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2963)과 예조 장생전 編, 《宣懿王后國恤謄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2962)의 두 권이다.

자인 영조 6년(1730년) 庚戌 6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의 국상 절차를 기재하고 있다. 역시 군신 간의 상례 관련 논의와 節目·事目과 소요 물품單子, 공문서 등이 등록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세 기록이 거의 유사한 서술체계를 취한다는 것이다. 해당 기록들은 모두 일자별 상례에 관련된 기사 및 공문 등을 초출·등서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상호 간에 기사내용이 중복된 부분도 더러 존재한다. 다만 편찬을 주관한 기관의 성향에 따라 중점적으로 기록한 분야가 다를 수 있는데 稽制司 일기의 경우 의례를 담당한 기관이기에 전반적인 의례에 관한 공문과 논의사항을 주로 수록하였고, 典享司 등록의 경우는 상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 그리고 長生殿 등록의 경우는 梓宮의 마련에 대해 주로 수록하고 있다. 결국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 부서에서 동일·유사한 제목으로 등록물을 생산한다는 것이며,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謄錄하는 문서에 차이를 두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기록 간에 日記와 謄錄이라는 명칭을 구분할 수 있을만한 유의미한 구성과 내용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굳이 日記라는 명칭을 제호에 사용한 이유는 편찬 과정이나 편찬 주체의 차이에 따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확인되는 서지사항이나 내용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隆熙 3年(1909년)에 편찬된 《宮內府記錄總目錄》³⁹¹⁾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해당 서적은 당시 대한제국 궁내부가 소장한 자료들의 목록을 정리한 것인데, 크게 儀軌類·謄錄類·日記類·公文類·雜書類로 구분하였다. 이 중 의례류는 儀軌나 儀軌草·儀·儀式 등의 제목으로 편찬된 기록물에 더하여 《宗廟儀軌凡例》·《宗廟儀軌續錄》·《加上尊諡》등을 포함해 분류되었다. 특이한 점은 《國朝五禮儀》가 儀軌로 분류된 것이다. 《國朝五禮儀》는 의례에 관한 일종의 禮制書이지 의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의례류 기록의 분류를 단순히 表題를 기준으로만 한 것

391) 해당 기록 원문에서는 편찬기관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해제에서는 편찬기관을 장생전으로 특정하였다.(이상규, 《선의왕후국휼등록》 해제, URL: <http://royal.aks.ac.kr> [검색일자: 2020.01.04., 검색방법: “선의왕후국휼등록” 키워드 검색])

392) 궁내부 編, 《宮內府記錄總目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5152)

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한다. 실제 謄錄類에 속한 기록물들은 표제에 謄錄이나 錄이라는 명칭으로 끝나는 기록물만이 포함되어었는데, 구성상 의궤류와 차이가 없는 《文禧廟營建廳謄錄》이 등록류에 속했었음이 확인된다.

일기류로 분류된 기록물을 살펴보면 더욱 혼란스러운데 《承政院日記》·《日省錄》·《內閣日曆》에 더하여 疏筭을 정리한 기록인 《公車文》·《公車文叢》·《章筭彙編》과 疏筭·啓文·備忘記 등을 정리한 《報聚》 또한 일기류에 편입되어 있다.³⁹³⁾ 이는 단순히 일자별로 분류한 기록을 日記로 둔 것인데 기존 謄錄으로 분류된 기록들 중에서도 일자별 분류 기록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목록에서 日記와 謄錄의 분류는 결국 제목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宣傳官廳日記》가 日記類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해당 기록과 구성 및 내용상 차이가 없는 《宣傳官廳謄錄》이 등록류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庚戌國恥로 國亡이 눈앞이던 시기라고는 하나, 조선에서 등록류와 일기류의 편찬이 근시기에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니만큼 등록류와 일기류의 분류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해당 목록의 작성과정에 투과된 결과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秘書日記와 官廳日記 모두 협의적 개념의 등록물에 속하는 기록임을 보여주고 있다. 秘書日記와 官廳日記 모두 대체로 그 편찬 방식과 기록의 체제가 관청일지 성격의 등록물 특징과 동일하며, 일부의 경우에는 일자별로 정리된 형태의 공문서철 등록물이나 자료집 등록물의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들 日記가 공식석상에서 ‘謄錄’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의 인식 또한 이들을 등록물의 일환으로 여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日記라는 명칭의 관찬기록이 조선의 등록체계에서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단 조선에서 謄錄은 原文書의 보존을 위해 별도의 책자 형태로 이를 옮겨 적는 기록관리방식의 하나로서,

393) 해당 기록의 분류 이유에 대한 목록 내 설명은 다음과 같다. “公車文, 公車文叢, 章筭彙編, 報聚는 總히 上疏及批答文을 遂日遂日히야 記入한 者인 故로 日記類部에 編入함.”

위로는 실록에서부터 아래로는 지방 말단의 문서에까지 적용되었다. 물론 등록체계하에서 편찬되는 등록물들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그 위상 또한 같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는 각 日記 내용의 개별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日記라는 별도의 기록군이 특별한 위상을 지닌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특히 실록형일기를 제외한 秘書日記와 官廳日記는 기본적으로 그 중요도에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전체적인 편찬 방식과 보존 과정은 협의적 개념의 등록물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承政院日記》를 비롯한 秘書日記와 각 官司에서 일자별로 업무 관련 기록을 정리한 官廳日記 모두 관청일지 성격의 등록물로 볼 수 있으며, 일부 官廳日記의 경우에만 일자별로 정리된 공문서철 성격의 등록물 또는 자료집 성격의 등록물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燕山君日記》나 《光海君日記》의 경우 전혀 별개의 성격을 지닌 기록으로서 廢君의 實錄을 格下하는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기에 사실상 實錄의 체제로서 찬수된 기록이며, 謄錄과의 관계 또한 實錄과 謄錄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承政院日記》와 같은 秘書組織의 기록은 매일의 기록을 謄錄의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비서일기의 경우 그 생산기관이 국왕을 지근거리에서 긴밀하게 보좌하는 조직이기에 국왕에 관계된 기록이 주를 이루며, 그 위상 또한 起居注와 日曆에 비견될 정도였다.

그 외 관청의 日記는 일자별로 정리된 기록의 의미로서 일반적인 등록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실제 謄錄이라는 명칭을 혼용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례는 日記와 謄錄이라는 명칭 자체에 별도의 위상 차나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며, 기록 그 자체의 내용에 따라 위상이 결정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조선의 官撰日記는 實錄型 일기를 제외하고는 謄錄物과 동일한 원리로 편찬·관리된 기록이라 할 수 있으며, 日記라는 명칭 그 자체에 별도의 위상을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 할 수 있겠다.

結 論

본 논문은 조선의 기록관리가 謄錄이라는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전제하에, 이 등록체계의 구축과 발전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등록체계는 原文書의 내용 중 별도로 보존할만한 것을 선별하여 베껴 적고, 이를 일정한 체제로 나누어 成冊하며, 이렇게 편찬된 등록물을 활용·보존하는 일련의 체계를 의미한다. 이 등록체계가 조선에서 공적 영역의 기록관리체계로서 구축·작동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통치이념과 이에 근간한 제도, 조선이 처한 사회적 현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에서 謄錄은 단순한 寫本記錄을 제작하는 방식이 아닌 原本을 대체할 수 있는 前例이자 典故, 더 나아가 實錄의 史料로까지 활용될 정도로 공적인 신뢰를 지닌 기록을 생산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산출된 謄錄物이 사본기록에 가까운 성질을 지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原本과 동일한 수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선의 통치이념과 이에 근간한 제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성리학적 理에 근간한 통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齊民的 행정체계의 확립과 관료체제의 정비 그리고 성문법에 따른 法治를 추구하였다. 조선 건국을 주도한 인물이었던 정도전은 이 성리학적 통치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법령의 구축과 그 공정한 집행을 내세웠다. 그는 법령을 세우는 이유가 백성들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함이며, 정치와 행정은 이렇게 세워진 법(憲典)에 근거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조선은 이에 따라 성문법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은 성문법에 따른 통치를 통해 기존 관습법적 불합리를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해소시키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당시 가장 선진적인 성문법이자 동시에 성리학적 통치철학을 반영한 명의 法律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는 기록관리에 관한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은 《대명률》을 비롯한 명의 律法과 함께 禮式과 文書式을 보다 상세히 규정한 《洪武禮制》를 기본 틀로 하면서도, 고려의 舊制와 조선의 행정 현실을 반영한 기록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법전에 수록하였다. 그러나 조선과 명의 기록관리제도는 각기 다른 지향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조선이 명의 제도를 본떴음에도 불구하고, 명과는 차별화된 기록관리제도를 수립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조선의 법전에 수록된 기록관리제도는 크게 두 가지 사항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문서행정에 관한 부분이다. 실제 사용하는 공문의 서식과 서식별 활용범위, 문서의 보존·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다른 하나는 행정의 결과로 나온 문서를 비롯하여 典籍·圖書·時政記·謄錄 등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물에 대한 생산·보존·관리 규정이다. 특히 문서와 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있어서는 명과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는데, 조선은 명과 달리 문서와 기록의 보존 및 관리 방법까지도 法典상에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조선 기록관리제도의 의의는 이처럼 公的 기록의 생산부터 그 보존과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기록관리체계를 물리적인 법조문의 형태로서 규정했다는 것에 있다.

물론 이것이 명에서 문서와 기록의 보존 및 관리를 등한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명 또한 內閣, 翰林院, 通政司, 司禮監과 실무를 담당하는 六部 등에서 문서와 기록을 보존·관리하였으며, 기록의 보존·관리를 위한 나름의 체계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서·기록의 보존 준칙이 법전에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기록관리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양국 간의 인식차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각국에서 수행한 기록관리의 목적이 무엇인가와 직결된다.

명의 경우 문서 및 기록의 행정적 역할에 보다 주목한 것이라면, 조선의 경우는 문서와 기록의 행정적 역할에 더해 실록편찬을 위한 史料의 가치로서의 측면과 함께 공적 행위에 대한 證據의 측면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조선에서 기록이란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닌 현재의 행위를 明白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후대에도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조선이 謄錄이라는 기록관리 방식을 적극 활용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

물론 조선이 기록관리를 위해 謄錄이라는 방식만 활용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관사나 고을에 있는 문서는 분류하여 作綜하고 懸籤하여 각기 보관한다.”는 《經國大典》藏文書條의 기사처럼 原文을 보존하는 준칙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謄錄이 보다 일반적인 기록관리 방식으로서 작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첫째, 전근대 유교문화권 국가들이 고수해 온 史書편찬 전통이다. 史書의 편찬은 말 그대로 原文書의 내용을 옮겨 적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實錄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實錄이라는 방식은 그 특성상 역사적 著述이자 동시에 기록의 모음집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謄錄物의 편찬과 유사하게 진행되었으며, 謄錄이라는 기록관리 방식을 공적인 영역에서도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둘째, 조선의 행정적·사회적 상황이다. 당시 제각각인 문서의 크기는 原文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으며, 문서용 종이 또한 넉넉하지 않았기에 謄錄冊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뿐더러 기록의 보존에도 편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산된 謄錄物은 일반적인 寫本과 달리 원본과 동일한 위상을 갖춘 기록이자 동시에 중요 기록물로서 인정받았다. 다만 시기의 흐름에 따라 謄錄의 용례가 변화되는 모습이 實錄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조선 기록관리제도의 구축기에 謄錄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법에 버금가는 위상을 지닌 국왕의 受敎 또는各司의 條例文書 등을 편찬한 것 또는 이러한 기록들을 수집하여 정리하는 방식을 뜻하였다.

이는 별도의 성문법을 통한 체계적인 법의 운용이 어려웠던 조선 초기의 상황과도 연관되어 있다. 당시 조선이 수용하고자 한 明律은 그 환경의 차이로 인해 법조문을 그대로 조선에 적용하기가 어려웠으며, 별도의 法典編纂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어려웠다. 이후 《經濟六典》과 《續六

典》 등의 편찬으로 이에 근간한 法治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이들 법령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법 또는 하위법으로서 謄錄의 편찬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는 초기 대다수 등록물이 受敎輯이나 條例輯과 같은 성격을 지니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발전기 이후부터는 謄錄의 유형이 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법령에 준하는 受敎·條例 외에도 일반적인各司의 공문서 또한 謄錄物로서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등록의 외연 확장과 개념의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成宗 연간부터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경국대전》 반포로 조선의 성문법 체제가 완비됨에 따라, 謄錄의 법전적 기능이 《경국대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기에 謄錄은 문서를 베껴 책록해 구비하는 것으로만 남게 된 결과로 보았다. 그러나 《경국대전》 이후에도 法典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등록물의 편찬·활용이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살펴볼 때, 성종 재위 전후 나타난 등록개념의 분화는 보다 다양한 요인이 그 배경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謄錄物 자체가 지닌 복합적 성격이다. 謄錄物을 편찬하는 행위는 결국 憑考가 가능한 典故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때문에 국왕의 명으로 법전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등록물 외에도,各司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受敎·條例의 등록물도 존재하였으며, 外交·功臣·銃筒 등에 관련된 謄錄物도 분명 존재하였다. 즉 謄錄이라는 행위 자체는 초창기부터 受敎나 條例에만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성종 시기 전후 이루어진 실록찬수체계의 강화 및 이에 따른 기록관리 체계의 변화도 謄錄의 외연 확장과 개념의 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판단된다. 조선의 실록은 고려나 중국의 역대왕조들에 비해 그 찬수체계의 엄정함과 내용의 기밀보장 등이 상당 부분 강조되었으며, 이는 실록 찬수를 위한 자료의 생산과 수집·보존 과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조선에서 실록의 찬수를 위해 수집되는 사료는 時政記와 《經筵日記》, 《承政院日記》를 비롯한 각사의 謄錄物과 주요 緊關文書였다. 實

錄의 史料로써 등록물은 행정의 영역을 다루는 기록으로 보다 많은 영역에서 편찬될 필요가 있었으며, 보다 철저한 체계하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었다. 실록찬수체계에 영향을 끼친 성리학적 역사관은 국가 행위를 史로서 남기도록 하고, 그 史料의 공적인 생산과 관리 또한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선의 기록관리체계인 등록체계는 成宗代 이후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그 외연이 확장되고 개념적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재편된 등록체계하에서 등록물은 행정을 위한 수단으로써, 그리고 당대사 편찬을 위한 사료로써 생산·활용·보존되었다.

이들 등록물의 유형은 그 편찬 방식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원본을 그대로 베껴 적은 형태의 편철형 등록물이고, 다른 하나는 추가적인 서술이 들어간 첨입형 등록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등록물은 다시 그 목적 및 체제 등에 따라 각각 준법전·공문서철·업무지침서·관청일지·자료집·기타 등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준법전적 성격을 지닌 등록물은 法典을 보조하는 형태로서 傳敎·受敎 또는 法典의 해석 등을 수록한 형태이다. 《六典謄錄》，《受敎謄錄》，《受敎輯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문서철 성격의 등록물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상시적인 업무에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謄書한 형태의 기록으로서 《繼後謄錄》，《推案及鞫案》，《同文彙考》 등이 해당된다. 업무지침서 성격의 등록물은 일종의 지침·설명서로서 현대 매뉴얼 개념과 유사한 등록물이다. 주로 문서 서식과 적용례, 주요 업무 절차, 관련 공문서 등이 등록되며, 《吏文謄錄》이나 《儀註謄錄》류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 관청일지 성격의 등록물은 기관의 인력·업무·기타 운영에 관한 현황 등을 일자별로 작성한 기록으로 《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議政府謄錄》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집 성격의 등록물은 특정 儀禮나 事件과 관련된 기록을 보존하고 보고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등록한 기록으로서 《英祖戊申別謄錄》，義軌類 謄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이상의 성격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유형의 등록물도 존재할 수 있다.

이들 등록물들은 각각의 구성과 서술체제 및 위상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공통적인 생산·활용·보존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등록체제로 규정될 수 있는 조선 기록관리체계이다.

등록체계 운영의 실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등록물을 편찬하기 위해 구체적인 凡例가 마련된다. 이는 각각의 등록물이 일정한 체제와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등록물의 편찬을 위해 범례가 구성되면 이에 따라 등록될 문서들이 수집·선별되었다. 등록되지 않은 原文書나 이미 등록된 원본문서는 폐기되거나 休紙로 재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간주되기도 하였다. 이는 등록이라는 행위가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보존하고 불필요한 문서는 폐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일단 등록할 대상이 정해지면 해당 기록에서 등록할 부분을 선별하여 1차적으로 등록물의 초본을 만들었다. 草謄錄이라는 이름의 등록물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 草謄錄을 재검토하고 正書하여 正本 등록물로 성책하여 보존하였다.

등록물의 편찬이 이처럼 정해진 범례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시행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된다. 등록물의 생산 주체는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堂上 이상 고위 관료이다. 이들의 역할은 凡例와 같은 등록 기준을 정하고, 실제 등록물의 편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다만 이들 堂上 이상 관원들은 등록물의 생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대체로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는 각 官司의 郎廳과 같은 실무직군이다. 이들은 각 관사의 문서와 기록을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등록물의 편찬을 지휘한다. 原文書를 평가하여 등록할 기록을 선별하고 등록된 기록을 검토하는 것 또한 대체로 이들이 수행하였으며, 중요기록의 경우는 이들이 직접 謄書·謄寫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은 각 관청에 딸린 書吏와 書寫들이다. 이들은 낭청을 보조하여

해당 관청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를 점검하기도 하고, 낭청의 지시에 따라 原文書를 베껴 등록물에 적어 넣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 낭청직들이 각 아문의 기록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직책이라면, 이들 書吏와 書寫는 기록의 등록과 보관 등을 실제로 수행하는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생산된 등록물은 조선의 공식적인 업무과정에서 하나의 典故로 활용되었다. 이 등록물은 국가 대사는 물론이거니와 宮人의 喪에 이르기까지 조정 大小事에 널리 그리고 자주 활용되었다. 그런데 이들 등록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먼저 해당 사안을 소관하는 官司의 郎廳이 이와 관계된 문서나 등록물 등을 찾는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考閱하여 해당되는 부분을 抄出하고, 이를 제출·비치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다. 다만 장기적으로 편람해야 할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별도의 抄謄錄 또는 謄錄抄를 만들어 두기도 하였다.

등록물은 각사에서 업무상 수시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기에 일반적으로는 해당 관사에 직접 비치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래도 등록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隆文樓·隆武樓·架閣庫·弘文館·春秋館 등 국가 典籍을 보존하는 공간에서도 등록물을 함께 보관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 중요 기록으로서 장기적 보존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등록물의 경우에는 아예 實錄과 함께 史庫에 보존하여 관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등록체계하에서 생산·활용·보존되는 등록물은 조선의 주요한 기록관리 방안으로서 폭넓게 활용되었다. 때문에 조선이 찬수·편찬한 또 다른 중요기록인 實錄·儀軌·日記 또한 등록물과 일정한 연관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實錄은 현대와 후대를 鑑戒하기 위한 前代 國王의 統治記錄이자 동시에 當代史로서 찬수되었다. 때문에 실록은 그 어느 기록보다도 철저한 찬수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래야만 實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실록 내용의 유출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조선은 철저한 실록찬수체계를 구축·운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등록물은 행정의 결과이자 동시에 역사적 평가의 대상인 史料가 되었다.

그리고 실록찬수체계가 정립됨에 따라 등록물 또한 그 생산·보존 체계의 강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래야만 등록물이 실록찬수를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등록물은 비록 원본 문서가 아닐지라도 당시의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되었으며, 동시에 공식적으로 국가의 공인을 받은 기록이 될 수 있었다. 즉 실록찬수체계하에서 등록체계는 문서의 일차적 선별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등록물은 原文書와 실록을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동시에 행정 영역의 영구보존기록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의궤는 기본적으로 국왕에게 보고 및 후대에 참고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국가 주요 행사 기록이다. 때문에 儀軌는 일반적인 官司에서 생산하지는 않았고 儀軌廳이라는 별도의 주관 기구를 설치하여 편찬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 편찬 방식을 살펴보면 등록물과 유사하게 原文書를 선별하여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를 謄書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등록물의 편찬과정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업무상의 활용을 위해 편찬한 등록물과는 달리 儀軌는 주로 御覽 및 保存을 위한 목적으로서 편찬되었다는 차이가 있으며, 그 기록의 구성과 체제 또한 일반적인 등록물에 비해 정비된 형태로서 나타난다.

의궤는 또한 實錄에 버금가는 위상을 지닌 기록이었다. 實錄처럼 내용의 기밀을 요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찬수과정의 엄정함과 정교함은 일반적인 등록물의 편찬과정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동일한 기사 내용을 담은 의궤와 등록물을 비교해보더라도 의궤가 등록물보다 정제된 형태로서 그리고 국가차원의 관점에서 편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궤가 謄錄의 형식으로 찬수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이 일반적인 등록물에 비해 확고히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日記의 경우 廢王의 實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承政院日記》와 같이 일지형 등록물이나 일자별로 정리된 기록물 그 자체를 뜻하는 용어로도 활용되었다. 官撰日記는 크게 폐왕의 실록인 ‘實錄型日

記’, 국왕의 비서조직에 의해 매일의 국왕 동정 등을 기록한 ‘祕書日記’, 그 외 일반의 官司에서 일자별로 기록을 정리한 형태의 등록물인 ‘官廳日記’로 구분할 수 있다.

廢王의 實錄인 실록형일기는 기본적으로 實錄과 동일한 기록이다. 다만 廢王의 실록이기에 格을 낮추어 지칭한 것이며, 日記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록이 일별로 기록을 謄錄하여 정리한 방식을 취하였기에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祕書日記의 경우 일반적인 관사와 달리 매일 아침마다 문서를 編綴하여 謄書 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였기에 매일의 기록이라는 의미의 日記로서 이들 등록물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 官廳日記는 일지형 등록물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그 題號 또한 謄錄과 日記를 혼용하고 있는데, 당시에 해당 유형의 일기는 일자별로 정리된 謄錄物로서만 여겨졌을 뿐 엄격하게 구분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실록형 일기를 제외한 日記라는 별도의 기록군은 등록물과 별개의 위상을 지닌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그 편찬방식과 체제에 따라 日記라는 명칭을 달리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으로 조선시대 등록체계의 구축과 발전 과정을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조선의 등록체계가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받아 구축·발전되었음을 논증하였음에도, 이 등록체계가 역으로 조선의 정치·경제·행정 분야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조선의 기록관리체계 그 중에서도 특히 등록체계가 지닌 記錄史的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추후의 과제로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전하는 등록물은 대다수가 宣祖代 이후의 기록이기에 宣祖 이전 시기의 등록물에 대한 실체적 분석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실존하는 개별 등록물 역시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선 등록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京外各司에서 작동하는 등록체계의 모습을 보다 상세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자

평할 수 있다. 먼저 조선 초기 등록체계의 형성 배경과 시기별 전개 양상을 분석하여 등록이 조선의 주요한 기록관리의 방법으로서 통용될 수 있었던 맥락을 규명하였으며, 등록이 생산·활용·보존되는 과정을 실례를 통해 논증함으로써 조선 기록관리의 한 축을 이루었던 등록체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에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당대 조선에서도 등록체계를 통해 생산된 등록물이 寫本에 가까운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典故이자 史料로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記錄史的 관점에서 등록물이 지닌 사료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함과 동시에 등록물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었다. 등록물은 당시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등록체계를 통해 생산·활용·보존되어 온 공식적인 기록이었다. 때문에 등록물의 사료적 가치를 단순히 寫本이라는 이유로 폄훼할 것이 아니며, 조선 기록관리체계의 결과물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될 조선시대 연구 과정에서 謄錄과 謄錄物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사료

- 《各司受教》(奎7901)
《改修日記謄錄》
《經國大典》
《慶嬪嘉禮時嘉禮廳謄錄》(K2-2615)
《慶嬪禮葬所謄錄》(奎12945, 奎12946, 奎12947)
《高麗史》
《高麗史節要》
《孤雲集》
《繼後謄錄》(奎12869)
《宮內府記錄總目錄》(K2-5152)
《禁衛營抄謄錄》(K2-3300)
《大典通編》
《大典會通》
《同文彙考》(奎660, 奎15331의1)
《文禧廟營建廳謄錄》(奎12930, 奎13926)
《丙子四月本寺草謄錄》(奎 13003)
《祔廟都監儀軌》(K2-2235, K2-2236)
《備局謄錄》(K2-3319)
《備邊司謄錄》
《備邊司謄錄抄》(古 4255-13)
《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奎14930)
《山陵都監草謄錄》(K2-3563)
《三國史記》
《三峰集》
《璿源譜略修正草謄錄》(奎 12986)
《宣懿王后國恤謄錄》(K2-2962, K2-2963)

《宣懿王后國恤日記》(K2-2964)
《宣傳官廳日記》
《昭慶園謄錄》(K2-2334)
《續大典》
《受教謄錄》(奎12867의 1, 奎12867의3, 奎12982, 奎15142, 古5125-23,
K2-3435)
《受教輯錄》(奎1159, 奎1160, 奎3147, 奎3153, 奎5435)
《收養承嫡日記》(奎13038)
《承政院日記》
《實錄考出形止案》(K2-3731)
《實錄曝曬形止案》(K2-3734)
《御營廳抄謄錄》(K2-3360)
《御製草謄錄》(奎12998)
《英祖戊申別謄錄》(奎15049)
《英宗大王實錄廳儀軌》(奎14171, 奎14172, 奎14173)
《營總》
《義興縣公事草謄錄》(K2-3661)
《仁元王后國恤草謄錄》(K2-3000)
《日省錄》
《日省錄凡例》
《典律通補》
《貞聖王后國恤草謄錄》(K2-3009),
《朝鮮王朝實錄》
《典客司謄錄》
《增補文獻備考》
《哲宗大王實錄廳儀軌》(奎14184, 奎14185, 奎14186)
《臺營事例》
《推案及鞫案》
《通信使草謄錄》(奎 15067)

《弘齋全書》

《和緩翁主嘉禮謚錄》(K2-2732, K2-2733)

《[孝宗大王寧陵]山陵都監儀軌》(K2-2320)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K2-3798)

《憲宗大王實錄廳儀軌》(奎14181, 奎14182, 奎14183)

《顯宗大王實錄改修廳儀軌》(奎14162, 奎14164)

2. 국외사료

《論語》

《論孟精義》

《論語注疏》

《論語集註》

《論語集解義疏》

《唐會要》

《大明律集解附禮》

《大明會典》

《明實錄》

《孟子》

《史記》

《史通》

《薛文介公文集》

《隋書》

《御批資治通鑑綱目》

《禮記》

《二程遺書》

《莊子》

《貞觀政要》

《周禮》

《周禮詳解》
 《朱子大全》
 《朱子語類》
 《春秋左傳》
 《春秋左傳注疏》
 《洪武禮制》
 《皇明經世文編》
 《晦菴集》

3. 국내 단행본

- 국립중앙박물관 編(2012), 《조선왕조의례 현황과 전망》, 서울:국립중앙박물관.
- 강은경(2007), 《고려시대 기록과 국가운영》, 서울:혜안.
- 고혜령(2001), 《高麗後期 士大夫와 性理學 受容》, 서울:일조각.
- 김경수(1998), 《朝鮮時代の 史官研究》, 서울:국학자료원.
- 김대식(2010), 《고려전기 중앙관제의 성립》, 서울:경인문화사.
- 김문식&신병주(2005),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과주:돌베개.
- 김영수(2006), 《건국의 정치 : 여말선초, 혁명과 문명 전환》, 서울:이학사.
- 김운태(1995), 《(第二全訂増補版)朝鮮王朝 政治·行政史[近世編]》, 서울:박영사.
- 김의규 編(1985), 《高麗社會의 貴族制說과 官僚制論》, 서울:지식산업사.
- 김인걸(1998), 《各司謄錄 資料의 基礎調査 및 研究》, 國史編纂委員會 한국사연구지원보고서, 과천:국사편찬위원회.
- 김창현(1999), 《조선초기 문과급제자 연구》, 서울:일조각.
- 김충렬(1984), 《高麗儒學史》,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충렬(1988), 《고려유학사》,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해영(2018), 《조선왕조의 의궤와 왕실 행사》, 서울:현암사
- 남권희(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청주고인쇄박물관.

- 민두기 編(1985), 《中國의 歷史認識上》, 서울:창작과비평사.
- 민현구(1983),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서울:한국연구원.
- 박병호(1996), 《근세의 법과 법사상》, 서울:진원.
- 박용운(1993), 《高麗時代史》, 서울:일지사.
- 변태섭(197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서울:일조각.
- 안지원(2005), 《고려의 국가불교의례와 문화》,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오항녕(2009),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서울:일지사.
- _____(2018), 《실록이란 무엇인가》, 고양:역사비평사.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編(1993), 《經濟六典輯錄》, 서울:다은.
- 유승원(2020), 《사대부시대의 사회사:조선의 계급·의식·정치·경제구조》, 고양:역사비평사.
- 이병도(1987), 《韓國儒學史》, 서울:아세아문화사.
- 이성무(1990), 《조선시대 양반연구》, 서울:일조각.
- 이정훈(2007), 《고려전기 정치제도 연구》, 서울:혜안.
- 정두희(1983), 《朝鮮初期政治支配勢力研究》, 서울:일조각.
- 최이돈(1994), 《조선중기 사림정치구조연구》, 서울:일조각.
- 최승희(1989), 《(改正增補版)한국고문서연구》, 서울:지식산업사.
- 최정환(2009), 《(새로 본)高麗政治制度 研究》, 대구:경북대학교 출판부.
- 택와허선도선생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編(1992), 《택와허선도
선생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서울:일조각.
- 한국기록학회(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역사비평사.
- 한국역사연구회 17세기 정치사 연구반 編(2003), 《조선중기 정치와 정
책:인조~현종 시기》, 서울:아카넷.
- 한영우(1983a), 《朝鮮前期社會經濟研究》, 서울:을유문화사.
- 한영우(1983b), 《朝鮮前期 社會思想 研究》, 서울:지식산업사.
- _____(2002),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서울:지식산업사.
- Max Weber[박성환 譯](1997), 《경제와 사회 1》, 서울:문학과지성사.

4. 해외 단행본

E. H. Carr(1987), 《What is History?》, London:Penguin.

屈萬里 主編(1986), 《大明律集解附例:明萬曆間奉勅》, 臺灣學生書局:臺北.

內藤虎次郎(1949), 《支那史學史》, 東京:弘文堂.

小學館 編(2006), 《精選版 日本國語大辭典》, 東京:小學館.

5. 학위논문

김응호(2017), 〈조선초기 중앙군 운용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정신(2008), 〈朝鮮前期 勳舊·士林의 政治思想 比較〉,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태훈(2012), 〈조선건국정치사상 연구 : ‘가족적 정치질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철영(2000), 〈高麗中·後期 儒學思想 研究〉,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병련(1991), 〈朝鮮朝 儒敎官僚制의 性格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천식(1985), 〈조선 건국공신의 연구 - 정치세력 규명의 일환으로〉,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이원명(1992), 〈高麗 性理學 受容의 思想的 背景〉,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현경(2001), 〈鄭道傳(1342~1398)의 異端論 研究 : <심기리편>·<불씨잡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형중(2012), 〈조선시대 등록(謄錄)체계의 기록학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정은(2007), 〈備邊司謄錄의 書誌學的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성식(1996), 〈麗末鮮初의 歷史的 轉換과 性理學的 對應에 관한 研究: 鄭圃隱과 鄭三峯의 思想的 特性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정재훈(2001), 〈朝鮮前期 儒敎政治思想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6. 국내논문

- 장문식(2010), 〈儀軌를 통해 본 《英祖實錄》의 편찬 체계〉, 《조선시대사학보》 54, 조선시대사학회.
- 강은경(2003), 〈고려시대 공문서의 전달체계와 지방행정운영〉, 《韓國史研究》 122, 한국사연구회.
- _____ (2004), 〈고려시기 공문서 관리체계에서胥吏의地位〉, 《역사교육》 89, 역사교육연구회.
- _____ (2014), 〈고려초 문서행정의 구조와 부서간 문서전달〉, 《한국중세사연구》 39, 한국중세사학회.
- 권태억(1994), 〈갑오개혁 이후 공문서 체계의 변화〉, 《규장각》 1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김건우(2007), 〈조선후기 慶尙右兵營의 문서행정에 관한 일고찰: 《營總》을 중심으로〉, 《규장각》 3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김경록(2006), 〈明代 公文制度와 行移體系〉, 《명청사연구》 26, 명청사학회.
- _____ (2016), 〈明初 洪武帝의 國家統治 구상과 《大明律》〉, 《법사학연구》 53, 한국법사학회.
- 김경수(1997), 〈朝鮮朝 外史의 設置와 運營〉, 《역사학보》 154, 역사학회.

- 김경현(2015), 〈서기 1~3세기, 로마제국의 공문서 관리〉, 《서양고대사연구》 42,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 _____(1998), 〈조선전기 검임사관의 운영과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5, 조선시대사학회.
- 김당택(1991), 〈忠宣王의 復位敎書에 보이는 ‘宰相之宗’에 대하여:소위 ‘權門世族’의 구성분자와 관련하여〉, 《史學學報》 131, 역사학회.
- 김대홍(2015), 〈조선시대 《大明律》 制書有違조 조문 연구〉, 《법사학연구》 52, 한국법사학회.
- 김문식(2009), 〈조선시대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 《규장각》 2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_____(2010), 〈「儀軌事目」에 나타나는 의궤의 제작 과정〉, 《규장각》 3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김비환(2008), 〈경국대전체제에 나타난 유교적 법치주의의 구조와 성격: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20집 1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 김상호(2011a), 〈《哲宗大王實錄儀軌》의 謄錄 官文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9, 한국서지학회.
- _____(2011b), 〈《純宗大王實錄廳儀軌》의 謄錄 官文書의 연구〉, 《서지학연구》 50, 한국서지학회.
- 김선민(2012), 〈《舊滿洲檔》에서 《滿漢實錄》까지 : 청 태조실록의 편찬과 수정〉, 《史叢》 7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김영수(2010), 〈조선건국의 정신적 기원: 14세기 주자학 수용의 내적 계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1권 제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김정기(2008),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관인(mandarin)의 참여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3, 한국행정사학회.
- 김정신(2008), 〈16세기 前半 勳舊·士林의 관료제 운영론 비교〉, 《조선시대사학보》 47, 조선시대사학회.

- 김중권(2004), 〈朝鮮 太祖·世宗年間 經筵에서의 讀書討論 考察〉, 《서지학연구》 27, 한국서지학회.
- _____ (2005), 〈朝鮮朝 經筵에서 成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32, 한국서지학회.
- _____ (2007), 〈朝鮮朝 經筵에서 燕山君의 讀書歷에 관한 考察〉, 《서지학연구》 37, 한국서지학회.
- _____ (2008), 〈朝鮮朝 經筵에서 中宗의 讀書歷에 관한 考察〉,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 _____ (2011), 〈朝鮮朝 經筵에서 明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49, 한국서지학회.
- 김태웅(2000), 〈甲午改革 前後 地方公文書管理의 변화〉, 《규장각》 2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김 혁(2000), 〈藏書閣 소장 謄錄의 문헌학적 특성〉, 《장서각》 제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 _____ (2002), 〈朝鮮後期 中央官廳 記錄物에서 謄錄의 위상〉, 《서지학보》 26, 한국서지학회.
- 김현영(2008), 〈조선시대의 문서와 기록의 위상 : 사초, 시정기에 대한 재검토〉, 《고문서연구》 32, 한국고문서학회.
- 나중석(2013), 〈주희의 공(公) 개념과 유교적 공공성(公共性) 이론에 대한 연구〉, 《東方學志》 16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남권희(1986), 〈架閣庫考〉, 《서지학연구》 1, 한국서지학회.
- 남지대(1980),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世宗·文宗年間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노명환(2017),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의 관점에서 보는 조선시대 성리학 세계관과 기록·기록관리〉, 《기록학연구》 51, 한국기록학회.
- 도현철(2004), 〈조선의 건국과 유교문화의 확대〉, 《동방학지》 12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_____ (2008), 〈정도전의 경학관과 성리학적 질서의 지향〉, 《태동고

- 전연구》 제24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 _____ (2016), 〈고려후기 성리학 도입에 관한 제설의 검토와 김구의 역할〉. 《역사와 실학》 59, 역사실학회.
- _____ (2018), 〈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과 문치 확대〉, 《역사비평》 2018년 겨울호(통권 제125호), 역사비평사.
- 명경일(2014), 〈정조대 傳敎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 체계〉, 《고문서연구》 44, 한국고문서학회.
- _____ (2016), 〈조선 후기 事變假注書 日記의 사료적 가치〉, 《규장각》 4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문형진(2002), 〈《大明律》의 전래와 한국적 변이 양상〉,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_____ (2004a), 〈《大明律》의 性格에 대한 一考察：儒敎의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33,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 _____ (2004b), 〈《大明律》과 《經國大典》 編纂의 法制史的 의의〉, 《중국연구》 34,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 박재우(2008), 〈고려시대의 관문서와 전달체계〉, 《고문서연구》 33, 한국고문서학회.
- 박준호(2003), 〈《洪武禮制》와 朝鮮 初期 公文書 制度〉, 《고문서연구》 22, 한국고문서학회.
- _____ (2006), 〈《經國大典》 체제의 문서 행정 연구〉, 《고문서연구》 28, 한국고문서학회.
- 박창희(1973), 〈高麗時代 官僚制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58, 역사학회.
- 박천식(1980), 〈高麗禎王代의 政治權力的 性格과 그 推移〉, 《전북사학》 4권, 전북사학회.
- 방향숙(2012), 〈중국 고대 국가의 藏書制度和 역사서의 편찬: 漢代의 藏書制度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26, 한국사학사학회.
- 배수호&김도영(2014), 〈유학(儒學)에서의 공공성 논의: 행정학 맥락에서 이해하기〉, 《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3호, 한국행정학회.
- 배현숙(1979), 〈五臺山史庫와 收藏書籍에 대하여〉, 《서지학연구》 1,

- 한국서지학회.
- 백선희(2007), 〈《경국대전》의 기록관리 규정〉, 《기록학연구》 15, 한국기록학회.
- 부남철(2016), 〈준비되지 않은 혁명 : 조선 건국기 유교와 정치〉, 《동양문화연구》 제25권,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 서원남(2008), 〈宋代의 문헌정리와 藏書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50, 중국어문학연구회.
- 서인범(2014), 〈《明實錄》의 刊行·收藏과 朝鮮 유입〉, 《동국사학》 57집,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손숙경(2000), 〈부록: 《축영사례》(乙酉臚)〉, 《경남문화연구》 22권,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 신명호(2010), 〈조선건국 후 왕실의례 정립과 의궤〉, 《조선왕조의례 학술심포지움 발표집》, 국립문화재연구소.
- _____(2011), 〈조선 초기 儀軌編纂의 배경과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59, 조선시대사학사.
- 신병주(2006), 〈광해군 시기 의궤의 편찬과 그 성격〉, 《남명학연구》 22,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 _____(2008), 〈조선후기 기록물 편찬과 관리〉, 《기록학연구》 17, 한국기록학회.
- _____(2009), 〈‘實錄廳儀軌’의 편찬과 제작 물자에 관한 연구: 《영종대왕실록청의궤》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8, 조선시대사학회.
- 신복룡(2010),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통해서 본 조선왕조의 통치이념〉, 《일감법학》 17,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심영환(2009), 〈朝鮮初期 官文書의 《洪武禮制》 呈狀式 受容 事例〉, 《장서각》 21, 한국학중앙연구원.
- 심재우(2007), 〈조선말기 형사법 체계와 『대명률』의 위상〉, 《역사와 현실》 65, 한국역사연구회.
- 안드레아 조르지&김정하(2009), 〈이탈리아의 기록물과 기록물관리학〉,

- 《규장각》 3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안미경(2017), 〈17세기 실록형지안에 수록된 일반서책 목록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71, 한국서지학회.
- 연갑수(2000), 〈조선후기 등록에 대한 연구〉, 《역사문화연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오항녕(1997), 〈조선초기 경연의 《資治通鑑綱目》 강의〉, 《한국사상사학》 제9집, 한국사상사학회.
- _____ (1999), 〈性理學的 歷史觀의 成立: 超越에서 現實로〉, 《조선시대사학보》 9, 조선시대사학회.
- _____ (2000), 〈朝鮮初期 實錄編纂體裁의 變化에 關한 史學史的 考察〉, 《한국사학사학보》 1, 한국사학사학회.
- _____ (2001), 〈실록(實錄):등록(謄錄)의 위계(位階)〉, 《기록학연구》 3, 한국기록학회.
- _____ (2003), 〈朝鮮時代 時政記 編纂의 規定과 實際〉, 《韓國史學史學報》 8, 한국사학사학회.
- _____ (2004), 〈조선후기 국사체계(國史體系)의 변동에 관한 시론: 실록(實錄)에서 일성록(日省錄)으로〉, 《역사와 현실》 52,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2006), 〈正祖 초반 《英祖實錄》 편찬에 대한 연구〉, 《민족문화》 29, 한국고전번역원.
- _____ (2008),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이해〉, 《기록학연구》 17, 한국기록학회.
- 윤정분(2006), 〈明初 경연제도의 배경과 그 특징: 주원장의 경사 강론과 군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5, 명청사학회.
- 윤훈표(2000), 〈조선초기 공기록물(公記錄物) 관리제(管理制)의 개편〉, 《기록학연구》 2, 한국기록학회.
- 이경룡(2017), 〈원말명초 재상제 논의와 이학경제의 정주학 확정〉, 《명청사연구》 48, 명청사학회.
- 이근호(2014), 〈18세기 ‘공론’정치 구조에 대한 시론〉, 《조선시대사학

- 보》 71, 조선시대사학회.
- 이상익(2001), 〈퇴계와 율곡의 정치에 대한 인식〉, 《퇴계학논집》 110, 퇴계학연구원.
- 이성무(1990), 〈《經國大典》의 編纂과 《大明律》〉, 《역사학보》 125, 역사학회.
- 이익주(1988), 〈忠烈王代の 정치세력과 그 성격〉, 《한국사론》 1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이재룡(2004), 〈조선왕조 법제도에서의 국가관〉, 《동양사회사상》 제 10집, 동양사회사상학회.
- 이태진(1990), 〈朝鮮王朝의 儒敎政治와 王權〉, 《韓國史論》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이한희(2007), 〈조선시대 기록물의 생산 및 처리과정과 보존〉, 《서지학연구》 37, 한국서지학회
- 이형중(2018), 〈조선 등록물의 유형과 그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8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_____(2020), 〈《朱子語類》의 ‘史’인식과 朝鮮의 수용〉, 《동양고전연구》 78, 동양고전학회.
- 임민혁(2011), 〈조선시대 《膳錄》을 통해 본 왕비의 親迎과 권위〉, 《한국사학사학보》 25, 한국사학사학회.
- 임용한(2003), 〈《經濟六典膳錄》의 편찬목적과 기능〉, 《법사학연구》 27, 한국법사학회.
- 장현근(2016), 〈충군(忠君) 관념과 명대 동림당인(東林黨人)의 정치심리: 강요된 복종인가 자발적 의지인가?〉, 《아태연구》 제23권 4호, 국제지역연구원.
- 정궁식(2017), 〈중국율령의 수용과 한국 전통사회〉, 《저스티스》 통권 제158-2호, 한국법학원.
- 정궁식&조지만(2003), 〈朝鮮 前期 《大明律》의 受容과 變容〉, 《진단학보》 96, 진단학회.
- 정요근(2017), 〈고려 후기~조선 전기 수령 중심 군현 편제의 전개와

- 연속성〉, 《역사비평》 2017년 가을호(통권 제120호), 역사비평사.
- 정진영(2014), 〈한중 고문서의 외형적 비교 고찰: 嶺南과 徽州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5, 한국고문서학회.
- 조영준(2014), 〈조선후기 宮房의 謄錄 작성과 고문서의 謄書 실태 : 《龍洞宮謄錄》·《龍洞宮公事冊》의 기초 분석〉, 《고문서연구》 44, 한국고문서학회.
- 조지만(1999), 〈朝鮮初期 《大明律》의 受容過程〉, 《법사학연구》 제20호, 한국법사학회.
- 조현걸(2008), 〈고려 초기에 있어서 불교의 정치적 기능〉, 《대한정치학회보》 제15집 3호, 대한정치학회.
- 차장섭(1985), 〈史官을 통해 본 朝鮮前期 士林派〉, 《慶北史學》 8, 경북사학회.
- _____(1992), 〈朝鮮前期 實錄의 史論〉, 《국사관논총》 제32집, 국사편찬위원회.
- 최연식·송경호(2007), 〈《경국대전》과 유교국가 조선의 예치(禮治): 예(禮)의 형식화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제38집 1호, 연세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최영희(2010), 〈주희 역사관에 내재된 문도론적 사유〉, 《철학논총》 제59집, 새한철학회.
- 하우봉(1991), 〈《通信使謄錄》의 史料的 性格〉, 《한국문화》 1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한기문(2003), 〈고려시기 정기 불교 의례의 성립과 성격〉, 《민족문화논총》 제27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한우근(1988), 〈朝鮮前期 史官과 實錄編纂에 관한 研究〉, 《진단학보》 66, 진단학회.
- 홍순민(2007), 〈조선후기 도죄(盜罪) 장죄(贓罪)의 구성과 『대명률』〉, 《역사와 현실》 65, 한국역사연구회.

7. 국외논문

- Alan L. Boegehold(1972),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Archive at Athens〉,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76, Archaeological Institute of America.
- Dirks, John M.(2004), 〈Accountability, History, and Archives: Conflicting Priorities or Synthesized Strands?〉, 《Archivaria》 57,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 O'Toole, James(2004), 〈Archives and historical accountability: toward a moral theology of archives.〉, 《Archivaria》 58,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 羅 軍(2014), 〈明朝的公文制度在大明律中的體現〉, 《蘭台世界》 2014.5月 中旬, 遼寧省檔案學會.
- 所桂萍(2007), 〈明代檔案机构設置及其管理探究〉, 《江漢論壇》 2007年 12月, 湖北省社會科學院.
- 孫衛國(2005), 〈《明實錄》与《李朝實錄》之比較研究〉, 《求是學刊》 2005年 第2期, 南開大學歷史學院.
- 李建宏(2003), 〈中國古代實錄編纂研究〉, 《檔案學通訊》 2003年 第2期, 中國人民大學.
- 趙彥昌(2011), 〈明代檔案管理制度研究〉, 《遼寧大學學報》 第6期, 哲學社會科學版.
- 錢茂偉(2010), 〈《明實錄》編纂与明代史學的流變〉, 《學術研究》 2010年 第5期, 廣東省社會科學界聯合會.
- 朱榮貴(1995), 〈從劉三吾《孟子節文》論君權的限制與知識份子之自主性〉, 《中國文哲研究集刊》 第六期(1995.3.), 中國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 黃才庚(1988), 〈高度中央集權主義的明朝文書及其制度研究〉, 《檔案》 5, 甘肅省檔案局.

8. 홈페이지

한국학중앙연구원 編, 《온라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編, 《온라인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국립국어원 編, 《(온라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中國社會科學院 編, 《(온라인)文學網辭典》.

【English Abstract】

The Archival Management
Legislation
and Deungrok System(謄錄體系)
in the Joseon Dynasty

LEE, Hyeongjung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the substance of deungrok(謄錄), Which is the mainly system for creating, utilizing, and preserving records and archives in Joseon dynasty. Although the literal meaning of the word 'deungrok(謄錄)' is 'copy and write', Joseon extended its meaning. In Joseon, deungrok(謄錄) also refers to the act or the consequence of appraising and selecting what to be preserved and writing down it to another collection.

Joseon widely used deungrok(謄錄) as a means of managing archives in public administration field. Although the documentary books of deungrok(謄錄物) were not the original but a copy, they have been recognized as the original with the same reliability. Therefore, the documentary books of deungrok usually were used as precedent and reference of official administrative work or historical materials of the history such as Sillok(實錄) in Joseon. This was the result of the Joseon's ruling ideas, the underlying system, and the socio-economic reality at that time.

From the beginning, Joseon attempted to introduce the ruling principle in administrative area and pursued constitutional government which based on statute law including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egislation. Joseon's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was also established in a way to realize public values which as evidence of public service and as a historical documents. For this reason, records and archives were important in the Joseon, and deungrok was valued as one way of managing records and archives.

In the pre-Seongjong(成宗) period, the statute law system was not completed yet. Thus, during this period, deungrok complemented the law system by acting as an authentic precedent in public affairs.

In the post-Seongjong period, the concept of deungrok was expanded and differentiated. The background of this phenomenon was the completion of the statute law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illok management system, which brought some changes in the archives management system. After this period, deungrok appeared in various types as a means for administration as well as a means for the historical materials of Sillok.

Joseon's documentary books of deungrok may be divided into two types. One is the document collection, which is composed of copies.

The other is the document book that had additional descriptions in the original records. And documentary books of deungrok may be subdivided into five detailed types: the quasi-lawbook(準法典), the file(公文書綴), the manual(業務參考書), the government official diary(官廳日誌), and the reports or collection(資料集).

These documentary books were created by collecting and arranging the original records and archives according to the preparation criteria and copying the necessary parts separately. And these books were actively used in various fields ranging from local administration to national history such as Sillok. These books were differentially preserved in various places such as each repository of institutions or national history Archives(史庫), depending on their utilization and importance.

Deungrok acted a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Joseo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Therefore, deungrok had to establish a certain relationship with Sillok, Uigwe(儀軌) and Ilgi(日記, Public diary) that were other major documentary of Joseon.

Sillok was the historical archives of the former King's rule and the history of those days. Thus, Sillok had to have strict compila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preventing leakage and gaining public confidence. In this system, the documentary books of deungrok were used as reliable archives and historical materials of the administrative domain.

Uigwe was the archives that organized the procedures of major rituals in the country and related documents in certain system. Uigwe was largely similar to deungrok in the structure of archives. In some cases, Uigwe and deungrok had the same ritual event's records and archives. However, uigwe and deungrok were different in that uigwe is the national archive, whereas deungrok was created and used by

the institution. Uigwe was created in a refined form compared to deungrok, and its purpose was mainly to preserve the rituals' procedures.

Ilgi was mostly a daily archive of the King's secretary such as Seungjeonwon(承政院), Kyujanggak(奎章閣) or general institution. Ilgi was very similar to deungrok of government official diary type and there was essentially little difference between ilgi and deungrok in their structure and content. Thus, ilgi cannot easily be differentiated from deungrok based on its structure and content, but ilgi may diverge from deungrok based on ways of its creation and composition.

In conclusion, deungrok had been used in a wide range of areas from national Sillok history management to minor official record management as mainstay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It can be said that despite the fact that deungrok was more like a copy, it acted as a reliable precedent and historical materials in Joseon.

keywords : Deungrok(謄錄), Archive Management, Sillok(實錄),
Uigwe(儀軌), Ilgi(The Dairies, 日記)

Student Number : 2013-30028